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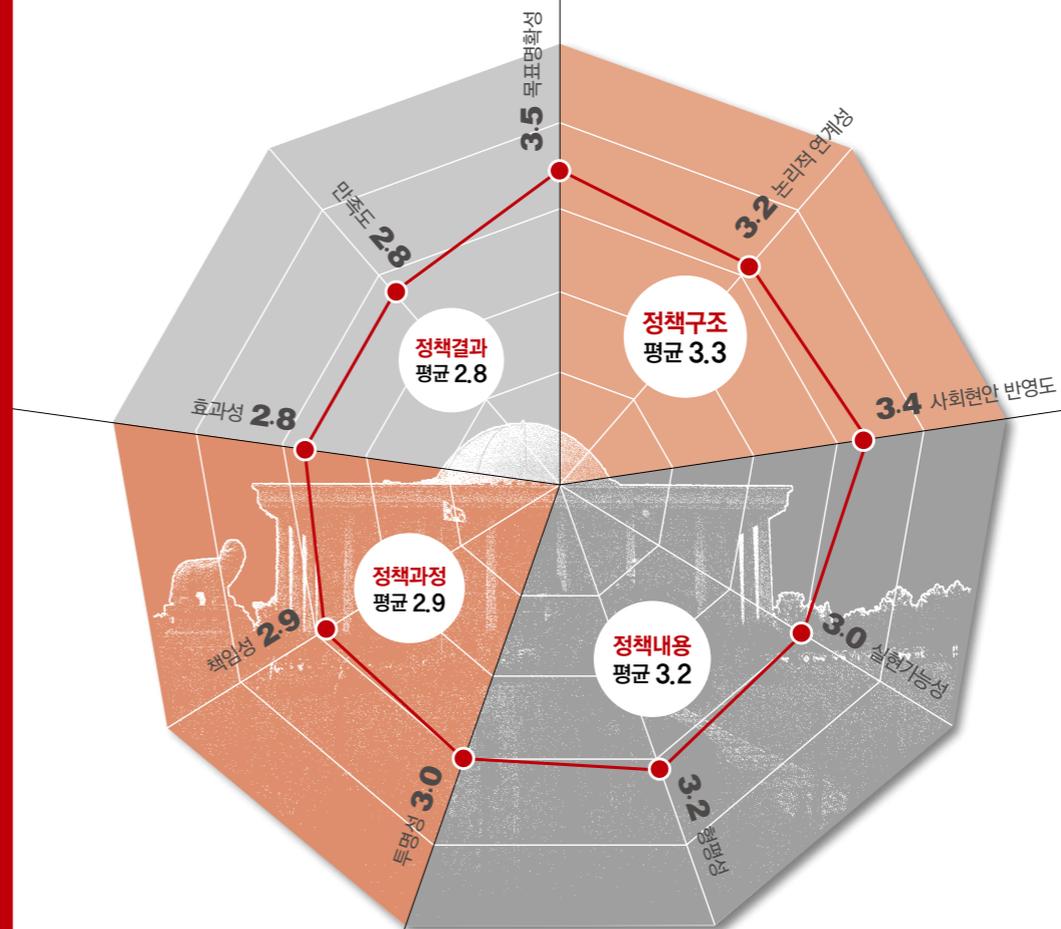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동아E&D

동아E&D



값 20,000원



9 788997 257089
ISBN 978-89-97257-08-9

03060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공동연구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동아일보 공동연구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공동연구 /
지은이: 염재호, 최진욱, 구교준, 이용균, 최흥석,
최영준, 김두래, 최상욱, 김선혁, 임현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 서울 : 동아E&D, 2015
p. : cm
ISBN 978-89-97257-08-9 03060 : W20000
정부 정책 [政府政策]
한국 행정 [韓國行政]
351.11-KDC6
352.3-DDC23 CIP2015007886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
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
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5007886)

참여 저자

- 염재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책임)
-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총괄)
-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총괄)
- 이용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 최흥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총괄)
- 최영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 김두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총괄)
- 최상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총괄)
-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동아E&D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contents

제1장	서론	012
	1. 정책평가의 목적	014
	2. 평가 방법과 대상	015
제2장	정책평가 방법론	016
	1. 평가지표의 선정과 의미	018
	2.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020
	1)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020
	2) 평가대상 정책 선정	023
제3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032
	1. 경제정책 분야	034
	1)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관세청)	034
	2) 일감몰아주기 과세(국세청)	034
	3)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유망 서비스산업 육성)(기획재정부)	035
	4)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035
	5) 마리나 산업 육성(해양수산부)	036
	6) 기술 유망기업 발굴 지원(중소기업청)	037
	7)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미래창조과학부)	037
	8)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농림축산식품부)	037
	9) 가맹점주 권리강화(공정거래위원회)	038
	10) 공유형 모기지(국토교통부)	038

2. 사회복지정책 분야	039
1) 기초연금제도(보건복지부)	039
2)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039
3)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보건복지부)	040
4)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보건복지부)	040
5)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보건복지부)	041
6)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보건복지부)	042
7)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043
8) 사회적 기업 육성(고용노동부)	043
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043
10)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044
3. 교육문화정책 분야	045
1)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교육부)	045
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교육부/법무부)	046
3) 대학입시 간소화(교육부)	046
4)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교육부)	048
5)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교육부)	049
6)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정책(교육부)	049
7)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여성가족부)	050
8) 자연휴양림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산림청)	051
9) BK21플러스사업(교육부)	051
10)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정책(문화체육관광부)	052
4. 외교안보정책 분야	052
1) 병사처우개선 - 병 봉급 인상(국방부)	052
2) 이산가족문제 해결(통일부)	053
3)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방위사업청)	054
4)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통일부)	055
5)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통일부)	055
6)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외교부)	056
7)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병무청)	056
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외교부)	057
9)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외교부)	057
10)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외교부)	057

제4장	분야별 정책평가	058
	1. 정책평가 방법	060
	2. 경제정책 분야	061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061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081
	3) 평가결과 종합	107
	3. 사회복지정책 분야	115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15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137
	3) 평가결과 종합	161
	4. 교육문화정책 분야	168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168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187
	3) 평가결과 종합	213
	5. 외교안보정책 분야	221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221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257
	3) 평가결과 종합	291
제5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300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302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305
	1) 경제정책 분야	305
	2) 사회복지정책 분야	306
	3) 교육문화정책 분야	308
	4) 외교안보정책 분야	310
	참고문헌	313

표목차	【표 2-1】	경제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1
	【표 2-2】	사회복지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1
	【표 2-3】	교육문화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2
	【표 2-4】	외교안보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022
	【표 2-5】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경제정책 분야	029
	【표 2-6】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사회복지정책 분야	029
	【표 2-7】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교육문화정책 분야	030
	【표 2-8】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외교안보정책 분야	031
	【표 3-1】	마리나 산업 육성 정책 예산편성 내역	036
	【표 3-2】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황	040
	【표 3-3】	소득인정액 기준	043
	【표 3-4】	'13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045
	【표 3-5】	2017학년도 수능체제 개선방안(안)	047
	【표 3-6】	3~5세 누리과정 변화과정	050
	【표 3-7】	3~5세 누리과정 월 지원금액(매월)	050
	【표 3-8】	'13년도 사업유형별 지원예산액(안)	052
	【표 3-9】	병 봉급 인상률	053
	【표 3-10】	병 봉급 인상 예산편성 내역	053
	【표 3-11】	이산가족문제 해결 소요 예산	054
	【표 3-12】	방위사업 추진 소요 예산	055

그림목차	【그림 2-1】	경제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23
	【그림 2-2】	사회복지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25
	【그림 2-3】	교육문화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26
	【그림 2-4】	외교안보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027
	【그림 3-1】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	042
	【그림 3-2】	경력단절 취업지원 사업 전달체계	044
	【그림 3-3】	보육료 지원사업 전달체계	045
	【그림 3-4】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12년 2차, '13년 1차)	046
	【그림 3-5】	지방대학의 성과모델	048
	【그림 4-1】	경제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061
	【그림 4-2】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설문조사 결과	062
	【그림 4-3】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설문조사 결과	063
	【그림 4-4】	일감몰아주기 과세 설문조사 결과	064
	【그림 4-5】	일감몰아주기 과세 설문조사 결과	065
	【그림 4-6】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066
	【그림 4-7】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067
	【그림 4-8】	행복주택 공급 설문조사 결과	068
	【그림 4-9】	행복주택 공급 설문조사 결과	069

[그림 4-10]	마리나 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070
[그림 4-11]	마리나 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071
[그림 4-12]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 설문조사 결과	071
[그림 4-13]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 설문조사 결과	073
[그림 4-14]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설문조사 결과	073
[그림 4-15]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설문조사 결과	075
[그림 4-16]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설문조사 결과	075
[그림 4-17]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설문조사 결과	077
[그림 4-18]	가맹점주 권리강화 설문조사 결과	077
[그림 4-19]	가맹점주 권리강화 설문조사 결과	078
[그림 4-20]	공유형 모기지 설문조사 결과	079
[그림 4-21]	공유형 모기지 설문조사 결과	080
[그림 4-22]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081
[그림 4-23]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083
[그림 4-24]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성평가 결과	084
[그림 4-25]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성평가 결과	085
[그림 4-26]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086
[그림 4-27]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088
[그림 4-28]	행복주택 공급 정성평가 결과	089
[그림 4-29]	행복주택 공급 정성평가 결과	091
[그림 4-30]	마리나 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091
[그림 4-31]	마리나 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093
[그림 4-32]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 정성평가 결과	094
[그림 4-33]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 정성평가 결과	096
[그림 4-34]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정성평가 결과	096
[그림 4-35]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정성평가 결과	099
[그림 4-36]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정성평가 결과	100
[그림 4-37]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정성평가 결과	102
[그림 4-38]	가맹점주 권리강화 정성평가 결과	102
[그림 4-39]	가맹점주 권리강화 정성평가 결과	104
[그림 4-40]	공유형 모기지 정성평가 결과	105
[그림 4-41]	공유형 모기지 정성평가 결과	107
[그림 4-42]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108
[그림 4-43]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110
[그림 4-44]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113
[그림 4-45]	사회복지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115
[그림 4-46]	기초연금 도입 설문조사 결과	117
[그림 4-47]	기초연금 도입 설문조사 결과	119
[그림 4-48]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설문조사 결과	119
[그림 4-49]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설문조사 결과	121
[그림 4-50]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122
[그림 4-51]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123
[그림 4-52]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설문조사 결과	124
[그림 4-53]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설문조사 결과	125

[그림 4-54]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설문조사 결과	126
[그림 4-55]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설문조사 결과	127
[그림 4-56]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설문조사 결과	128
[그림 4-57]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설문조사 결과	129
[그림 4-58]	모성보호육아지원 설문조사 결과	130
[그림 4-59]	모성보호육아지원 설문조사 결과	131
[그림 4-60]	사회적 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131
[그림 4-61]	사회적 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133
[그림 4-6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133
[그림 4-6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135
[그림 4-64]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설문조사 결과	135
[그림 4-65]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설문조사 결과	137
[그림 4-66]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37
[그림 4-67]	기초연금 도입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39
[그림 4-68]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40
[그림 4-69]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41
[그림 4-70]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42
[그림 4-71]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43
[그림 4-72]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내실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44
[그림 4-73]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46
[그림 4-74]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46
[그림 4-75]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49
[그림 4-76]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49
[그림 4-77]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에 대한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51
[그림 4-78]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52
[그림 4-79]	모성보호 육아지원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54
[그림 4-80]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54
[그림 4-81]	사회적 기업 육성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56
[그림 4-8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57
[그림 4-8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59
[그림 4-84]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59
[그림 4-85]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61
[그림 4-86]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162
[그림 4-87]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163
[그림 4-88]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166
[그림 4-89]	교육문화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168
[그림 4-90]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 설문조사 결과	169
[그림 4-91]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 설문조사 결과	170
[그림 4-9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 설문조사 결과	171
[그림 4-93]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 설문조사 결과	172
[그림 4-94]	대학입시 간소화 설문조사 결과	173
[그림 4-95]	대학입시 간소화 설문조사 결과	174
[그림 4-96]	지방대학 지원 확대 설문조사 결과	175
[그림 4-97]	지방대학 지원 확대 설문조사 결과	176

[그림 4-98]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	177
[그림 4-99]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	178
[그림 4-100]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	178
[그림 4-101]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	180
[그림 4-102]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설문조사 결과	180
[그림 4-103]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 설문조사 결과	182
[그림 4-104]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 설문조사 결과	182
[그림 4-105]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 설문조사 결과	183
[그림 4-106]	BK21 플러스 사업 설문조사 결과	184
[그림 4-107]	BK21 플러스 사업 설문조사 결과	185
[그림 4-108]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설문조사 결과	186
[그림 4-109]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설문조사 결과	187
[그림 4-110]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87
[그림 4-111]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89
[그림 4-11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89
[그림 4-113]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92
[그림 4-114]	대학입시 간소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92
[그림 4-115]	대학입시 간소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94
[그림 4-116]	지방대학 지원 확대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94
[그림 4-117]	지방대학 지원 확대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97
[그림 4-118]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97
[그림 4-119]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99
[그림 4-120]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199
[그림 4-121]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02
[그림 4-122]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02
[그림 4-123]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05
[그림 4-124]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확대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05
[그림 4-125]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및 확대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07
[그림 4-126]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08
[그림 4-127]	BK21 플러스 사업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10
[그림 4-128]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11
[그림 4-129]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13
[그림 4-130]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214
[그림 4-131]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216
[그림 4-132]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219
[그림 4-133]	외교안보정책 분야 설문 종합평가 결과	222
[그림 4-134]	병 봉급 인상 설문조사 결과	223
[그림 4-135]	병 봉급 인상 설문조사 결과	226
[그림 4-136]	이산가족문제 해결 설문조사 결과	227
[그림 4-137]	이산가족문제 해결 설문조사 결과	230
[그림 4-138]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설문조사 결과	230
[그림 4-139]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설문조사 결과	233
[그림 4-140]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234
[그림 4-14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237

[그림 4-142]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설문조사 결과	237
[그림 4-143]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설문조사 결과	240
[그림 4-144]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설문조사 결과	241
[그림 4-145]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설문조사 결과	243
[그림 4-146]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설문조사 결과	244
[그림 4-147]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설문조사 결과	247
[그림 4-14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설문조사 결과	247
[그림 4-149]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정책 설문조사 결과	250
[그림 4-150]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설문조사 결과	251
[그림 4-151]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설문조사 결과	253
[그림 4-152]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설문조사 결과	254
[그림 4-153]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설문조사 결과	257
[그림 4-154]	병 봉급 인상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58
[그림 4-155]	병 봉급 인상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61
[그림 4-156]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61
[그림 4-157]	이산가족문제 해결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64
[그림 4-158]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65
[그림 4-159]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68
[그림 4-160]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69
[그림 4-16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71
[그림 4-162]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72
[그림 4-163]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75
[그림 4-164]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76
[그림 4-165]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78
[그림 4-166]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79
[그림 4-167]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81
[그림 4-168]	한중 전략적 협정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82
[그림 4-169]	한중 전략적 협정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84
[그림 4-170]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85
[그림 4-171]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88
[그림 4-172]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289
[그림 4-173]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91
[그림 4-174]	외교안보 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292
[그림 4-175]	외교안보 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295
[그림 4-176]	외교안보 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298
[그림 5-1]	4대 정책 분야별 종합 평균	302
[그림 5-2]	40개 정책 평균 비교	303
[그림 5-3]	40개 정책 평가지표별 점수 결과	304

01

제1장 서론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책은 일단 만들어져 집행되면 대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어떤 정책이라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집단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결정자와 정부 부처가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을 선택하는 유일무이의 기준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특정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과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 방법과 대상

정책평가의 틀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번 평가는 정책 수요의 대상인 국민과 정책을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와 더불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전문가(평가 참여 연구진)의 정성평가를 더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인식조사는 일반 국민 2,000명과 각계 정책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정성평가는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에 소속된 행정학과 교수 10명이 진행하였다. 평가의 기준은 크게 정책의 구조, 정책의 내용, 정책의 과정, 정책의 결과라는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 정책평가의 목적	014
2 평가방법과 대상	015



1. 정책평가의 목적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모든 정책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책은 일단 만들어져 집행되면 대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어떤 정책이라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집단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결정자와 정부 부처가 누구의 관점에서,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책을 선택하는 유일무이의 기준이 있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은 정치적 이념이나 특정한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발전의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과 공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정부의 정책은 사회적 혜택과 효용을 증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성과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책이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의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정책은 가계대출의 규모를 증가시켜 오히려 경제회복에 위험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휴대폰 보조금을 둘러싼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판매 대리점의 불법을 조장하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휴대폰 업계와 소비자의 불신만 높아지고 있다. 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정책은 소요 재정 투입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중앙 정부가 대립하여 많은 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우려하는 부작용만 낳을지,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효과를 안겨줄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지만 어떤 경우라도 정책의 오류와 실패는 최소화되어야 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할 때 국가와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은 실로 막중하다.

정책이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정책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정부가 감당할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못해 실패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좋은 효과를 낳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정책도 있다. 정책결정자가 올바른 정보를 갖지 못해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특정 집단의 이해에 매몰되어 정책실패가 발생하기도 한다. 보다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고비용이 수반되는 잘못된 정책수단을 사용할 때도 정책은 실패하게 된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는 국민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정책이 표류하기도 한다.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의 “2014년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는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 국민과 국가경제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전 과정에서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그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 스스로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평가의 상당수는 평가의 엄정성과 평가기준,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에 있어 적지 않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정책품질관리” 틀

은 정책형성부터 정책수립, 정책평가와 환류, 정책홍보의 관점에서 정책의 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평가가 다분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학계, 시민단체, 언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평가는 평가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대개 국민의 인식조사에 기초하고 있어 평가방법론의 엄밀성이 약하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각도에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때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평가 틀(policy evaluation tool)을 재설계하고, 이를 적용하여 2014년도에 집행되고 있는 중요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질(quality of policy)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평가방법과 대상

정책평가의 틀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번 평가는 정책 수요의 대상인 국민과 정책을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와 더불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전문가(평가 참여 연구진)의 정성평가를 더한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인식조사는 일반 국민 2,000명과 각계 정책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정성평가는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에 소속된 행정학과 교수 10명이 진행하였다.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책을 평가하였다. 평가의 기준은 크게 정책의 구조, 정책의 내용, 정책의 과정, 정책의 결과라는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구조의 측면에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평가기준으로 삼았고, 정책의 내용은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정도,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형평성을 평가하였다. 정책 과정 측면은 정책의 민주성과 책무성을 평가기준으로 정하였고, 정책의 결과는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이 같은 정책평가의 틀을 설계한 후 2014년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 정책 영역은 크게 경제정책, 사회복지정책, 문화·교육정책, 외교안보 정책 등 4개의 대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이 범주 안에는 대부분의 중앙정부와 기관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4개의 정책 영역에서 평가를 위한 정책을 선정하는 과정은 두 단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각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선택하게 한 후 이 결과를 연구에 참여한 교수진의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해 각 영역별로 10개의 정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영역별 10개의 정책, 총 40개 정책을 대상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 설문조사와 연구진 정성평가를 통해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02

제2장 정책평가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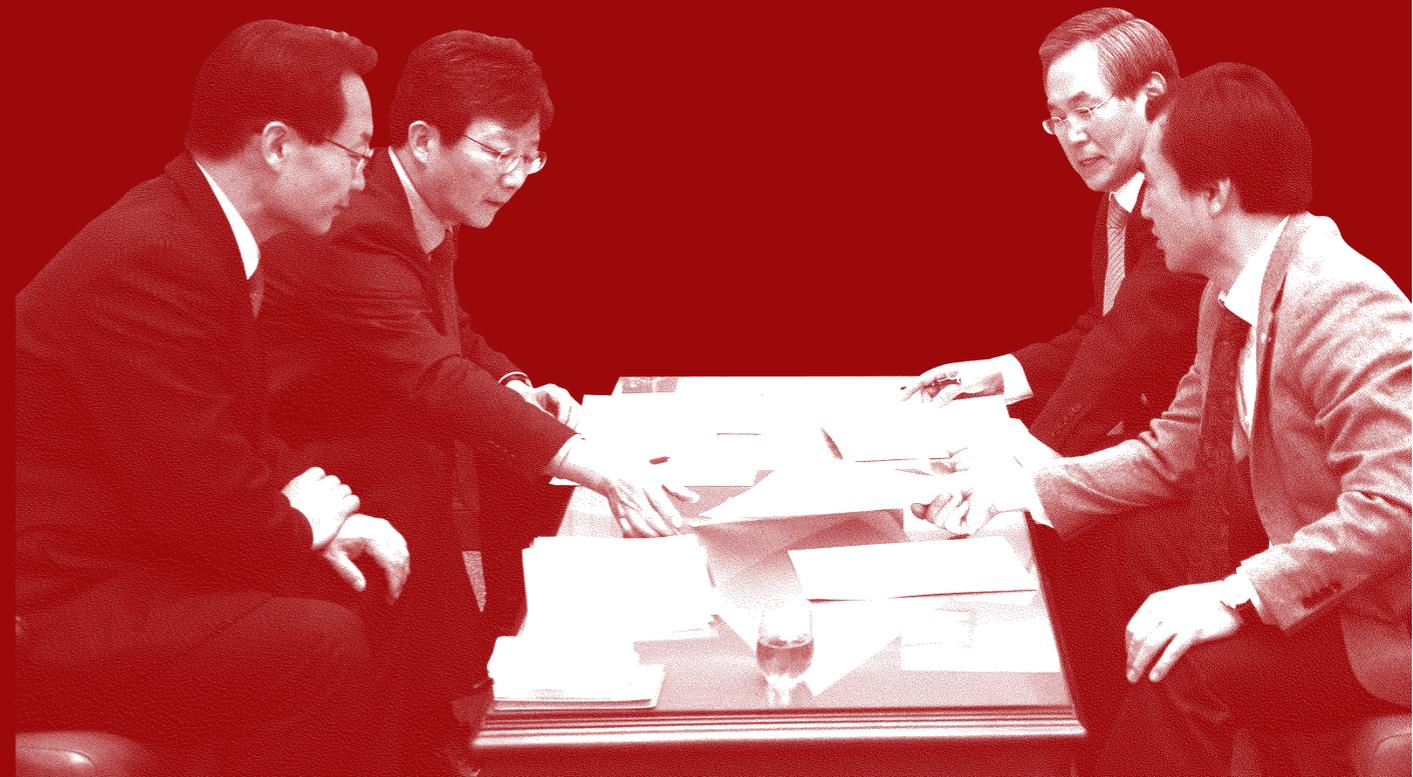
대부분의 기존 교과서는 정책평가를 주로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는 효과성의 개념, 즉 정책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Bingham, 2002). 그러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인과관계의 틀(정책개입 → 정책효과)에서 효과성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평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을 반영하는 정책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효과성 기준으로 낮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평가는 정책이 가지는 다면적 성격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1 평가지표의 선정과 의미	018
2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020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과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2차 선정

본 연구진은 평가의 대상이 될 정책들을 선정함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평가 대상 정책을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담보된 샘플링(sampling)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별 '정책'의 조작적 정의(定義)에 따라 평가 대상 정책 목록의 구성이 결정되므로 예컨대 근거 법령의 존재(신규 입법 혹은 개정), 예산 편성의 단위(項 혹은 目), 관할권의 확립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대상은 '정책'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 과제는 정부의 평가가 아니라 개별 정책의 평가이다. 따라서 복수(複數)의 정부에 걸쳐 있는 연속적 정책도 존재할 수 있고, 반면에 동일 정부에서도 상이한 (혹은 상충적인) 복수의 정책이 존재할 수 있다.



1. 평가지표의 선정과 의미

1) 평가지표 선정 과정

대부분의 기존 교과서는 정책평가를 주로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는 효과성의 개념, 즉 정책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한다(Bingham, 2002). 그러나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인과관계의 틀(정책개입 → 정책효과)에서 효과성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정책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평면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현안을 반영하는 정책이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적으로 의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단순히 효과성 기준으로 낮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평가는 정책이 가지는 다면적 성격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책평가 관련 문헌에서 정책의 결과 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과와 함께 가장 자주 언급된 좋은 정책의 기준은 과정이다. 즉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의도한 결과를 가져 온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의미이다.

이 평가에 참여한 연구진은 학계의 이러한 평가 기준이 정책 자체에 대한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평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정책 자체는 이미 제대로 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가정에 밀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진은 4회에 걸친 평가지표 팀 회의와 2회의 전체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정책의 과정과 결과 이외에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하고 목표와 정책대안 간에 논리적 연계성이 얼마나 뚜렷한가와 같은 정책의 구조적 측면과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실현가능한지,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같은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이들 영역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1) 정책목표의 명확성,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3) 사회현안 반영도, 4) 정책의 실현가능성, 5) 정책의 형평성, 6) 정책의 민주성, 7) 정책의 책무성, 8) 정책의 효과성, 9) 정책의 만족도의 9개 평가지표도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평가는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라는 네 가지 큰 영역을 대상으로 9개의 세부지표를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2) 평가지표의 구성과 의미

가) 평가영역 1: 정책의 구조

①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정책목표가 누가 보기에든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목표의 명확성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특히 1) 정책을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3) 복수의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 목표 간 일관성이 있는지의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②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수단으로서의 정책과 정책목표 간에 원인과 결과로서 뚜렷한 논리적 연계성이 존재하는가로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제시된 정책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논리적 연결이 뚜렷하게 존재하는지를 평가한다.

나) 평가영역 2: 정책의 내용

①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는 대상 정책이 현재 거시적인 국가/사회의 목표(social goal)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제정책의 경우 경제성장, 사회복지정책의 경우 양극화해소 등 우리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문제와 관련된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증거들이 수집 분석되고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제도, 자원,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을 원래 의도한 대로 실현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1)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타당해야 하고(재정적 실현가능성), 2) 정책의 필요성과 목표에 비해서 소요되는 인력과 인프라가 타당해야 하며(행정적 실현가능성), 3) 정책의 법적근거가 충실히 마련되어야 한다.

③ 정책의 형평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정해야 하며, 정책의 형평성은 정책의 집행으로 인해 특정 집단이 피해를 입거나 혜택을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는 안되며,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집단이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혜택을 누려서는 안된다.

다) 평가영역 3: 정책의 과정

①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민주성은 정책과정(입안 및 집행)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얼마나 보장되고 그러한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진행되는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 혹은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누구나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책무성이란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필요한 경우 환류를 통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책무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1)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 있어야 하고, 2) 정책이 계획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 3) 이를 통해 필요한 경우 주기적인 환류를 통해 궤도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라) 평가영역 4: 정책의 결과

①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효과성은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따라서 정책이 원래 의도한 대로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혹은 정책이 고유의 목표 뿐 아니라 연관목표의 달성에 기여하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②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는 정책에 대하여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정책의 과정과 성과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심상을 반영하는 평가로 이루어진다.

2. 평가대상 정책의 선정

1) 평가대상 정책 선정 과정

본 연구진은 평가의 대상이 될 정책들을 선정함에 있어 크게 세 가지 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평가대상 정책을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담보된 샘플링(sampling)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개별 '정책'의 조작적 정의(定義)에 따라 평가 대상 정책 목록의 구성이 결정되므로 예컨대 근거 법령의 존재(신규 입법 혹은 개정), 예산 편성의 단위(項 혹은 目), 관할권의 확립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의 대상은 '정책'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본 과제는 정부의 평가가 아니라 개별 정책의 평가이다. 따라서 복수(複數)의 정부에 걸쳐 있는 연속적 정책도 존재할 수 있고, 반면에 동일 정부에서도 상이한(혹은 상충적인) 복수의 정책이 존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에 유념하여 평가 대상이 될 정책의 예비 선정을 2단계에 걸쳐 실시하였다. 우선 제1단계에서는 해당 정부 부처와 동아일보가 제공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망라적 목록(exhaustive list)을 만들었다. 해당 정부 부처는 동아일보의 요청에 따라 정책의 목록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특히 관련된 법령이 있을 경우 해당 부처는 이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동아일보의 해당 부처 출입기자가 검토의견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마련된 망라적 목록을 가지고 연구진 전문가 집단 검토 FGD(Focused Group Discussion)를 통해 취합된 정책들 중에 영역별로 다음과 같이 각 20개의 정책을 선별하였다. 전문가 집단 검토 시 고려된 요인들은 정책 목표 및 추진일정의 유무, 소요 예산의 규모, 전담 인원의 크기, 근거 법령의 존부(存否) 등이다.

[표 2-1] 경제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
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리강화
3		관세청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4		관세청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
5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
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 재생사업 실시
7		국토교통부	공유형 모기지
8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9		금융위원회	기술금융활성화 추진
10		기획재정부	규제완화및제도개선(투자활성화)
11		기획재정부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육성 (유망서비스산업육성)
12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활성화
13		농림축산식품부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14		미래창조과학부	온-오프라인 창조경제 확산
15		미래창조과학부	출연(연) 혁신
16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17		중소기업청	청년창업사관학교
18		중소기업청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
19		해양수산부	마리나 산업 육성
20		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표 2-2] 사회복지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도입
2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		보건복지부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4		보건복지부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5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지원체계 구축
6		보건복지부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7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8		보건복지부	수요자 중심의 무상보육 기반구축
9		보건복지부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10		보건복지부	보건소 건강증진 허브화
11		금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출범
12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

13	사회복지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14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15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16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17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보호대책
18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
19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20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표 2-3] 교육문화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교육문화	교육부	대학입시 간소화
2		교육부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
3		교육부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4		교육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5		교육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6		교육부	BK21플러스사업
7		교육부	지방대학 지원 확대
8		교육부	특성화 전문대학 집중 육성
9		교육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10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예술 종합연습장 조성
11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코리아 랩
12		미래창조과학부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
13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확대, 제작 지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14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 지원을 통한 지역민의 알 권리 보장
15		법무부	학교폭력예방대책(학생자치법정, 학교폭력예방 교육출장강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16		산림청	치유의 숲 조성 운영
17		산림청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
18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 공감대 확산
19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
20		환경부	생태관광 활성화

[표 2-4] 외교안보정책 분야 평가대상 정책 1차 선정 결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외교안보	외교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추진을 통한 신뢰구축 및 새로운 질서 창출
2		외교부	한미동맹포괄적전략동맹심화발전
3		외교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4		외교부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5		외교부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6		외교부	외교부 공공외교 역량 강화 사업
7		통일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및 국가이미지/위상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내실화 등 통일준비 역량 강화
8		통일부	탈북민자산형성지원사업등맞춤형정착지원

9	외교안보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10		통일부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11		통일부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12		통일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13		방위사업청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14		방위사업청	방산수출 확대
15		방위사업청	국방중소기업 성장지원
16		방위사업청	민군기술협력 활성화
17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
18		국방부	병사처우개선 - 병 봉급 인상
19		병무청	군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맞춤형기병제 신설
20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2) 평가대상 정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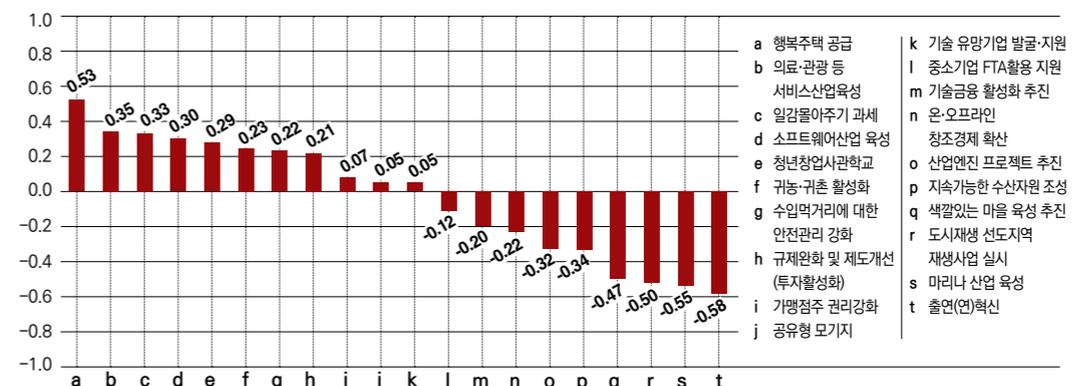
가) 설문조사를 통한 1차 선정 결과

위에서 언급한 제2단계 FGD를 통해 선정된 분야별 각 20개씩의 정책을 가지고 일반인 600명과 전문가 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설문조사는 인지도, 영향력, 우선시행 여부를 물었는데, 인지도는 “선생님께서서는 다음 정책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영향력은 “선생님께서서는 이 정책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시행 여부는 “선생님께서서는 이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각각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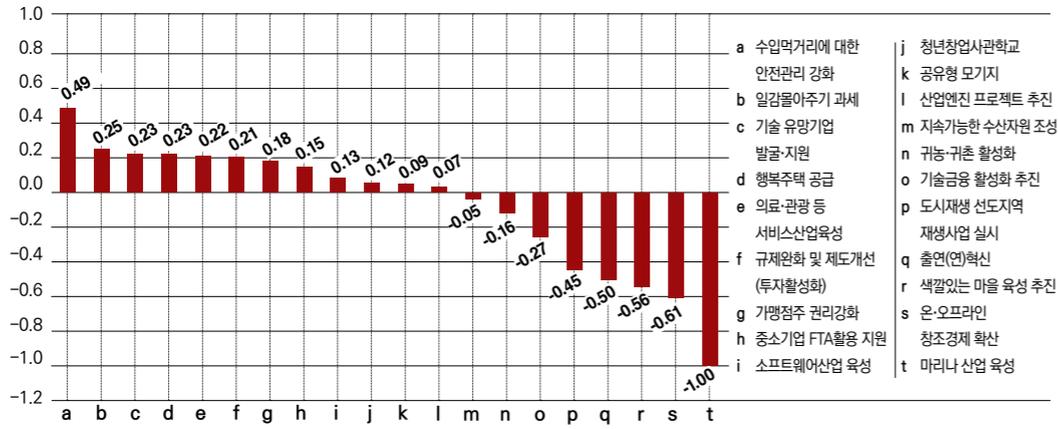
설문조사의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원점수를 표준점수화하고, 이를 가중 평균하여(전문가 60%, 일반인 40%) 점수화한 것이다. 이렇게 도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20개 정책의 순위를 파악하였다.

[그림 2-1] 경제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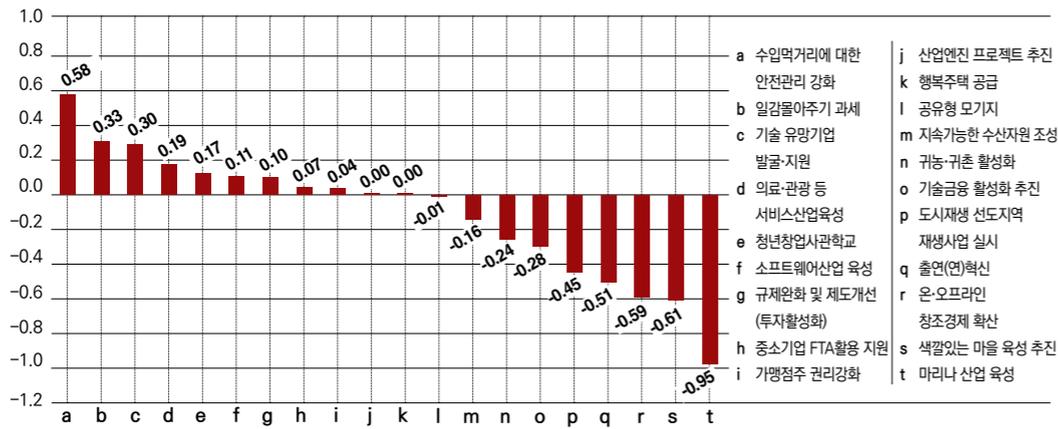
경제정책 분야: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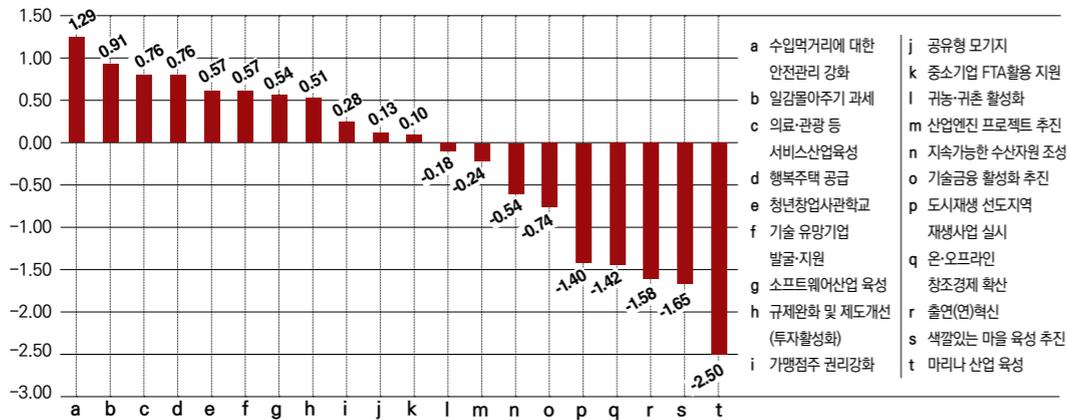
경제정책 분야 : 영향력



경제정책 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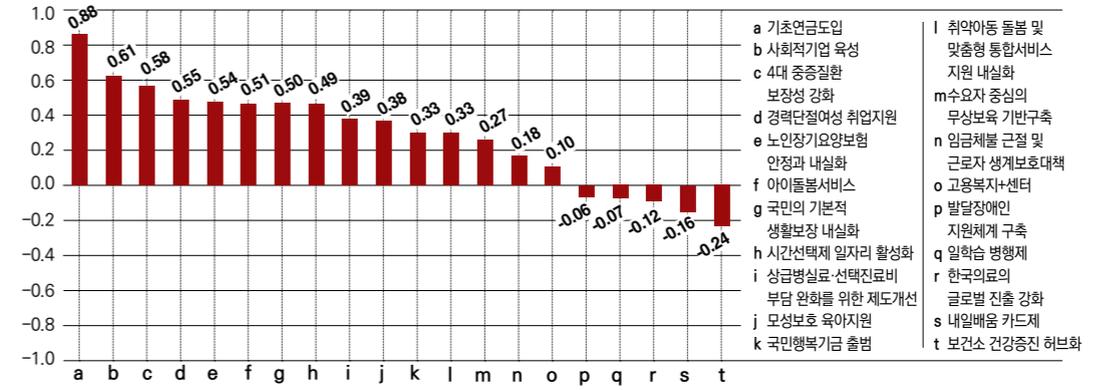


경제정책 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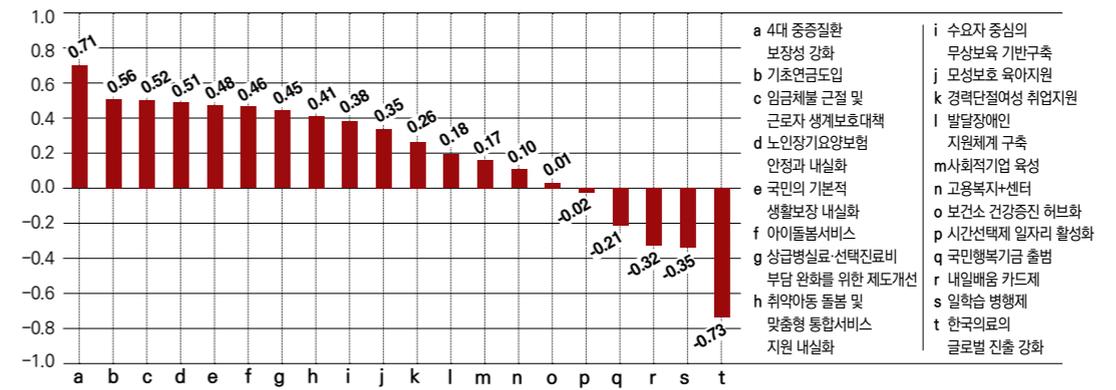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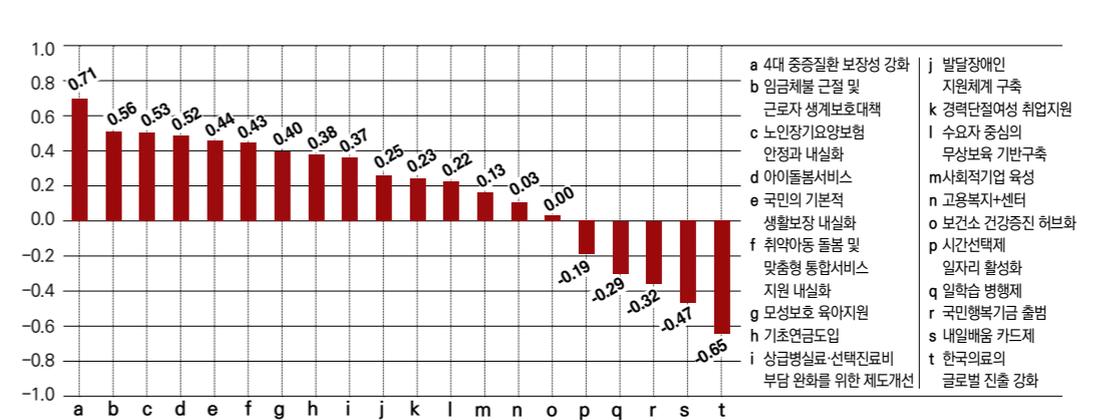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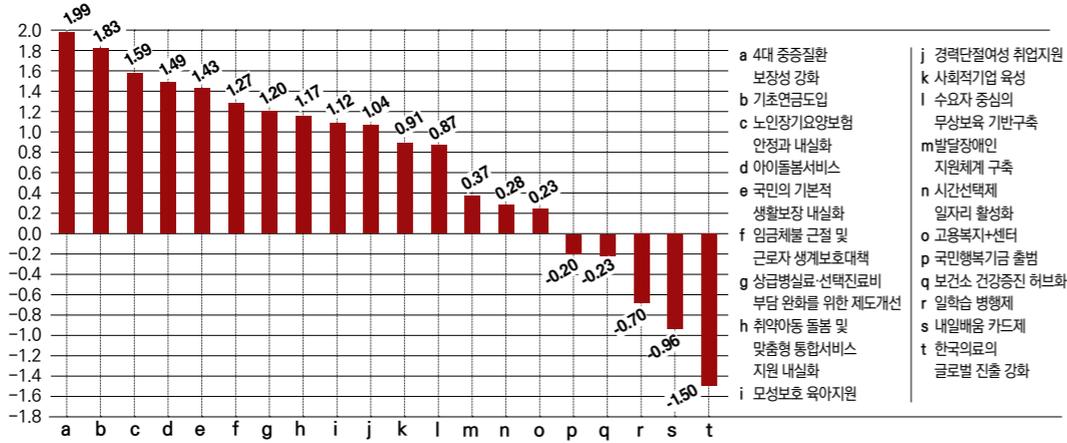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 영향력



사회복지 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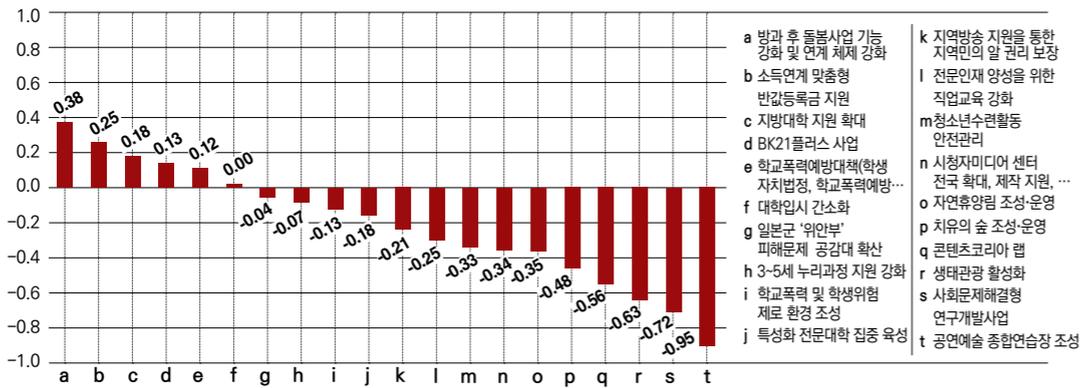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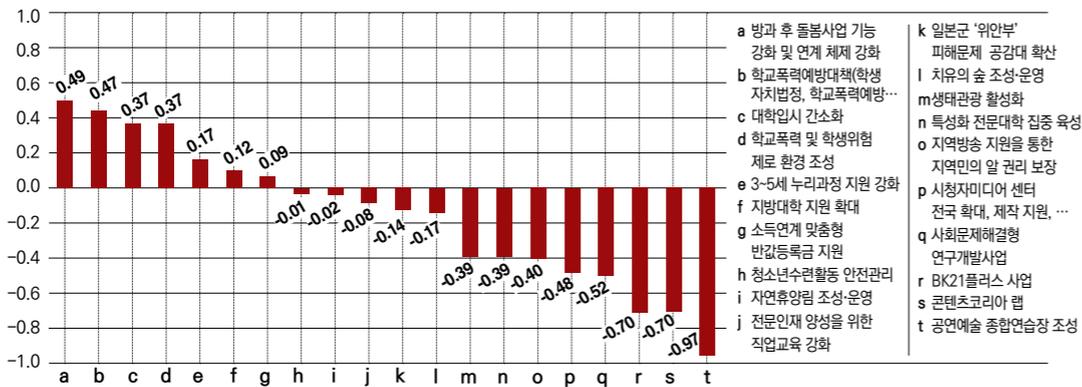


[그림 2-3] 교육문화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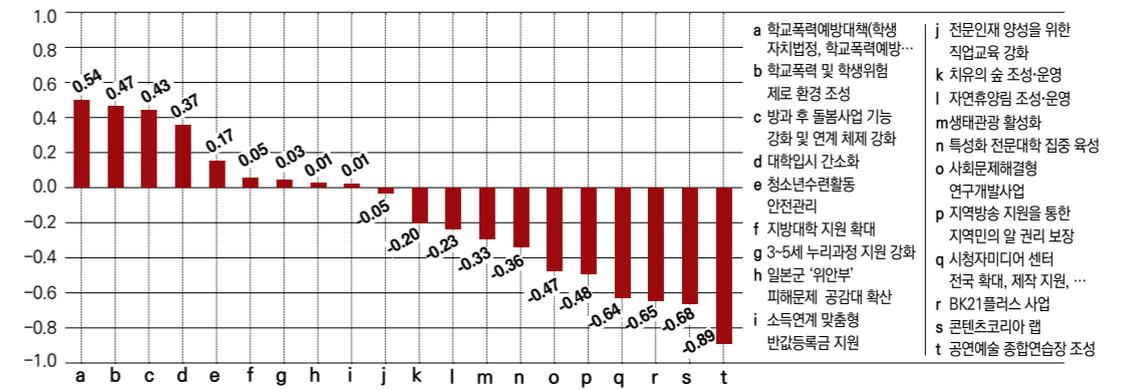
교육문화 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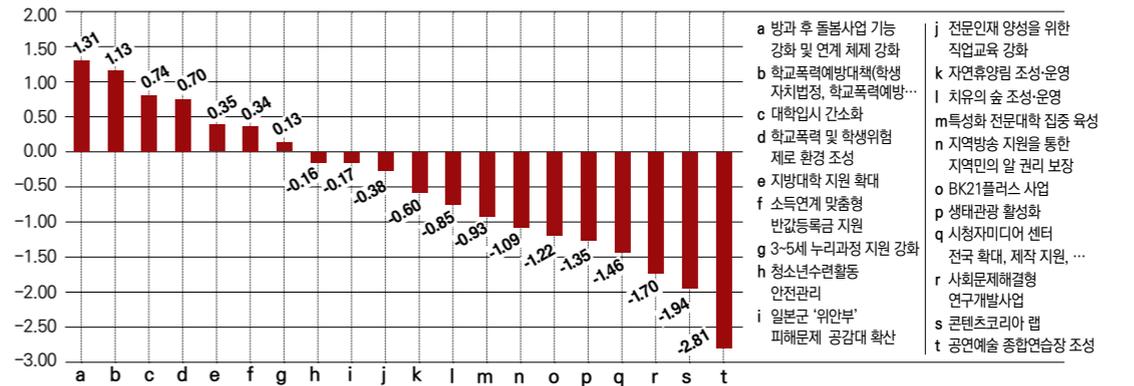
교육문화 분야 : 영향력



교육문화 분야 : 우선시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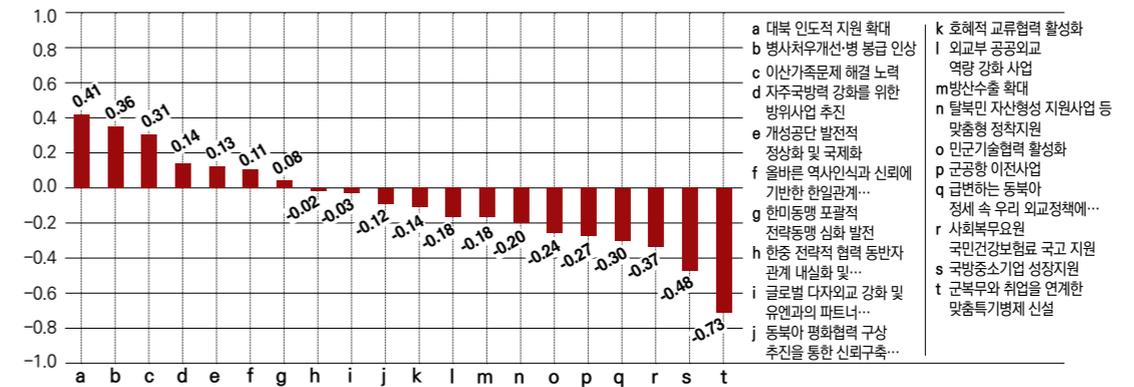


교육문화 분야 : 합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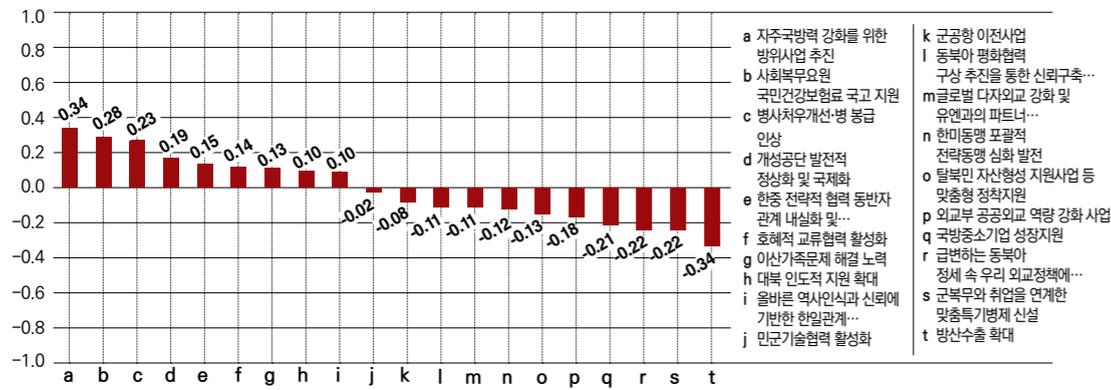


[그림 2-4] 외교안보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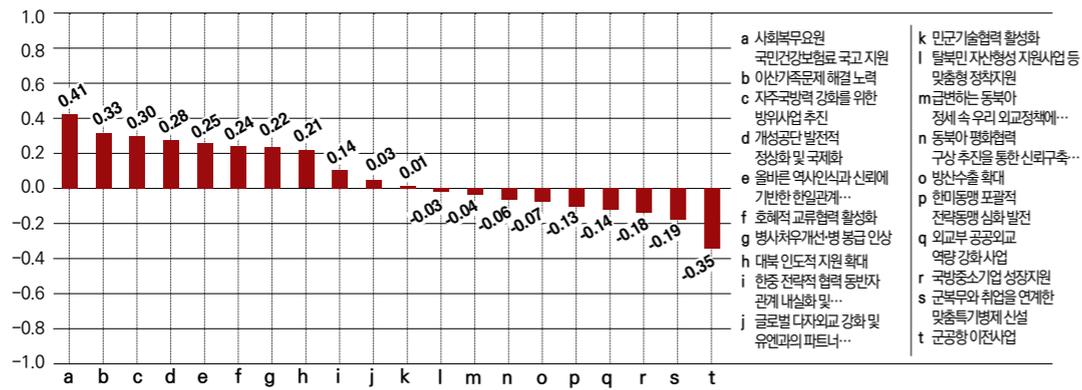
외교안보 분야 :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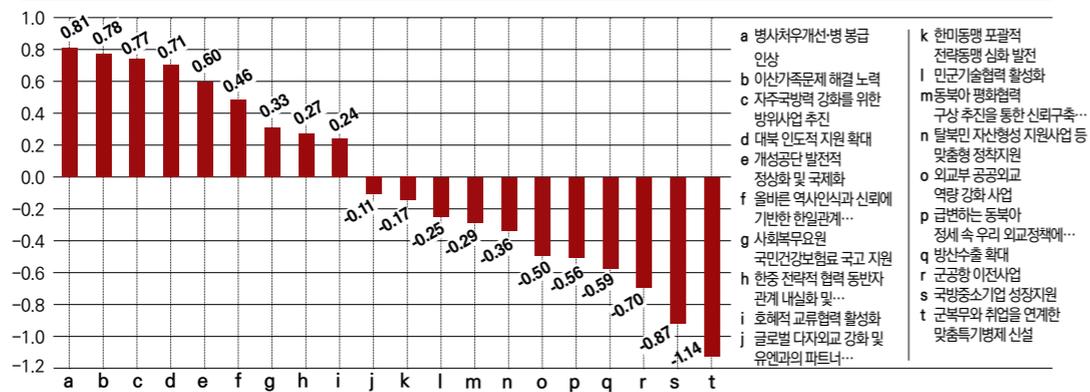
외교안보 분야 : 영향력



외교안보 분야 : 우선시행 여부



외교안보 분야 : 합산점수



나) 전문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한 2차 선정 결과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순위가 결정된 분야별 20개 정책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2차로 최종 10개의 정책을 선정하였다. 각 분야에서 선정된 정책 10개의 목록과 그 선정 근거는 각각 아래와 같다.

[표 2-5]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경제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경제	관세청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2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
3		기획재정부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육성(유망서비스산업육성)
4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5		해양수산부	마리나 산업 육성
6		중소기업청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
7		미래창조과학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8		농림축산식품부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9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리강화
10		국토교통부	공유형 모기지

선정 근거

경제정책 분야 1차 설문조사 결과의 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10개 평가대상 정책 중 7개를 상위 10순위 내의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연구진 회의를 통해 유사한 성격의 정책,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책 등을 제외하고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재정의 투입이 많거나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창업사관학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정책이 제외되고 대신 마리나 산업 육성, 색깔있는 마을 육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추가되었다.

[표 2-6]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사회복지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도입
2		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3		보건복지부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4		보건복지부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5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6		보건복지부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7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8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
9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10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선정 근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임금체불근절 및 근로자생계보호대책이 10대 정책에서 제외되고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10대 정책으로 포함되었다. 인지도, 영향력, 우선시행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아이돌봄서비스가 네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는 보육정책에 있어서 핵심 정책이라기보다는 소위 '무상보육' 체제, 즉 영유아 보육료지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양육수당 제도를 보충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예산에 있어서도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645억 원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크다. 또한, 최근에 가장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복지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임금체불근절 및 근로자생계보호대책은 1차 설문 결과 6번째 순위를 기록하였다. 이 정책을 통해서 일부 사업장에 만연해 있는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고 근로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2014년 7월 14일에 입법예고되었고, 설문 시점에 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평가 대상으로 넣을 수 없었다. 이에 다음 순위였던 사회적 기업을 10대 평가 정책으로 넣게 되었다.

[표 2-7]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교육문화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교육문화	교육부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
2		교육부/법무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
3		교육부	대학입시 간소화
4		교육부	지방대학 지원 확대
5		교육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6		교육부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7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
8		산림청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
9		교육부	BK21플러스사업
1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선정 근거

교육문화 분야에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은 국무총리실을 비롯 11개 부처에서 범정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법무부의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조성 확대와 치유의 숲 조성은 크게 보아 자연휴양림의 특성화 과정에서 질한 치유의 목적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확대된 것으로 판단하여 통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1차 조사결과 10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두 개의 정책을 추가하였다. 우

선 BK21플러스사업은 일반 시민에게 그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고등연구자 양성의 주축이 되는 정책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은 문화와 관광의 융합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며 주요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그 잠재적 중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외부전문가(언론)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평가대상에 포함하였다.

[표 2-8]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2차 선정 결과: 외교안보정책 분야

연번	분야	주관부처	정책명
1	외교안보	국방부	병사처우개선- 병 봉급 인상
2		통일부	이산가족문제 해결
3		방위사업청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4		통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5		통일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6		외교부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7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8		외교부	한중 전략적 협정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9		외교부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10		외교부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선정 근거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최종평가대상 10개 정책을 선정함에 있어 1차 평가 결과, 즉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였다. 다만 내부 연구진의 논의 결과, 1차 평가 결과 각각 4위와 9위를 기록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의 경우, 모두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으로서 정책내용의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차 평가 결과 11위에 해당하는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정책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최종평가대상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와 과정, 기준과 근거에 따라 분야별 각 10개씩 총 40개의 정책이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03

제3장 평가대상 정책의 개요

평가대상 정책분야 : 경제정책 / 사회복지정책 / 교육문화정책 / 외교안보정책
분야별 각 10개씩 총 40개의 정책이 평가 대상으로 최종 선정

1 경제정책 분야	034
2 사회복지정책 분야	039
3 교육문화정책 분야	045
4 외교안보정책 분야	052

경제정책 분야 청년창업사관학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정책이 제외되고 대신 마린나 산업 육성, 색깔있는 마을 육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추가되었다.

사회복지정책 분야 아이돌봄서비스와 임금체불근절 및 근로자생계보호대책이 10대 정책에서 제외되고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10대 정책으로 포함되었다.

교육문화정책 분야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은 교육부와 법무부의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조성 확대와 치유의 숲 조성은 통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BK21플러스사업과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정책을 최종 평가대상에 포함하였다.

외교안보정책 분야 1차 평가 결과 각각 4위와 9위를 기록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의 경우, 모두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정책으로서 정책내용의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1. 경제정책 분야

1)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관세청)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의 주무부처는 관세청 통관기획과이며, 관세법 제226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제24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2013년 3월 1일에 시행된 본 정책은 불법·유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수입 식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여 국민건강 보호 및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하여 본 정책은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 대상 품목을 지정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 검사의 경우 식약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고자 식품류 검사율을 일반 품목의 검사율(3% 내외)의 5배에 달하는 15.1%로 증가시키고 적발률을 분석하여 대상 품목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을 기해 식품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14. 01~10)하여 172개 업체(총 1,312억 원)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 역시 거두고 있다. 더 나아가 본 정책의 경우 원산지표시단속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교류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사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정책에 특별히 반영된 예산은 없으나, 본청 정책담당자 외 일선세관 '수입식품안전대책단(463)'을 운영하여 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수입 식품의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정책의 수혜 집단은 일반 국민 전체라고 볼 수 있으며, 손해 집단은 따로 없으나 일반 식품 수입자 및 유통업자가 규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식약처 등 관계부처 협의 시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¹⁾

2) 일감몰아주기 과세(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책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서 도입하여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본 정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수 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여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살펴볼 때 본 정책의 수혜 집단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이득을 보는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으며, 손해 집단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친족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 파악 가능하다(국세청, 2014). 국회 내 입법 과정에서는 손해 집단이 되는 지배주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중소·중견기업의 과세 요건이 낮아지는 결과를 도출해내었으나, 정책 집행 이후에는 별도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정책은 관련법을 집행하는 것에 그치므로 별도의 정책 예산, 추진 일정 및 성과지표는 존재하지 않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수혜 법인(지배 주주)의 유형별로 과세대상 인원 및 세액만을 명시하고 있다.²⁾

1) 이 평가를 위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두어 작성하였음.
2) 이 평가를 위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두어 작성하였음.

3)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유망 서비스산업 육성(기획재정부))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의 주무 부처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이다. 2013년 5월에 시행된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은 의료, 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15조 원 이상의 투자와 18만 명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해당 유망 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이며, 성과 확보를 위하여 유망 서비스 분야별 핵심 성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유망 서비스 분야별 핵심 성과 목표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해외 환자(연 환자 수)를 대상으로 2013년에는 21만 명(65만 명)을 목표로 하였고, 2017년에는 50만 명(150만 명)을 목표로 한다. 관광·콘텐츠 분야의 경우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13년에 1,218만 명, 2017년에는 2,000만 명을 성과 목표로 설정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2017년에 우수 외국대학 3개의 유치를 목표로 한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금융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대상으로 2013년의 경우에는 6.7%를 설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8.0%를 목표로 삼는다. 물류 분야의 경우에는 물류산업 매출의 목표를 2013년에는 92조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135조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우 SW 수출을 대상으로 2013년에는 40억 불이 목표였으며, 2017년에는 70억 불이 성과 목표이다. 이렇게 서비스 분야별 정책목표를 가진 본 정책의 수혜집단은 지원 받는 6개 서비스 분야의 종사자이다. 예산의 경우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각종 재정지원을 통해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³⁾ 정책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4년 9월 3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새누리당 주최로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간담회의 주요 참석자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정희수 기획재정부 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 연구기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총 연합회 등 서비스단체, 그리고 디자인 관광분야 등 업계 종사자 등이 꼽힌다. 본 간담회에 참석한 서비스 산업계 및 연구기관에서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발표하였고, 필요시 관련 부처에서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관련 법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앞으로 분야별 정책설명회와 현장방문, 그리고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추진할 예정에 있다(구창환, 2014).

4)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급 정책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로 공공주택건설추진본부 행복주택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행복주택 공급 정책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직주근접과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근거법령으로 하는 행복주택 공급 정책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2013년 서울 6곳, 경기 1곳 등 수도권 7곳에 시범지구 지정 이후, 2014년 3월 초 부산, 인천 등 19개(약 13,325호)의 지자체와 사업추진 협의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수도권(9개, 6,230호) 및 지방(10개, 7,095호) 등에 골고루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공급은 연차별로 공급 예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3.8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에 따라 그

3) 이 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두어 작성하였음.

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되었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정책의 수혜 집단에 속하게 된다(국토교통부, 2014).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2013년 6월 28일~7월 15일, 총 18일)를 실시하였고, 간담회(2013년 12월 18일)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여론조사에서 희망 임대료 및 평형, 입주자격 기준, 입지 조건, 필요 시설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젊은 층 우선공급에의 공감도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여론조사 대상은 입주대상(750명)과 시범지구 일반시민(250명) 등 1,000명(19세 이상), 대학생, 사회초년생(사회생활 5년 이내), 신혼부부(혼인가간 5년 이내) 각 250명이었다. 2013년 12월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국토부, LH, LHI, 시·도(17개), 50만 대도시(15개)의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임대주택 담당과장, 그리고 지방공사의 관련부서 책임자 등이 참석하여 도심 주거지재생사업과 행복주택사업의 연계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국토교통부, 2013). 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는 4,29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2013년에서 2020년까지의 총 소요예산의 경우 7조 5,894억 원으로 책정되었고, 이는 연 평균 9,487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⁴⁾

5) 마린 산업 육성(해양수산부)

마린 산업 육성 정책의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이다. 본 정책은 마린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3. 10. 31. 마린 선박 대여업 신설 등을 위한 법 개정안 국회 발의)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하였으며, 2014년 4월 15일 마린산업 육성대책이 수립되면서 시행되었다. 본 정책은 2017년까지 마린 산업 관련 신규일자리 8천개 창출하고 2019년까지 마린 시설을 현재(1,650선석)의 4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무 부처는 마린 관련 인프라 확충, 마린서비스업 활성화,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 레저선박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년간 다음과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 소요 예산은 2,782억 원에 달한다.

[표 3-1] 마린 산업 육성 정책 예산편성 내역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원)	273억	710억	825억	974억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자료 제공

본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마린사업자이나, 마린산업의 육성을 통해 수상레저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간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정책은 마린 산업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마린 산업 육성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반기 1회)함으로써 이해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국내외 전문가 및 학계 의견 수렴을 위해 국제 컨퍼런스 및 포럼을 매년 정기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요정책 설문조사(연 1회, '13.11, '14.11)를 실시하고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민원과 제안에 대응함으로써(연중 수시) 간접적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의견 역시 수렴하고 있다.⁵⁾

4) 이 평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두어 작성하였음.
5) 이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두어 작성하였음.

6) 기술 유망기업 발굴 지원(중소기업청)

기술유망기업 발굴 지원 정책의 주무 부처는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기술개발과로,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199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정책의 목표는 미래에 성장이 유망한 분야와 FTA에 대응하여 글로벌 전략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시행일인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8년간 2조 8,473억 원(연평균 1,58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⁶⁾ 본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집단은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⁷⁾

7)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미래창조과학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정책의 주무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다. 본 정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약칭: 단말기유통법)」에 근거한다. 단말기유통법의 제정(2014년 5월 28일) 이후 시행령 및 고시가 제정(2014년 9월 24일)됨에 따라 법 시행(2014년 10월 1일)과 동시에 2014년 10월부터 정책이 시행되었다. 해당 정책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이용자 간의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는데 그 목표를 갖는다. 나이가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정책의 수혜집단은 통신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0월 17일, 단통법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이통사 및 제조사 CEO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사회적인 논란과 함께 국민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미래창조과학부, 2014)⁸⁾. 단통법의 예산은 2014년에는 미반영 되었지만, 2015년에는 16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다.⁹⁾

8)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농림축산식품부)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정책의 주무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이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를 근거로 2012년에 시행된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정책은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의 수립하고, 특색 있는 마을 발전을 지원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그에 따라 2017년까지 5,000개의 색깔있는 마을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정책 수혜집단은 농촌지역 주민들이다.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특별한 공청회는 없지만 정책지원 프로그램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농촌현장포럼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회의 프로

6) 이 평가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두어 작성하였음.
7)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사례집」이 전시되어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2013년과 2014년의 우수성공사례집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mtech.go.kr/front/ifg/eb/bestCaseBook.do>
8) 미래창조과학부(2014),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11.11.
9) 이 평가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두어 작성하였음.

그럼인 농촌현장포럼을 위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의 전문가, 행정 전문인력인 농촌 현장 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회의(피실리테이션 기법 활용)를 진행하였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경우 전국 대학을 중심으로 9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본 정책의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각각 절반씩 분담하고 있으며, 국비 기준으로 2013년도 예산은 1,076억 원, 2014년도에는 1,622억 원이 소요되었다.¹⁰⁾

9) 가맹점주 권리강화(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리강화 정책의 주무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이며, 가맹거래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 정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4년 2월 14일에 시행되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합리한 거래관행 및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가맹희망자 등이 본 정책의 수혜집단에 해당한다. 본 정책은 주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24시간 영업시간 및 매장리뉴얼 강요금지, 가맹본부에 의한 리뉴얼 시 비용 분담(20~40%), 가맹계약 시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 및 영업지역 내 추가 가맹점·직영점 설치 금지 등의 방식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고시, 표준가맹계약서(3종) 등 하위 고시를 제·개정하여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본 정책은 제과제빵, 화장품, 외식 및 커피전문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중점감시업종)를 선정하여 현장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시장 감시활동 역시 강화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 공개제도(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franchise.ftc.go.kr)를 운영하여 가맹창업자에게 가맹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성 모집을 예방하며, 가맹점 사업자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 사업자(약 2만 명) 등에게 분기별로 정책 소식, 심결 및 분쟁조정 사례 등 관심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 정책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만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시행 이후에도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5개 권역(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별 가맹점주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신규 도입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국민 체감도를 점검(상·하반기 2회)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¹¹⁾

10) 공유형 모기지(국토교통부)

공유형 모기지 정책의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이고, 주택기금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본 정책은 「주택법 제63조(기금의 운용용도)」를 근거로 2013년 10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12월에 본 사업이 연이어 시행되었다. 공유형 모기지 정책은 주택기금과 주택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신개념의 정책모기지로, 평범한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표를 가진다. 그에 따라 정책 수혜집단은 평범한 봉급

생활자 혹은 신혼부부이다. 공유형 모기지 정책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수익공유형의 경우 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로 용자하고, 주택 매각 시(또는 만기 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공유형의 경우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저리 모기지(1~2%)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종료 후에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이후 문제점 보완, 재정여건 감안,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확대 여부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¹²⁾(국토교통부, 2013). 정책 추진 예산의 경우 주택시장 상황, 주택기금 예산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 시행일자(2014년 12월 9일)부터 2조 원(약1.5만호)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¹³⁾

2. 사회복지정책 분야

1) 기초연금제도(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로서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이 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정책의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인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이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천 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기초연금은 읍·면·동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서 작성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접수된 신청에 대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을 결정 및 통보하고, 시·군·구 사업과에서 수급여액을 전달하게 된다.

이 정책은 기초연금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예산은 전액 조세에서 조달된다. 2014년 국비예산은 5조 2,014억 원이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으로 산출하면 연평균 예산은 약 3조 4,000억 원이다. 또한 2014년 지방비 매칭예산은 1조 7,720억 원이다.

2)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목표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4대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구의 재난적 의료

10) 이 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11) 이 평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12) 국토교통부(201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3. 9. 12.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2013), 2013. 12. 3. (<http://korealand.tistory.com/2514>)

13) 이 평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에 두어 작성하였음.

비 부담과 이로 인한 가계파산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2013년 6월 26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3년 10월 초음파검사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관련 비급여 정비를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정책의 수혜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12년 환자수 기준 159만 명)이며, 2013~17년간 건강보험 재정 약 9조원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요될 예정이다. 급여는 기존 의료보장체계 내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화한 것으로서, 기존 의료보험 전달체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의료보장급여로 전달된다.

[표 3-2]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현황

구분	계	행위	치료재료	약제
항목수(개)	25	4	1	20(1*)
대상자**(명)	115만 2천	7만5천	5만7천	102만(20*)
소요재정(억)	3,795~3,935	3,480 ~ 3,520	100~200	215(20*)

*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 / ** 초음파 검사 대상(150만 명) 제외
출처: 보건복지부(2014)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3)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보건복지부)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목표는 비급여 선택진료제 단계적 축소 및 폐지,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부담 경감, 상급병실 제도개편을 통해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특수병상 공급 확대 등의 유도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함으로써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거법령은 의료법 등(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시행령,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4년 8월 1일 선택진료액이 평균 35% 인하된데 이어서, 2014년 9월 1일에는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일반병상이 확대되었다. 선택진료는 2017년까지, 상급병실은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정책의 수혜자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이용자이다. 전달체계는 공단을 통해 의료보장급여로 전달된다. 정책의 예산은 2014년 국민건강보험재정 지원금 기준으로 약 6,550억 원, 2015~17년 연평균 2,390억 원의 신규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4)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보건복지부)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정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이다. 정책목표는 아동 및 가족에게 돌봄 및 맞춤형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방과후돌봄서비스, 아동통합서비스 등의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역량 개발 및 전인적 성장을 도와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경우, 2004년 민간 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하고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2007년 16개 시·군·구 시범사업을 통해 시작되었다.

정책의 수혜자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신고정원의 60% 이상 우선보호아동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가족으로서,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법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의 전달체계는 방과후돌봄 사업의 경우, 시·군·구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지원하며,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시·군·구에서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사업에 소요된 총 누적예산총액은 7,987억 원이며, 방과후돌봄서비스에 소요된 금액은 5,644억 원, 아동통합서비스지원운영에 소요된 금액은 2,343억 원이다. 연평균 예산 규모는 1,597억 원이며, 2014년 방과후돌봄서비스에 국비예산 1,319억 원이, 지방비 매칭예산 1,415억 원이 소요되었다. 아동통합서비스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2014년 6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시·군·구별 3억 원이 배정되었다. 단, 서울은 2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운영비 지원은 기존설치지역 30백만 원, 신규선정지역 150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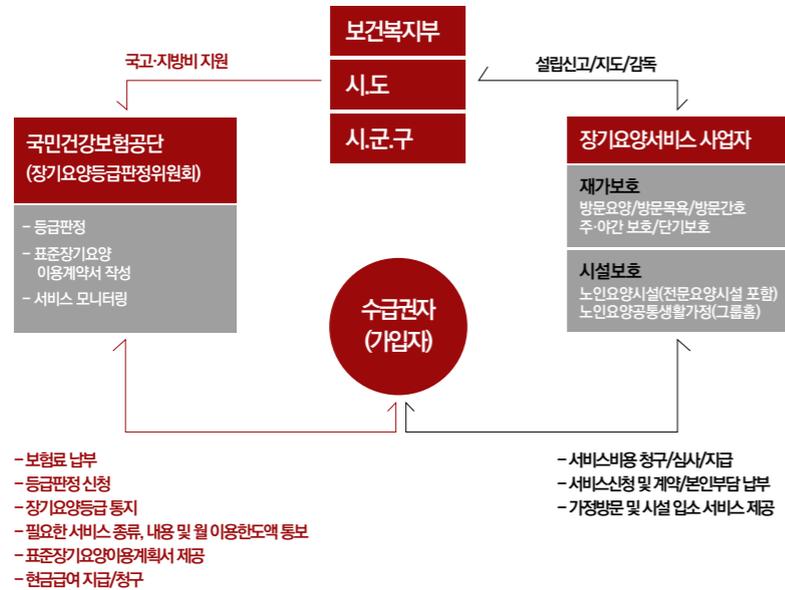
5)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며, 중앙정부 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가 주무부처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면서 2008년부터 시작되게 되었다. 2014년부터는 법령 개정을 통해 등급체계 개편 및 5등급 신설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수혜자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혹은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국민들 중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이다. 장기요양등급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한 사람들 중 활동 능력에 대한 사정을 걸쳐 장기요양 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된 노인에 한정되고 있다. 65세 미만의 성인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활동보호지원제도를 통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달체계는 아래와 같이 공단, 지방정부, 그리고 서비스 공급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장기요양보험재정은 현재 2013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 재정추계에 의해 4조 1,509억 원이며, 이중 국고지원금은 5,033억 원이다. 2008년 이후로 누적 총액은 13조 9,811억 원이며(국고 1조 9,174억 원), 연평균 예산 규모는 2조 7,962억 원(국고 3,835억 원)이다.

[그림 3-1]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2014)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6)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이다. 생계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2014년 11월 현재 사각지대 완화 및 탈수급 유인제고를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0년 이래로 시행되고 있다.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이때 소득인정액은 현금소득 및 재산을 통해 추산된다. 기초생활급여의 전달체계는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을 통해 급여가 관리되는데, 읍·면·동 대민 서비스 창구에서는 상담, 신청안내, 신청·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격관리를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액 조세를 통해 운영되며, 2000년 이래 현재까지 누적된 예산 총액은 36조 3천억 원이며, 연평균 예산 규모는 7조 3천억 원이다. 2014년 국비예산액은 34,867억 원이며, 지방비는 8,639억 원이 소요되었다.

[표 3-3]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명 가구	2명 가구	3명 가구	4명 가구	5명 가구	6명 가구	7명 가구
금액(원/월)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생활보장제도 시행지침

7)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이다.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 74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용보험법 제70조, 제73조의2, 제 75조에 근거하고 있다. 정책 목표는 임신, 출산에 따른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며 경제활동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2001년에 시작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임신 중의 여성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센터를 통해 급여의 신청과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누적 집행액은 3조 9,440억 원이며, 연평균 2,8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2014년 예산액은 6,982억 원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에 소요되었다.

8) 사회적 기업 육성(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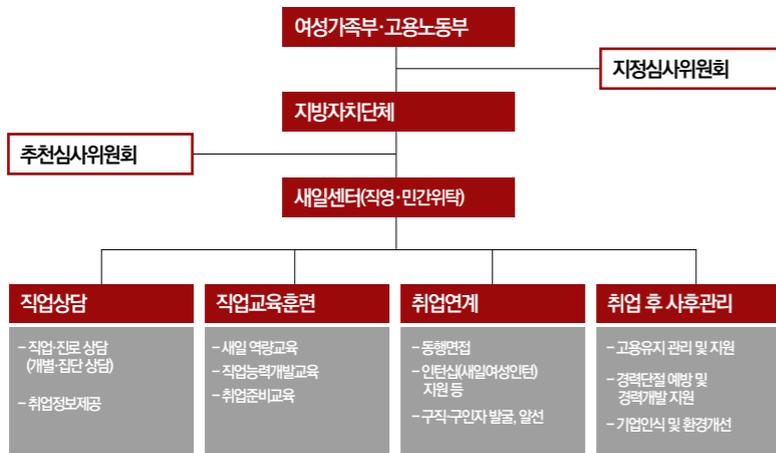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의 운영주체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며,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 사회적기업과이다. 사회 내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7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이 사업의 대상은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을 충족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업체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업무 및 지원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1조 2,524억 원이며, 연평균 약 1,56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2014년 예산은 1,559억 원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판로 및 인프라 지원, 인건비 지원 등에 소요되었다.

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업무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이며,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의 수혜자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육아 등으로 인해 이전 경력에 단절되었거나, 현재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모든 성인 여성이 해당된다. 사업은 아래와 같이 여성부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지원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에 소요된 누적총액은 891억 원이며, 연평균 297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2014년 예산액은 409억 원이다.

[그림 3-2] 경력단절 취업지원 사업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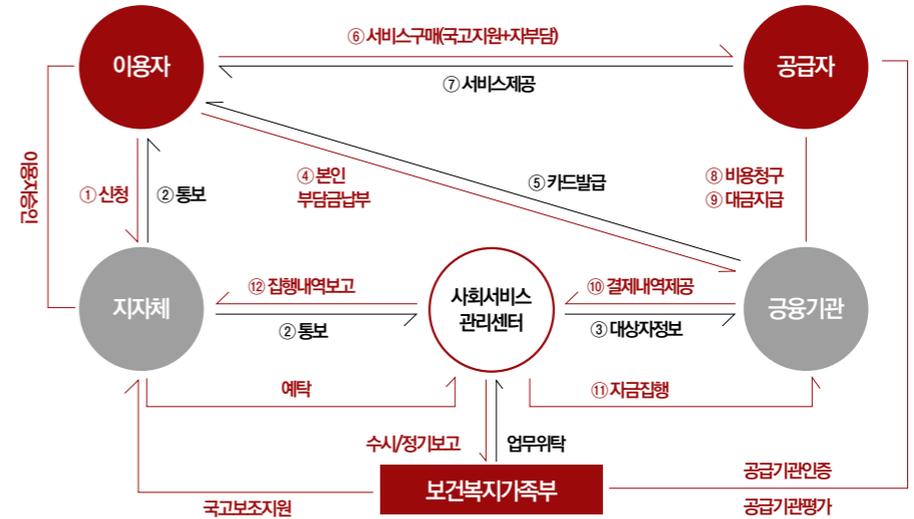


10)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로, 정책 목표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부모의 다양한 근로형태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여성 경제활동의 활성화 유도이다. 2013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만 5세 이하 아동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게 되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전자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수급하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의 경우 양육비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급여의 청구와 집행은 시·군·구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에서 양육수당으로 소요된 총 예산은 연간 9,043억 원이며, 2014년 보육료 지원 국비예산은 3조 802억 원, 지방비예산은 2조 208억 원이다. 또한 양육비의 경우, 2014년 기준 국비예산이 1조 1,208억 원이며, 지방비예산은 7,661억 원이 책정되었다.

[그림 3-3] 보육료 지원사업 전달체계

출처: 보건복지부(2014)



3. 교육문화정책 분야

1)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교육부)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 정책의 주무 부처는 교육부로 방과후학교지원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12년 10월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등 추가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22시까지 저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14년에는 초등 1~2학년 희망하는 모든 학생 수용을 위한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및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여,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은 '13.4월 현재 5,784교, 7,395실, 약 16만 명의 참여에서 '14년 6월에는 5,938교, 10,966실, 약 22만 1천명 참여로 증가하였다(표 3-4참조). '14년 이 정책의 누적예산 집행실적은 1,008억 원에 이르고 있다.

[표 3-4] '13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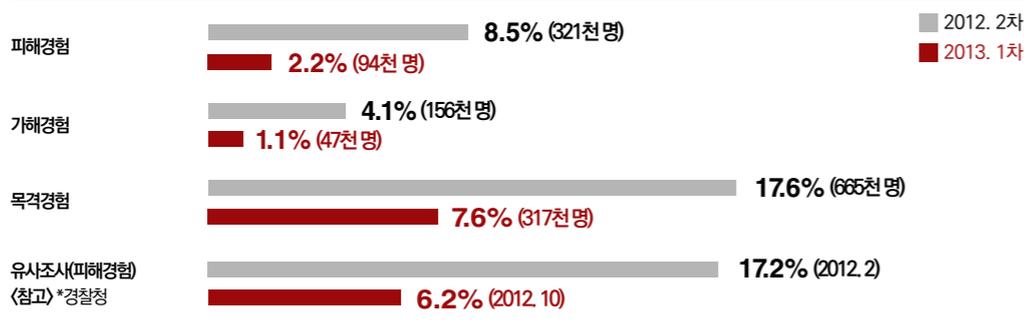
구분	운영시기(시간)	학교 수	돌봄교실 수	학생 수
오후돌봄교실	방과후 ~ 17:00	5,784교 (97.8%)	7,395실	159,737명
온종일돌봄교실(오후돌봄 연장 운영)	06:30 ~ 22:00	1,459교 (24.7%)	1,927실	38,738명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4.1.28)

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교육부/법무부)

이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12년으로, 2012년 2월 6일 “학교폭력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정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 대책을 7대 정책으로 세분화하여 발표했으며, 당해 연도 7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 정책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11개 부처에서 범정부합동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예방대책은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대책의 정책 목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에 대한 학교 역량을 제고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주요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조기발견 및 학생자살예방 체계 확립하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주관의 학교폭력예방대책은 학교폭력예방 및 폭력방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본 정책은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다양한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지원,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 등 맞춤형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강화와 가해학생의 가해행위 재발방지에 역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학교 역량 제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 학생자치법정, 학교폭력예방 교육 출장강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등 크게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2,200억원(누적)이며,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위한 예산은 166억원(누적)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초등학교 4-6학년, 중·고 전체학생 약 520만 명을 대상으로 ‘12년도와 ‘13년도에 각각 실시하였다. 주요한 조사결과는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참조). 예를 들면, 학교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12년도에 17.6%에서 ‘13년도에 7.6%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4]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12년 2차, '13년 1차)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4.7.23)

3) 대학입시 간소화(교육부)

대학입시 간소화는 지나치게 복잡한 입시전형을 간소화하여 대입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지역, 계층을 고려한 고른 입학 전형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목적을 토대로 수시는 학생부, 논술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로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면서 대학별 전형방법 수 기준도 제시되었다.

수능의 경우 체제 개선을 위해 수준별 수능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우선 2015학년도에 영어 과목을 폐지하고, 2017년도까지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 중심의 학생부 위주 전형 비중을 확대하여 학생부 위주의 전형 선발 비율을 2014학년도에 44.4%에서 2015학년도에 55%, 그리고 2016년도에 57.4%로 확대할 예정이며, 반면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논술, 적성, 구슬고사 운영은 지양함으로 논술 고사 선발 인원을 2014학년도에 17,737명에서 2015학년도에는 17,417명, 2016학년도에는 15,349명으로 점차 줄이고, 적성 고사 선발 인원의 경우 2014학년도에 19,420명, 15학년도에 5,835명, 그리고 16학년도에는 4,639명으로 급격히 줄일 계획이다. 대입전형 사전 예고 강화 및 발표 후 변경 제한을 위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기존 1년 6개월 전에서 2년 6개월 전으로 변경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기존 1년 3개월 전에서 1년 10개월 전으로 변경한다. 마지막으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확대를 위해 농산어촌, 저소득층 및 지역인재 전형 등 고른 기회 입학전형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정책예산은 610억 원이다. 특히 2017학년도 이후 수능체제는 현행 골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그 동안 제기된 문·이과 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함께 제시하여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그 발전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구체적인 수능체제 개선방안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5] 2017학년도 수능체제 개선방안(안)

구분	현행	제1안: 문·이과 구분안 (현행 골격 유지안)	제2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제3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취지	학생 수준별 학업 능력평가	문·이과 계열별로 집중 학습한 과목 평가	문·이과 계열별로 교차하여 과목 선택	문·이과구분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 평가	
장단점	- 수험부담 완화 - A/B형 선택에 따른 혼선 발생	- 수능시험의 안전성 유지 - 문·이과 구분없는 교육과정 취지에 배치	- 시행상의 문제 최소화 - 제도개선 취지 미흡	- 계열 구분없이 융복합 인재양성 - 제도 변화에 따른 학생·학부모 부담 가능성	
국어	A: 화법과 작문 I, 독서와 문법 I, 문학 I B: 화법과 작문 II, 독서와 문법 II, 문학 II	공통(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수학	A: 수학 I, 미적분과 통계 기본 B: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가: 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나: 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공통(수학 II, 미적분 I)+ 선택 1과목(미적분 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공통(수학 II, 미적분 I, 확률과 통계)	
영어	A: 영어, 영어 I B: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심화영어회화	공통(실용영어 II, 영어 I, 영어 II)			
한국사	-	필수			
사회탐구	선택한 영역에서 택2 - 사탐: 10과목 중 택2	선택한 영역에서 택2 - 사탐: 9과목 중 택2	사탐 택2+과탐 택1 또는 과탐 택2+사탐 택1 또는 직탐 택2+기타 택1	(공통)사회 과목+(융합)과학 과목	
과학탐구	- 과탐: 8과목 중 택2	- 과탐: 8과목 중 택2			
직업탐구	- 직탐: 10과목 중 택2	- 직탐: 10과목 중 택2		10과목 중 택2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1	현행 유지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14.8.28)

4)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교육부)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은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원 확대, 지방대학생 채용기회확대 등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부에서 주관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선정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14.1) 및 동법 시행령 제정(14.7)하였다. BK21 플러스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대학을 배려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K21플러스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국”과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지역” 사업단(팀) 수 45% 내외, 지역 사업단(팀) 예산 35% 내외 수준을 보장한다. 이때 “지역”에는 KAIST, 포항공대, GIST, UNIST, DGIST 등 5대 과기대 제외되며, “전국”에는 지방대학도 지원 가능하다. 또한 LINC 사업으로 지역산업에 특성화된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대학을 증점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대학을 51개교에서 57개교로 확대하여 시행되었다. 지방대학지원 확대정책의 예산은 2,577억 원(누적)수준이다. 특히,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교육을 잘하는 대학, 산학협력을 잘하는 대학, 연구력이 높은 대학을 정책목표로 지방대학의 성과모형을 제시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림 3-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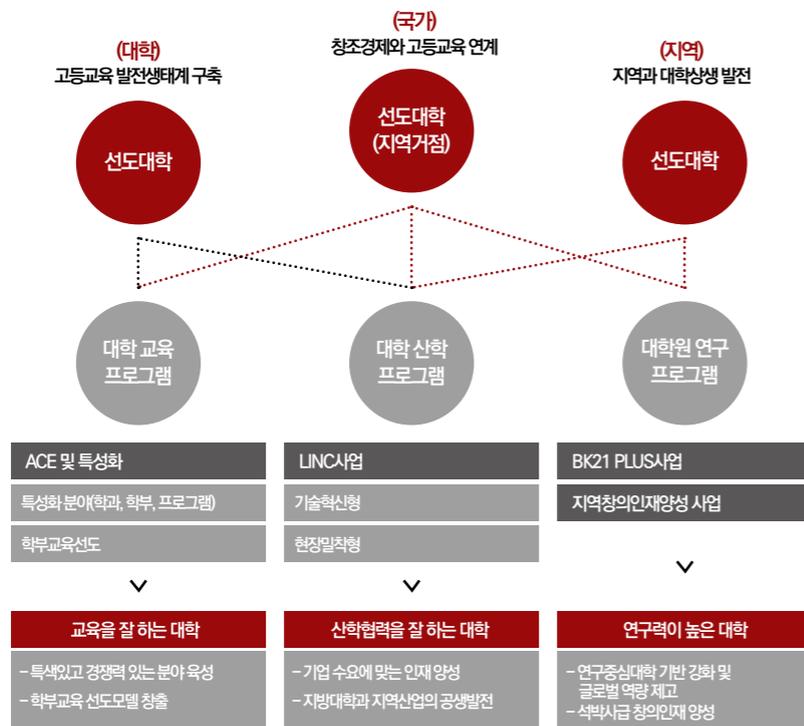
5)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교육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은 교육부가 주관부처로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고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4조 원)와 대학(3조 원)이 분담하여 '15년까지 등록금 총액(14조 원)대비 전체 학생 부담을 절반(50%) 수준으로 경감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정부재원 장학금*(3.7조 원)과 대학의 자체노력(3.1조 원)을 포함하여 '14년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는 48.3% 수준이었으며 '15년까지 정부재원장학금(4조 원)과 대학자체노력(3조 원)을 통해 7조원을 확충하여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은 '11년 등록금 총액기준으로 '13년도 42.8%, '14년도 48%이며 '15년도에는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보호(13년 대비 1인당 22.5~180만 원 증)하고,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 물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성적기준(현행 B0)을 완화*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한 정책예산은 누적금액 8조 4,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14년 국가장학금 3.5조 원, 근로장학금 등 기타장학금 0.2조 원 등 약 3.7조 원
* C학점 경고제: 기초 ~ 1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C학점)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미지원

[그림 3-5] 지방대학의 성과모형

자료: 교육부 지방대학육성방안, 국정과제 기본계획(2013.10)



6)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정책(교육부)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정책은 생애출발단계부터 균등한 교육·보육 제공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으로 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 본 정책을 주관한다. 정책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의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유아단계부터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하는 것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전 계층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국·공립유치원 1인당 월 6만 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22만 원)으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은 7조 6,688억 원(누적)으로 상당한 수준이며, 최근 누리과정 소요재원의 부담을 둘러싸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요 재원 확보와 같은 대처를 통해 정책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누리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월 지원 금액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과정의 지원 대상이 '11년도에는 소득하위 70%로 국한되었으나, '13년도는 전 계층(100%)로 확대되었다. 또한 월 지원금액도 '12년도와 '13년도에는 연령별로 차이를 두어 지원하였으나, '14년도부터는 차등 없이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금액도 '13년도 22만 원에서 '14년도 24만 원, '15년도 27만 원, 그리고 '16년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표 3-6] 3-5세 누리과정 변화과정

구분	2011년	2012년(현행)	2013년
지원대상	- 만 3, 4, 5세: 소득하위 70%	- 만 5세: 전 계층으로 확대 - 만 3, 4세: 소득하위 70%	- 만 3, 4, 5세: 전 계층으로 확대(100%)
교육·보육과정	-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	- 만 5세: 5세 누리과정 - 만 3, 4세: 3, 4세 교육과정	- 만 3, 4, 5세: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원단가	- 국공립유치원(월 5.9만 원)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4, 5세 월 17.7만 원, 만 3세 월 19.7만 원)	- 국공립유치원(현행유지)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5세 월 20만 원, 만 4세 월 17.7만 원, 만 3세 월 19.7만 원)	- 국공립유치원(현행유지) -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3~5세 월 22만 원) ※연차적 인상: '16년 까지 월 30만 원
재원부담	- 유아학비/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 교육청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12년:만5세, '13-14년:만3,4세 일부, '15년 이후:만3-5세 전부 부담	
관리체제	- 유치원(교과부) - 어린이집(복지부)	- 이원화 체제 유지	

자료: 교육부, 누리과정안내 팸플릿: 누리과정 무엇일까요?(2012.9)

[표 3-7] 3-5세 누리과정 월 지원금액(매월)

연령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만5세	20만 원	22만 원 (↑2만 원)	24만 원(↑2만 원)	27만 원(↑3만 원)	30만 원(↑3만 원)
만4세	17.7만 원	22만 원(↑4.3만 원)			
만3세	19.7만 원	22만 원(↑2.3만 원)			

자료: 교육부, 누리과정안내 팸플릿: 누리과정 무엇일까요?(2012.9)

7)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여성가족부)

이 정책은 지난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주관부서는 여성안전가족부이며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다양한 청소년체험활동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안전점검이 의무화가 되고 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역시 의무화 되었다. 또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의 경우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 정책의 또 다른 목표는 청소년체험활동 관련 정보를 학교, 학부모, 청소년에게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들을 위한 정책 예산은 38억 원이다.

8) 자연휴양림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산림청)

자연휴양림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정책은 산림청에서 주관한다. 자연휴양림 조성·운영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유의 숲 조성·운영을 통해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심신함양 도모하는 것을 본 정책의 목적으로 한다.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산림청은 2013까지 총 9,028억 원(국비 5,412억, 지방비 3,616억)투자하여 156개소를 조성·운영(국유 39, 공유 98, 사유 18개소)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자연휴양림 조성 확대, 다양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사유 자연휴양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환경성 질환, 생활습관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 2014까지 총 635억 원(국비 405억, 지방비 230억)투자하여 29개소를 조성·운영(국유 6, 공유 23개소)한다. 본 정책을 위하여 자연휴양림조성 및 운영에는 9,028(누적)억 원, 치유의 숲 조성 및 운영에는 6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9) BK21플러스사업(교육부)

BK21플러스사업의 주관부처는 교육부이며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 및 대학원의 교육·연구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내용은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글로벌인재양성, 특화전문인재양성의 3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 사업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등 모든 학문분야의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단계 BK21 후속 사업으로 472개 사업단(팀)의 13,000여 명의 대학원생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인재양성 사업은 과학기술 기반 융·복합 분야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사업(WCU)의 후속 사업으로 21개 사업단의 400여 명의 대학원생을 지원하고 있다. 특화전문인재양성 사업은 특화전문분야(디자인, 문화콘텐츠, 관광, 헬스케어, 정보보호 등)의 고급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현 정부가 신설한 사업으로 54개 사업단, 600여 명의 대학원생을 지원하고 있다. BK21플러스사업의 지원 내용으로는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유형별 40%-60%이상) 지원 (석사 월 60만 원, 박사 월100만 원 이상),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지급 (박사후연구원 등 월250만 원 이상), 국제화경비 지원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여·활동 경비 등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3조 5,000억 원(누적)에 이른다. '13년도 사업유형별 지원예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형에 160억 원, 특화 전문인재양성사업에 50억 원, 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사업에 2,277억 원, 그리고 사업평가관리비에 39억 원을 지원하였다(표 3-8 참조).

[표 3-8] '13년도 사업유형별 지원예산액(안)

구분		예산 비중(안)	사업단(팀) 수	
세부사업유형	글로벌 인재 양성형	전국	112억	14개 내외
		지역	48억	6개 내외
		소계	160억	20개 내외
	특화 전문인재 양성	전국	20억	3개 내외
		지역	30억	5개 내외
		소계	50억	8개 내외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	전국	1,489억	265개 내외
		지역	788억	207개 내외
		소계	2,277억	472개 내외
사업평가관리비		39억	-	
합계		2,526억	500개 내외	

* 글로벌 인재양성형, 특화전문인재양성형은 6개월분('13.9~'14.2) 예산임
 자료: 교육부, BK21 플러스사업 기본계획(2013.5)

키기 위해 병영생활에 필요한 최소경비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봉급을 지급받는 병사들이며, 구체적으로 병 봉급의 수준을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2배로 인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13~'1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연도별 인상을 또한 미리 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2013년에는 전년 대비 20%,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각각 전년 대비 15%,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0%의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상률에 따라 2017년에 상병의 경우 2012년 봉급액 97,500원의 2배 수준인 195,800원의 봉급을 지급 받게 된다.

[표 3-9] 병 봉급 인상률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원)	9만 7,500	11만 7,000	13만 4,600	15만 4,800	17만 8,000	19만 5,800
인상률	-	20%	15%	15%	15%	10%

출처: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자료 제공 (기준: 상병)

10)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정책(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며, 주요 정책목표로는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지역맞춤형 관광 활성화, 해외 방한시장 다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세부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시·군 단위로 관광두레를 조직하여 지역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사업을 활성화한다. 다음으로는 관광기업진흥펀드를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관광객 유치 및 동남아 신흥시장 유치 확대를 위해 고부가가치 신흥시장 육성을 통한 한국관광 경쟁력 제고(러시아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및 의료관광 등 활용, 전략적 관광상품 개발, 한류·계절 등 전략적 관광상품 개발 및 기타언어권 방한객 가이드북 등 정보 제공 강화)방안 등이 있다. 2013년-2014년 동안, 시·군 단위로 관광두레 조직에 누적총액으로 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관광기업진흥펀드 조성에는 500억 원이 편성되었다.

4. 외교안보정책 분야

1) 병사처우개선 - 병 봉급 인상(국방부)

병 봉급 인상 정책의 주무 부처는 국방부로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정책이 도입된 것은 2013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증진시

병 봉급 인상 정책이 사업으로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병 봉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동 규정 [별표 13]의 비고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이등병에게는 112,500원, 일등병에게는 121,700원, 상등병에게는 134,600원, 병장에게는 149,000원이 계획대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기 위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다음과 같은 예산편성이 계획되어 있다.

[표 3-10] 병 봉급 인상 예산편성 내역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원)	5,258억	6,184억	6,995억	7,952억	9,005억	1조 140억
비고(전년대비)	-	+926억	+811억	+957억	+1,053억	+1,135억

출처: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자료 제공

2) 이산가족문제 해결(통일부)

이산가족문제 해결 정책의 주무 부처는 통일부로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 정책의 목표는 이산가족의 사전(死前)교류를 지원하고, 이산가족의 사후(死後)교류를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위로하는 것으로, 따라서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이산가족이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인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정책은 특히 2014년에 활발하게 추진되었는데, 2014년 설 명절을 계기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시키는 등 이산가족 당국교류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산가족 영상

평지 제작 사업 계약을 통해 1,200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였다. 또한 2014년 처음 시작된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보관 사업을 위해 1,200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경기지역과 인천지역에서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7억 3,000만 원과 3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였다.

[표 3-11] 이산가족문제 해결 소요예산

예산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원)
2013년	이산가족 당국교류	8억 3,000만
	이산가족 민간교류	1억 1,000만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6억 9,000만
	이산가족 초청행사	1억
	총 소요예산	17억 3,000만
2014년	이산가족 당국교류	21억 8,000만
	이산가족 민간교류	8,000만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4억 2,000만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보관	3억 9,000만
	이산가족 초청행사	1억
	총 소요예산	31억 7,000만

출처: 통일부 통일정책실 자료 제공

3)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방위사업청)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정책의 주무부처는 방위사업청으로, 방산진흥국 수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국방부에서 소요가 결정된 각종 무기체계를 효율적으로 획득하여 군에 적기에 보급함으로써 자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본 정책은 방산수출 확대 및 방산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과 이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무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각 군과 무기 등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연구소 및 업체 등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은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사력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국민 또한 정책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201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데 무기체계 등을 연구개발, 구매 하는데 사용되는 방위력 개선비에 있어서 최근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각각 9조 1,030억 원, 9조 6,935억 원, 9조 8,93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고, 2014년 처음으로 10조를 넘는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 이래로 2015년에도 10조 5,09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위력 개선비는 무기체계 등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기술개발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할당된 예산 또한 증가되어 왔다.

[표 3-12] 방위사업 추진 소요 예산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편성액)
방위력 개선비예산(원)	9조 1,030억	9조 6,935억	9조 8,938억	10조 1,749억	10조 5,096억
기술개발예산(원)	5,193억	5,845억	6,468억	6,893억	8,310억
방위력 개선비예산(원)	9조 1,030억	9조 6,935억	9조 8,938억	10조 1,749억	10조 5,096억
기술개발예산(원)	5,193억	5,845억	6,468억	6,893억	8,310억

출처: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자료 제공

4)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통일부)

이 정책은 통일부 교류협력국(교류협력기획과, 남북경협과, 사회문화교류과, 인도지원과로 구성)에서 집행하는 정책으로, 민족동질성 회복과 경제협력(이하 경협) 사업자들의 고통 및 애로 사항 완화를 목표로 삼고, 세부적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주민 간 접촉면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이루어진 「5·24」조치에 의해 경협이 중단되면서 이에 참여한 기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990년 8월에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2010년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경협 기업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특별경제협력자금 대출을 실시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1995년부터 지속되어온 사업으로, 2006년 6월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추계가 어렵다. 2014년 4월부터 당해 10월까지 경협 기업 외에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기업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은 총 200억 원이 의결되었으며, 2014년 11월 현재 164억 원이 집행되었다(통일부 교류협력국, 2014). 이 정책의 수혜자는 북한의 영유아·임산부를 포함한 취약계층, 사회문화 교류협력 관련 사업자 또는 단체, 민간 경협 사업자로 볼 수 있다.

5)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통일부)

이 정책은 2013년 4월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사태 이후 제 7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채택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2013년 8월 14일)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 합의서에 따라 제시된 정책 목표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과 남북공동위원회를 정책 집행 과정에 배치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다만 이 정책은 제도개선 및 안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남북 간의 협의에 의해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추계하기는 어렵다. 통일부는 이 정책으로 인해 개성공단 내의 입주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며, 잠재적으로는 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외교부)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정책의 주무부처는 외교부로, 동북아시아국 동북아1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은 올바른 역사인식이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출발점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일본의 역사 퇴행적 언행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외교장관 회담 개최 등 양국 외교당국 간의 대화 채널을 유지해 나가면서, 경제·문화, 인적교류 등 호혜적 분야에서는 일본과 협력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의 근거법령은 대통령령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동 법령 제19조에 동북아시아국의 분장 사항이 마련되어 있어 이 규정을 근거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동 규정 제3항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국 국장은 일본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총괄·조정을 하고, 일본 지역 사정에 대해 조사·연구를 추진하며, 일본과의 경제외교 관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된다. 이 정책은 동북아시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라는 사업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2014년에 소요된 예산은 53억 9,300만 원이었으며, 2013년부터의 평균예산액은 52억 8,90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외교부 동북아1과, 2014). 이 정책의 수혜자는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위안부와 같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책의 내용상 역사 문제 외에도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사항들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수혜자는 일반 국민이 된다고 볼 수 있다.

7) 사회복지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병무청)

사회복지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정책의 주무부처는 병무청으로 사회교육복무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사회복지요원이 복무 중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전액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요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현역병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는데 반해 그간 사회복지요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왔기 때문에 이 정책을 통해 병역의무이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 또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정책의 근거법령은 「병역법」으로, 동법 제77조의3은 국민건강보험료의 정부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험료의 지원범위 및 지원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그 내용은 「병역법 시행령」에 입법위임 되고 있는데, 동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을 통해 사회복지요원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 정부지원의 근거가 마련된 것은 2013년 6월로, 이후 2013년 9월에서 12월에 걸쳐 보험료 정부지원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범위 및 기간이 명확하게 된 것은 2013년 12월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전원 지원하되,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사회복지요원 소집 전에 직장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정했다. 이 정책의 수혜자는 사회복지요원으로서 당초 정책의 추진을 위해 2014년 편성되었던 예산액은 39억 7,500만 원이

였지만, 2014년도 예산집행결과 이후에는 연간 31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어, 현재 2015년도 예산은 3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된 상태이다(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2014).

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외교부)

2008년 중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한국과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였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한 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 증진이라는 큰 기조 아래,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중간 전략적 소통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정치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지속·강화하며, ‘인문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제19조(동북아시아국) 제3항에 근거하여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 2과와 3과가 배치되었다. 예산은 총 53.9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정상급 회담 개최 비용, 실무자들 교류 비용, 의장단 활동비용 등이다(외교부 동북아2·3과, 2014).

9)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외교부)

200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통해 양국은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합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전통적 한·미 안보협력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일치 및 공감대 형성이라는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제21조(북미국) 제3항에 근거하여 외교부 북미1과를 주무부서로 정하였으며, 총 27.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예산의 대부분(20억 원)이 동맹 기반 강화 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세부적 항목은 대미 의회 외교 강화, 북미 내 친한 네트워크 강화, 한미 주요현황 정책 브리핑이다(외교부 북미1과, 2014).

10)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외교부)

이 정책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및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다자이슈 관련 회의 참여 및 개최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이 정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제25조(국제기구국) 제3항에 근거하여 유엔과, 군축비확산과, 인권사회과, 국제안보과로 구성된 외교부 국제기구국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였다. 정책의 집행을 위한 예산은 총 13.75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8.65억 원)이 국제회의 의장단 진출·활동 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책정되었다. 또한, 정부는 UN 및 인권·군축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회원국을 주요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외교부 유엔과, 2014).

04

제4장 분야별 정책평가

본 연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정책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우선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선정된 분야별(경제, 교육문화, 사회복지, 외교안보) 10개의 정책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수는 분야별로 각각 500명과 50명이며, 따라서 4개 분야 9개 지표에 걸쳐 일반인 총 2,000명과 전문가 총 2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의 대상이 되는 9개 지표는 앞의 지표선정 부분에서 제시한 대로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효과성, 정책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1 정책평가 방법	060
2 경제정책 분야	061
3 사회복지정책 분야	115
4 교육문화정책 분야	168
5 외교안보정책 분야	221

정책평가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정성평가 내용을 차례로 제시한 후 이를 통합한 종합결과를 제시한다. 평가결과의 종합을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 35%, 일반인 설문조사 30%, 연구진 정성평가 35%의 가중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연구진의 정성평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 것은 설문조사의 경우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조사라고 할 수 있고, 본 연구진에 의해 평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 정책평가 방법

본 연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정책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다. 우선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선정된 분야별(경제, 교육문화, 사회복지, 외교안보) 10개의 정책을 대상으로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수는 분야별로 각각 500명과 50명이며, 따라서 4개 분야 9개 지표에 걸쳐 일반인 총 2,000명과 전문가 총 2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의 대상이 되는 9개 지표는 앞의 지표선정 부분에서 제시한 대로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효과성, 정책에 대한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은 5점 척도로 총 10문항인데 앞에서 설명한 정책평가의 기준이 되는 4개 분야 9개 지표 문항과 해당 정책의 인지도를 묻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의 남녀 비중은 49:51로 적절한 비율을 맞추었고, 연령 분포도 20대 17.2%, 30대 18.4%, 40대 22.4%, 50대 20%, 60대 이상 22%로 비교적 고르게 구성하였다. 설문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분포 역시 수도권 50%, 중부권 12.8%, 호남 및 제주권 1.65%, 영남권 25.6%로 인구 분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분하였다.

4개 분야 총 40개 정책에 대한 평가는 해당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분야에서 9개 지표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와 연구진의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정책의 내용에 대한 간단한 기술과 추진일정, 예산 등과 같은 기초자료만을 제공하고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진의 정성평가는 부처로부터 직접 수집된 해당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성평가는 설문조사와는 달리 해당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인식 평가가 아니라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양한 관련 사항 등을 종합한 말 그대로 질적평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성평가의 결과를 설문조사 결과와 통합하기 위하여 정성평가의 경우에도 설문조사와 동일한 항목들에 대하여 5점 척도의 점수를 부여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정성평가 내용을 차례로 제시한 후 이를 통합한 종합결과를 제시한다. 평가결과의 종합을 위하여 전문가 설문조사 35%, 일반인 설문조사 30%, 연구진 정성평가 35%의 가중치를 사용하기로 한다. 연구진의 정성평가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 것은 설문조사의 경우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인식조사라고 할 수 있고, 본 연구진에 의해 평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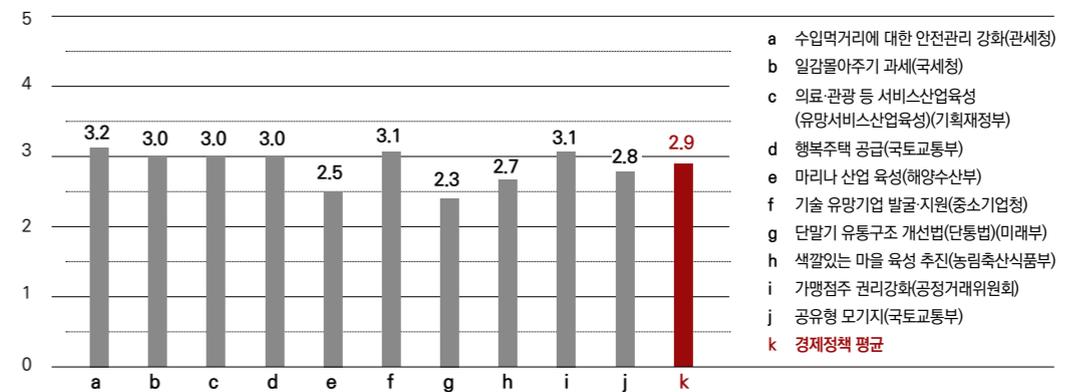
2. 경제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그림 4-1]은 경제분야의 정책별 설문결과를 종합한 결과를 보여준다. 10개 정책의 평균은 2.9점으로 전반적으로 3점 내외의 평가를 받았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단통법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입머거리 안전관리 강화 정책 간에는 거의 1점 가까운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정책과 그렇지 못한 정책의 특성을 살펴보면 최근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정책이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안전문제와 관련된 수입머거리 안전관리 정책이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가맹점주 권리강화 등이 좋은 예이다. 한편 최근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았던 단통법의 경우 소비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줄어든 보조금과 단말기 가격 인상이 낮은 평가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마린나 산업 육성이나 색깔있는 마을 육성 정책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인해 평가에 다소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림 4-1] 경제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이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게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개인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오는 정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은 점은 얼마 전 마이클 쉐넬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철학 서적이 인기를 끌었던 현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공정(fairness), 정의(justice)와 같은 개념에 많이 목말라 있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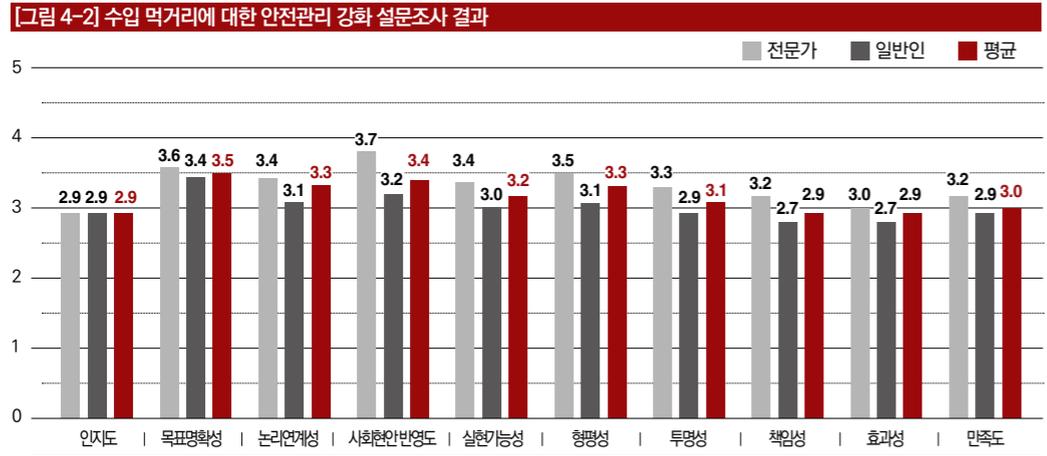
경제 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보이는 또 한 가지 특징은 전반적으로 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정책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평가보다 낮다는 점이다.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는 정책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되는지(정책의 민주성)와 정책이 얼마나 책임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정책의 책무성)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과정 부문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의미는 정부와 정책수요자 간의 소통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즉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내용을 수정하고 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낮은 편인데, 이는 정책의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관세청)

수입먹거리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정책의 인지도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9 정도로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사회현안 반영도는 인지도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지도가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6, 일반인이 3.4의 점수를 주어 다른 정책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평가가 모두 3.0을 넘고 그 평균이 3.3에 달하는 등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3.7, 일반인이 3.2로 평가하였다. 이에 본 정책이 여타 경제정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4, 일반인이 3.0으로 모두 타 정책에 비해 높은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형평성에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 이상을 주었다. 이에 본 정책이 여타 경제 정책에 비해 더욱 형평성이 있다고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전문가의 경우 본 정책의 투명성을 3.3으로 평가하였으나, 일반인은 2.9로 평가하여 본 정책의 민주적 측면에 관하여서는 전문가의 신뢰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은 책임성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2.9를 받아 다소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전문가 집단의 경우 책임성을 3.2로 평가하여 일반인 집단에 비해 본 정책의 책무성을 높게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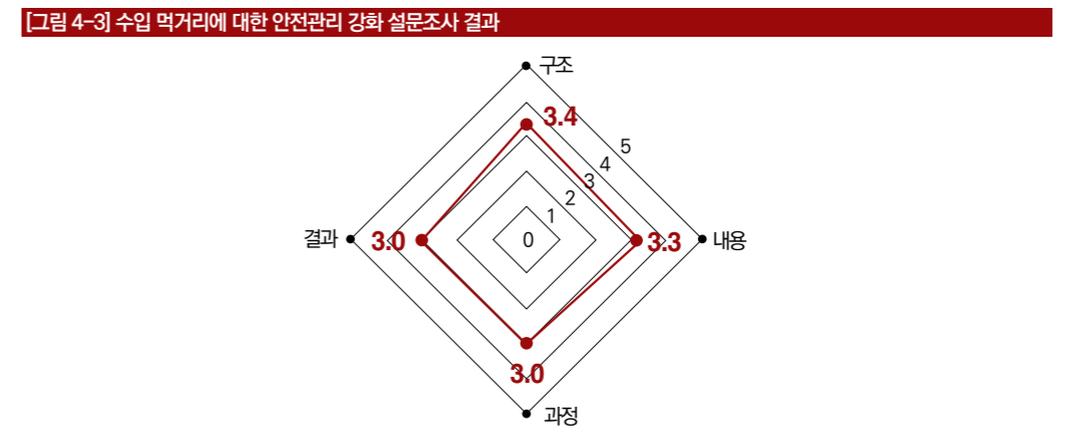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이하로 평가한 것에서 미루어 볼 때 본 정책의 효과성은 그리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 만족도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3.0의 점수를 받았으나, 전문가의 경우 3.2를, 일반인의 경우 2.9를 준 것에서 미루어보아본 정책에 대하여 전문가가 일반인에 비해 더욱 만족을 표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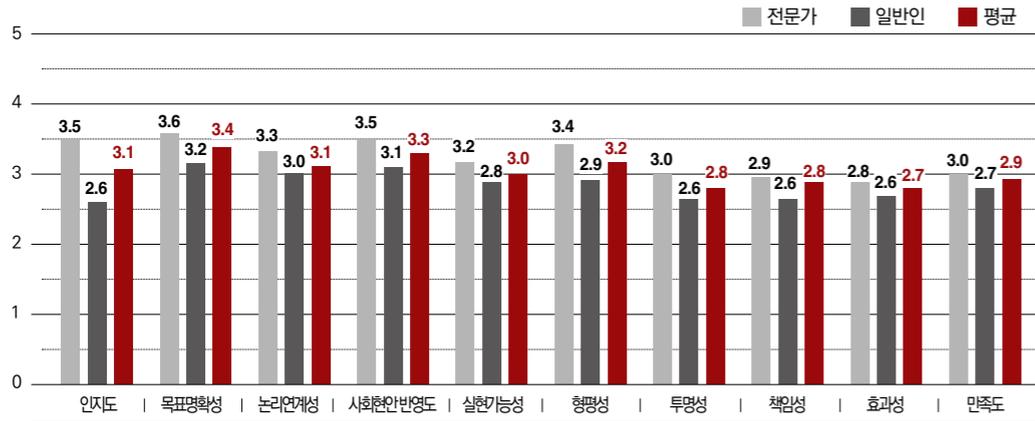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 보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 일감몰아주기 과세(국세청)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전문가 집단에선 매우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반인들의 경우 인지도 수준이 2.6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일감몰아주기 과세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3.6, 일반인이 3.2의 점수를 주어 다른 정책에 비해 비교적 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 이상으로 평가하는 등 다른 경제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는 3.5, 일반인은 3.1로 평가하였다. 이에 본 정책이 여타 경제정책에 비해 사회현안을 상대적으로 높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3.0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문가가 3.2, 일반인이 2.8의 점수를 주어 전문가에 비해 일반인의 신뢰도가 낮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형평성에 관련하여 전문가는 3.4로 평가하였으나 일반인 의 경우 2.9를 주어 전문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의 민주성에 관하여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 이하로 평가하는 등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은 책임성 측면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서 3.0 이하로 평가되는 등 다소 낮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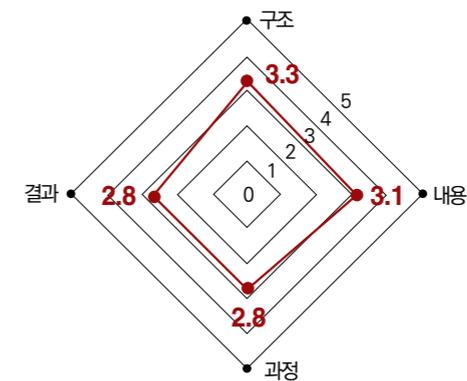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이하로 평가한 것에서 미루어 볼 때 본 정책의 효과성은 그리 긍정적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 이하로 평가하는 것에서 미루어 볼 때 본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 보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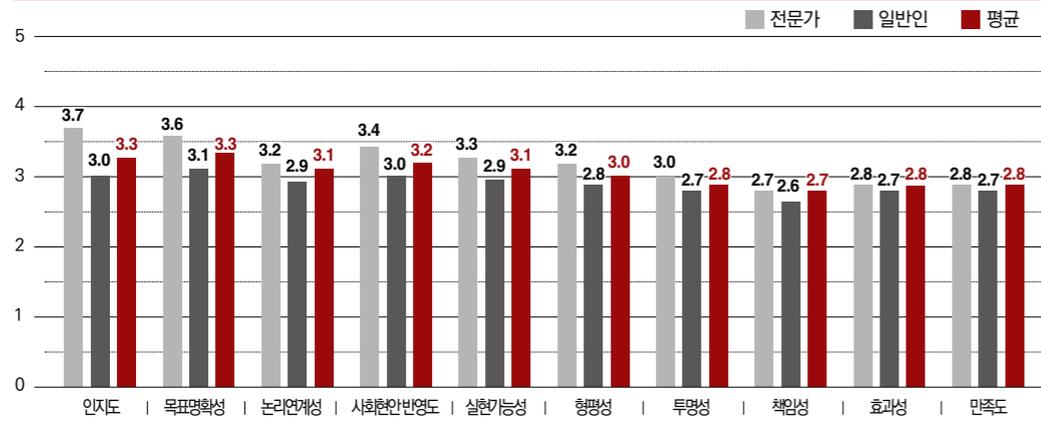
[그림 4-5] 일감몰아주기 과세 설문조사 결과



(3)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기획재정부))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의 경우 전문가들의 인지도는 3.7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일반인들의 경우 3.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일반인 모두 3.0 이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그룹의 평가가 좀 더 후한 편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3.2 일반인 2.9의 답을 하였다. 정책 대안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인지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쪽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는 전문가 일반인 모두 3.0 이상으로 서비스 산업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의 하나로 이는 아무래도 정책의 내용 중 일반인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의료민영화 부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은 실현가능성과 함께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의 하나로 일반인들의 경우 의료민영화로 인한 서비스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 3.0 일반인 2.7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정책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책무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일반인 모두 3.0 이하로서 그리 긍정적인 편은 아니다. 다만 보통이다의 응답을 제외한 긍정 및 부정 응답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인의 긍정 응답 비율이 전문가 보다 다소 높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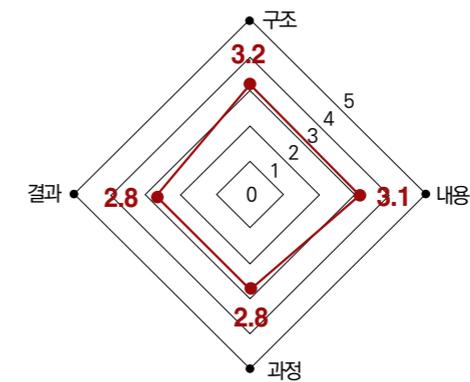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일반인 모두 3.0 이하로서 그리 긍정적인 편은 아니다. 다만 보통이다의 응답을 제외한 긍정 및 부정 응답을 비교하였을 때 일반인의 긍정 응답 비율이 전문가 보다 다소 높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일반인 모두 3.0 이하로서 그리 긍정적인 편은 아니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 보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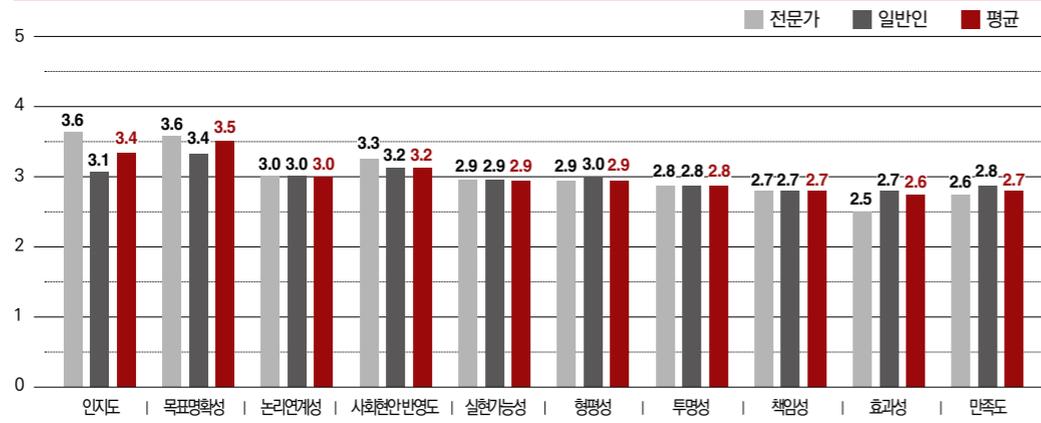
[그림 4-7]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4)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문가의 경우 3.6, 일반인의 경우 3.1로 둘 간의 차이가 다른 정책들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

[그림 4-8] 행복주택 공급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6과 3.4로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의 비율만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의 긍정적 응답 비율이 42%로 일반인들의 34.7% 보다 다소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이라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균점이 3.3과 3.2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꽤 높은 편이었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52%로 과반을 넘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높은 현안 반영도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다소 회의적인 편으로서 응답자 평균점이 2.9에 그쳤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보다 다소 많았으나 일반인의 경우 부정 답변이 35.9% 긍정 답변이 31.8%로 좀 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2.9 일반인 3.0으로 일반인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정책의 대상이 주거복지 취약계층으로 그 효과를 일반인들이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8로 그다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보통이다'의 의견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긍정적인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책임성은 전문가 일반인 모두 2.7로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특히 부정 의견과 긍정 의견을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일반인 모두에서 부정 의견이 긍정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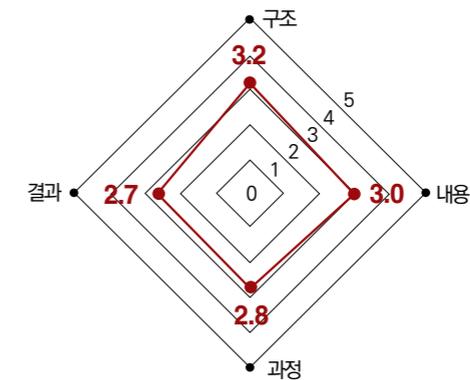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의 평가는 2.5로 전체 항목 중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 그러나 일반인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긴 하지만 2.7로 전문가 보다 높았고 부정의견이 과반을 넘은 전문가와 달리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도 일반인이 전문가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효과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만족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문가 일반인 모두 3.0이하로 낮은 편이지만 일반인이 전문가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 보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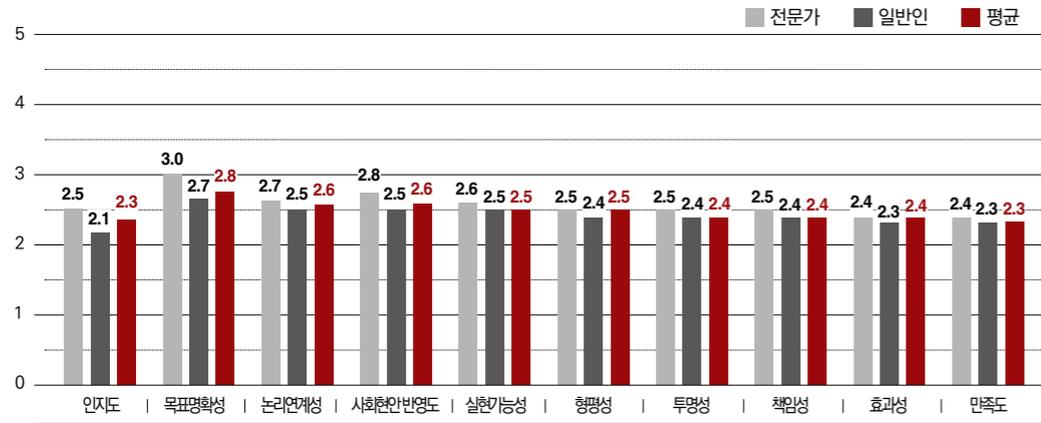
[그림 4-9] 행복주택 공급 설문조사 결과



(5) 마리나 산업 육성(해양수산부)

마리나 산업 육성은 10개 정책 중 가장 인지도가 낮은 정책에 속한다. 특히 전문가의 인지도도 일반인 못지않게 낮은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점대의 인지도를 보인 것은 마리나 산업 육성 정책이 유일하다.

[그림 4-10] 마리아나 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 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 이하로 낮게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역시 평균이 2.6에 달하는 등 다른 정책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 현안 반영도 역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서 3.0 미만의 응답을 받는 등 여타 경제 정책에 비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2.5에 가까운 응답을 하는 등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2.5이하의 평가를 받아 가장 낮은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은 투명성의 측면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2.5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아 여타 경제 정책에 비해 가장 민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은 책무성 측면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2.5 이하의 평가를 받아 가장 낮은 수준의 책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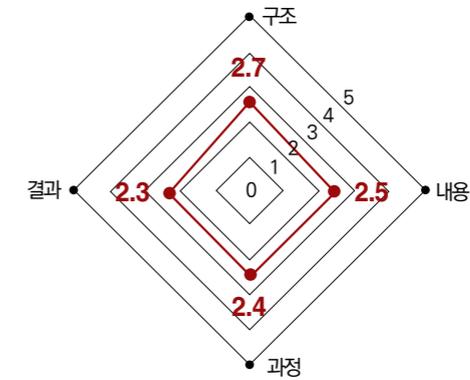
본 정책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4이하의 응답을 보이는 등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 역시 평균적으로 2.3의 점수를 받음으로써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가장 낮은 만족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 보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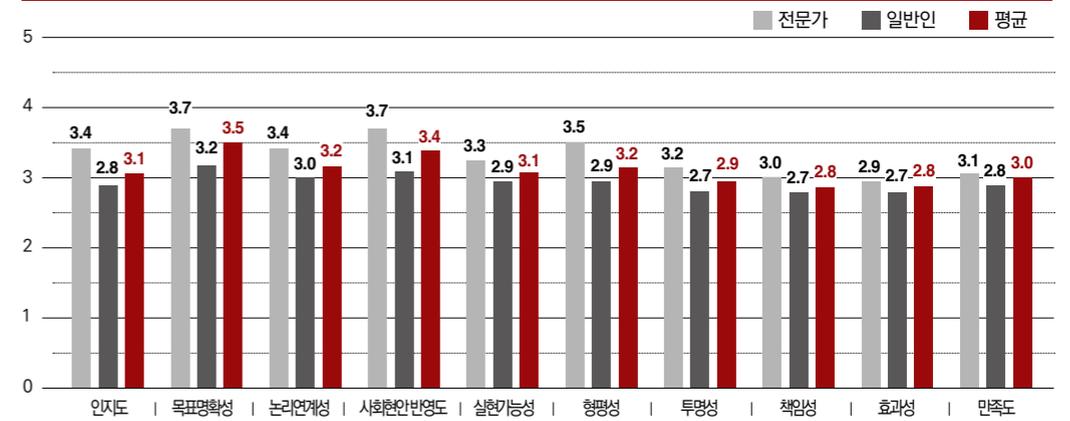
[그림 4-11] 마리아나 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6)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중소기업청)

기술 유망기업 발굴 정책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2.8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림 4-12]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정책목표의 명확성 측면에서 평균 3.5의 평가를 받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이 3.7로 응답하는 등 본 정책의 명확성에 대하여 더욱 높은 평가를 제시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3.2를 받아 일반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3.4로 평가되었으나, 전문가가 3.7, 일반인이 3.1로 평가하는 등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격차가 상당 존재한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이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를 더욱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실현 가능성의 경우 전문가 집단은 3.3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으나 일반인은 2.9로 비교적 낮게 간주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형평성 측면에서는 평균적으로 3.2를 받았으나, 전문가가 3.5로, 일반인이 2.9로 일반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등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격차가 상당히 나타났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민주성 측면에서는 평균 2.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다만 전문가의 경우 3.2로 평가하였으나 일반인은 그보다 낮은 2.7로 평가하는 등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이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책무성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 3.0 이하로 그다지 높지 않다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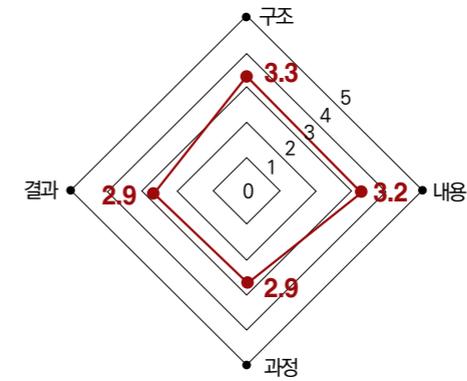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 역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 이하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 측면에서 역시 평균은 3.0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전문가는 3.1로 평가하는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격차가 존재하였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 보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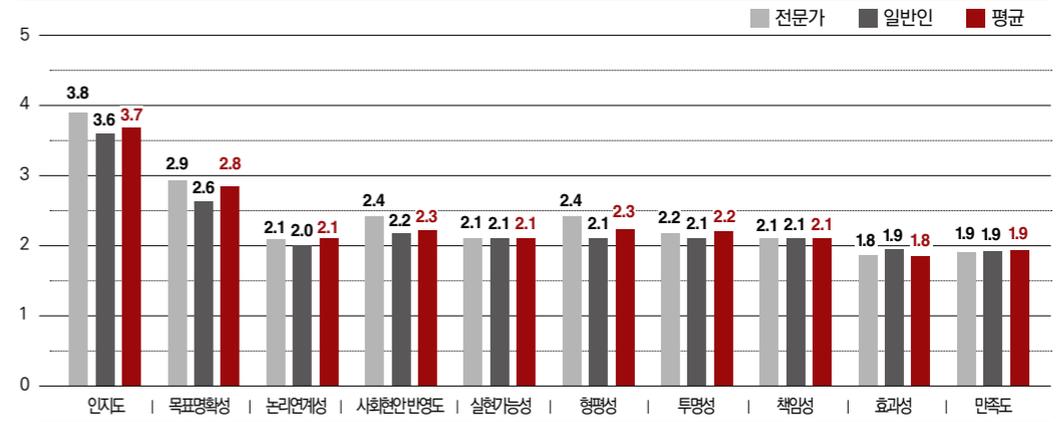
[그림 4-13] 기술 유망기업 발굴 지원 설문조사 결과



(7)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미래창조과학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최근 언론에 많이 언급되어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8과 3.6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정책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림 4-14]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전 항목에 걸쳐 평가 점수가 낮게 나왔다.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다른 정책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단통법의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균 응답이 2.1과 2.0으로 모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부정 답변이 70%에 이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항목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일반인이 평가한 평균점은 역시 2.4와 2.2로 상당히 부정적인 편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1로 상당히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부정 응답의 비율이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70%에 이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응답도 다르지 않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점대 초반의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낮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응답도 다르지 않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점대 초반의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74%로 일반인에 비해 다소 높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응답도 다르지 않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점대 초반의 낮은 평가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문가의 경우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76%로 일반인에 비해 다소 높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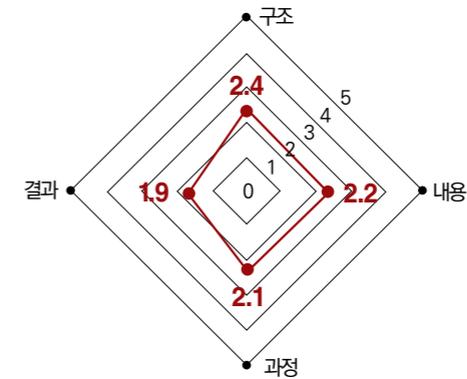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경제분야 평가 대상 정책들 중 유일하게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서 2.0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88%, 일반인의 73.5% 정책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만족도 역시 전문가 일반인 모두 1점대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특히 전문가의 84%, 일반인이 72.8%가 본 정책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 보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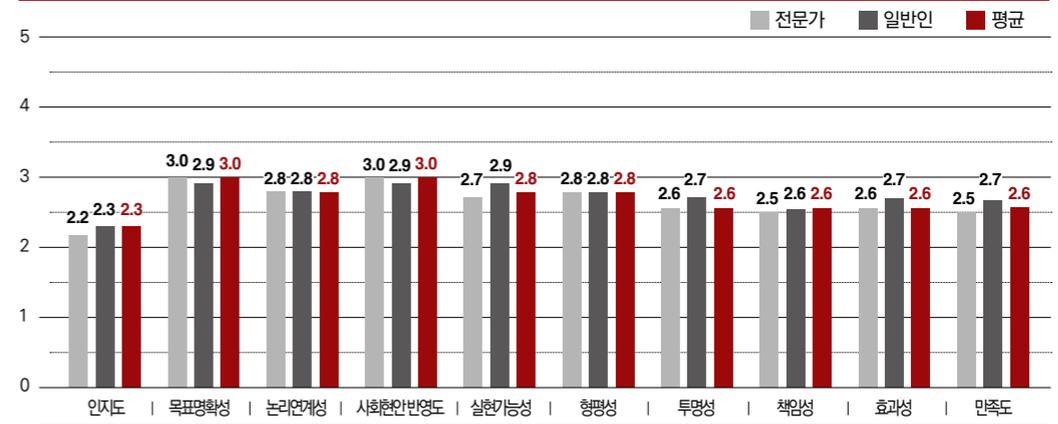
[그림 4-15]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설문조사 결과



(8)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농림축산식품부)

색깔있는 마을 육성 정책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인지도가 가장 낮은 정책에 속한다. 두 그룹 모두 2점대 초반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고, 본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가장 많았다.

[그림 4-16]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색깔있는 마을 육성 정책은 대해서는 다른 정책들과 비교할 때 항목별 중간솔림이 다소 심한 편이다. 우선 정책목표의 명확성은 전문가 일반인 모두 3.0 내외의 평가를 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8점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강한 편이다. 특히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전문가가 40%, 일반인이 35.9%로 전문가가 다소 높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 반영도에서도 전문가와 일반인이 3.0과 2.9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부정적인 응답은 이번엔 일반인 쪽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전문가 2.7 일반인 2.9로 낮은 편이다. 특히 전문가의 부정적 답변은 42%로 일반인의 36.6% 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 일반인 모두 2.8로 다른 항목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정적이 평가가 많았다. 특히 긍정 평가에 비교해서 부정 평가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두 배에 달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인 면이 강했는데, 특히 전문가의 경우 부정적 응답의 비중이 46%에 달했다. 이 부분은 본 정책이 기본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인데, 아마도 낮은 인지도로 인해 정책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데에 기인한 듯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책임성도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5와 2.6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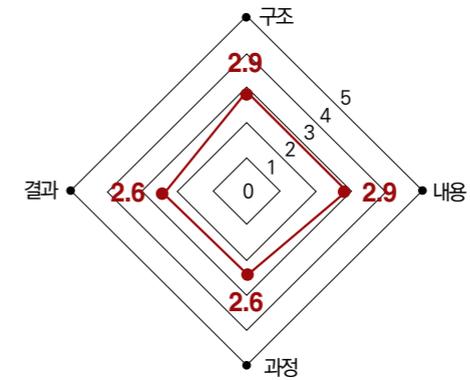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도 다른 항목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6과 2.7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정적인 답변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4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효과성을 반영하여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편이다. 특히 전문가의 만족도가 낮은 편으로 전체의 52%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 보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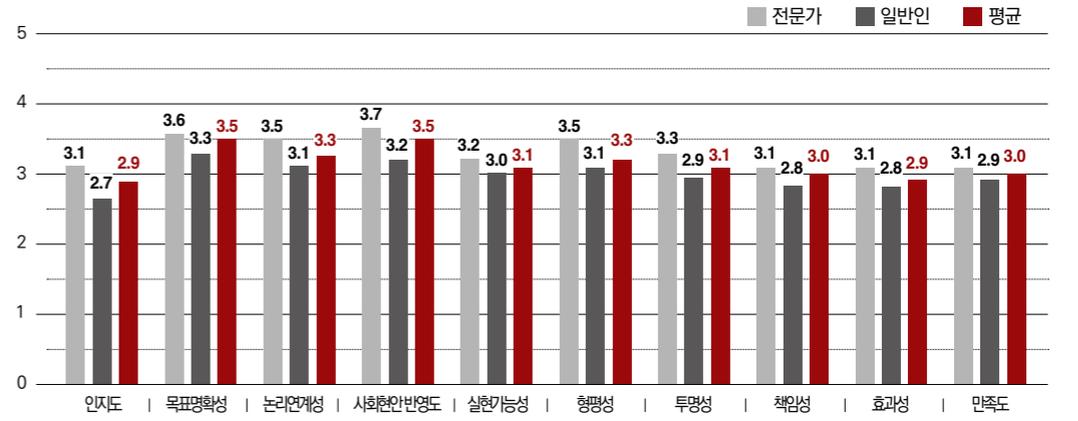
[그림 4-17]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설문조사 결과



(9) 가맹점주 권리강화(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권리강화의 경우 전문가의 인지도가 일반인의 인지도 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의 인지도가 3.1로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들보다 낮은 편이다.

[그림 4-18] 가맹점주 권리강화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 목표의 경우 전문가가 3.6, 일반인이 3.3으로 다른 경제 정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경우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분야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3.0 이상의 점수를 받고 그 평균이 3.3에 이르는 등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현안의 반영도에 있어 본 정책은 평균 3.5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전문가가 3.7, 일반인

은 이보다 적은 3.2라는 점에서 일반인에 비해 전문가들이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 정도를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전문가 3.2, 일반인 3.0으로 어느 정도의 실현가능성은 있으나 그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본 정책은 전문가 3.5, 일반인 3.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민주성 차원에서는 평균 3.1을 받으며 그다지 높지 않다고 평가되었으나, 전문가가 3.3, 일반인이 2.9로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인식 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책무성 차원에서는 평균 3.0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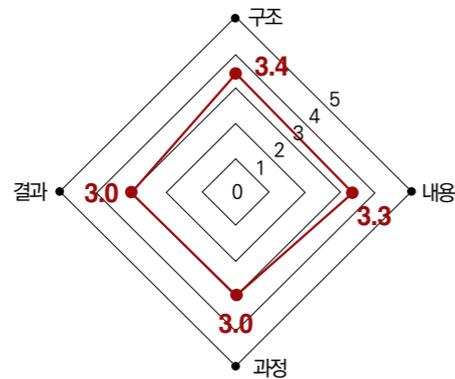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 평균 2.9로 조사되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본 정책의 효과에 관해 그다지 긍정적인 예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문가가 3.1, 일반인이 2.9를 기록하여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 보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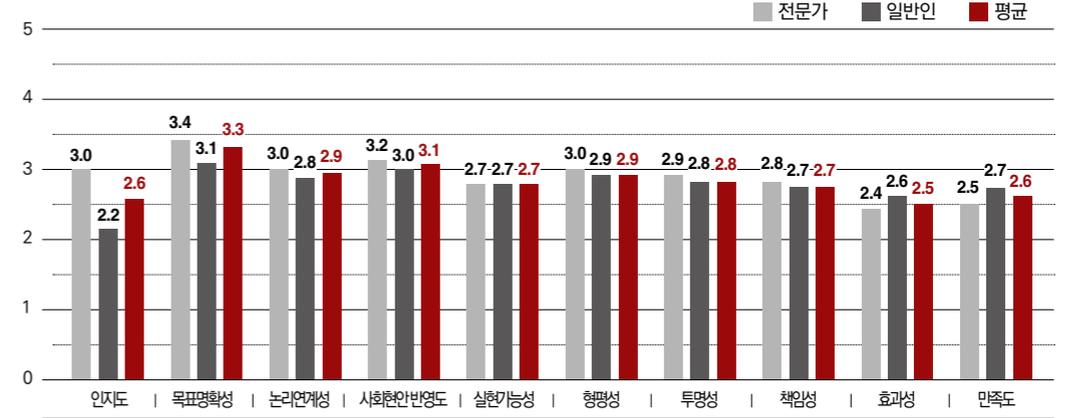
[그림 4-19] 가맹점주 권리강화 설문조사 결과



(10) 공유형 모기지(국토교통부)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일반인의 관심이 많을 법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2.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의 인지도도 3.0으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닌데, 이는 정책의 내용과 구조가 다소 복잡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0] 공유형 모기지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공유형 모기지 정책은 일반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지도가 2.2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본 정책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한 일반인 응답자의 비율이 58.9%에 이른다. 다만 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4와 3.1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우세한 편이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대안으로서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일반인에 비하여 전문가가 10% 정도 낮은 것을 나타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주택 관련 정책이다 보니 사회 현안 반영도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2와 3.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전문가의 경우 응답자의 4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 37%에 그친 일반인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7로 높은 편은 아니다. 특히 전문가의 긍정적인 답변은 일반인이 긍정적인 답변에 비하여 10% 정도 낮은 편이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평가가 전문가의 평가보다 다소 부정적이었다. 일반인의 부정적인 응답자의 비율이 전문가 보다 10% 정도 높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민주성에 대한 응답도 다르지 않았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 이하의 점수를 보였고, 특히 일반인의 부정적인 응답은 38.5%로 전문가의 28%에 비해 10% 가량 높게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책무성에 대한 응답도 다르지 않았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3.0 이하의 점수를 보였고, 특히 일반인의 부정적인 응답은 44.1%로 전문가의 34%에 비해 10% 가량 높게 나타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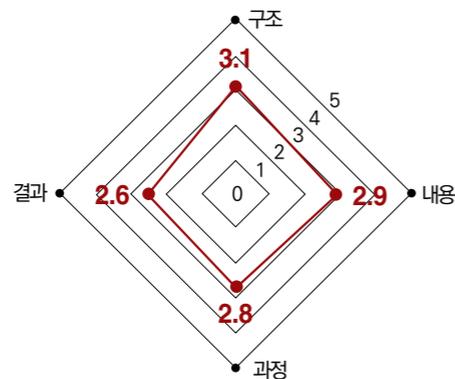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일반인의 인식이 전문가에 대한 인식에 비해 좀 더 부정적인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응답에선 일반인의 긍정인식이 전문가 보다 다소 높았다.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일반인 17.6%, 전문가 10%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일반인과 전문가의 긍정적인 답변에 차이가 큰 편이다. 일반인 응답자의 19.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데 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한 전문가 응답자는 6%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설문 내용을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네 분야로 종합하여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정책의 구조와 내용 보다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림 4-21] 공유형 모기지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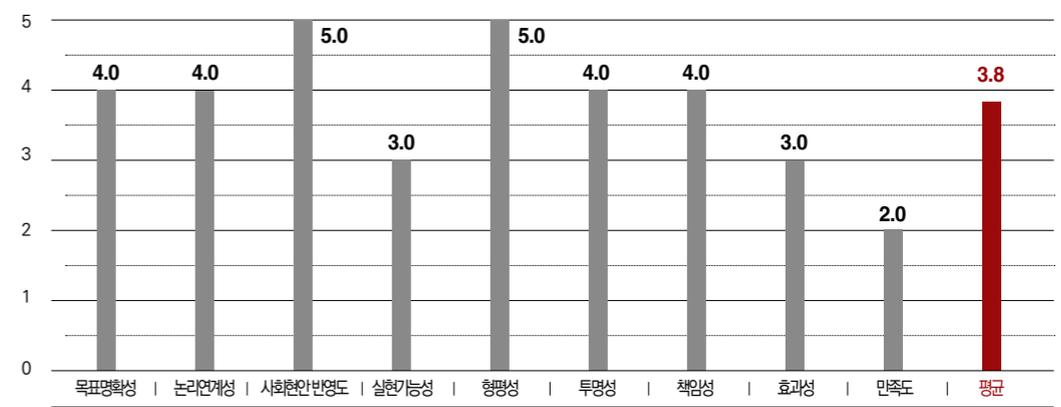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관세청)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본 정책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만큼 인지도 또한 높다. 그러나 추가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성공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2]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불법·유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수입 식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국내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정책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미 식약처에서 수입 식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은 있으나, 본 정책의 경우 식품류 검사율을 일반 품목의 5배에 달하는 15.1% (14.10)로 늘리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은 기존 정책의 보충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입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중국산 납 꽃게 및 멜라민 함유 분유 등의 사태는 국내 수입 식품의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수입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역시 상당히 증폭되었다.

통계청(2012)의 '2012년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54.7%는 수입 식품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가장 주된 이유로 정부의 수입 식품 규제 관리 미흡(50.1%)과 수입업체의 식품 안전의식 부족(22.9%)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식품 관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현재 수준에서의 관세청 자체의 노력은 좋지만,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는 수입 식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많이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식품을 검열하기 위해서는 관세청보다 경찰·사법 당국 등 상위 기관의 역할이 부정 유통 방지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정책이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인력 투입이 절실할 것으로 추측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목적이 수입 먹거리 안전 증대인 점을 고려할 때 본 정책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식품 수입자 및 유통 업자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불법 유통만을 단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손해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정책의 형평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된 기록은 없다. 하지만 본 정책의 특성상 전 국민이 수혜를 입으며 특정 손해 집단이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먹거리 파동에 의한 사회적 불안감을 잘 반영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수혜집단인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정책의 민주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기록은 없으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있을 경우 수시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수입 식품 검역에 대한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있으므로 정책의 책무성 역시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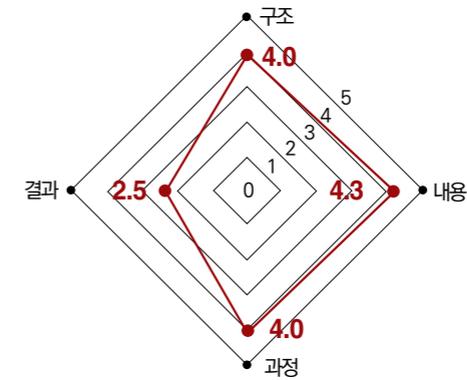
본 정책의 경우 시행한 지 2년에 불과해 아직 효과성을 예단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수산물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14.01~10)을 통해 172개 업체(총 1,312억 원)를 적발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정책은 식약처의 검사를 보완하여 식품 수입 업체의 불법 행위에 예방적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통관 단계에서의 유통 이력 임의 변경을 사전 예방하고 유통 단계에서 공정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반적인 평가에 비해 본 정책의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23]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정성평가 결과



(2) 일감몰아주기 과세(국세청)

본 정책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궤를 같이하며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충분히 실현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혜택이 전 국민으로 분산되는 반면 손해는 특정집단에 집중되므로 만족도는 크지 않은 반면 정책에 대한 저항이 예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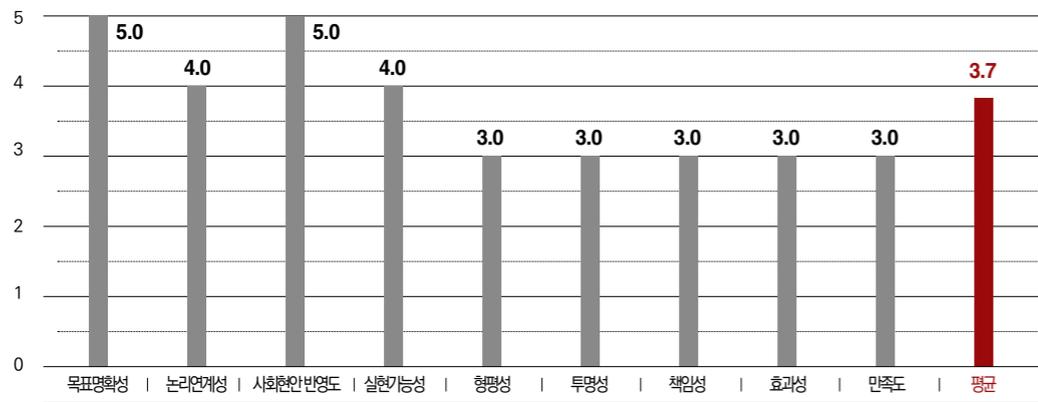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특수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여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것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감지하고 과세하여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그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과세 면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의 무상 이전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림 4-24]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성평가 결과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은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 민주화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의 경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절한 소득 분배,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부의 편중을 막고자 한다. 따라서 부의 무상 이전을 차단하고자 하는 본 정책의 목표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현재 사회 시류와 일치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경우 관련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담당 인원이 적다는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이 적다고도 보일 수 있으나, 과세의 특성상 관련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을 집행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예산 및 집행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추산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과세 대상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친족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 본 정책에 의해 추가적인 세금을 내게 되므로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양극화가 해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정책의 형평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의 과세 요건을 낮추면서 해당 기업들이 과세에서 많이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행위는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지만 대기업만 과세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과세 대상인 내국법인 간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점이 되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과 관련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개정 과정에서만 의견 수렴이 있었을 뿐 실질적인 손

해 집단들에 대한 적극적 의견 수렴 과정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투명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의 집행 이후에는 별도의 의견 수렴 과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본 정책의 책임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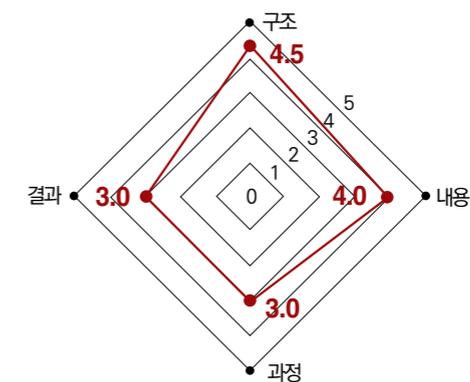
본 정책의 경우 수혜 법인(지배 주주)의 유형별로 과세대상 인원과 세액만이 지정되어 있을 뿐 정책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는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극화의 해소 및 경제 민주화라는 비가시적인 효과는 추산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정책의 효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수혜 집단이 전체 국민이고 손해 집단이 특정 주주라는 점에서 혜택이 분산되고 손해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정책으로 인해 전체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본 정책을 체감하기는 어려우므로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25]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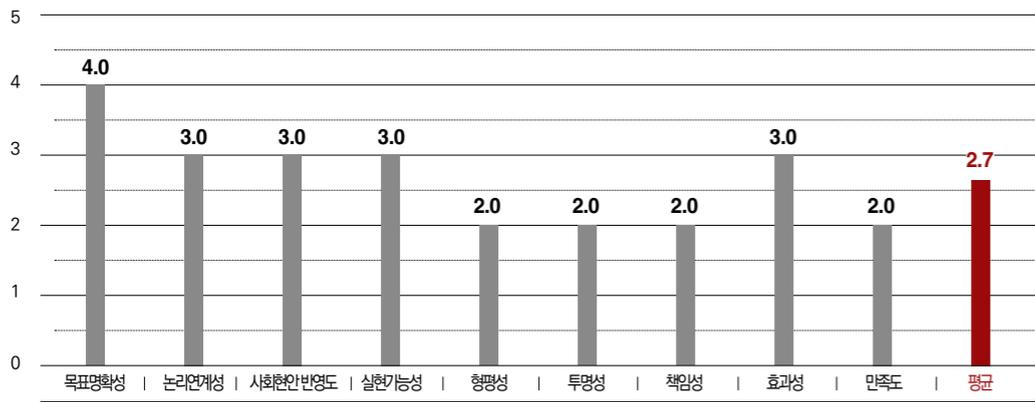


(3)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기획재정부))

본 정책은 7개 서비스 산업 육성을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료와 교육서비스 관련 내용이 형평성, 민주성, 책임성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전체 요약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는 특히 정책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목표가 몇몇 분야의 목표는 다소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그림 4-26]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의료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15조 이상의 투자와 18만 명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기획재정부, 2014¹⁴).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에는 일곱 개 서비스 산업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의 정도가 다르다. 우선 보건, 의료 분야의 대표적인 정책방향은 의료법인자회사 설립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인데, 특히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과 보건,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는 논리적 연계성이 뚜렷하지 않다. 오히려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은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오히려 의료서비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교육 서비스 분야의 경우도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전략을 제시하는데 국내교육기관의 경쟁력 향상 없이 외국교육기관만 유치하면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기엔 논리적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과 다른 개도국들에게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대안은 나름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의 약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비하면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

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보다 시급한 산업 경제와 관련된 현안이라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빼놓을 수 없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이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이외에도 금융위, 복지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광범위하게 간여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4¹⁵). 따라서 다른 정책들에 비하여 물적, 인적, 제도적 자원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의 미래, 즉 실현가능성이 장밋빛으로만 그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의료분야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의료민영화 관련 내용이(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포함되어 있고, 관광분야의 경우 3-4년 안에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다소 과도한 욕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인 자회사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의 가능성으로 인해 야당 뿐 아니라 의사협회를 비롯하여 각종 시민단체에서 이미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산업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된 진료에서 연구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시작부터 표류하고 있다. 10년에 걸쳐 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확보한 예산은 100억 원 정도로 원래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관광의 경우도 2013년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 수가 1,200만 명 정도인데 그 수를 복합리조트와 테마파크 개발 등으로 3-4년 안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고 하는 것도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이 만큼의 관광객 증가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선 호텔 등 숙박시설의 획기적인 증가가 요구되지만, 현재 제시된 호텔 공급 증가를 위한 대안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본 정책의 큰 방향은 옳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경쟁력 제고의 대상이 되는 산업에 보건의료와 교육이 포함됨으로 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특히 정부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민간의 역할 증대와 외국기관 유치라는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문제의 가능성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 민간역할 증대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비싼 등록금을 받는 외국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면 보건의료와 교육 서비스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의 일곱 개 육성 대상 분야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보건의료와 교육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정책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보면 이 두 분야 보다는 디자인, 관광 등 분야에 좀 더 치중하듯한 느낌을 받는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문제는 의료계 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가 크므로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의

14) 기획재정부(2014), 보도자료 2014.8.12., 배포일시 2014.8.11.

15) 기획재정부(2014), 보도자료 2014.8.12., 배포일시 2014.8.11.

확보 과정이 요구되거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책무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의 노력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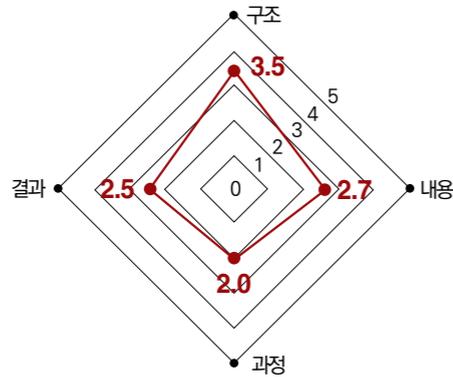
본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선 다소 실망스런 부분도 엿보인다. 예를 들어 의료산업화를 위해 추진된 연구중심병원 지원 사업의 경우 원래 계획한 규모의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지난 1년 반 동안 거의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부적인 분야의 문제로 전체적인 정책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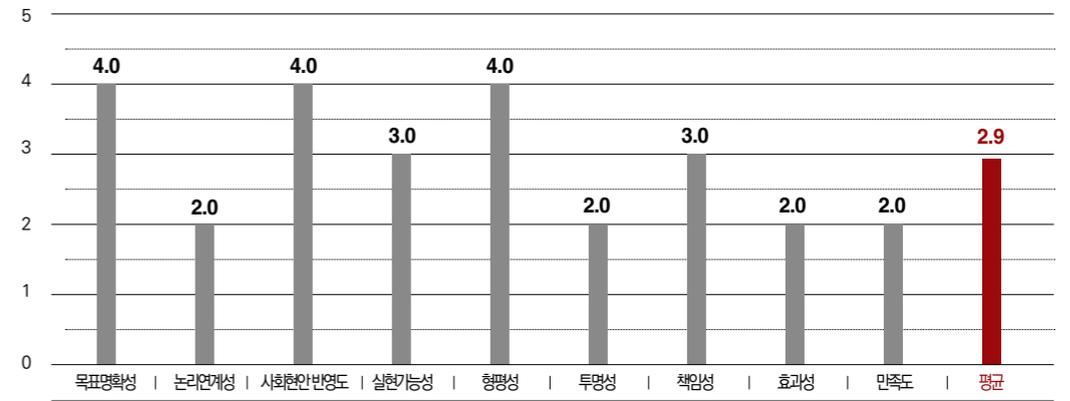
[그림 4-27]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4)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정책은 높은 사회현안 반영도와 명확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행복주택 입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급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정부의 기조가 갈등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그림 4-28] 행복주택 공급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직주근접과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국토교통부, 2014a¹⁶⁾). 다만 지나치게 양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행복주택 정책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도심의 우수지나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적은 비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본 정책은 목표를 양적으로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우선 우수지를 활용한다는 점은 악취나 홍수에 취약한 안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소음이나 구조물 건설로 인한 비용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주택이 계획된 수량만큼 공급된다 하더라도 질적인 문제가 따라올 수 있는 것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주택문제는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본 정책은 높은 사회현안 반영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조이다. 지난해 시작된 시범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표류했던 이유도 바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었고, 따라서 이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동의를 구할지가 정책목표 달성의 관건이 될 것이다. 최근에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갈등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업추진)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판단된다.

16) 국토교통부, 2014a, 행복주택 브로슈어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수혜 대상이 주거복지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들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제공되는 주택이 상대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우수지와 같은 곳에 건설된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대학원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과 같이 주거취약계층이지만 입주대상이 아닌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여론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수혜자 집단의 의견수렴을 하였다고 하지만 최초 사업대상 7곳 중 5곳에서 주민반발을 겪었고 목동지구와 공릉지구에서는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으로 까지 번졌다(신현우, 201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행복주택이 입지하는 사업대상지의 주민과 지자체와의 소통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는 갈등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갈등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평가 할 만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2013년 시범사업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상당 기간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여 2014년 사업의 최우선 과제를 갈등관리로 삼았던 점은 평가할 만하다(국토교통부, 2014b¹⁷⁾). 그러나 아직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판단하기 이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2013년 지정된 7개 시범지구 중 가좌(362가구)와 오류(890가구)만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지구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두 곳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올해 말로 예정된 행정소송의 결과가 정부 측에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항소가 예상되므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 뿐 아니라 지방의 경우도 지자체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 건설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 승인 물량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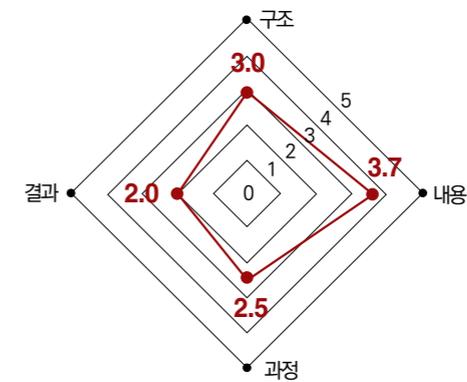
본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방향은 ‘집 문제’라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현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수단으로서의 정책이 가지는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못하다. 첫째, 정책의 목표가 지나치게 숫자에 치우쳐 있어서 주거환경의 질적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의 임대주택 제도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일종의 낙인효과로 인해 임대주택에 거주하

17) 국토교통부, 2014b, 부처제공자료

는 사람들과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에 social divide가 생기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행복주택 정책은 단순히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최근의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주거 커뮤니티 복원이나 social mix의 개념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데, 우수지는 홍수 발생에 제일 먼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취약계층의 주거지를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지역을 개발하여 공급한다는 것은 형평성 내지는 불편부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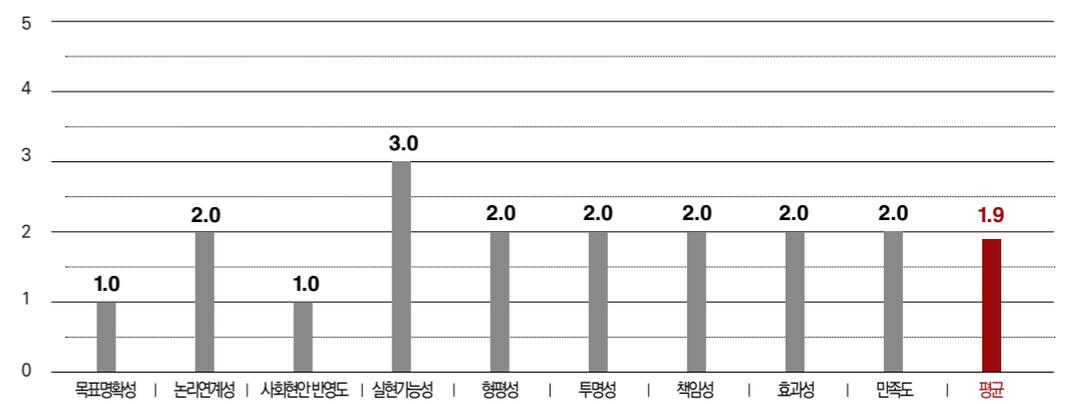
[그림 4-29] 행복주택 공급 정성평가 결과



(5) 마리나 산업 육성(해양수산부)

본 정책의 대상인 마리나 산업은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실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다. 여기에 뚜렷한 사회현안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혜택이 사회 전반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성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매우 제한적인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4-30] 마리나 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경우 거시적으로는 ‘마리나 산업의 육성’, 미시적으로는 ‘2017년까지 신규 일자리 8천 개 창출, 2019년까지 마리나 시설을 현재(1,650선 석)의 4배로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 목표의 경우 마리나 산업의 육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미시적 목표 역시 정책 목표보다는 정책성과 지표에 그친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본 정책의 목표는 타 정책에 비해 명확성이 낮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경우 마리나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마리나 산업 육성 자체의 개념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실제로 마리나 산업이 부흥할 지의 여부도 확실치 않아 보인다. 특히 본 정책은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공급자에게만 편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 예로 본 정책은 마리나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 산업 창원 지원, 마리나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마리나 산업에 대한 수요적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한 산업의 성패에 있어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역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경우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을 포착하고 이에 맞추어 진행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과연 사회 전반에 걸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사회 다른 측면에 대한 수요에 우선하는지의 여부 역시 불확실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경우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목표한 바를 이루기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 정책의 세부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여도 전술한 바와 같이 논리적 연계성이 떨어질 경우 최종 목표인 마리나 산업 육성을 이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존재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경우 형평성 측면에서도 여타 경제 정책에 비해 낮다. 해양수산부는 본 정책의 결과 해양 레저가 활성화될 경우 모든 국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손해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급자, 즉 마리나사업자들을 지원하는 데에 경도되어 있으며, 수요자에 대한 언급은 적다. 따라서 본 정책은 전체 국민보다는 마리나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그 형평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의 경우 입법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과정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의 투명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간주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의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마리나 산업 육성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을 파악하여 보았을 때 관련 부처 및 직접 수혜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의견 수렴 역시 공청회 같이 직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보다 연 1회의 설문조사 및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모니터링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정책은 종합적인 의견 수렴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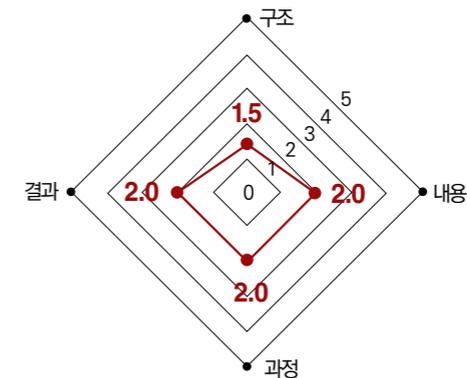
본 정책을 자체 제시한 성과지표에 비교하여 본다면 그 성과가 높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성과지표로 제시된 국내 레저선박 등록 척수, 요트 및 보트 면허 취득자수, 마리나 산업 내 신규 일자리 창출 수 등이 과연 마리나 산업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마리나 산업 및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효과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의 만족도 역시 타 정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본 정책의 수혜자가 편중되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마리나 산업 성장이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31] 마리나 산업 육성 정성평가 결과



(6)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중소기업청)

산업경제에서 창의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은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로 질적 전환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본 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현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

다. R&D 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도 뚜렷하다. 또한 연 1회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여부를 정량적인 측면에서 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원래 의도한 성과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미래 성장 유망 분야 및 FTA에 대응하여 글로벌 전략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정책의 목표는 상당히 명확한 것으로 사료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이 목표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R&D 부문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정책이 중소기업의 R&D 부문에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논리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기업에 잠식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중소기업을 살려 경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국 경제는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본 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민주화를 일구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현안의 반영 정도가 높다고 평가되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 의해 선정되는데, 과연 해당 중소기업이 가진

기술의 유망성을 그 분야 전문가가 아닌 중소기업청이 오롯이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다. 특히 본 정책의 경우 매출 실적 등 정량적 평가 방식으로 추가 지원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 방식 역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R&D 단계에서의 자금 지원은 상업화 단계 이전에 이미 소진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자체 자금만으로 매출 실적을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정책은 투입 자금을 비해 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이 낮게 보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살리면 이와 동시에 경제의 양극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정책은 형평성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의 경우 중소기업 R&D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과 비교할 때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의 경우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해관계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 수렴은 정책 집행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정책의 책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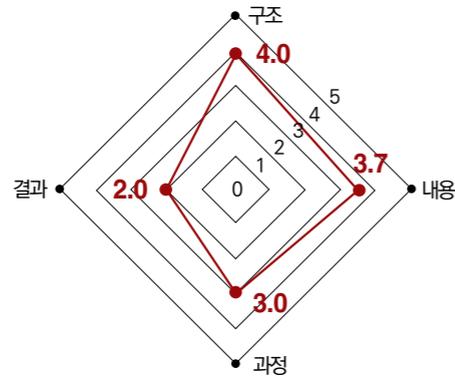
④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본 정책의 경우 정책 목표는 좋으나 그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제 중소기업의 성장은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정책의 효과성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의 만족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본 정책의 대상이 되는 유망 기술이 전문가가 아닌 행정 공무원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낮으며, 더 나아가 재평가 기준 역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정책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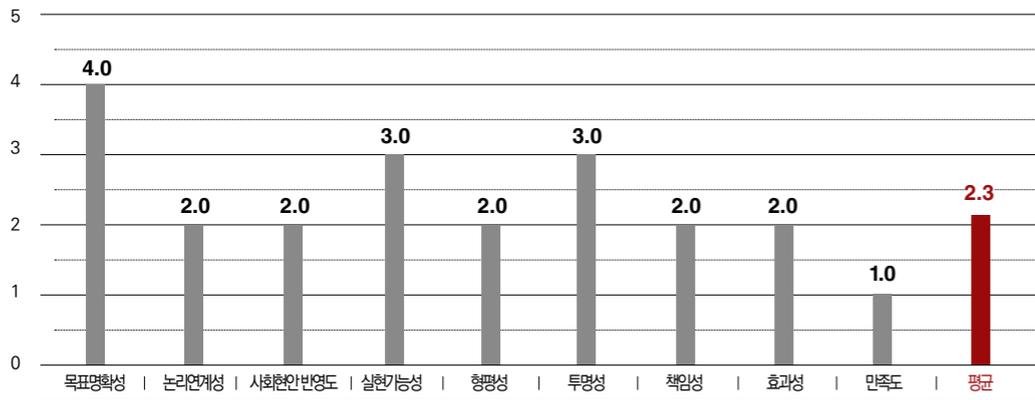
[그림 4-33]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 정성평가 결과



(7)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미래창조과학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공공의 적이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의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정책이다. 특히 보조금 차별을 없애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허용한 부분이나 보조금 경쟁을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선을 규정해 놓았으나 의도한 대로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에 있어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수정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34]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부당한 이용자차별을 방지하고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요금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가 이용자의 보조금 차별을 없애겠다는 부분이고, 둘째가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요금경쟁을 유도한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보조금을 통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에도 소비자 후생은 증가하므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요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 증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말기 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통신기 및 서비스의 과소비(우리나라의 핸드폰 교체주기가 세계에서 제일 빠름) 등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므로 보조금 경쟁을 금지하여 보다 바람직한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이러한 접근에는 보조금 경쟁을 금지하면 고객 확보를 위해 서비스 경쟁이 새롭게 점화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서비스 요금 경쟁에 나서는 이동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용자의 보조금 차별을 없애는 것을 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 이동사들이 요금제에 따라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조금 차별을 없애겠다는 원래의 취지와 배치되는 부분이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것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소비자들이 단말기 구입 시 받는 보조금이 일정치 않다는 것 혹은 이동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회현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어디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구매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 만약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말기 가격 차이가 문제라면 동일한 물건이 대형마트, 일반 상점, 온라인에서 다른 가격에 판매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도 없는 일이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이동사들이 보조금 경쟁이 없어진 만큼 서비스 요금 경쟁에 뛰어든 것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동사 입장에서는 서비스 요금 인하 경쟁의 유인이 보조금 경쟁 유인만큼 크지 않으며, 따라서 원래 의도한 만큼의 소비자 후생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책 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실제 소비자 후생의 증가가 있려면 보조금 규모 축소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후생 감소 이상으로 서비스 요금 인하 경쟁으로 인한 후생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단말기 보조금 축소로 이동사 간 이동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상황에서 집토끼인 기존 고객을 위해 서비스 요금을 인하할 인센티브가 이동사 입장에서는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원래 과점시장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그나마 경쟁이 존재하던 단말기 보조금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해서 오히려 시장의 과점적 성격과 그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해 단말기 구매가격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외에도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규정한 위약금도 통신사의 이익에만 부합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김건우, 2014). 보조금 경쟁의 제한이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이러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정책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태를 너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접근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대상은 현재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고객이므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단말기 보조금 감소로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이통사 이동에 더 높은 장벽이 생긴 상황에서 서비스 요금 경쟁은 현재의 고객이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 입장에서 이미 손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자원을 투입해야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따라서 보조금 경쟁만큼의 서비스 요금 경쟁이 이어지길 기대하기는 힘들다. 애덤 스미스도 지적하였듯이 원래 시장이 가지는 공정성의 근거가 바로 경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분야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데 실패했다면 시장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또한 원래 음성적으로 제공되던 단말기 보조금을 공식화하여 위약금4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든 점도 정말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소비자 후생 제고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소비자 보다는 이통사 후생 제고에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아닌가 판단된다. 게다가 단말기 보조금 감소로 인해 단말기 판매가 급감함으로써 해서 이통사 대리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유정, 2014).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미래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단통법의 본래 취지를 위해 이통사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통사 CEO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단통법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일반 국민이나, 단말기 취급 대리점,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는 단 2회 진행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매일경제 사설, 2014). 정책의 민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단통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과 이통사의 이익만 대변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참여연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5%가 단통법을 대폭 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윤보람, 2014).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담당 부처는 아직 정책의 수정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번 표명하였다. 정부 정책의 수정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지난 두 달간 나타난 본 정책의 효과로 정부는 단말기 가격 인하를 들고 있다. 그러나 단말기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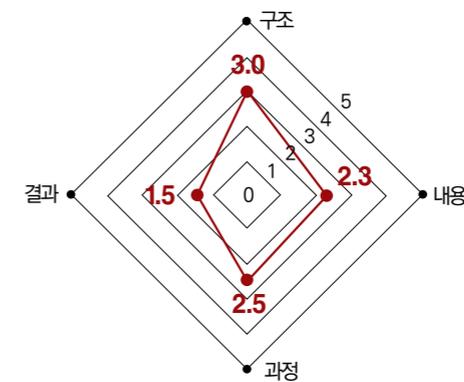
인하는 유동성 확보가 급한 팬택과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화웨이등 중국 업체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단통법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통사 가입비 폐지의 경우도 과거에 이통사 이동시에는 어차피 대리점에서 대신 지불해주던 비용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생 증가라고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 게다가 보조금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요금에 따른 차별은 허용함으로써 해서 이용자가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에 가입할 여지를 여전히 만들어 놓았다. 새롭게 신설된 '위약금4'는 오히려 소비자 통신비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건우, 2014). 결론적으로 원래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던 서비스 요금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소비자 뿐 아니라 단말기 유통을 담당하는 이통사 대리점, 단말기 제조사들도 높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대리점은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수가 줄어서 제조사는 고가의 신제품 단말기에 대한 판매가 줄어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는 경제 부문 평가 대상인 10개 정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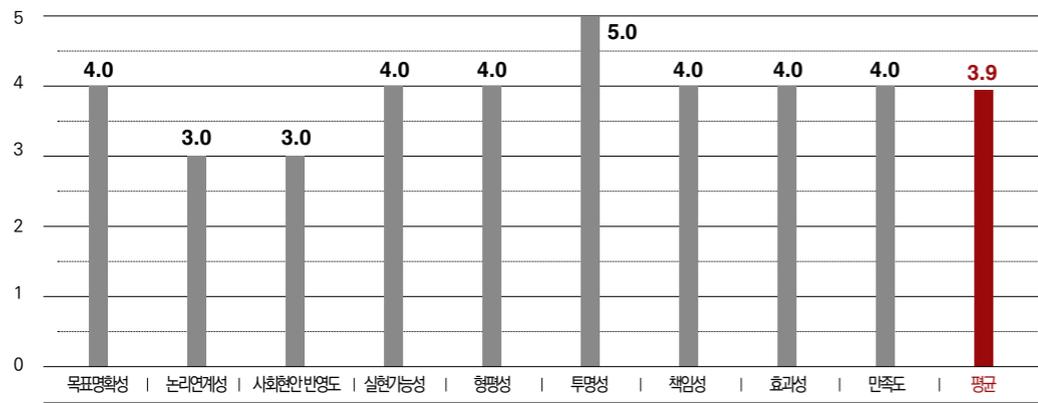
[그림 4-35]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정성평가 결과



(8)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농림축산식품부)

본 정책은 인지도가 낮은 인지도로 인하여 다소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른 정책들은 투명성, 책임성 같은 정책의 과정 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본 정책은 마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간다는 과정의 측면에서 분명히 차별성을 가진다. 그러다 보니 정책에 대한 효과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다만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이나 사회현안 반영도는 다른 정책들과 비교할 때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36]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주민주도의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특색 있는 마을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정책의 목표라기보다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접근방식에 가깝다. 정책의 목표는 무엇을 달성하려 하는지의 'what'에 해당하는 것인데 제시된 목표는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의 'how'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정책이 제시하는 목표는 그다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목표가 그다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과 대안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정책 대안을 통해 도달하려고 하는 이상적인 그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으로 명시화되지는 않았으나 정책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 정책이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상향식 접근을 통한 차별성 있는 마을 경쟁력 제고 정도로 이해한다면 정책이 가지는 대안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농어촌 지역의 마을 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관점에서는 절실한 문제이지만 본 연구를 통해 평가의 대상이 되는 다른 정책들과 비교하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정책 대상이 국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현안 반영도는 다른 정책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큰 하나의 덩어리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마을 단위의 작은 사업들의 집합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다른 사업들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작은 사업들 하나하나는 현실적으로 성공적으로 관리하기가 더 수월하며, 사업 추진 과정이 분권적이므로 시행착오가 생기더

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단위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향식 정책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므로 인적자원의 활용도도 높은 편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대표적인 수혜자는 농어촌 주민들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잠재역량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마을의 발전 전략과 미래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입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주민역량이 향상되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다고 하는 응답이 70%-80% 정도로 나타난 바 있다. 지역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 마을이 주로 혜택을 얻으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집단을 이야기하기 어려우므로 정책의 형평성은 높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¹⁸⁾).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과 차별성은 바로 정책의 민주성에서 찾을 수 있다.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으나 기존의 지역발전 정책과 달리 마을주민 주도의 발전계획이 세워지며, 주민 스스로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짜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향식 정책과정은 다른 정책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마을의 발전계획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고 집행해 나가므로 당연히 책무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정책 집행 방식이 상향식이므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방향수정이 필요하다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관계공무원들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농어촌 현장포럼에 다른 현장활동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며, 현장포럼은 마을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하여 마을주민들이 색깔있는 발전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2013년 234개 마을, 2014년 350개 마을을 지정하여 마을당 평균 670만 원을 지원하였다. 한 마을당 지원된 절대액수는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으나, 현장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고 있는 듯하다. 특히 2013년 현장포럼 참석자 7,6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정책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실 치즈마을이나 아산의 외암 민속마을처럼 새롭게 마을이 가진 잠재역량을 개발하여 차별성을 부각시킨 사례를 찾을 수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1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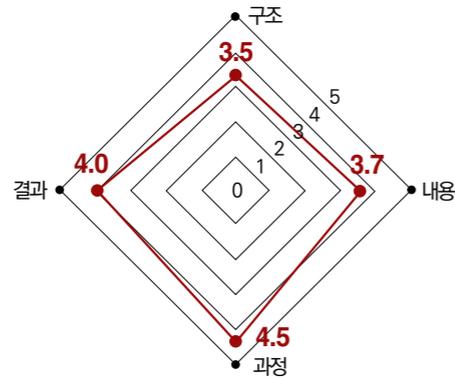
18) 이 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두어 작성하였음.
19) 농림수산식품부(2011), 보도자료 2011.10.21, 배포일시 2011.10.20.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하향식으로 장기적인 비전과 큰 사업 중심이었던 기존의 광역형 지역정책과는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다. 상향식이고 참여 중심이며, 생활밀착형, 맞춤형으로 마을이라는 작은 단위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집행해 나간다.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정책으로,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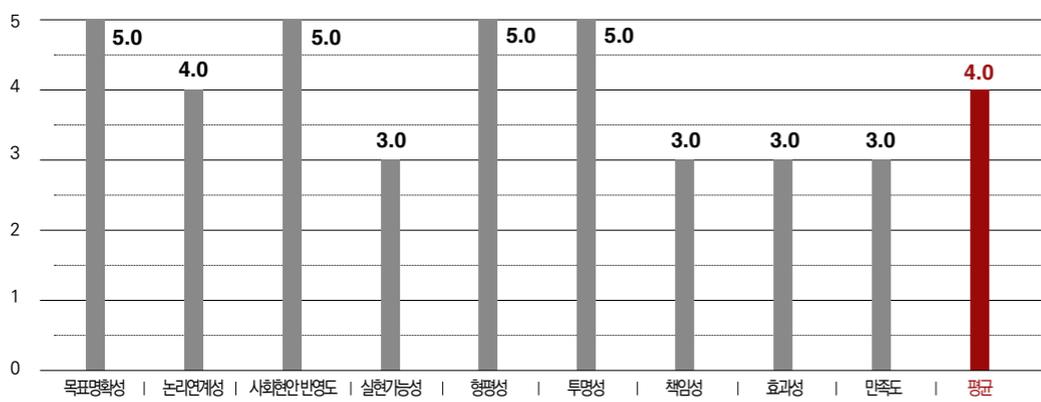
[그림 4-37]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정성평가 결과



(9) 가맹점주 권리강화(공정거래위원회)

본 정책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갑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수단을 단순한 과징금 부과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책의 성격이 사회 전반에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형평성을 담보하고 있으며, 정책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하였다는 측면에서 민주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림 4-38] 가맹점주 권리강화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철폐하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는 비교적 명확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본 정책은 표준가맹계약서 등의 양식을 제정 및 보급하고, 가맹사업법 위반 시 각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저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실질적 권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정책은 그 논리적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추산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의 경우 최근 회자되었던 갑을관계의 심각성을 포착하고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정책의 시행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경우 사회의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은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수단을 통해 정책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없을 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이 부족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시 그 부담이 다시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정책에 별도로 책정된 예산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역효과를 막을 수 있기에 충분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인지의 여부가 의심스럽다. 따라서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후 예산 및 인력의 보충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경우 가맹본부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기는 하나 그 목적 자체가 건전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불공정 행위를 막고자 함에 있으므로 한국 경제에 만연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본 정책을 통해 갑을관계 문제가 해소되고 가맹점주의 부담이 줄어들 경우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정책은 사회 전반적으로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정책의 형평성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정책의 토대가 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가

맹본부 측과 가맹점 사업자 측의 간담회를 각각 3회 이상 개최하는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정책의 민주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이 집행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도입 제도 실태 점검을 위해 설문조사, 서면 실태 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가맹점 사업자와 맹본부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정책의 책무성은 그다지 높지 않게 평가되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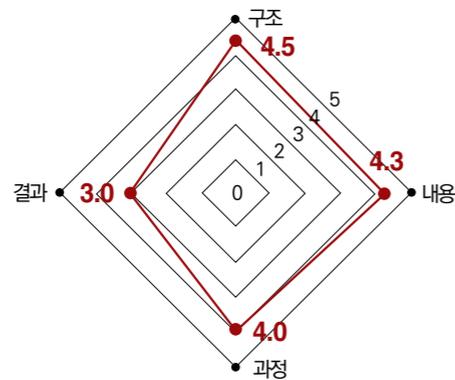
본 정책은 2014년부터 시작되었기에 아직 정책의 효과성을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과징금 부담 등의 수단을 활용하면서 가맹점주의 권리가 조금씩 증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예로 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 금액이 1,211만 원에서 806만 원으로 405만 원 (△33.4%) 가량 감소하였으며, 매장 리뉴얼 비용을 맹본부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전에 비해 1,167건에서 1,289건으로 122건(10.5%)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본 정책의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도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 역시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그리 높지 않게 조사되었다. 이는 아직 본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 생긴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이상의 성과를 보일 경우 정책의 만족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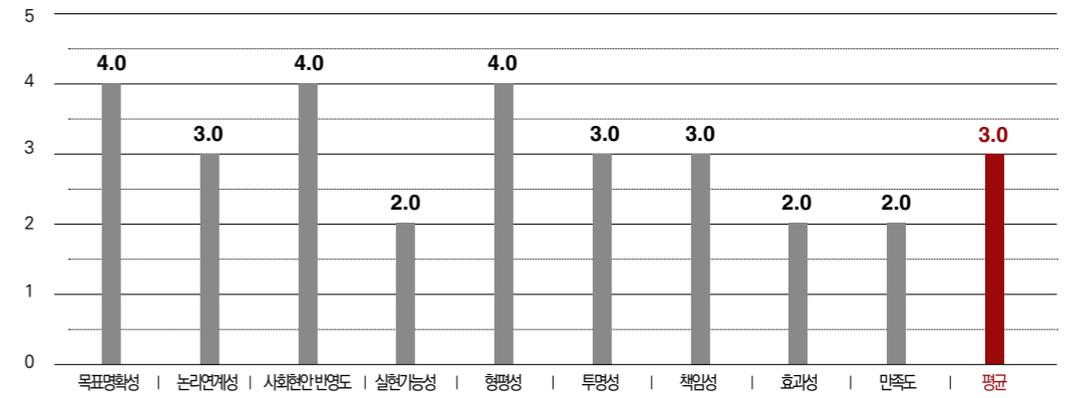
[그림 4-39] 가맹점주 권리강화 정성평가 결과



(10) 공유형 모기지 (국토교통부)

공유형 모기지는 높은 현안 반영도와 명확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택구입 의사결정의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 상승 시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 하락 시 유리한데 주택가격 상승 시엔 수익을 공유한 인센티브가 주택가격 하락 시엔 주택을 구입할 인센티브가 낮아지므로 정책의 메리트가 높지 않음)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다.

[그림 4-40] 공유형 모기지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국민들이 주택가격 변동의 수익과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비교적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주거 취약계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저리의 주택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대안은 언뜻 신선하고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정책은 개인이라는 대상이 존재하고 따라서 정책에 대한 개인의 반응 행태에 따라 그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정부 정책이 시행착오를 거치고 실패하는 것도 이와 같이 정부 정책에 반응하는 개인의 행태를 무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1차원적인 접근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본 정책의 경우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두 무주택 계층이 주택을 구입하게 할 만큼 큰 유인이 되지 못한다. 수익공유형은 개인이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가 클 경우 선택하게 될텐데, 수익을 공유한다면 금리를 높게 지불하는 효과가 생기고 결국은 저금리의 메리트가 사라진다. 손익공유형은 개인이 집값이 내린다는 기대가 클 경우 선택하게 될텐데, 손해가 날 상황을 예측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두 유형 모두 주택 구입이라는 의사결정에서 개인의 인센티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유인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주택문제는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본 정책은 높은 사회현안 반영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을 위한 재원은 주택기금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유형 모기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의도한 대로 무주택자가 좀 더 저렴하게 주택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으로 나뉘는데, 수익공유형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주택기금과 수익을 공유하게 되고 손익공유형은 손해가 발생할 경우 주택기금과 손해에 대한 부담을 공유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들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경우 주택을 구입할 유인이 커지는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공유하게 되면 결국은 원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므로 저금리의 메리트가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경우엔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전세를 선호할 것이므로 손익공유형에 대한 수요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 모두 주택 구입이라는 개인의 선택을 강하게 유도할 정도로 큰 유인이 못되며, 따라서 얼마만큼의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봉급생활자, 신혼부부 등 상대적으로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계층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성에 무게를 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을 원하는 젊은층이 주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큰 반면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집단은 생각하기 어렵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했듯이 정책과정이 하향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개인들의 인센티브 구조에 기반한 정책의 반응 행태에 대한 예측은 실패했다고 본다. 정책디자인 과정에서 좀 더 정책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현재의 성과보다는 나은 성과를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은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나름대로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원 대상자격을 일반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뿐 아니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까지 확대시켰고 신규아파트 잔금지원 확대나 전세가 깎 주택 구입 시 지원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니즈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국토교통부, 2014c).²⁰⁾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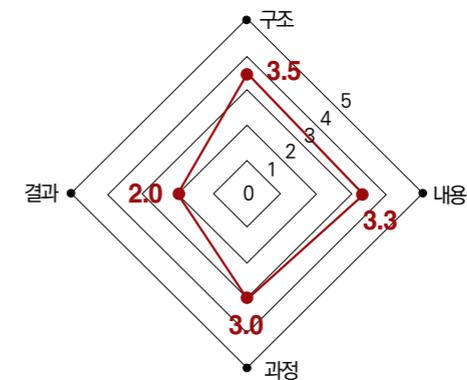
본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수준에 밀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책을 통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3년 12월 정책이 도입된 이래로 올해 말까지 2조 원 가량의 대출실적을 목표로 삼고 있었으나 10월말 현재 대출실적은 1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대출건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로서 지난 10월에는 건수로 300건, 액수로 404억에 그치며 정책 시행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이석우, 2014). 다만 같은 기간 유사한 정책인 디딤돌 대출액은 크게 늘어 두 정책 수단 간에 trade-off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중요한 사회현안을 다루고 있고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정책의 주요 수요자로 삼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디자인이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개인의 의사결정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소 낮은 편이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41] 공유형 모기지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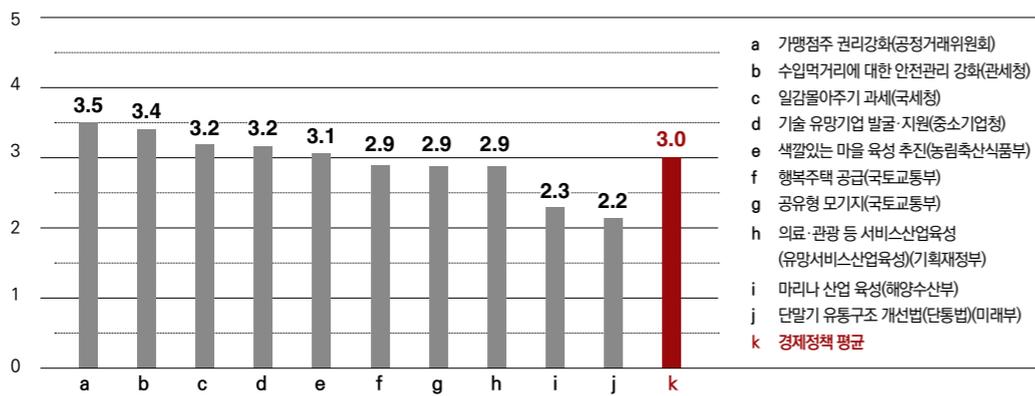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경제정책 분야 10개 정책에 대하여 일반인과 전문가, 그리고 본 연구진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계산한 결과 평균이 3.0으로 외교안보분야(3.3점)나 보건복지분야(3.2점)으로 보다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가맹주점 권리강화나 일감몰아주기과세 등과 같은 경제

20) 국토교통부(2014c), 보도자료 2014.3.26, 배포일시 2014.3.25.

민주화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가 높았다는 점이다. 교육이나 복지 분야와 같이 일반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정책이 아님에도 높은 인지도와 관심, 그리고 평가가 나왔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이제 단순한 성장 보다는 형평성, 공정성 등의 가치를 갖춘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수입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정책은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고,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경제의 질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 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으로는 정책의 목표나 실효성 등이 뚜렷하지 않은 마리나 산업 육성 정책이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좋은 정책의 필요조건으로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뚜렷한 목표와 실효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42]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별 쟁점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청의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정책의 경우 다른 경제 정책들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사회현안 반영도가 4.0을, 형평성이 3.9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본 정책은 현재 사회의 안전을 적절히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 내 형평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 측면에서는 다른 경제 정책에 비해서는 낮지 않은 편이나 본 정책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다소 뒤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정책 역시 다른 경제 정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책 목표의 명확성과 사회 현안 반영도로, 두 분야에서 모두 4.0에 육박하는 점수를 얻었다. 이는 본 정책이 사회의 현안을 적절히 반영하면서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에 비해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이 다소 부족해 본 목표를 현실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책의 투명성·책임성·효과성·만족도의 네 개 분야에서 모두 3.0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정책의 집행 과정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기획재정부의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육성(유망서비스산업육성) 정책의 경우 평균이 2.9로 타 정책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3.6을 받은 정책 목표 명확성이나, 이 역시도 위의 두 정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투명성·책임성·만족도의 세 분야는 2.5를 받는 등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넷째,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공급 정책은 전체적으로 2.9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책의 목표성에서 3.7, 사회현안 반영도에서 3.5를 받으며 본 정책의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이 2.7로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본 정책이 목표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낮은 효과성(2.4)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도 본 정책은 투명성 및 만족도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해양수산부의 마리나 산업 육성 정책의 경우 평균 2.3을 받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단통법의 경우 언론의 집중적인 포화를 받으면서 그 문제점이 세간에 잘 알려졌으나, 본 정책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 정책은 다른 정책이 정책 목표의 명확성,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과 달리 모든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2.7을 받았으나, 이 역시도 타 정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여섯째, 중소기업청의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 사업의 경우 평균 3.2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본 정책은 사회현안 반영도에서 4.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정책 목표 명확성과 논리 연계성에서도 각각 3.7과 3.5를 받았다. 이는 본 정책이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목표를 명확히 드러내었으며, 이를 수행하기에 알맞은 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정책은 재정적 및 행정적 측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이 2.7로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에 효과성 및 만족도도 각각 2.5, 2.6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예산 확충 및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미래창조과학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경우 평균 2.2를 기록하며 경제정책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본 정책의 폐해에 대한 잇따른 지적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정책은 목표의 명확성(3.2)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최저치에 육박하는 점수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농림축산식품부의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 정책의 경우 평균 3.1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 정책은 걸보기에는 논리 연계성(2.9)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3점대 초반의 점수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비슷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타 정책이 평균에 비해 투명성·효과성·만족도에서 2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정책 과정 및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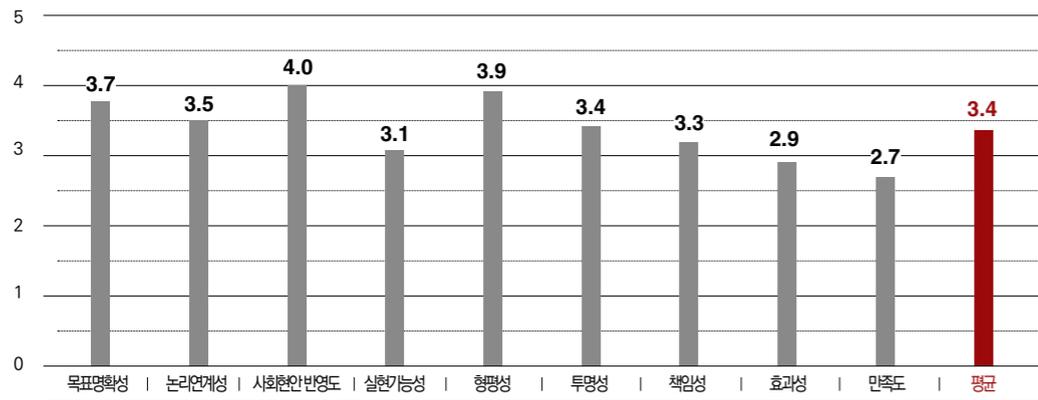
아홉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점주 권리강화 정책의 경우 평균 3.5로 경제정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본 정책은 목표의 명확성·사회현안 반영도·형평성·투명성의 네 개 분야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표가 적절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집행 과정 역시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단 본 정책은 논리 연계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받으면서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실현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예산 및 행정적 인력을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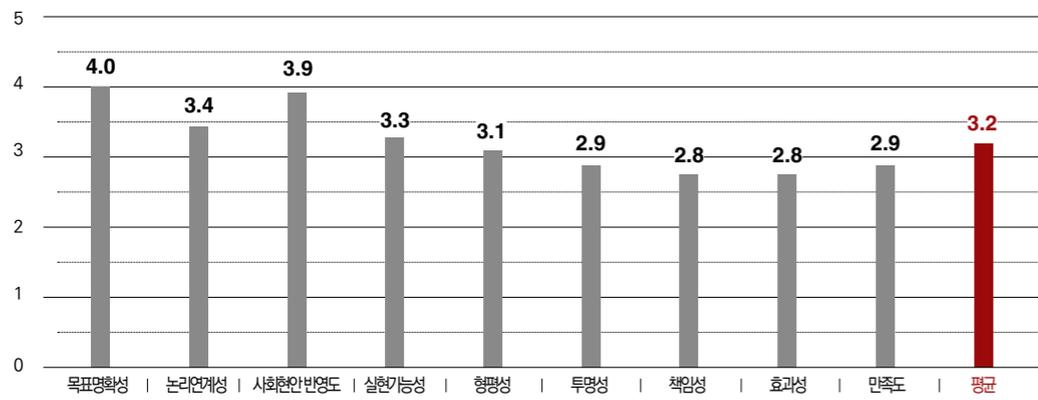
열째, 국토교통부의 공유형 모기지 정책의 경우 평균 2.9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본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2.5로 다른 경제 정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정책의 결과(효과성, 만족도) 역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본 정책은 예산 및 행정 인력을 보강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정책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증진시킬 필요성을 가진다.

[그림 4-43]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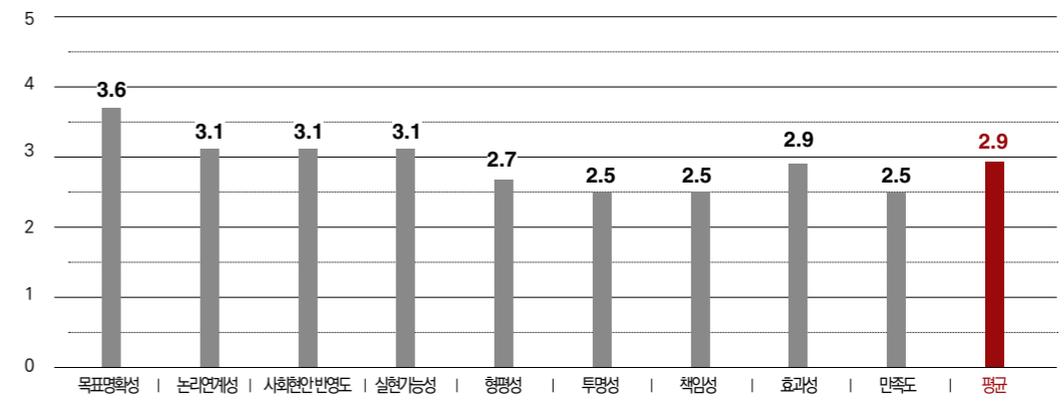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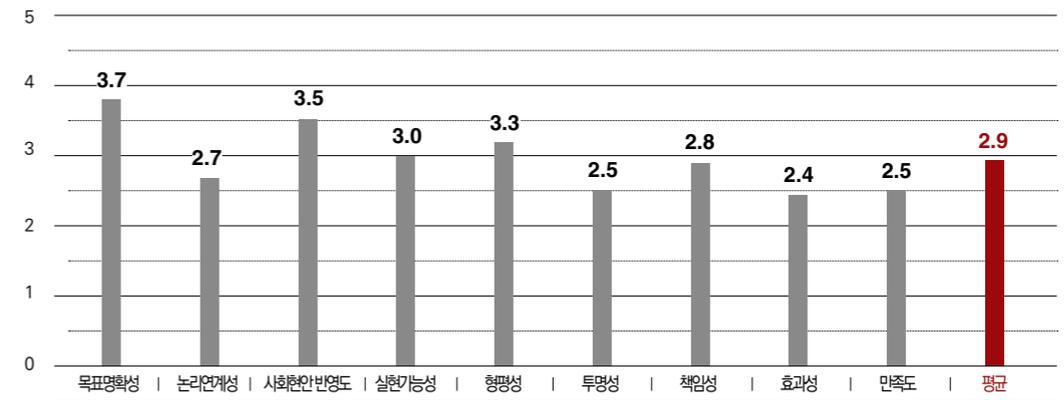
일감몰아주기 과세(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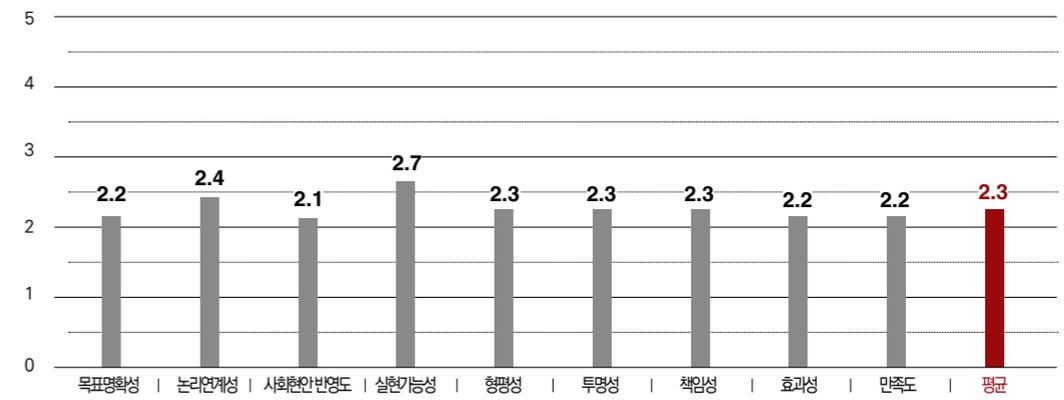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육성(유망서비스산업육성)(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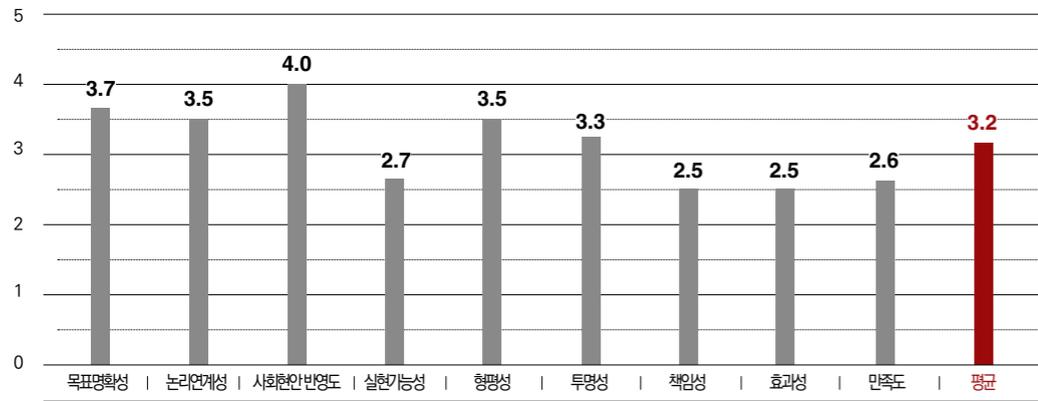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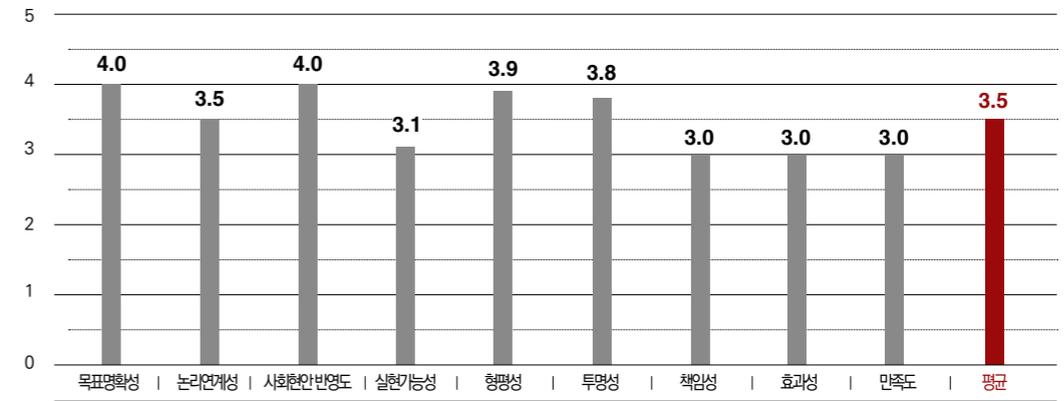
마리나 산업 육성(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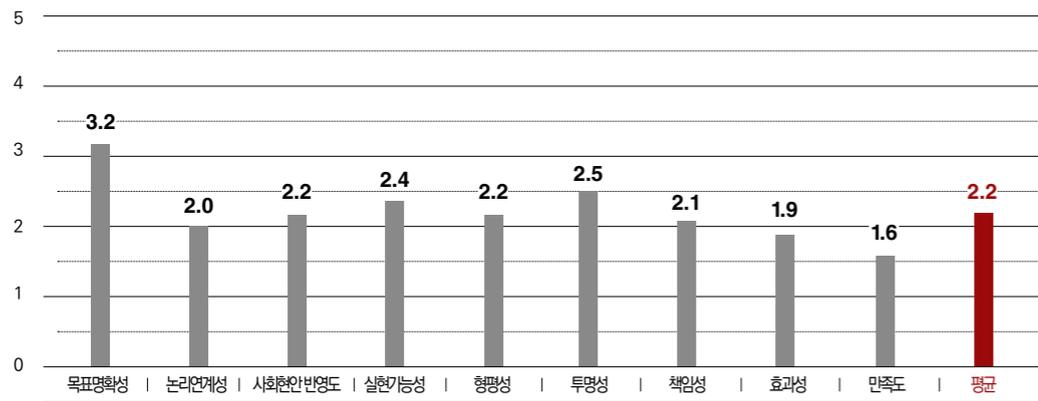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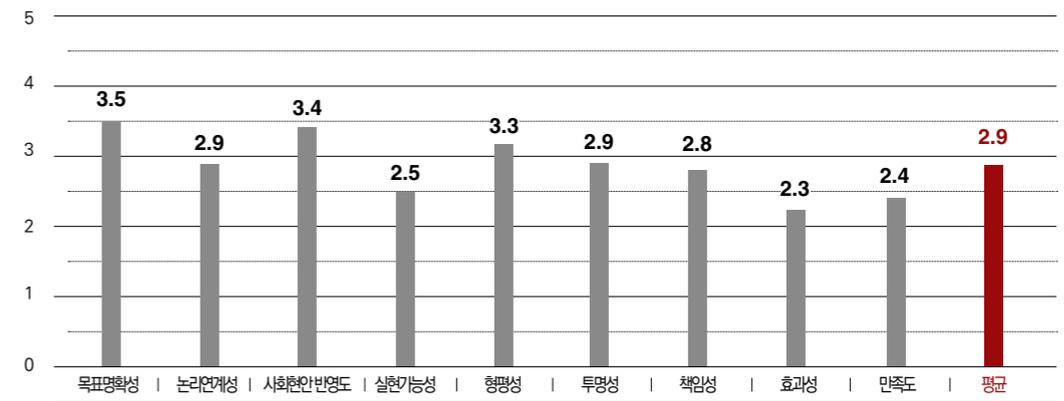
가맹점주 권리강화(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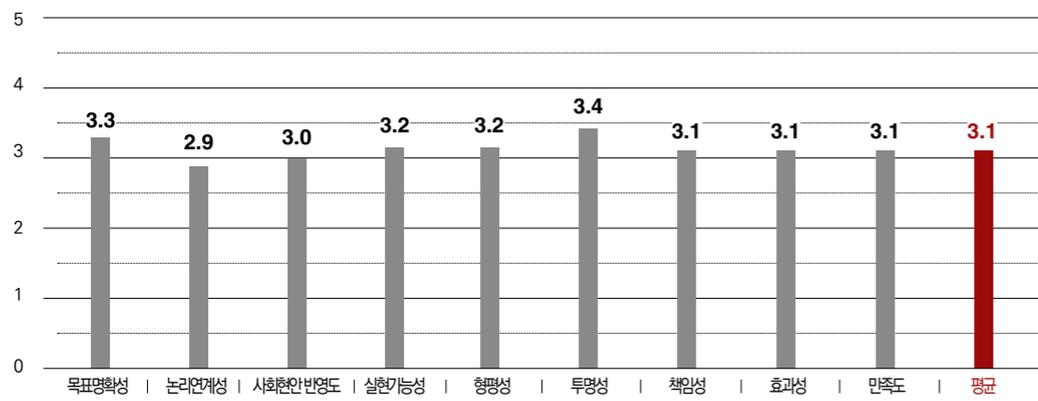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미래부)



공유형 모기지(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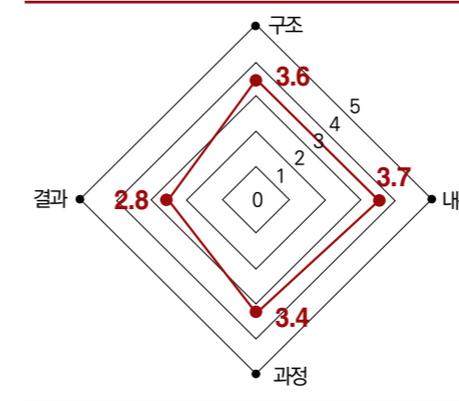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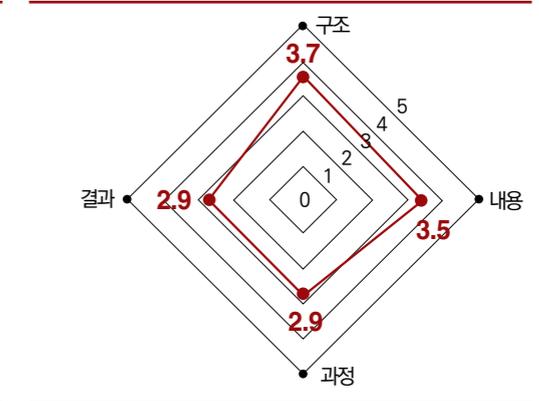


[그림 4-44] 경제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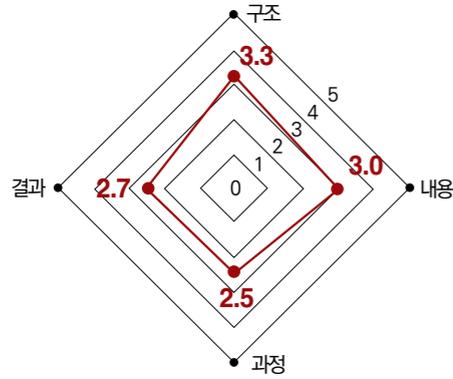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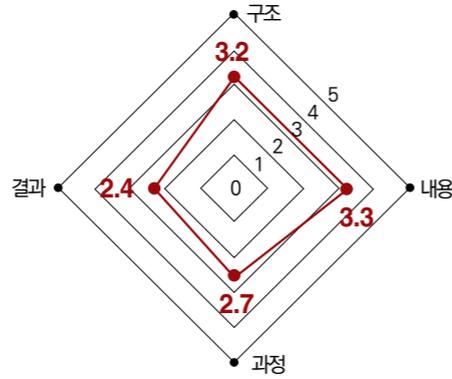
일감몰아주기 과세(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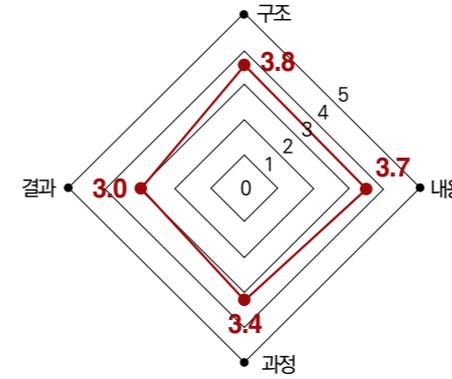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육성(유망서비스산업육성)(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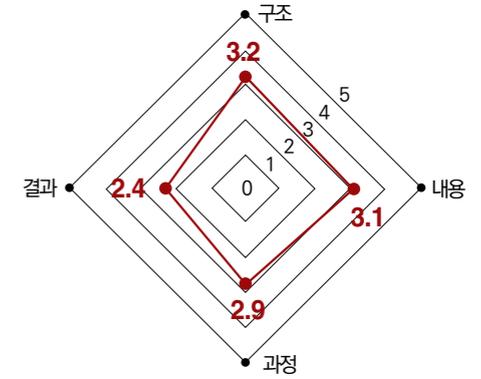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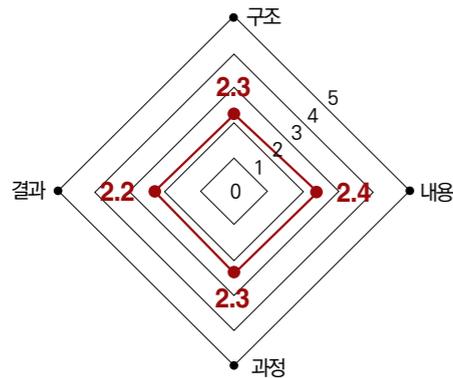
가맹점주 권리강화(공정거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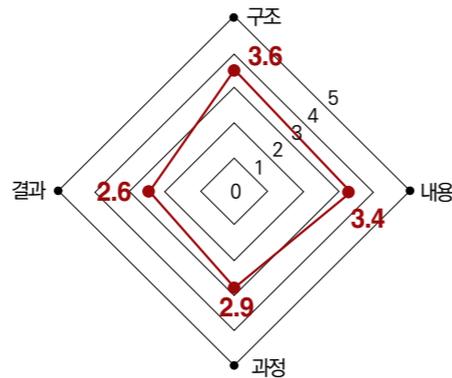
공유형 모기지(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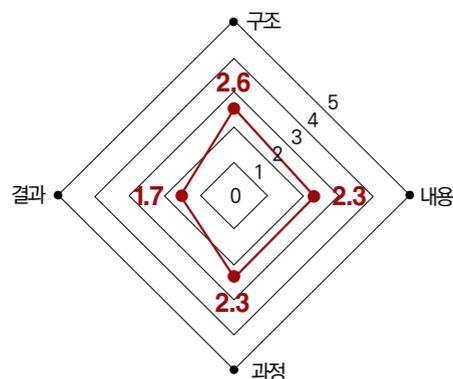
마리나 산업 육성(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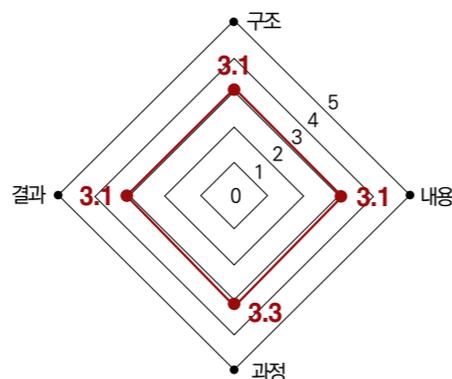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중소기업청)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미래부)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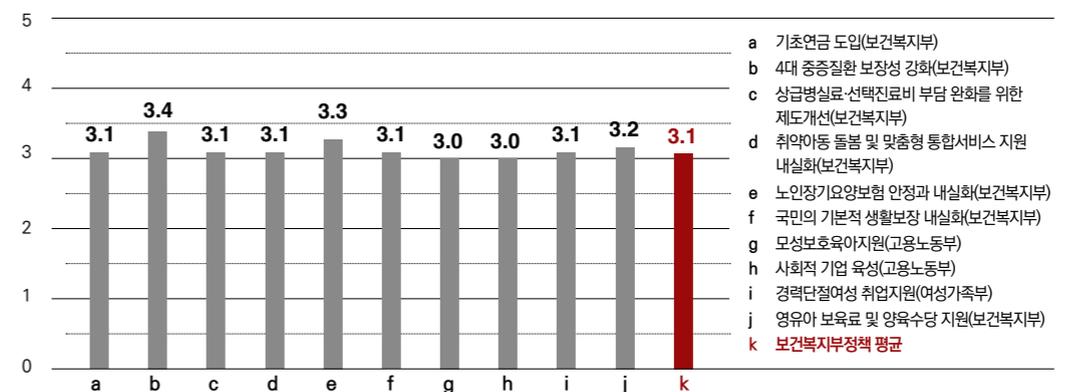
3. 사회복지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정책평가는 경제정책(2.9), 교육문화정책(2.9)이나 외교안보정책(3.0)에 비해서 다소 높은 3.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대선과 총선 등을 거치면서 보건 및 복지정책이 핵심적인 선거이슈로 부각되었고, 이후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차 이슈화되면서 높은 인지도가 바탕이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과 같이 많은 계층에게 이슈화된 정책도 있었으며, 실제로

[그림 4-45] 사회복지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되면서 다른 정책에 비해서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단순한 관심 자체가 높은 평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높은 관심이 있다고 해도 정책의 구조나 내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면 전반적인 평가는 오히려 낮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른 정책에 비해서 다소 높은 평가가 나온 것이나 평균치인 3보다 다소 높은 3.1이 나온 것은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 전문가들이 각 정책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3.8(4:알고 있다, 3:보통이다)이라고 응답해서 대체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인들도 3이라고 응답해서 상대적으로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전반적으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8과 3.2를,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묻는 질문(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3.5와 3.0을 주었다.

정책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형평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의 응답이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 특히 사회현안 반영도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3.6과 3.0으로 응답해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는 복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동의라고 파악된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3.4와 일반인 2.9로서 평균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정책의 민주성과 책무성으로 나타나는 과정지표 값은 평균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2 그리고 일반인은 2.7로 응답했으며,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 3.1과 일반인 2.7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3.1, 일반인은 2.7로 응답했다. 또한,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3.1과 일반인이 2.8로 응답함으로써 평균인 3.4와 2.9보다 낮게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정책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 구조와 사회현안에 대한 반영을 포함하는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책임성이나 민주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표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과정에 대한 낮은 평가는 효과성과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효과성에 대한 질문과 만족도에 대한 값이 정책 내용이나 구조에 대한 평가보다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나고 있었다.

10개 정책들 간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대체로 3.4에서 3.0으로 편차가 크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평가가 3.4와 3.3으로 가장 높았고, 고용노동부 사업인 모성보호육아지원과 사회적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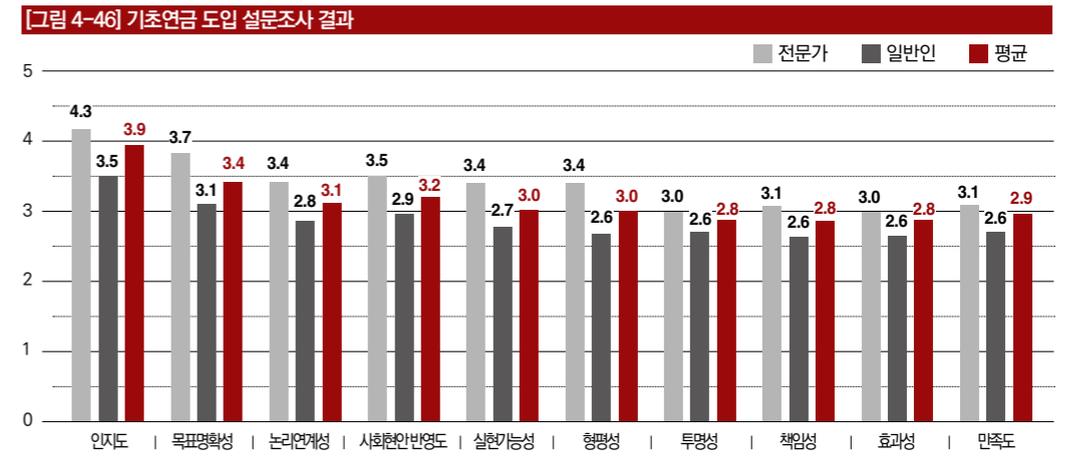
업에 대한 정책이 3.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건강'과 '노령화'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작용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가장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은 3.1과 3.2로 평균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각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기초연금제도(보건복지부)

기초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4.3과 3.5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 중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전문가와 일반인)이다. 그만큼 최근에 많은 정치적 이슈가 되었으며,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광범위한 수혜대상과 그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3.7과 3.1로 다른 수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빈곤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 중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다는데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70%가 넘는 반면 일반인들은 40%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3.4로 일반인 2.8에 비해서 높았으며, 일반인은 '보통이다(3)'보다 낮은 평가를 내렸다. 일

반인의 경우 '별로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이들이 38%로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27%보다 높게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보다 다소 높은 3.5와 2.9의 평가를 전문가와 일반인이 내렸다. 이는 노인빈곤과 자살 등이 이슈가 되는 현 상황에서 기초연금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4로 다소 낙관적으로 본 반면 일반 국민들은 2.7로 상당히 낮게 평가했다. 실제 일반인 중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평가한 이들이 24.3%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42%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3.4라고 평가한 반면 일반인들은 실현가능성보다 낮은 2.6의 평가를 내렸다. 형평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의 비중이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 47%로 절반에 육박함을 보여주었다. 국민연금 기여 기간과의 연계 등이 부정적 평가로 연결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앞 내용과 달리 전문가의 평가가 3.0으로 상당히 낮아짐을 볼 수 있다. 전문가들 중 부정적 평가가 38%로 긍정적 평가인 34%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일반인들 중 긍정적 평가는 17%로 부정적 평가인 48%에 비해서 월등히 낮았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정책과정의 민주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 3.1과 일반인 2.6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 평가가 36%와 48%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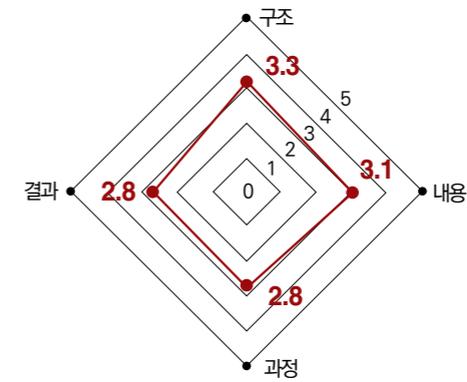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3.0과 2.6의 평가를 나타냈다. 비록 아직 기초연금의 효과를 판단하기에 이른 시기이지만 현재까지의 평가는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보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부정적 평가가 40%에 이르렀으며, 일반인들의 부정적 평가도 48%가 넘게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정책과정과 같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3.1과 일반인 2.6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에 대한 정책적 목표나 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도 다소 높은 평가를 준 반면 정책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게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효과성이나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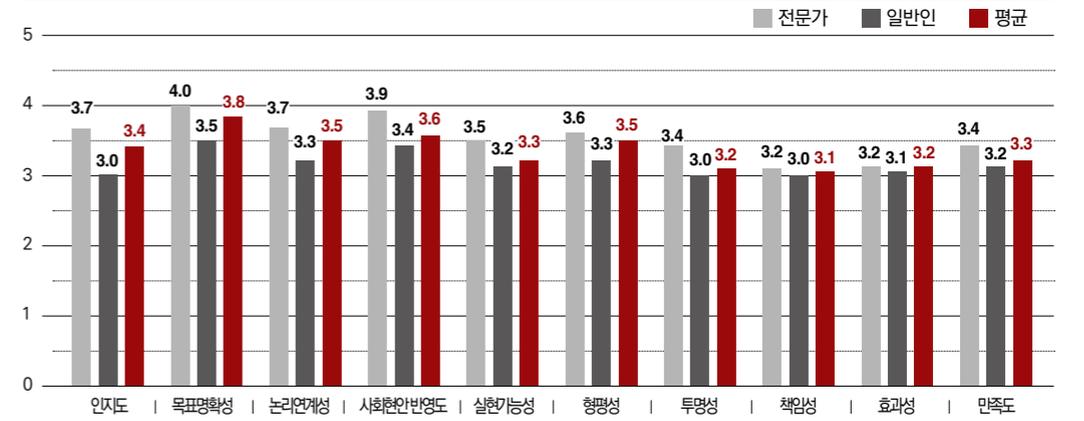
[그림 4-47] 기초연금 도입 설문조사 결과



(2)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7과 3.0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도입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정치적 이슈가 되어 다른 복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4-48]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4.0과 3.5로 다른 항목의 수치에 비해 또 다른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비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이라는 명확한 목표로 전문가는 80%, 일반인은 57% 이상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앞서 기초연금 도입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일반인의 차이는 크지만 일반인들이 다른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 중 45%가 넘는 항목이 단 하나이며 46%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높이 평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3.7 그리고 일반인들 3.3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앞에서 정책목표가 명확하다고 평가하고 이어 비교적 다른 분야에 비해 시행방안도 구체적이며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9와 3.4로 모두 다른 분야에 비해 제일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시도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5 그리고 일반인은 3.2로 다소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일반인들이 대체로 낮게 평가하는 것에 비해 약 40%가 '어느 정도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3.6으로, 일반인들은 3.3으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66%)와 일반인(45%) 모두 다른 어떤 정책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형평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른 정책에서는 대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한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전문가는 3.4 그리고 일반인은 3.0으로 그리 낮지 않은 평가를 했다. 민주성 역시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2와 일반인 3.0으

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는 '그렇지 않다' 32%, '보통이다' 24%, 그리고 '그렇다'에 44%로 응답한 반면, 일반인은 각각 29%, 41%, 그리고 30%로 응답하여 전문가 그룹이 일반인에 비해 책임성 있게 진행했다고 응답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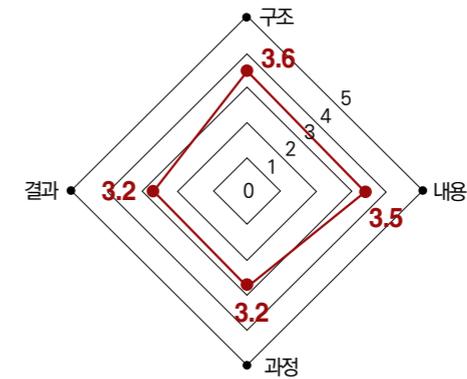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이 3.2와 3.1로 유사하게 평가했다. 전문가의 경우 '보통이다'와 '그렇다'에 각각 32%, 44%, 일반인은 각각 36%, 37%로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으로 나타나, 역시 다른 정책들에 비해 효과성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정책의 효과성과 같이 전문가 3.4, 일반인 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환자 의료비에 대한 큰 부담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와 이에 따른 보장으로 환자 본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고 향후 나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의 표현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림 4-4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3.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적 목표의 명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각각 3.6과 3.5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민주성과 책무성, 그리고 효과성과 만족도를 포함하는 정책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모두 3.2로 다소 높게 평가하여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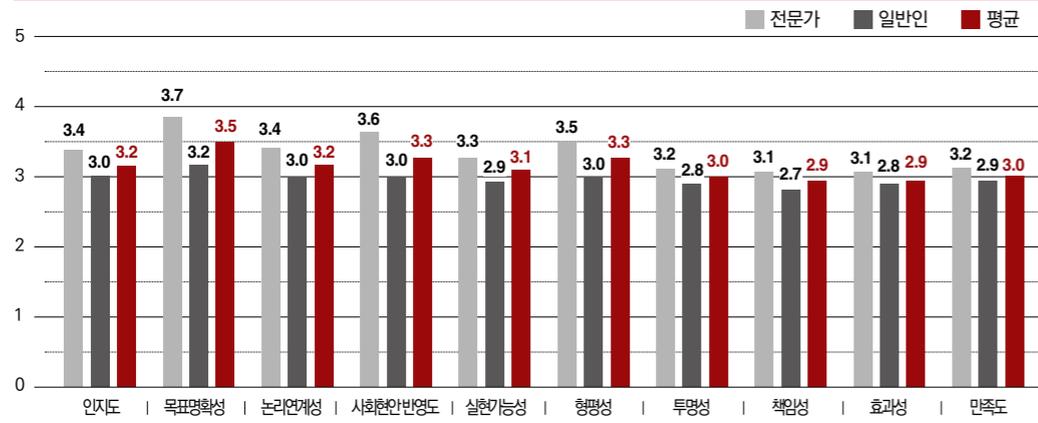
[그림 4-49]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설문조사 결과



(3)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보건복지부)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인지도는 전문가가 3.4로 다른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와 모성보호 육아지원 정책과 더불어 가장 인지도가 낮았다. 10개 정책 중 전문가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22%로 가장 많았다. 일반인의 인지도는 3.0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림 4-50]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3.7과 3.2로 다른 수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지도에 비해 정책명칭으로 정책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3.4, 일반인이 3.0으로 평가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6, 3.0의 평가를 내렸다. 앞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3으로 다소 낙관적으로 본 반면, 일반인들은 2.9으로 약간 낮게 평가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3.5로 평가한데 반해 일반인들은 3.0으로 보통으로 답한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56%인데 반해,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0%, 그리고 '그렇다'가 약 34%로 부정적 답변이 더 많았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2 그리고 일반인이 2.8로 다소 낮아졌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 3.1과 일반인 2.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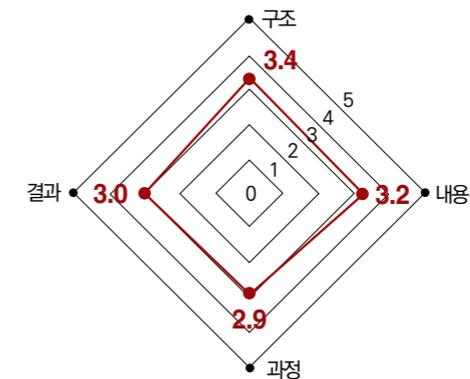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3.1과 2.8의 평가 하여, 효과성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정책과정 및 효과성과 같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가 3.2, 일반인 2.9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목표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구조(3.4)와 현안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책 내용(3.2)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평가를 한 반면, 민주성과 책무성을 나타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2.9로 그리 높지 않은 평가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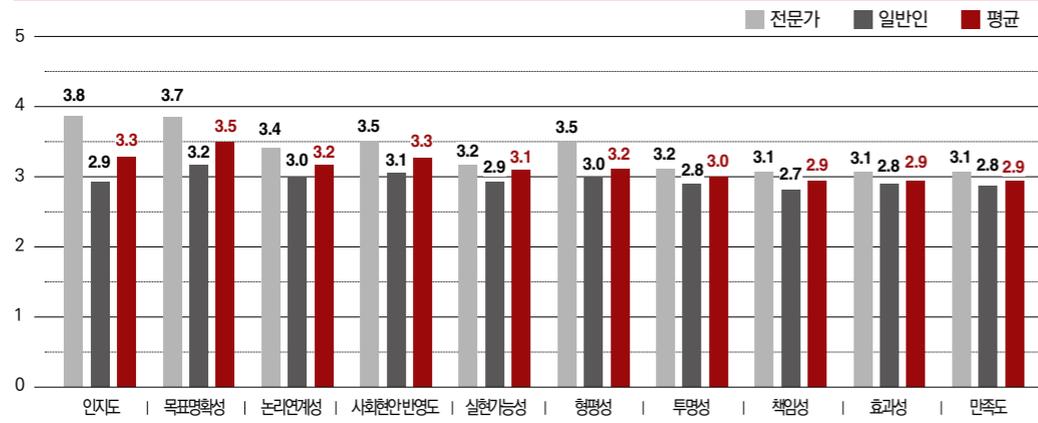
[그림 4-51]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4)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보건복지부)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가 3.8, 일반인이 2.9으로 응답하여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2]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각각 3.7과 3.2로 다른 수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이 3.4 그리고 일반인이 3.0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5와 3.1로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2, 일반인들은 2.9로 다소 낮게 평가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은 3.5, 일반인들은 3.0로 실현가능성보다 약간 높게 평가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가가 3.2 그리고 일반인이 2.8의 평가로 다른 정책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느끼는 바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3.1로, 일반인은 2.7로 낮게 나타났다. 일반인 중 책임성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2%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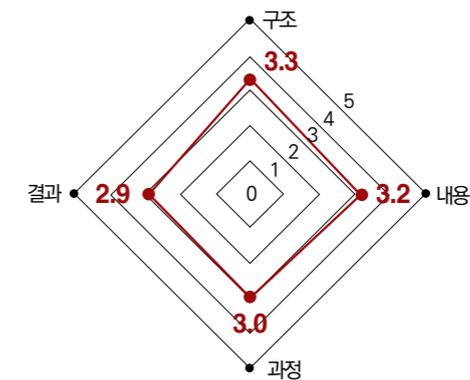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1과 2.8의 평가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이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24%, 긍정적이다 36% 라고 응답한데 반해 일반인들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에 불과하여 일반인들이 느끼는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대한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정책과정과 같이 전문가 3.1, 일반인 2.8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에 대한 구조(3.3)나 내용(3.2)에 대해서는 다소 높은 평가를 한 반면, 정책과정이 민주적인지,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 등의 정책과정(3.0)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효과성이나 만족도를 포함하는 결과(2.9)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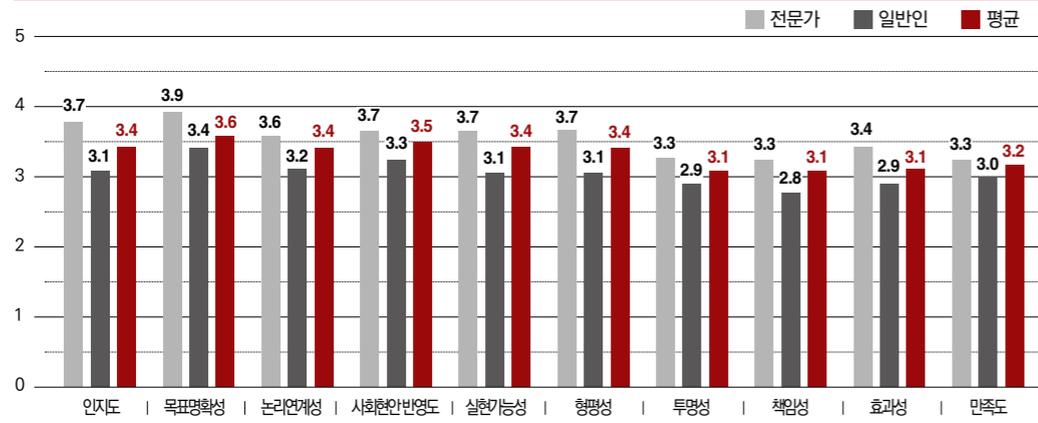
[그림 4-53]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 설문조사



(5)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7과 3.1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남에 따라 수혜 노인과 가족이 늘어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했으나 모른다는 응답이 29%를 넘게 나타났다.

[그림 4-54]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 3.9, 일반인 3.4로 다른 수치에 비해 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3.6, 일반인들이 3.2로 대체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3.7, 일반인이 3.3로 응답해 고령화 시대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파악할 수 있겠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3.7, 그리고 일반 국민은 3.1로 일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전문가들 50명 가운데 단 한명만이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49명이 보통이다(34%)와 실현가능하다(64%)는 답변을 선택했다. 이에 비해 일반국민의 25%가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36%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7로 비교적 높게 평가하여 다른 10개 정책 가운데 형평성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일반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에 대한 형평성을 다른 정책의 내용과 유사하게 3.1로, 보통 정도로 평가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는 3.3 그리고 일반인들은 2.9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3.3으로 다소 높게, 일반인의 경우 2.8로 다소 낮게 평가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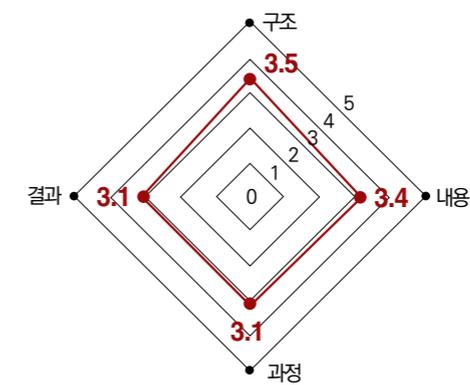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4, 2.9의 평가를 나타냈다.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의 효과성을 다소 낮게 평가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정책의 효과성이 다른 정책들에 비해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3.3으로, 일반인은 3.0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다음으로 만족도를 높게 평가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에 대한 정책적 구조(3.5)나 내용(3.4)면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하고, 민주성과 책무성 등으로 나타나는 정책과정, 그리고 효과성과 만족도로 나타나는 정책의 결과도 두 부분 모두 3.1로 낮지 않은 평가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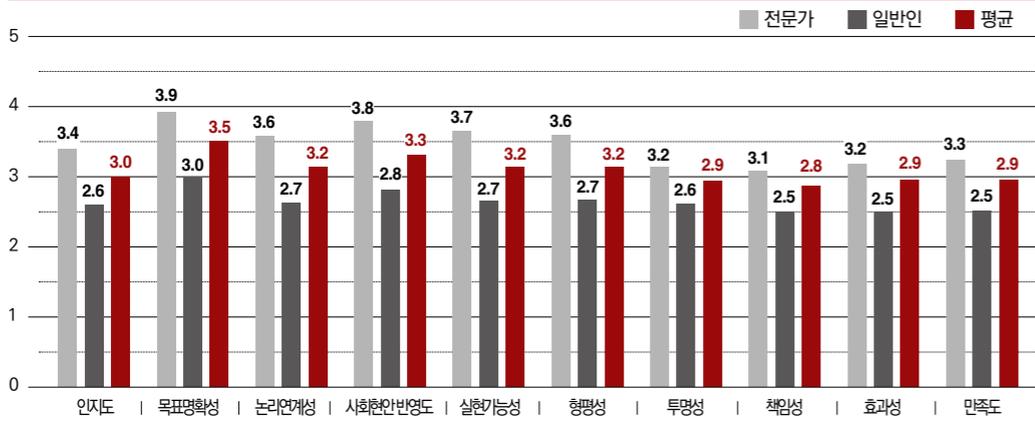
[그림 4-55]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설문조사 결과



(6)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보건복지부)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4과 2.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와 일반인 두 그룹 모두 사회복지 10개 정책 중에서 모성보호육아지원 정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인지도(전문가와 일반인)이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라는 추상적인 이름이 정책 인지도를 다소 낮추는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6]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3.9과 3.0으로 다른 수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3.6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한 반면 일반인은 2.7로 보통보다 낮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별로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10%에 불과한데 일반인은 40%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는 비교적 높은 3.8을, 일반인은 다소 낮은 2.8의 평가를 내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7로 다소 낙관적으로 본 반면, 일반 국민들은 2.7로 상당히 낮게 평가했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는 '별로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2%로 10개 정책 중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적었고, 일반인은 4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10개 정책 중 가장 부정적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와 일반인이 느끼는 실현가능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3.6에 비해서 일반인들은 보통보다 낮은 2.7의 평가를 내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앞선 내용과 달리 전문가는 3.2의 평가를 내렸고 일반인은 2.6의 평가를 내렸다. 일반 국민의 경우 '별로 그렇지 않다 혹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48%가 넘어 정책과정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매우 높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 3.1과 일반인 2.5로 낮게 나타났다.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보통수준의 평가를 했지만 일반인들의 평가는 거의 과반수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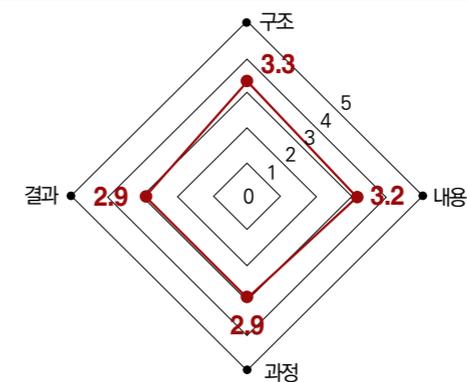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2과 2.5의 평가를 했다. 정책의 내용과 과정에서도 낮은 수준의 평가가 결과적으로 효과성에 있어서도 일반 국민들의 과반수이상(51%)이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문가 3.3과 일반인 2.5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에 대한 정책적 목표나 연계성, 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평가를 하였으나, 정책과정이나 결과에서는 다소 낮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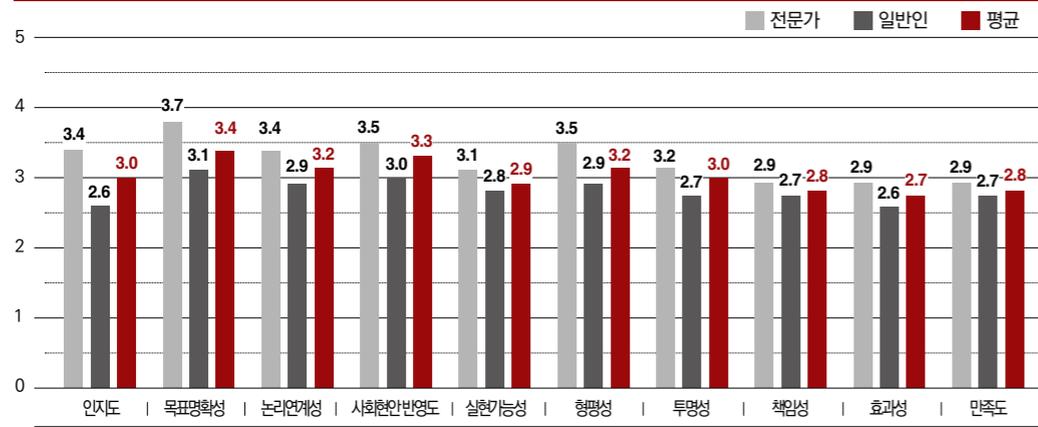
[그림 4-57]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 설문조사 결과



(7)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대해 전문가는 3.4로 다소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일반인은 2.6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본인이 해당되지 않거나 관심 영역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낮은 정책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8] 모성보호육아지원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3.7과 3.1로 다른 수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3.4로 일반인 2.9에 비해서 높게 평가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각각 3.5와 3.0의 평가를 내려 모성보호 육아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1, 일반인들도 2.8로 실현가능성에 대해 다소 의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이 3.5로 일반인들의 2.9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평가가 3.2 그리고 일반인의 평가가 2.7로 사회현안 반영도 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 2.9와 일반인 2.7로 낮게 나타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2.9와 2.6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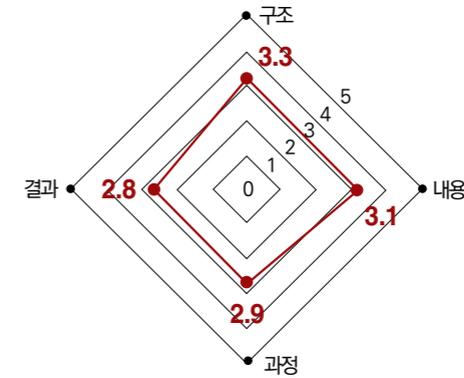
를 나타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의 주요정책인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등이 실제 직장에서는 유명무실하여 시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에 낮은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정책의 효과성과 같이 전문가 2.9와 일반인 2.6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대한 정책적 목표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약간 높게 평가하나(3.3) 내용(3.1)과 과정(2.9)에서 모두 그리 높지 않은 평가를 하고, 결과적으로 효과성이나 만족도에서 낮은 평가(2.8)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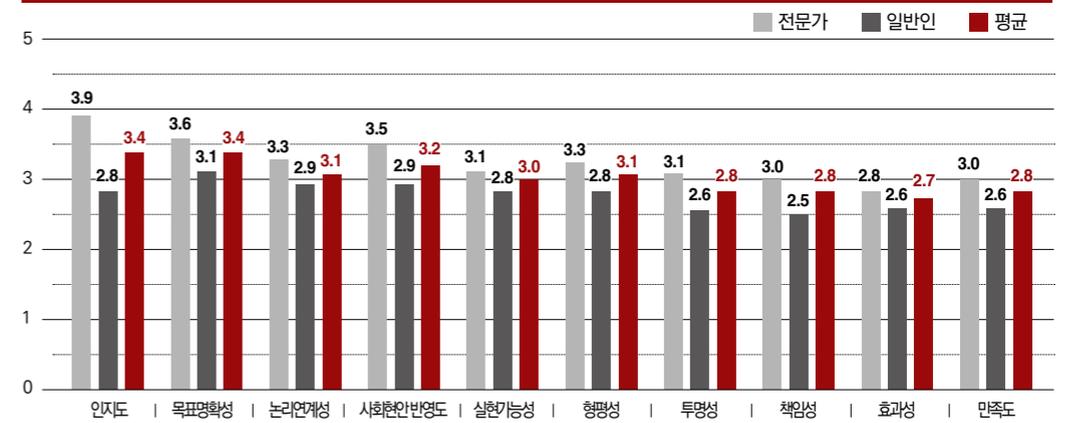
[그림 4-59] 모성보호육아지원 설문조사 결과



(8) 사회적 기업 육성(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가 3.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인은 2.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우는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없었으나 일반인 중 36%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해당사항이 없는 일반인의 경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0] 사회적 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각각 3.6과 3.1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3, 그리고 일반인이 2.9로 정책 목표가 명확한지에 대한 질문보다 낮은 평가를 내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5와 2.9의 평가를 내려 사회적 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1, 일반인들은 2.8로 다소 낮게 평가했다. 일반인 중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평가한 이들이 24.3%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42%보다 월등히 낮게 나타났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3.3로 평가한 반면 일반인들은 2.8의 평가를 내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앞선 내용과 달리 전문가의 평가가 3.1로, 일반인은 2.6으로 상당히 낮아짐을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 3.0과 일반인 2.5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부정적 평가가 34%와 50%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정책과정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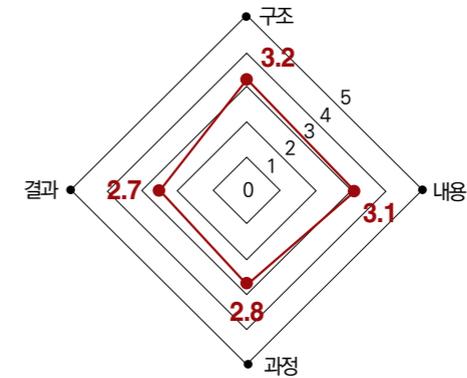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2.8과 2.6의 평가를 내렸다. 정책의 민주성과 책무성에 부정적 평가에 이어 효과성에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정책과정, 효과성과 같이 전문가 3.0과 일반인 2.6으로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구조(3.2)나 내용(3.1)에서도 높은 평가를 하지 않았고, 정책의 과정(2.8)과 효과성, 만족도에 이르는 결과(2.7)까지 모두 상당히 낮은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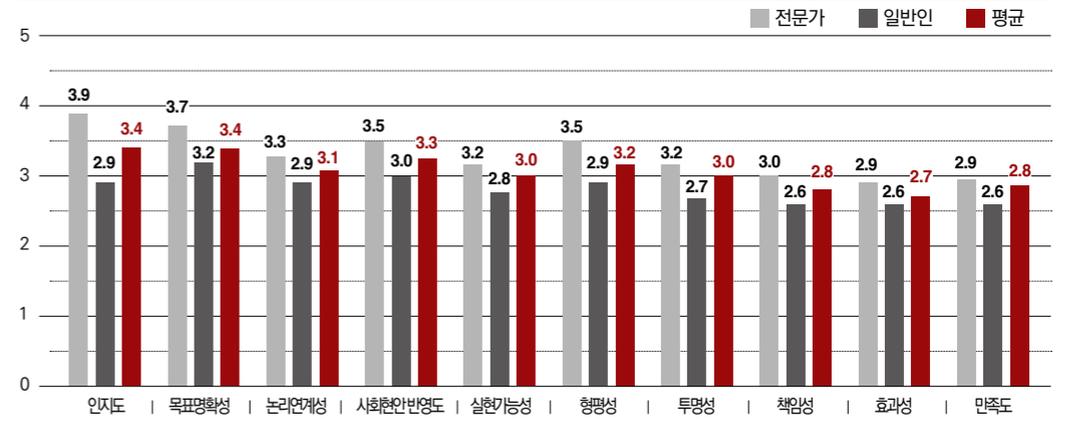
[그림 4-61] 사회적 기업 육성 설문조사 결과



(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해 72%가 알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 그룹은 인지도를 3.9로 평가하여 대체로 잘 알고 있는 반면, 일반인은 2.9로 평가하여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3.7과 3.2로 다른 수치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3.3, 일반인이 2.9로 다소 낮게 평가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보다 다소 높게 3.5와 3.0의 평가를 내렸다. 이는 낮은 출산율 및 여성고용율로 인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2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나 일반인들은 2.8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대체로 육아라는 현실에 매어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과연 새일센터라는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3.5로 평가한 것에 비해 일반인들은 현저히 낮은 2.9의 평가를 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2, 그리고 2.7의 평가를 내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 3.0과 일반인 2.6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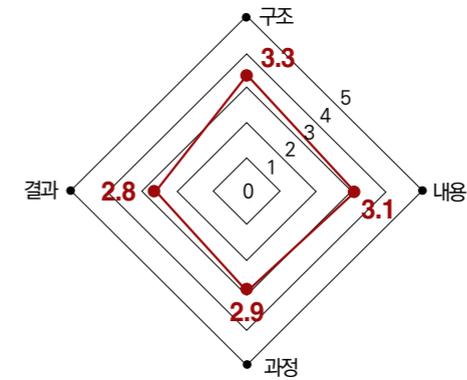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모두 2.9와 2.6로 낮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일반 국민의 51%가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실현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을 통해 재취업하는 여성비율의 증가 대한 효과가 낮다고 평가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낮은 정책의 효과성에 이어 정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전문가 2.9와 일반인 2.6으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정책의 구조(3.3)와 내용(3.1)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게 정책이 진행되었는지 과정에 대해 다소 낮은 평가(2.9)를 하고 따라서 효과성과 만족도로 나타나는 정책의 결과에서도 2.8이라는 낮은 평가를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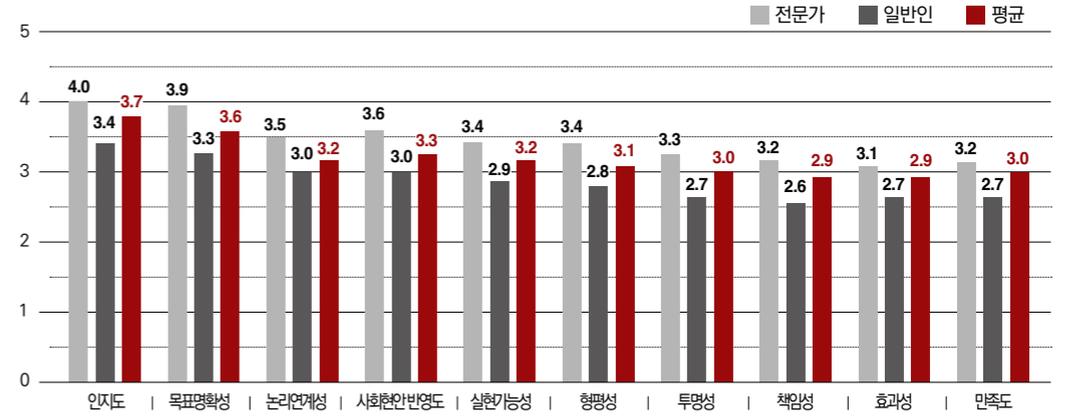
[그림 4-6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설문조사 결과



(10)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4.0과 3.4로 사회복지 10개 정책 중에서 기초연급 도입 정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학 전 모든 아동의 무상보육으로 확대되는 동시에 형평성을 위해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과 각 시도 교육감들이 예산 부족으로 내년 보육료 지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한다는 뉴스 기사²¹⁾가 보도되는 등 신문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4]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에 대한 명확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3.9과 3.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1) 연합뉴스. 2014.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되나> (10월 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6/0200000000AKR20141006190800054.HTML?input=1179m> (2014년 12월 1일 접속)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가들이 3.5, 일반인들이 3.0으로 높게 나타났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경제적 상황과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6과 3.0의 평가를 내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고령화시대의 저출산율과 낮은 여성고용율에 대한 적절한 반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해서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4로 다소 낙관적으로 본 반면 일반인들은 2.9로 낮게 평가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혜택을 받는 대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정책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은 실현가능성과 마찬가지로 3.4와 다소 낮은 2.8의 평가를 내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문가 3.3, 일반인 2.7의 평가를 내렸다.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는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3.2과 일반인 2.6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책의 실현가능성, 형평성, 민주성도 낮은 평가를 한데 이어 지자체로 떠넘긴 예산에 대한 논란 등 책임성 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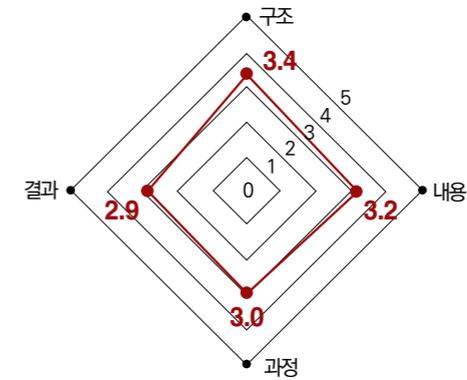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이 각각 3.1과 2.7의 평가를 내려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으로 아동발달, 양육부담경감,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3.2로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그러나 일반인은 2.7로 낮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대한 정책적 목표나 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구조(3.4)나 내용(3.2)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과정(3.0)에서는 보통 수준의 평가를, 하지만 효과성이나 만족도의 결과 측면에서는 다소 낮은 수준의 평가를 내렸다.

[그림 4-65]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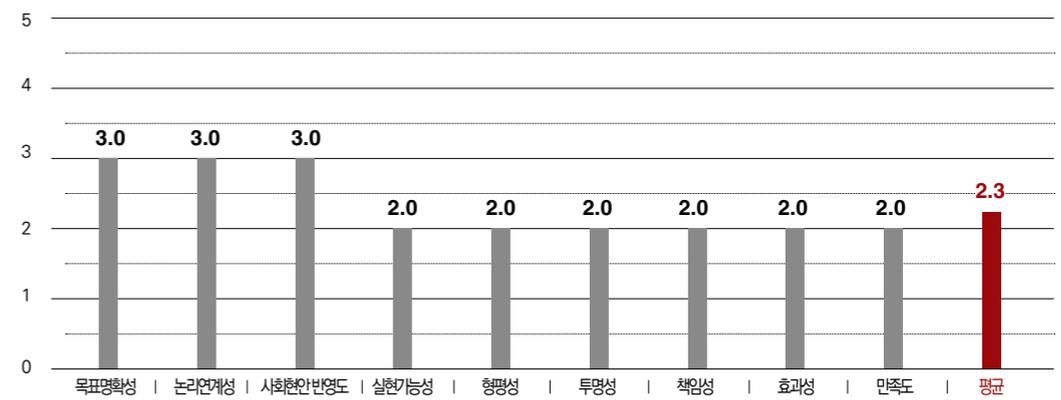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기초연금제도(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국가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이라는 다소 모순된 두 가지 목표를 잡으려 하고 있다. 제도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에서 비롯된 형평성이나 재정마련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 그리고 정책과정의 투명성 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66]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기초연금법 공포 안에 따르면 기초연금법 제정이유를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노인 빈곤 문제와 노인의 생활안정을 기여하기 위함이라 밝히고 있다. 정책목표에 국가재정 지속가능성과 노인 생활안정·노인복지 증진 등 상충되는 목표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목표의 명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를 축소·폐지가 적당할 것이고 현재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본 제도는 이러한 딜레마의 산물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혹은 절대) 빈곤선의 기준이 아닌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라는 자의적 선정과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반비례로 설정함으로써 제시된 목표와 정책의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기초연금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노인자살률, 그리고 중위소득 50% 기준 49%에 이르는 높은 노인빈곤율을 반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²²⁾ 또한, 장기적으로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재정의 이슈를 목표에 반영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빈곤을 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재원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확보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해서 임금상승률이 아닌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대 급여를 당장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시켜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윤성주, 2014). 일부 재정절약이 장기적으로 예상되지만, 추후 2020년 17조에서 2040년 100조까지 이를 재정부담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약 25%를 부담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중장기적으로 제도개혁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기초연금에서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 중 '70%'를 선정하는데, '70%' 기준의 도출과정과 기반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또한, '70%' 내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기반해서 최대 20만원까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데, 1)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노인들의 경제적 삶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2)국민연금은 자신의 기여를 기초로 해서 받는 권리성 급여라는 점, 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현재 길어도 예상되는 급여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기초연금법이 통과되기까지 대통령 공약, 인수위 안, 그리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권고안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해왔다. 지속적으로 아이디어가 변화가 되어왔지만, 누구의 의해서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어떤 논의과정을 거쳤는지가 투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결정과정에 명확한 책임소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표와 성과에 대한 시간적 목표가 존재해야 하는데 노인 하위소득 70%에게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산출적(output) 목표 이외에 뚜렷한 노인빈곤과 복지에 대한 성과제시가 불분명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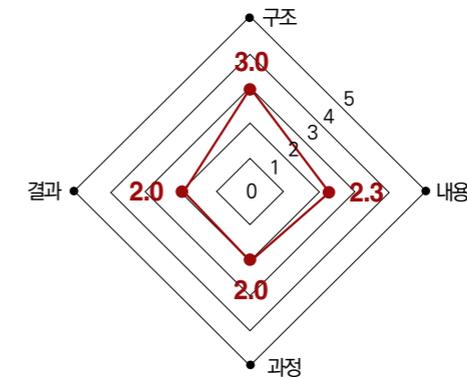
아직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이르지만, 효과는 '목표의 달성여부'라고 판단할 때 노인복지와 노인빈곤 완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지 의미이다. 기초연금만으로 노인빈곤 완화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지지하고 강화하는 방향이 함께 추구되어야 하지만, 국민연금 기여기간에 연동되어 이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위의 평가를 종합할 때 정책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3.0), 내용(2.3), 과정(2.0), 결과(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67] 기초연금 도입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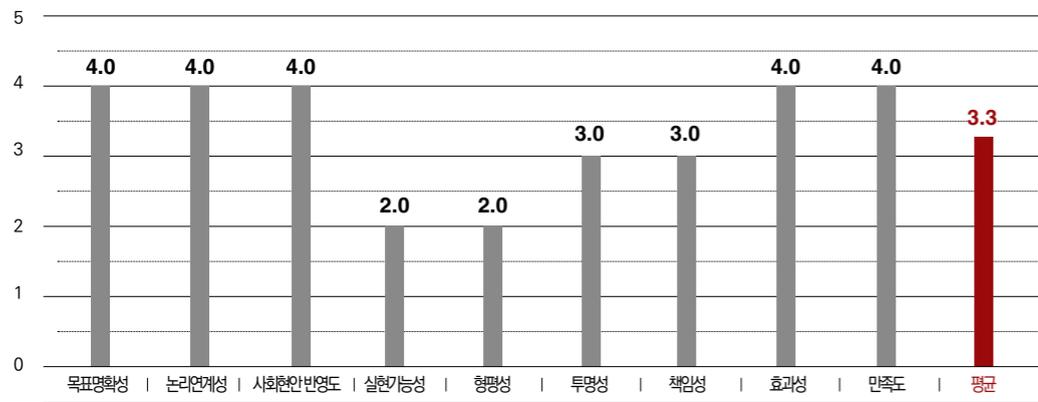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재난적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정책의 목표나 사회현안에 대한 반영도 그리고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민주성이나 투명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재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고 4대 중증질환과 그 이외의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2) <http://www.oecd.org/korea/economic-survey-korea.htm> (2014년 12월 1일 접속)

[그림 4-68]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 시행을 위해서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며, 필수급여에 대해서는 모두 급여화를 방침으로 하고 있다. 반면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급여화 혹은 본인부담을 오히려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과중한 의료비 경감이라는 차원에서는 미흡한 측면도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산정특례 중증질환에서 법정 본인부담률은 5%에 불과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실제 본인부담률은 24%로 상당히 높았다. 이로 인해서 과중한 의료부담인 '재난적 의료비 경험'을 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1/5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김 윤, 2014). 본 정책은 이러한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가계의 의료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통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약 9조원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하고, 재원은 누적적립금과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서 확보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불명확하다. 결과적으로 최근 '4대 중증질환 예산에 대한 현실성 문제제기'(조민규, 2014)가 되고 있고, 복권기금 300억 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300억 원이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²³⁾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에 있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형평성이다. 4대 중증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으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이들은 제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김용익 의

23) <http://health.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828720&code=46111201>(2014년 11월 28일 접속)

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2013년 11월 4일), 희귀난치질환 40만 명이 중증질환 공약 사각지대에 있으며, 4대 중증질환 환자인 심뇌혈관 입원환자 중 26만 명은 수술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보도자료 2013년 10월 14일).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보건복지부는 본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운영하여 시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온라인 국민 소통시스템'을 구축·가동하면서 정책 관련 국민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를 개통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이 되기는 하였지만,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책무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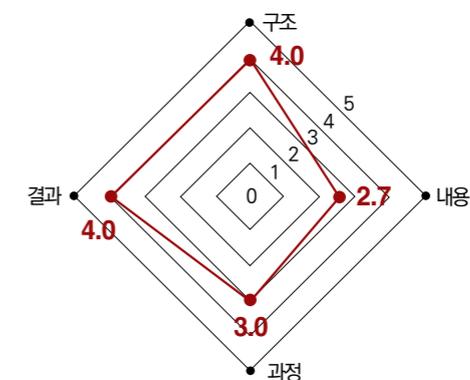
정책의 시행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인 효과를 측정하기는 이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1월 국민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85%가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²⁴⁾ 구체적인 효과는 꾸준히 발견될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이 실현가능성과 형평성을 보다 강화한다면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결과(4.0), 과정(3.0), 내용(2.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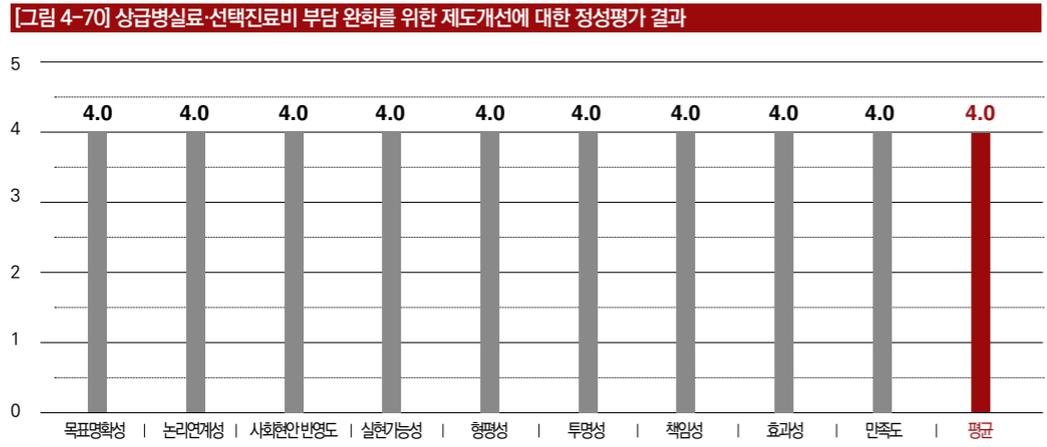
[그림 4-69]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4)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07391 (2014년 11월 30일 접속)

(3)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보건복지부)

건강보험에서 보장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급여 항목이 동시에 증가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줄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정책은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확한 목표와 내용 그리고 과정을 보여주면서 높은 효과성과 만족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와 함께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의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정책 목표는 환자의 의료비 경감과 건강보험 제도의 개편이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환자의 선택진료비 추가비용을 기존 20-100%에서 15-50%로 낮추는 것을 정책의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환자 부담 경감의 취지와 논리적 연계성을 갖추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건강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비급여 항목이 동시에 확대가 되면서 가계부담은 여전히 존재해왔다. 김 윤(2014)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25%로 이 기간 급여 증가율 13%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정책은 시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을 통해서 추가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간병비 포함하여 2014년 기준 약 5,6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에 대한 우려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14년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료율 1.7%를 인상했으며, 이후 1% 보험료율 인상을 통

해서 재원이 마련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월 13일 보도자료).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효과가 특정계층이 아닌 일반 환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로 선택진료비가 많았던 대형병원 진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통해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지만, 환자쏠림 현상이 다만 수가의 이슈만은 아니기 때문에 본 정책이 초래한 형평성 이슈로 보기는 힘들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은 보건의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중심으로 한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은 분명한 정책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관리와 책임성 소재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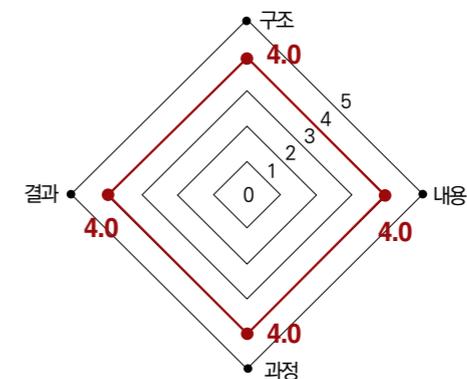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4인실 부담이 6-11만원에서 2.4만원으로 줄어들고,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평균 35%가량 감소함으로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선택진료 등에 대한 비급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비 부담 차원에서는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평가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상대적으로 정책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4.0), 과정(4.0), 평가(4.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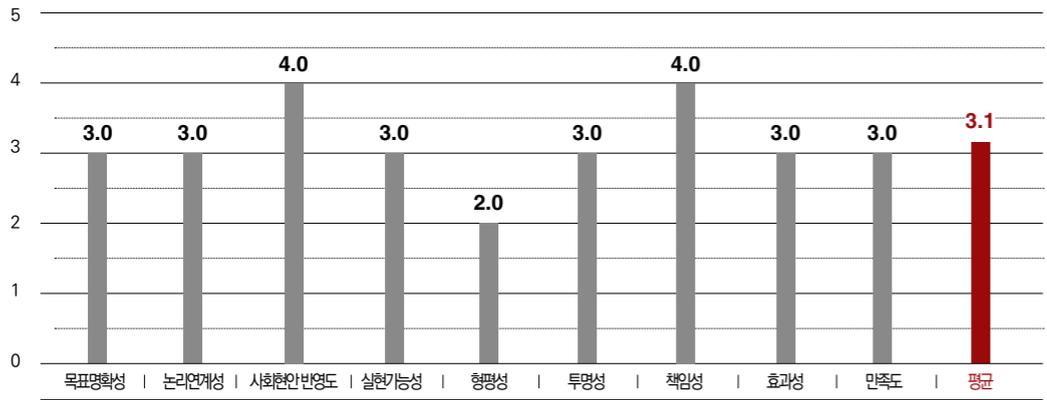
[그림 4-71]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4)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보건복지부)

아동복지의 취약성이 점차 사회적 이슈가 되고,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적 이동이 제한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정책의 중요성은 인정되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정책의 장기적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림 4-72]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내실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역량개발을 통해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와 취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목표의 추상성이 다소 높고, 구체적인 대상이나 성과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확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으로는 2004년부터 시작된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가 있다. 특히 아동통합서비스의 경우, 예방중심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과 자녀와 부모세대에 해당하는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아동 관련 복지시스템과 전달체계가 다소 혼재되어 있고, 서비스의 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물로 판명되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최근 10년 동안 빠르게 가족의 해체 현상과 사회양극화 등이 제기되면서 아동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부와 빈곤의 대물림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이의 근간에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열악한 가족 및 사회생활이 존재한다.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아동발달에 부적절한 양육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인적자본을 축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보건복지부, 2014). 이러한 배경에서 단순히 공교육 강화나 보육체계의 강화를 넘어서 부모와 아이들에 대

한 고용과 건강 그리고 복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이 정책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입되었고, 발전되어 오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사업은 전액국비사업으로 2013년에는 576억 원 그리고 2014년에는 632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지자체가 센터 임대료와 일부 운영비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약한 편이다. 다만, 본 정책이 정액, 제한된 대상에만 시행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한’ 대상 모두에게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재정부담 뿐 아니라 인력에 대한 보충이나 지자체의 자체 지출 등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책의 형평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게 된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아동센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대한 전반적 구조개혁과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황옥경 외, 2013). 이러한 제도적 조정과 통합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실현가능성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아동통합서비스는 2007년에 16개 시·군·구로 시작하여 2010년에 101개, 2013년에는 211개로 확대가 되고 있다.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취약아동과 가정들도 사는 지역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도 재정 여력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하고 형평성의 이슈가 존재하게 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안내를 매년 발간하고 사업 운영과 평가 그리고 사례관리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차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하기도 하며, 지역에서는 개별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집행의 민주성을 도모하기도 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www.icarevalue.or.kr)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지표구성은 총 3개 영역 1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는 아동 문서관리 및 권리보장, 프로그램 운영, 시설환경, 기관운영기반, 자원관리, 종합평가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센터 지원과 운영에 반영시키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도 사업에 대한 매년 평가와 평가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사업의 발전과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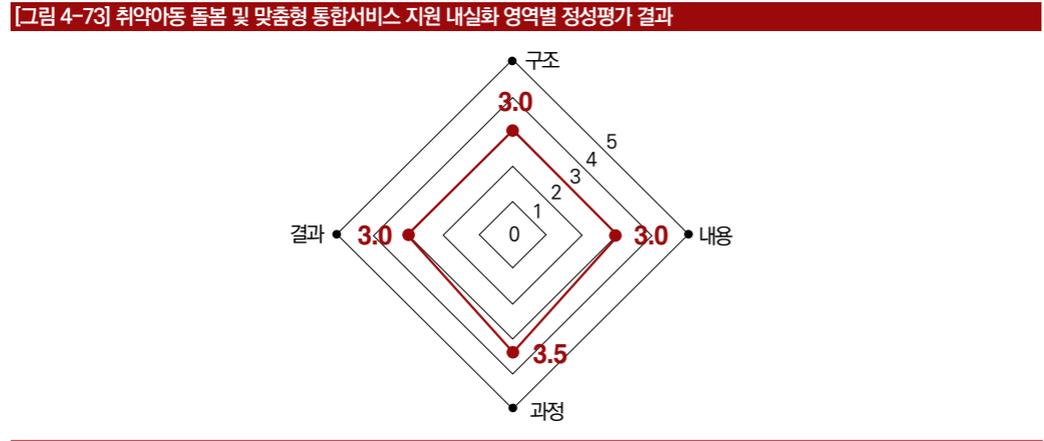
본 정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효과를 이들이 성장한 후에 판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며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황옥경 외, 2013). 하지만, 여전히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정책에 제외되고 있는 이들이 존재나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체계성이 높지 않다는 차원에서 향후 아동복지정책 및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5), 구조(3.0), 내용(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보건복지부)

급격한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반적으로 목표에 대한 명확성과 형평성 그리고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가족에게 부담되어져 왔던 돌봄서비스가 사회화되는 효과를 거두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나 돌봄부담경감 등의 사회적 효과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성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 간의 연계성과 형평성 이슈가 존재하지만, 본 제도 자체로는 높은 효과성과 만족도를 줄 수 있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정책목표는 일부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명확하다고 평가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위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을 통해서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이 있으며, 이를 공급자 지원 방식이 아닌 수요자지원방식의 일종인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재가와 시설급여 외에도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이는 도서벽지 등 매우 예외적인 사례만 허가를 해 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평가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2008년에 시행되었다. 이미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빠른 편이며,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미 조세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던 독일과 일본이 보험방식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었고, 증세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보험방식의 선택과 보편적 서비스 제공은 사회현안과 국가의 거시적 목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중 6.55%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재정적 불안정성은 약하지만, 향후에 어느 정도 지속가능할 것인지는 윤희숙(2010)의 연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도가 어느 정도 확장될 것인지에 따라서 매우 다른 추계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재정적 실현가능성보다 오히려 열악한 돌봄공급체계와 인력이 초기에 문제가 되었지만, 민간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짧은 시간 내에 확보를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서비스의 열악한 질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질 좋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의 이슈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 평가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자산조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며, 욕구사정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은 높다. 욕구사정을 기반으로 하여 2014년부터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고, 치매 특별등급을 도입하여, 등급에 따른 차등 서비스 양을 결정하고 있다. 서비스 당 본인 부담금이 존재

하지만, 취약계층은 인정소득에 따라서 면제가 이루어져 부분만 부담하게 하고 있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등 서비스 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며, 성인장애인수에 비해 재가서비스의 양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형평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제도는 추진단계에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통해서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서 민주성을 확보하려 했으며, 이후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시범사업과 공청회를 통해서 제도의 수정 및 개편을 해 나갔다. 2014년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사전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과 이슈 중 하나는 부당청구에 대한 건이었다. 민간 전달체제와 공급자를 활용하여 제도가 발전하면서 재가요양공급자들의 불법 유인 알선행위나 시설의 부당청구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와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투명성과 담당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한 예로 2014년 2월 5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또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와 재가·시설급여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제도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점도 높은 책무성 점수에 영향을 미쳤다(2014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제공 수준 등 종합 평가결과 발표').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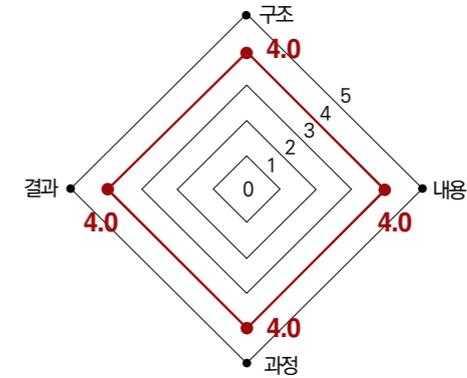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본 제도 도입과 함께 급속히 확장되면서 정책목표에 대한 효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2013년 7월 4일 보도자료('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88.5%... 1.6% 상승)에 따르면, 서비스 만족도가 2011년 86.9%에서 2013년 88.5%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양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도 2010년 84.7%에서 2013년 92.7%로 상당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형평성 있는 발전과 서비스 질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평가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4.0), 과정(4.0), 결과(4.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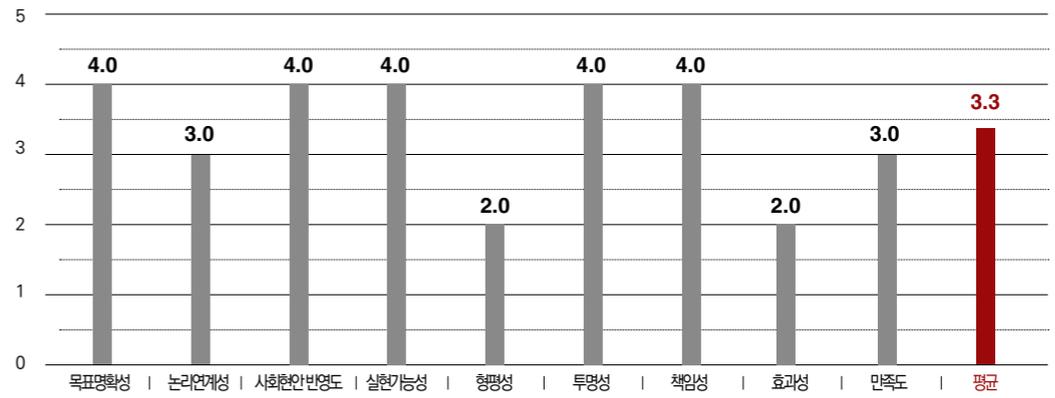
[그림 4-75]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6)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보건복지부)

2000년도에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대표적인 빈곤정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를 추구하여 정책의 내실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설문 시점까지는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목표의 명확성이나 사회현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책과정은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진행되었지만, 비수급빈곤층의 이슈나 근로빈곤층의 이슈가 매우 중요하게 남아있는 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4-76]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정책목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적시된 바와 같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에 대한 모호성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정책목표는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존재했던 생활보호법에 비해서 본 정책은 근로능력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들에게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사각지대가 상당 수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비수급빈곤층²⁵⁾), 이는 제도 내에 존재하는 부양의무기준이나 근로능력에 따른 추정소득과 같은 조항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탈산업사회로 진입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족의 해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빈곤계층에 대한 권리성 급여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추진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의도가 현실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빈곤층 규모는 201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7.8%이고 수급율이 2.8%이므로, 나머지 5%의 규모를 계산하면 약 250만명이 비수급빈곤층으로 계산된다(문진영 외, 2014).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2014년 예산기준으로 약 9조에 이르고 있으며, 복지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다(박인화, 2013). 상당한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국민에서 수급자 비중은 2003년에 2.9%에서 2006년 3.2%에 이른 후에 다시 줄어들어 2012년에 2.7%를 나타내고 있다(e-나라지표). 비수급빈곤층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재정적인 이슈보다 인력 및 행정의 실현가능성이 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송파세모녀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규모가 지역의 빈곤층 규모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통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비수급빈곤층을 고려할 때 형평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부양의무기준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되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일괄적으로 60만 원의 추정소득을 부과하여 수급층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면 의료나 주거·교육 등 다양한 급여들을 동시에 받는 반면, 비수급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중 일부는 곧 개정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별급여 제도와 부양자기준 완화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핵심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로서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법 개정에서도 '맞춤형복지급여기획단'이 마련되고 대국민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이 외에도 시민단체가 마련한 공청회에도 정부에서 참여하면서 의견이 교환되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함께 부정수급이나 부양의무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책을 개선시키고 있다. 기초보장 모니터링 포럼 운영은 하나의 예이다. 최근 행복이음(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해서 수급자에 대한 정보관리체계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최저생계비 계속 조사는 3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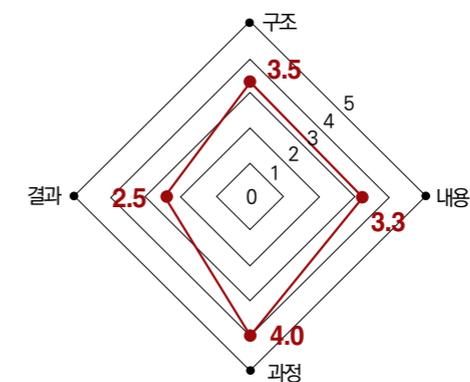
현재는 수급층과 비수급빈곤층 간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송파세모녀사건 등 빈곤층의 자살사건과 근로능력판정과 관련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정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11월 17일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소위 '세 모녀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어느 정도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4.0), 구조(3.5), 내용(3.3), 결과(2.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77]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에 대한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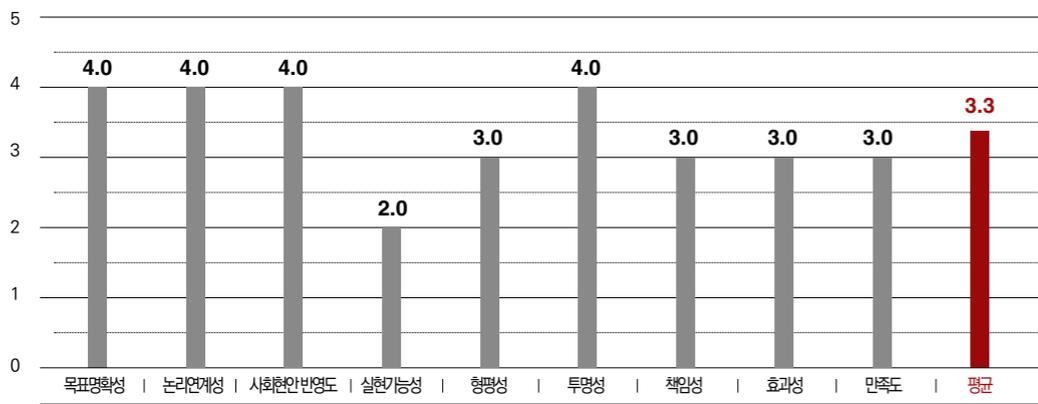


25) http://www.ytn.co.kr/_ln/0103_201411132158352856 (2014년 12월 1일 접속)

(7)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및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전히 권리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중요한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소요되는 재정의 규모가 커져가고 있고, 현재 고용보험 내 실업급여 계정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모성보호 육아지원을 어떠한 재원에서 감당해야 할지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될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78] 모성보호 육아지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임신, 출산에 따른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족 양립지원을 통해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부 정책으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임신기부터 출산기 그리고 육아기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손실을 줄이면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게 되면 90일 동안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월 통상임금의 40%를 받으며 사용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최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그로 인한 고령화 위험이 존재하며, 남성중심의 노동시장 구조가 여전히 개편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더 높아진 시대를 감안할 때 인적자본의 상당한 낭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낮은 여성고용률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임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고, 육아에 대한 부담 역시 또 다른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정책은 사회현안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재정적 차원이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이들이 2007년 58천명 수준에서 2013년 90천명으로 증가하였고, 육아휴직자수도 2007년 20천명에서 2013년 67천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나라지표). 이에 따라서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현재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더욱 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실업급여계정에서의 지출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예산처(2014)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실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계정 연말적립금을 해당연도 지출의 1.5배에서 2배까지로 유지하게 하고 있지만, 2013년의 적립배율은 0.4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2014년에 전체 지출의 5%에 그치면서 재정의 열악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두 번째는 여전히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로 이는 법에서는 지정이 되었어도 실제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급기시 된 곳들이 많다. 어떻게 정책이 의도된 바와 같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법적 형평성은 존재하고 있으며,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차이 등이 여전히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현 정부에서 고용률 70%가 중요한 정부 정책 목표로 제시되면서 본 정책에 대한 관심과 대국민 소통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본 정책과 관련이 없어도 저출산에 관련된 다양한 공청회나 국민토론회에서 본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다(예로 2010년 9월 14일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대국민공청회).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리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고(2014년 4월 2일), 다양한 토론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갖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당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을 2014년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신고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제시하고 있다(2014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또한, 각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책의 개선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논의를 해오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여성경력유지방안(2014년 2월 4일)과 여성고용 후속보완대책(2014년 10월 10일) 등이 제시된 바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휴가정책은 필수적인 수단이며, 앞으로도 보강되어야 할 정책이다. 하지만, 한국노총(2014)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전히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 경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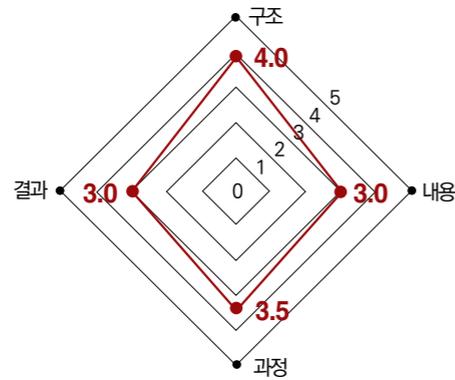
25%에 이르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존재한다. 또한,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비율도 높다.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안정과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 자체의 수요와 필요성은 높으나 아직 높은 만족도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과정(3.5), 내용(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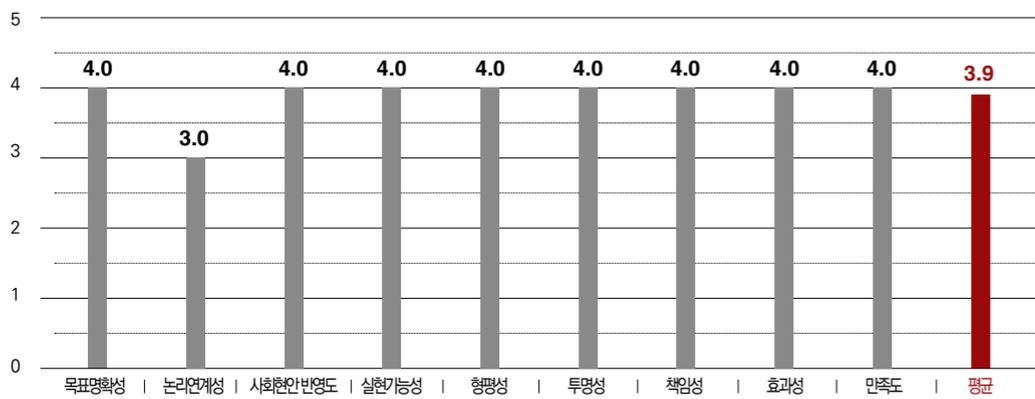
[그림 4-79] 모성보호 육아지원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8) 사회적 기업 육성(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정책은 기존에 정부의 지원이 없을 때 과연 꾸준히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회의가 있었으나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일반기업에 비해서 유지율이 높고 취약계층의 고용 성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용이 줄어드는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 다만,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차원이 사회적 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80]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목표는 명확하다고 평가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사회적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고, 이를 위해서 판로개척 지원이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 사회기업가 양성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책목표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이 사회적 기업 육성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가 다소 불명확하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은 노동시장이 점차 불안정해가고 취약계층의 고용이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현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윤리경영과 '착한소비'라는 새로운 문화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사업을 위해서 약 15백억 원의 예산이 2014년에 소요되고 있다.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의 총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 대비 재원의 마련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사회적 기업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형식이 아닌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진흥원의 심사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점에서 형평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제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워크숍, 심포지엄, 실태조사, 현장 및 과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졌다. 사회적 기업 관련 자료들이나 현황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견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 민관 협력체계인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민간자원과의 연계와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생태계 조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업종별 간담회, 업종별 사업화 지원, 업종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2014년에도 각 사회적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을 실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또한, 다양한 민·관 협력 포럼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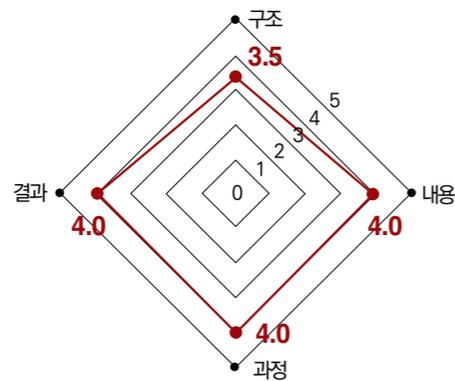
2012년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자 등을 광범위하게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처 2012). 또한, 정부재원지원 종료 사회적 기업 223개소 중 95.1%인 212개소가 생존했으며 11개소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폐업했다. 재정종료 후 3년 이후에도 생존율이 93%로 일반기업 3년 생존율인 40.5%에 비하면 매우 높다(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014년 11월 28일). 또한,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96.8%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90.3%는 근로조건 적합과 일자리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계속 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내부자료 2014년 11월 28일). 하지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인증 사회적 기업의 유형 중 사회서비스 유형은 일자리제공형 등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초기에 정부지원에 의존율이 너무 높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사회적 기업의 생존율과 취약계층 고용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서 만족도를 높게 평가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내용(4.0), 과정(4.0), 결과(4.0), 구조(3.5)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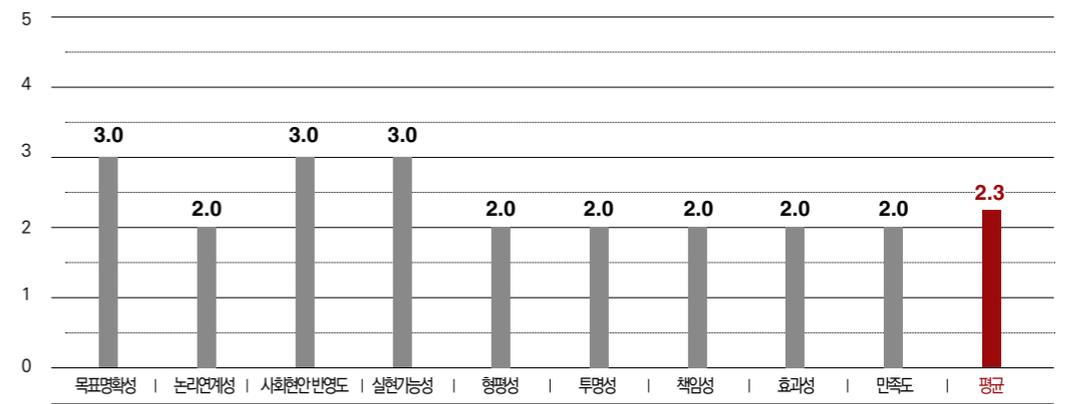
[그림 4-81] 사회적 기업 육성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경력단절이 여성고용률을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차원에서 본 정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새일센터의 역할이 다소 명확하지 않고, 정책의 결과가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새일센터가 보다 명확한 대상과 목표 그리고 보다 초점이 분명한 고용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4-8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후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비해서 정책의 목표가 매우 추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일·가족양립 정책과 함께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상담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 새일센터는 이들 중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전국 약 140여개 새일센터를 통해서 직업·진로상담,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직장·직무적응 기회제공을 위한 인턴십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지원센터나 향후 발전시키려는 고용복지센터와 왜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지, 왜 새로운 전달체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나 합리화는 충분하지 않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경력단절여성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그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경력단절이 대체로 결혼부터 초기 육아에 걸쳐 오기 때문에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경력단절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전의 경력과 숙련을 유지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새일센터의 설립이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아닌 비영리기관의 신청에서 운영된다는 점이 서비스의 보편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을 위한 재정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며, 2014년에 약 4백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본 정책은 신청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새일센터가 얼마나 더 확장되는지에 따라서 재정의 건전성이 결정될 것이다. 본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인력과 지원센터가 필요한데, 이 부분의 수급이 과연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는지가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더욱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다. 현재의 자료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쉽지 않다. 현재 새일센터의 인력에 대한 처우를 볼 때(2014년 임금 157.5만 원 기준 1인당 295천 원의 사업주 4대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지원) 고도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을 유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2014년에 처우를 일부 향상시켰다(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14).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새일센터에 접근성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에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접근성이 없는 이들의 배제가 예상된다. 그러한 점에서 형평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새일센터를 포함한 여성인력에 대한 정책포럼이 운영된 바 있으나, 전반적인 새일센터에 대한 정보나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피드백 시스템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명확하게 제시된 성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일센터의 역할이나 재정투입에 대한 로드맵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책집행과 피드백에 대한 책임성이 약하다고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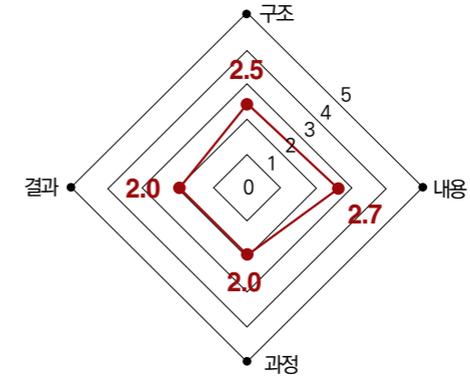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새일센터의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새누리당 이재영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2014년 2월 14일), 새일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았던 약 20만 명 중에 10만여 명이 취업에 성공을 하였지만, 약 과반수가 6개월 만에 그만두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남윤인순 의원의 경우도(2014년 10월 26일 보도자료) 2012년 말 기준으로 취업건수가 12만 명이며, 이 중 고용보험 가입건수가 7만 명이고, 1년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이들은 2만 3천 건에 지나지 않아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했을 때 새일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고용전달체계와의 연계나 협력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내용(2.7), 구조(2.5), 과정(2.0), 결과(2.0)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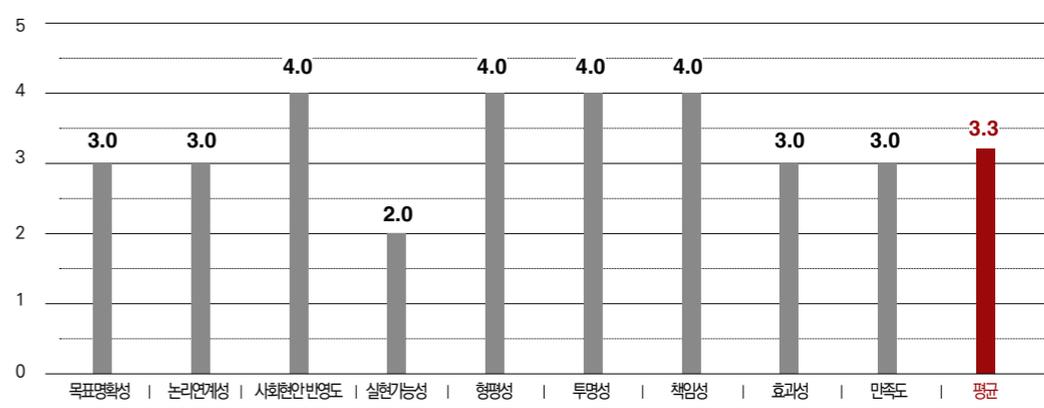
[그림 4-8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0)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지원은 저출산 대책부터 아동복지 그리고 여성의 고용률 제고 등 다목적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육아대책 및 가계부담경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다만, 향후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부담 주체 간의 역할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서비스 질 향상이 함께 추진되어야 정책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84]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의 취지는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는 것이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양육수당 지원이다. 본 정책목표에서도 나타나듯이 본 정책의 목표는 아동발달, 양육부담경감,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등 다양하며, 또한 배경에는 저출산 대책이라는 중요한 정책목표가 내재되어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은 연구자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발달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조기에 부모양육에서 떨어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결과반대의 근거를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엄마의 경력단절이 이 시기에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경제활동지원과 양육부담 완화라는 차원에서는 본 정책대안이 논리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육수당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바라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대체로 보육의 사회화가 부담 완화와 출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보육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의도된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은 여성고용의 중요성, 저출산 이슈의 심각성, 아동발달과 사회투자의 중요성 등 사회현안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이슈이다. 약 3조가 들어가는 대규모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의 도입단계부터 재정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지방과 중앙 간의 분담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분담체계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합의와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육의 질에 대한 이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등이 서로 연계되어 문제시 되면서 본 정책이 의도된 목표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0세부터 5세까지는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 정책으로 형평성에 큰 문제는 없다. 일부에서 일하는 부모에 한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 정책목표의 다면적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서비스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외국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한국이 보편적 아동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공청회와 세미나가 중앙단위와 지자체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투명성보다는 서비스 공급자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이며, 관련단체들이 이익집단화 되면서 민주성이 왜곡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정책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된 다양한 연구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시간제 보육 등 새로운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따라서 추후 일부 정책의 변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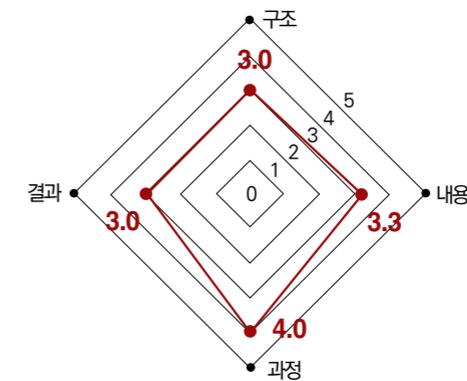
보육정책의 경우 정책의 투입과 결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성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양육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엄마의 양육부담 완화가 바로 여성고용 증가나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는 현재는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4.0), 내용(3.3), 구조(3.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85]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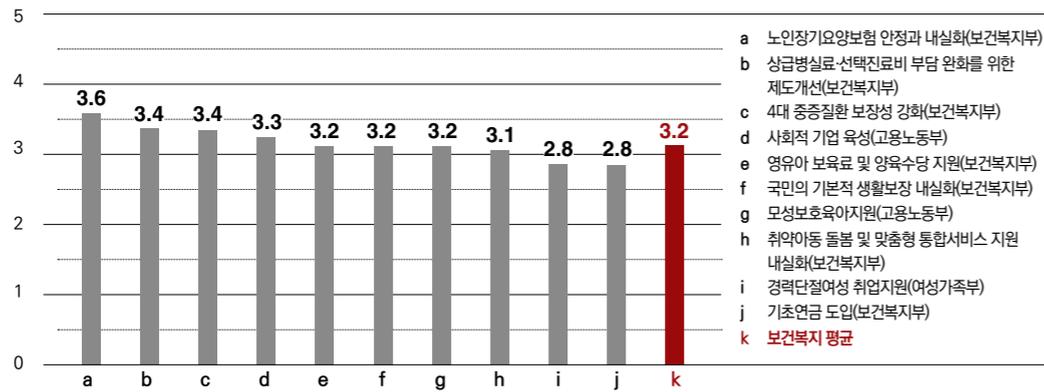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에 대해서 일반전문가와 국민 그리고 본 연구진의 평가를 종합하여 가중치를 계산한 결과 평균이 3.2로 보통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경제정책과 교육문화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며, 외교안보분야 평균점수인 3.3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사회복지 분야 정책이 다른 분야 정책에 비해서 국민들과 일반 전문가들의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것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일반 정치이슈나 경제이슈에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사회복지 분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3.6을 기록했고, 그 다음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그리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3.4로 높았다. 본 정책들은 특별한 소득이나 자산조건이 없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급격히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언제 재난적 의료비나 평생 돌봄서비스에 의존해야 할지 모른다는 잠재적 불안감을 해소해준다는 차원에서 높은 정책 필요성과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돌

봄의 경우 기존에는 가족에 대한 의존이 높았고,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대안이었지만, 가족 역할의 약화와 시장에 대한 의존의 재정적 부담이 존재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들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달리 정책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그리고 정책의 책임성 등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도 특징적이다.

[그림 4-86]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이에 비해서 기초연금이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정책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정책이다. 대체로 일반 국민들의 평가가 더욱 낮았던 이들 정책은 정책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형평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기초연금은 인지도가 매우 높지만,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인지도는 낮고 국민들의 평가도 좋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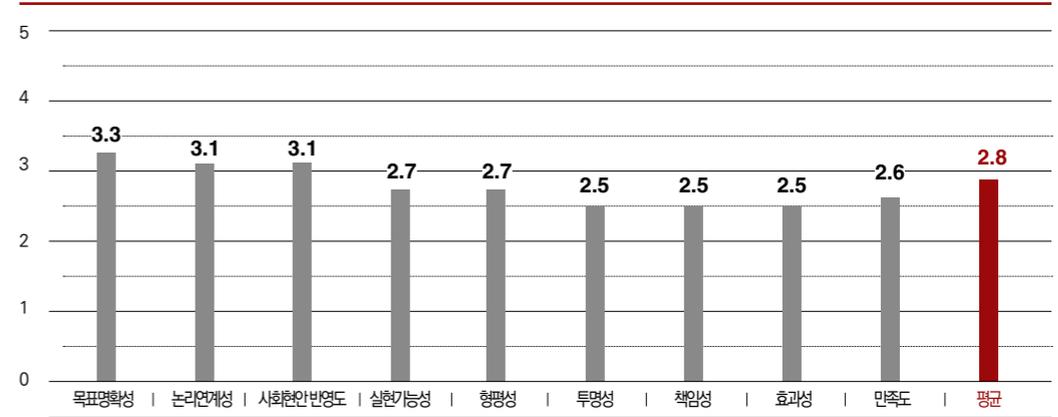
이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 정책이나 모성보호육아지원 정책의 경우, 본 연구진의 평가와 전문가, 국민들의 평가 간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였다. 전문가와 국민들의 평가에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낮다고 평가하였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다. 하지만, 본 연구진의 경우 출산전 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 중단 이후 생존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점에 착안하여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공청회나 평가 등을 통해서 제도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는 차원에서 전문가와 국민들의 평가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나 기초연금, 모성보호육아지원 정책 등 향후 상당한 자원과 인력지원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단순히 자원의 양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넘어서 누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이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분담은 추후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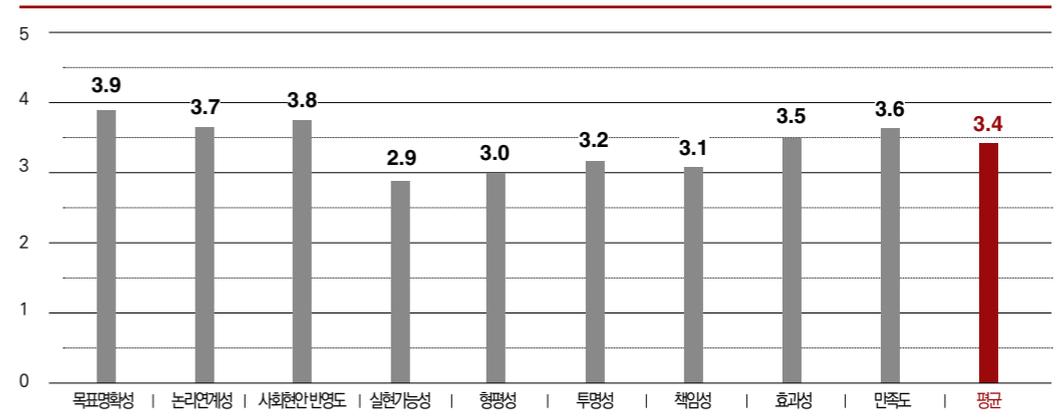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전문가와 국민들이 사회복지정책의 투명성·민주성 그리고 책임성이 약하다고 평가한 것은 정책 당국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정책홍보 활동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였어도 낮은 인지도와 정책이 투명하지 않다고 국민들이 평가를 한다면 정책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림 4-87]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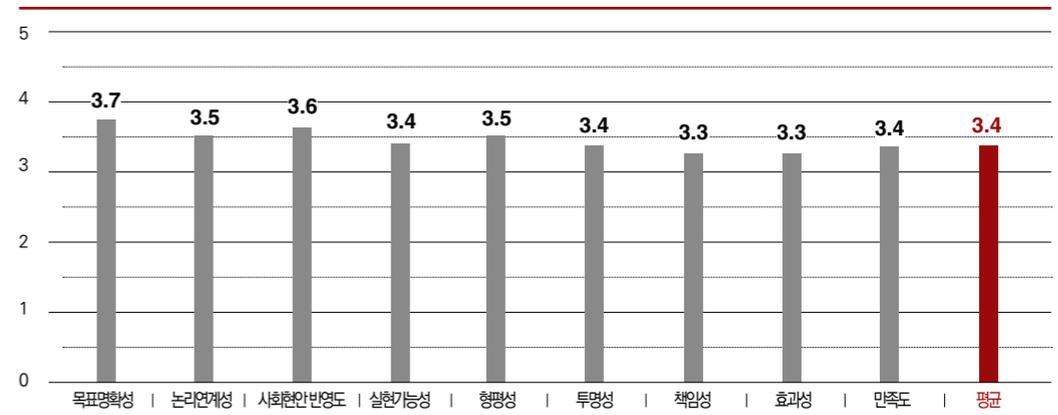
기초연금 도입(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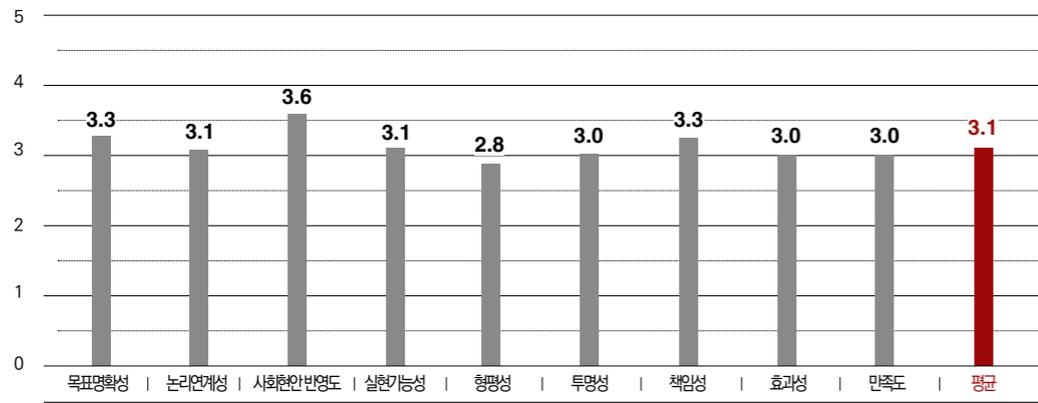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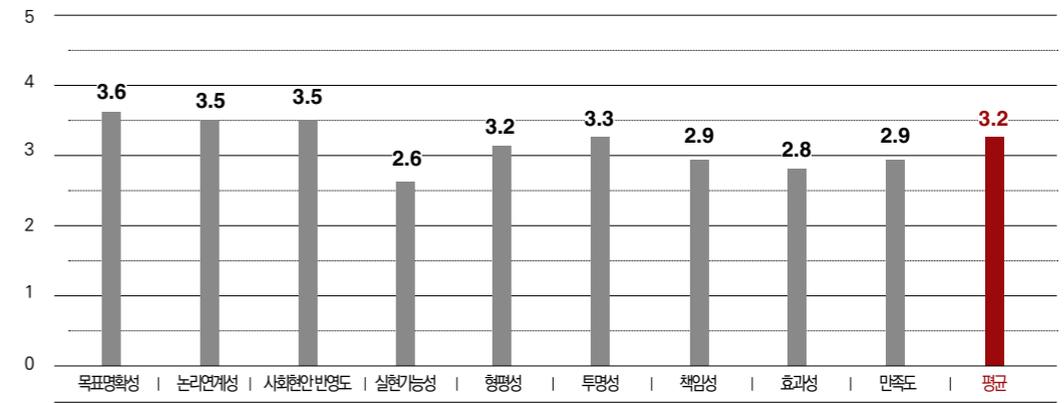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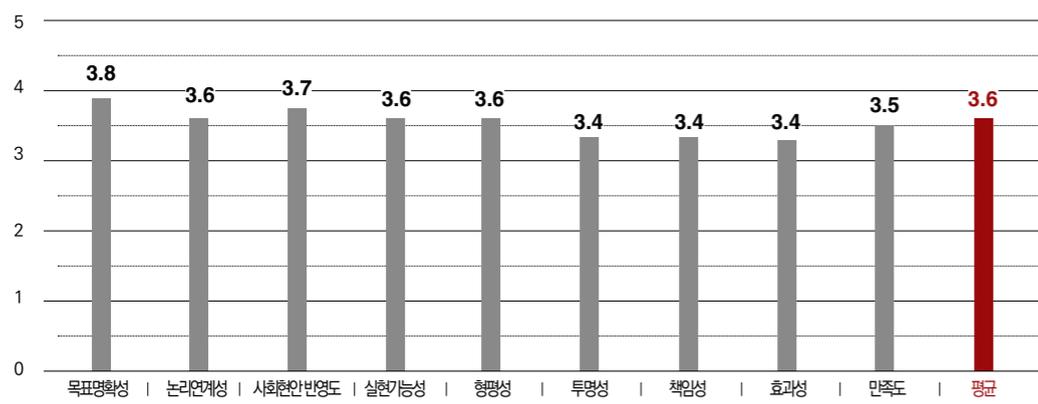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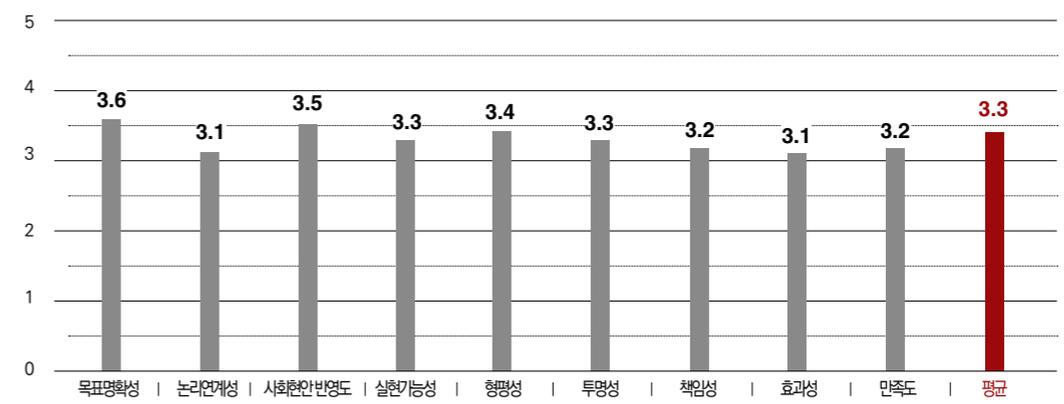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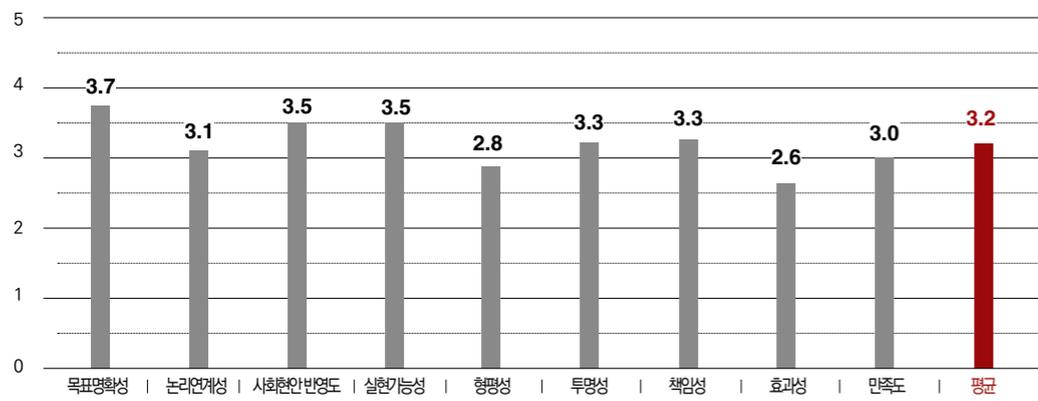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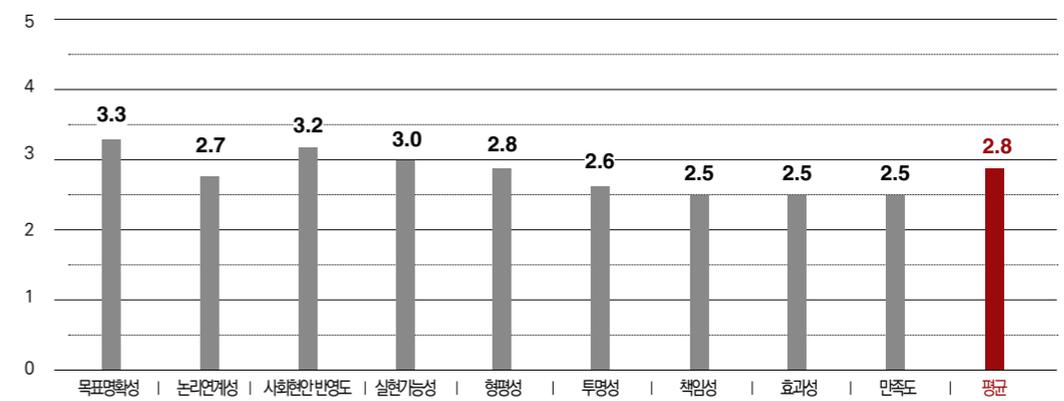
사회적 기업 육성(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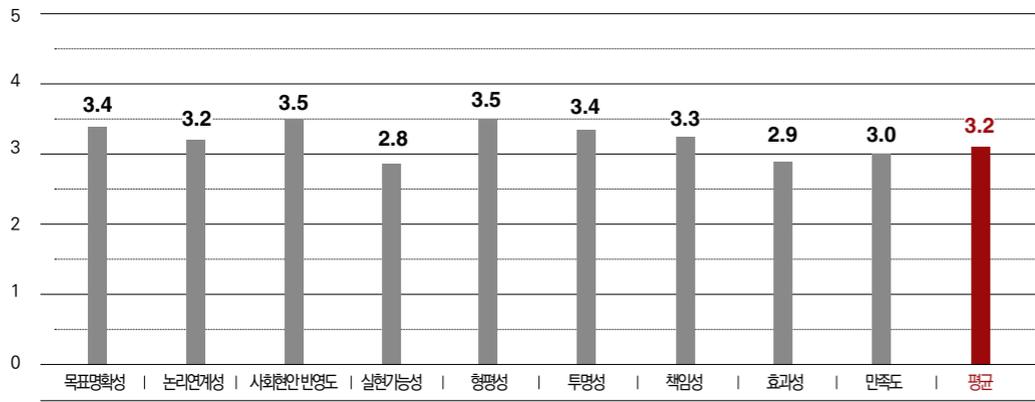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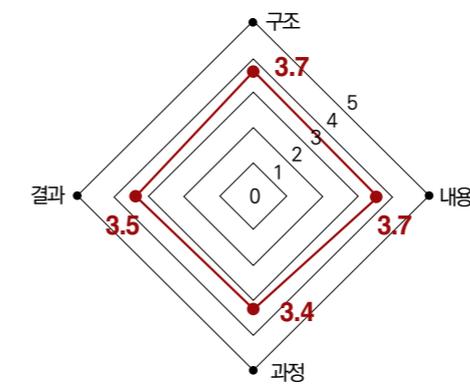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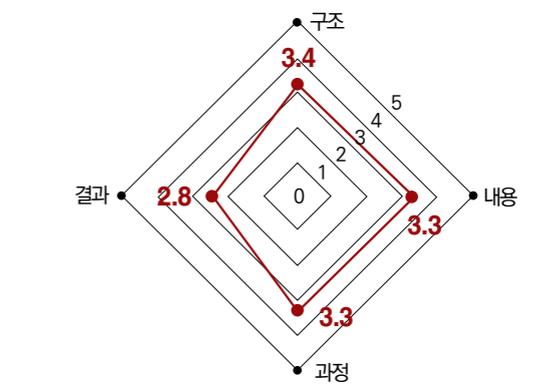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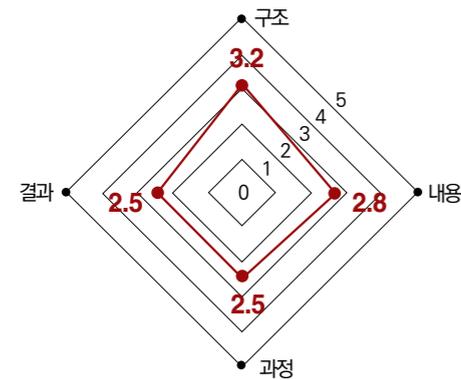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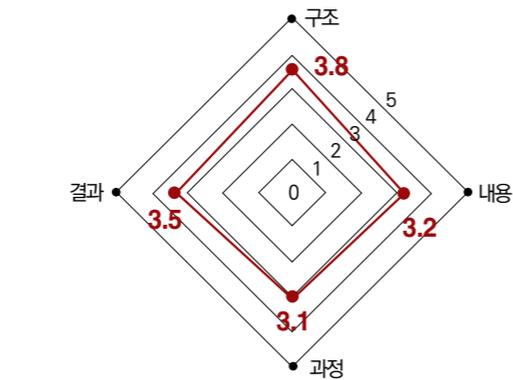


[그림 4-88] 사회복지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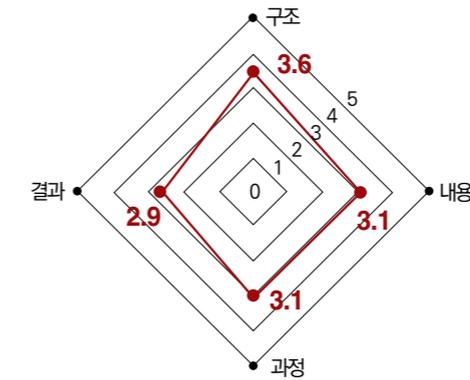
기초연금 도입(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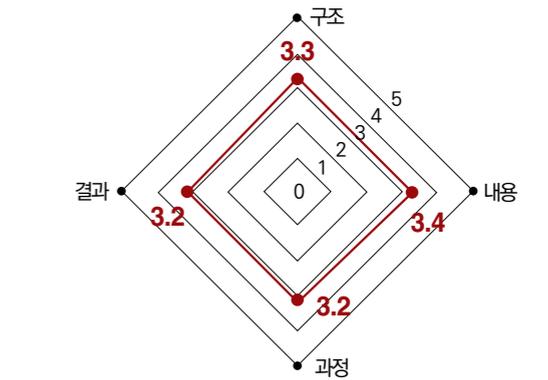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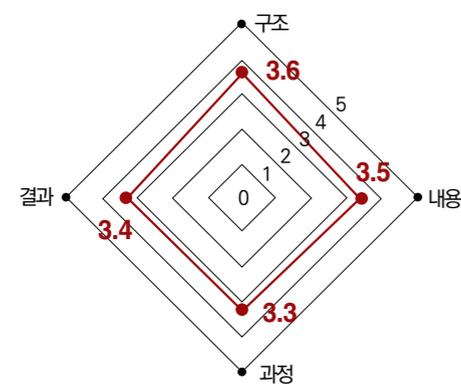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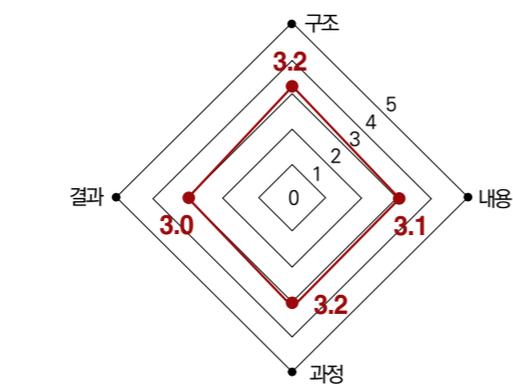
사회적 기업 육성(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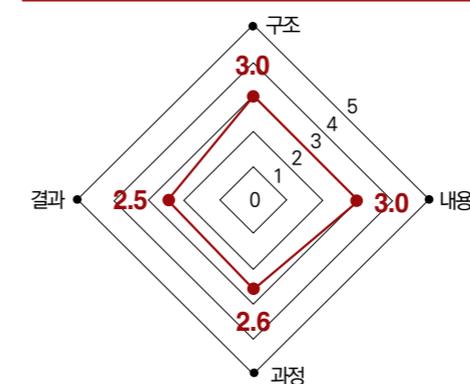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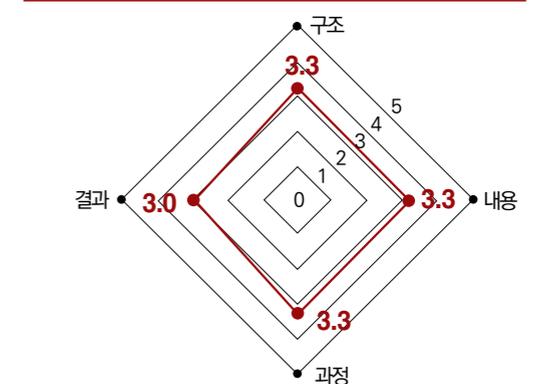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보건복지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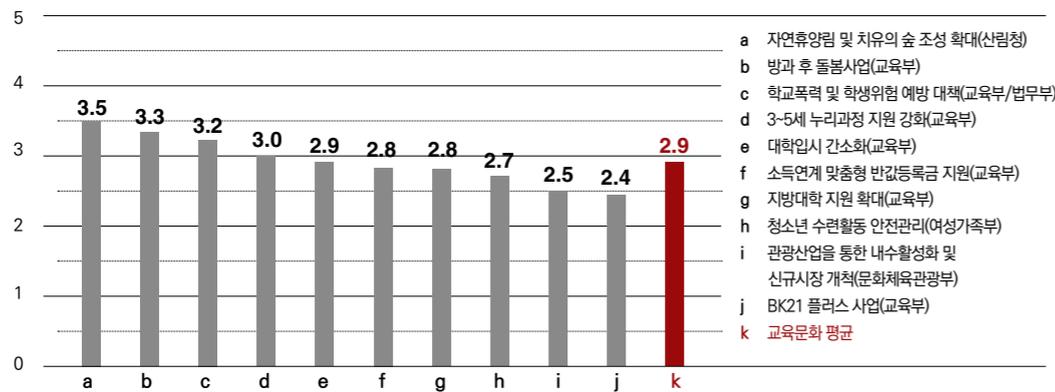
4. 교육문화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를 합산하여 10개의 교육문화 분야 정책을 살펴본 결과, 평균 2.9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문화 분야 정책 중 산림청이 시행하는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확대 정책이 3.2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육부가 시행하는 BK21플러스사업 정책이 2.6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10개의 정책 중 3점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정책은 3개(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방과 후 돌봄사업,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이었고, 나머지 정책들은 3점 이하의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림 4-89] 교육문화정책 분야 설문조사 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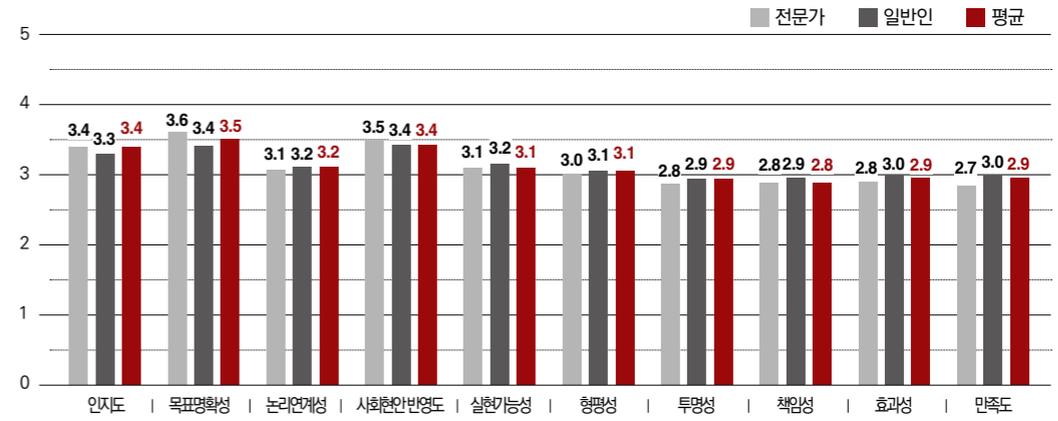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방과 후 돌봄사업(교육부)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정책은 개별지표인 인지도에서 일반인의 평가점수가 3.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정책의 수요를 위해서 해당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지표인 투명성과 책임성, 효과성과 만족도에서 전문가 및 일반인의 평가가 동일하게 낮은 정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정책의 과정과 결과측면에 있어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해당정책의 목표명확성에 있어서는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정책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필요한 경우 환류를 통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그림 4-90]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6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3.4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은 각각 3.1과 3.2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 목표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이 사회현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반영한 정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5, 일반인 집단은 3.4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책수요에 부응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3.1, 일반시민들은 3.2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과 마찬가지로 정책목표 및 사회현안 반영도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3.0 일반인 3.1로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여 정책수혜 대상에 대해 다소 유보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전문가 2.8 일반인 2.9로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책수행 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과정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2.8 일반인 2.9로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게 정책 수행과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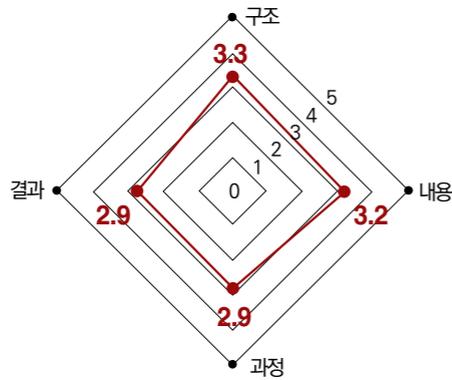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반인은 3.0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의 효과가 기대에는 유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전문가는 2.7로 부정적인 반면에 일반인은 3.0으로 평가하여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방과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체제 강화정책은 전체 항목의 평균이 3.075로 교육문화 분야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목표 및 대안의 정책구조 차원의 평가에서 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과정 및 결과 차원의 평가항목에서 2.9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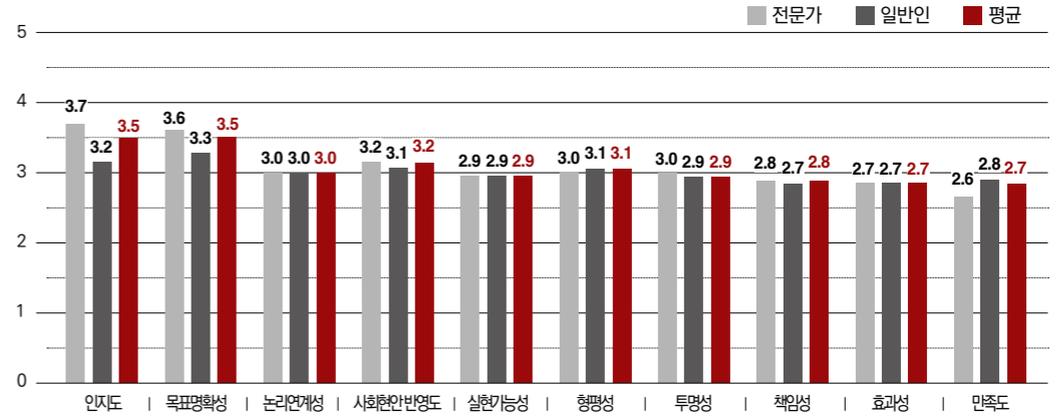
[그림 4-91]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 설문조사 결과



(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교육부/법무부)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정책은 모든 개별지표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인지도에서 유일하게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의 인지도에 비해 일반인의 인지도가 3.2로 조금 낮았다. 개별 평가지표인 실현가능성, 투명성과 책임성, 효과성과 만족도에서 전문가 및 일반인의 평가가 동일하게 3.0이하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 정책의 과정과 결과 차원에 대해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해당정책의 목표명확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효과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림 4-9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3.6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일반시민도 3.3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3.0으로 평가하여 정책목표에 비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은 각각 3.2와 3.1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및 위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았던 맥락을 감안하면 기대보다는 낮은 점수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 모두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목표 명확성과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등 정책설계의 차원에 비해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3.0 일반인 3.1로 평가되어, 이 정책의 수혜 범위에 대한 인식이 다소 유보적임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전문가 3.0 일반인 2.9로 평가되었고 평균이 2.9에 그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일반시민에 정보의 공개 및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과정의 책무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2.8 일반인 2.7로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 추진 체계의 확립 정도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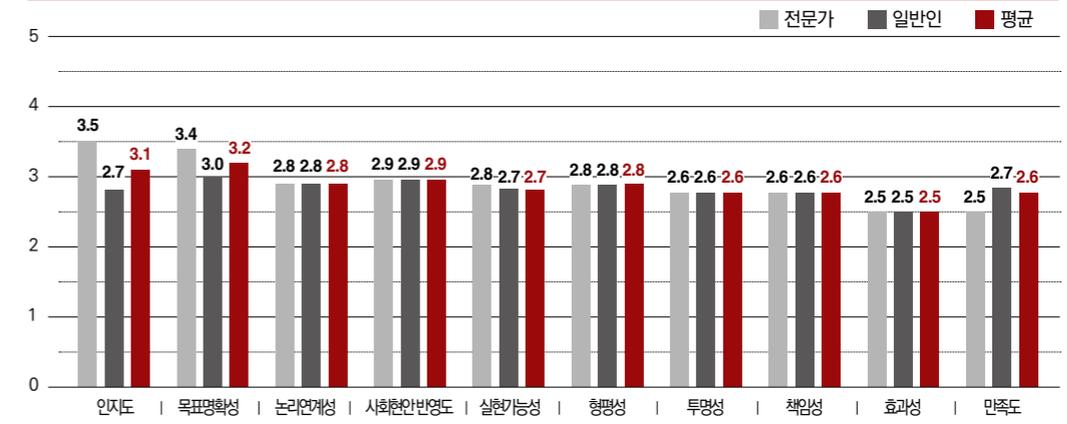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 모두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서도 전문가는 2.6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시민들도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 정책은 전체 항목에 대한 평가의 평균이 2.925로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정책구조 차원의 평가가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책과정 및 정책결과 차원의 평가가 각각 2.8과 2.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94] 대학입시 간소화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3.4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3.0으로 평가하여 전문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2.8로 평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책목표에 비해 정책수단의 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시민 모두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이 각각 2.8과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응답자들이 정책 대안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평가에 이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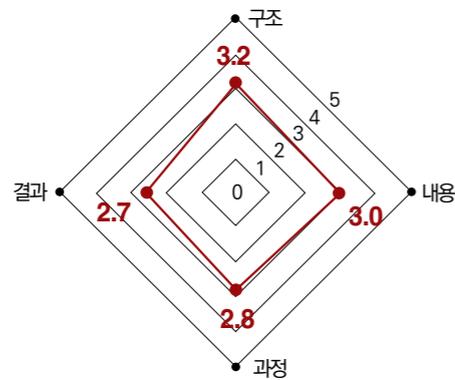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들이 모두 2.8로 평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6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6으로 동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정보공개 및 참여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3]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 설문조사 결과



(3) 대학입시 간소화(교육부)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도 대부분의 개별 평가지표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이 비슷한 평가를 보였으나, 인지도에서 유일하게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의 인지도는 3.5로 높았으나 일반인의 경우에는 2.7로 나타나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에도 낮은 편이었다. 일반시민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표명확성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8개의 지표들은 평균 3.0이하의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해당정책의 목표명확성 이외에 정책구조, 정책내용, 정책결과의 차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과정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2.6으로 낮게 평가하여 앞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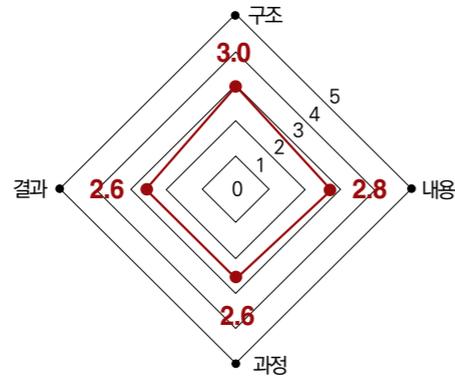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 모두 2.5로 평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 전문가는 2.5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시민도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은 전체 평균이 2.75로 낮은 편이었다. 정책구조 부문의 평가에서 3.0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정책내용 차원에 대해서 2.8로 다소 부정적이었고, 과정 및 결과 차원의 평가에서는 2.6으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해당 정책에 대해 정책내용 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 투명성 및 책임성, 효과성 및 만족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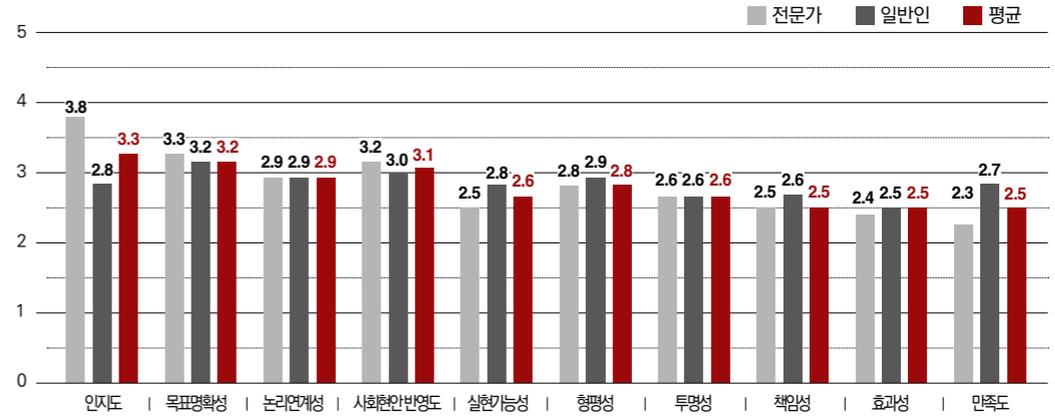
[그림 4-95] 대학입시 간소화 설문조사 결과



(4) 지방대학 지원 확대(교육부)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 집단이 비슷한 평가를 보였으나, 인지도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의 인지도는 3.8로 매우 높았으나 일반인의 인지도는 2.8로 매우 낮았다. 개별 지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3.0이상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나머지 지표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일반인이 모두 3.0이하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등에 대해 전문가 응답 집단의 평가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그림 4-96] 지방대학 지원 확대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 3.3 일반시민 집단 3.2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응답자 집단이 정책대안 설계 품질에 대해 매우 유보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3.2로 평가하였고 일반시민은 3.0으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 내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5로 매우 낮은 평가 결과를 보이고 일반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2.8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 내용의 형평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 응답자들이 각각 2.8과 2.9로 평가하여 정책수혜의 범위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모두 2.6으로 평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정책도 역시 정보공개 및 참여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과정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은 2.5로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일반인 집단도 역시 2.6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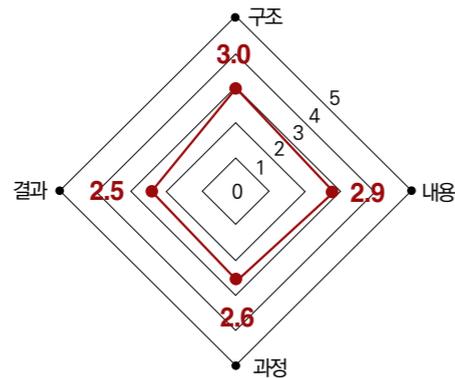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전문가 응답자 집단이 다시 2.4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응답자 집단도 2.5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만족도에 대해서 전문가의 평가는 2.3으로 매우 낮았고 일반시민의 평가는 다소 높았으나 역시 2.7로 부정적인 편이었다. 따라서 정책결과의 효과성과 마찬가지로 만족도도 매우 부정적이었다.

전체적으로,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도 앞에서 살펴본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과 유사하게 정책구조 차원의 평가가 3.0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고, 정책내용 차원에서는 2.9로 다소 부정적, 정책과정 및 결과 차원에 대해서는 각각 2.6과 2.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내용, 정책과정 및 결과의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97] 지방대학 지원 확대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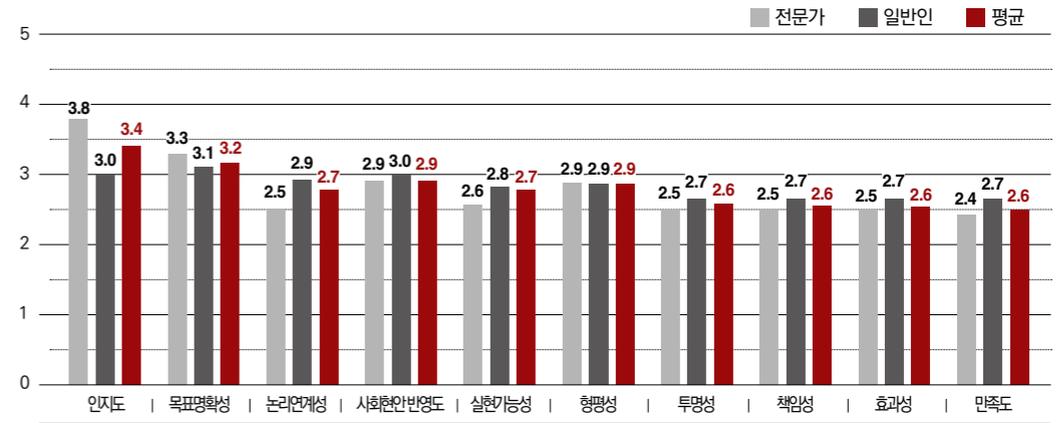
(5)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교육부)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평가는 9개의 개별지표 모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에서 비슷한 평가를 보였으며, 인지도에서 유일하게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인지도에서 전문가의 인지도 평가와 매우 상이하게 일반인의 평가점수가 3.0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정책의 수요를 위해서 해당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인지도와 목표명확성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지표에서 모두 3.0이하의 낮은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과 결과 측면의 전반적인 모든 측면에 있어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3 일반인 집단은 3.1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4-98]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2.5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와 관련해서 전문가는 2.9로 다소 부정적이었고 일반인도 3.0으로 평가하는 데 그쳤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는 2.6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도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2.9로 평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2.5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의 평가도 2.7에 머물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과정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또한 전문가는 2.5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반인도 2.7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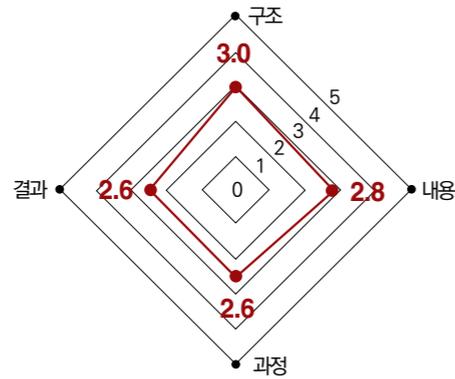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는 2.5, 일반인 집단은 2.7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에서 2.4로 가장 낮았고 일반인 집단에서도 2.7로 다소 낮았다.

전체적으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정책은 전체 평균이 2.75로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구조 부분의 평가항목에서 3.0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가 나타났다. 내용 차원의 평가항목에서 2.8로 낮았으며, 과정 및 결과부분의 평가항목에서 2.6으로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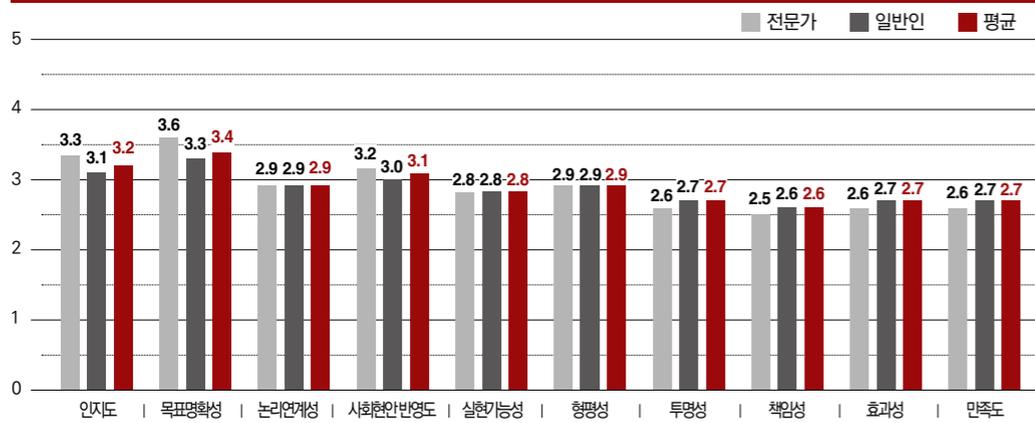
[그림 4-99]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설문조사 결과



(6)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교육부)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정책은 인지도를 포함한 10개의 개별지표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집단이 비슷한 평가 결과를 보였다. 인지도에서는 전문가 3.3 일반인 3.1의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실현가능성과 형평성, 투명성과 책임성, 효과성과 만족도에서 전문가 및 일반인의 평가가 동일하게 3.0이하의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가 목표명확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책임성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정책이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필요한 경우 환류를 통한 수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에 두 집단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00]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6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고, 일반인 집단도 3.3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모두 2.9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2 일반인 집단은 3.0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반면,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모두 2.8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최근 불거진 소요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2.9로 평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는 2.6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과정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또한 전문가는 2.5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6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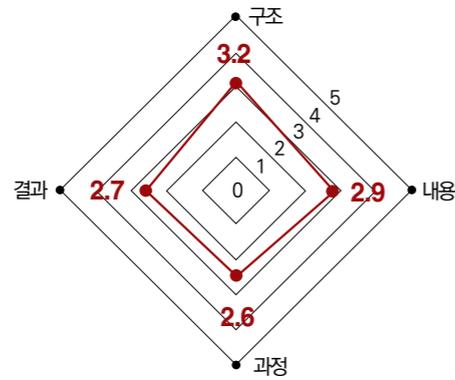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는 2.6, 일반인 집단은 2.7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에서 2.6으로 낮았고 일반인 집단에서도 2.7로 다소 낮았다.

전체적으로,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정책은 네 차원의 전체평균이 2.85로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다소 낮았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분의 평가항목에서 3.2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내용은 2.9, 결과는 2.7, 그리고 과정부분의 평가항목에서 2.6으로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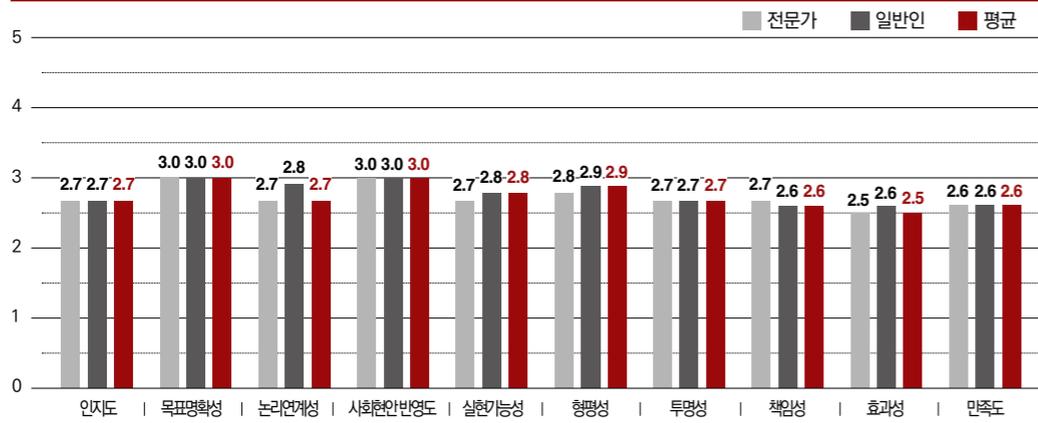
[그림 4-101]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설문조사 결과



(7)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정책은 10개의 개별지표에서 모두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모두 2.7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현가능성과 형평성, 투명성과 책임성, 효과성과 만족도에서 전문가 및 일반인의 평가가 3.0에 다소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정책의 과정과 결과측면에 있어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전문가집단과 일반인집단 모두에서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에 있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효과성에 있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해당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두 집단이 동일하게 다소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림 4-102]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모두 3.0으로 평가하였다. 다른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2.7, 일반인 집단은 2.8로 모두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은 모두 3.0으로 평가하였다.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예상보다 낮았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2.7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2.8로 평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은 2.8, 일반인 집단은 2.9로 평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이 모두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과정의 책무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2.6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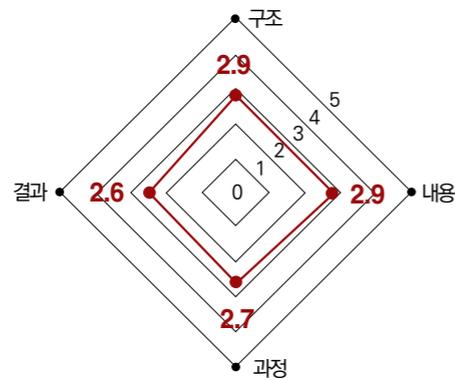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는 2.5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6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모두 2.6으로 낮았다.

종합적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정책은 전체 평균이 2.775로 낮은 편이었다. 구조부문의 평가항목과 과정부문의 평가항목에서 2.9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나 이는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는 낮은 수준이다. 결과항목에 대해 2.6정도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해당정책에 대해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결과의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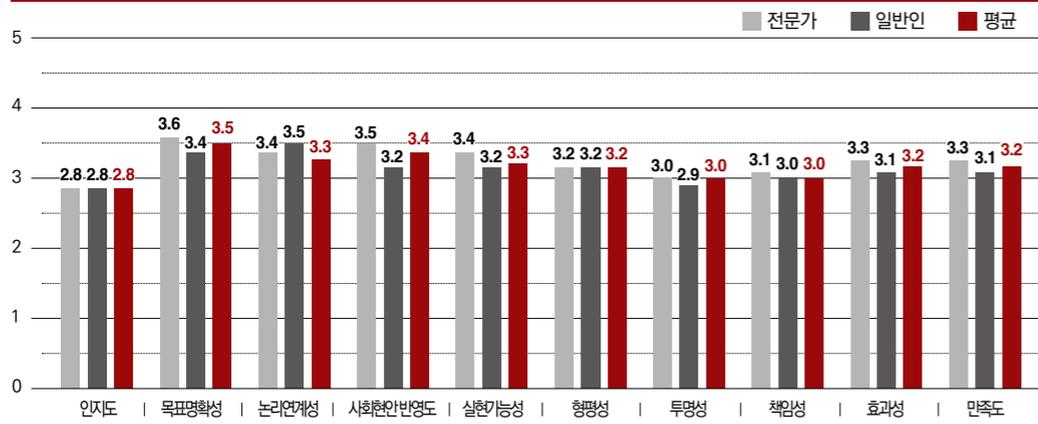
[그림 4-103]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 설문조사 결과



(8)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확대(산림청)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 정책은 10개의 개별지표 모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에서 비슷한 평가를 보였다. 인지도의 측면에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에서 모두 2.8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 정책의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해당정책은 전반적으로 개별지표들에 대해 두 집단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 개별지표인 투명성에 있어서 일반인 집단이 2.9의 평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목에서 3.0이상으로 평가되어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4-104]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3.6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3.4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3.4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3.2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3.5로 매우 높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3.2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레저 휴양 문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3.4 일반인 집단 3.2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3.2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0으로 평가하고 일반인 집단이 2.9로 평가하여 다른 평가 지표에 비해 다소 낮았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과정의 책무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1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3.0으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이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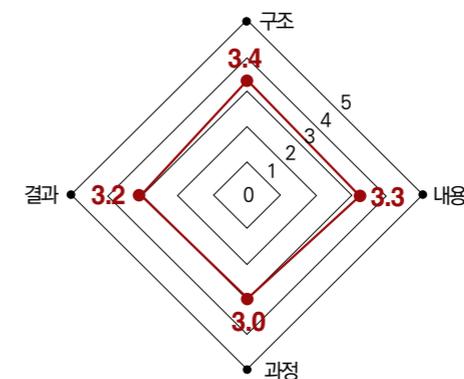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는 3.3, 일반인은 3.1로 평가하여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이 3.3 일반인 집단은 3.1로 다소 긍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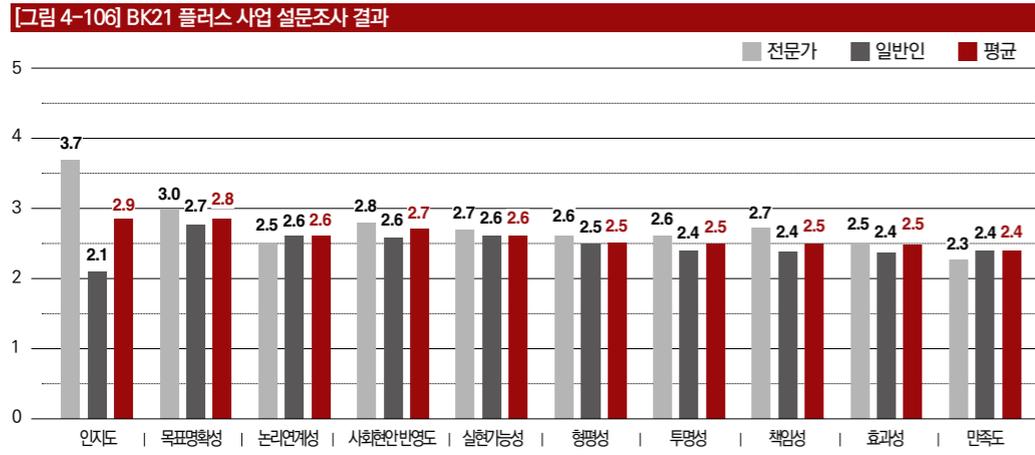
종합적으로,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전체평균 3.225로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3.4, 내용에서 3.3, 결과에서 3.2로 높았고, 과정부문의 평가항목에서 3.0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4-105]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 설문조사 결과



(9) BK21 플러스 사업(교육부)

BK21플러스사업정책은 9개의 개별지표 모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에서 비슷한 평가를 보였으며, 인지도에서 유일하게 매우 큰 격차를 보였다. 전문가의 인지도는 3.7로 매우 높았으나 일반인의 인지도는 2.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일반시민에게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개별지표인 실현가능성, 투명성과 책임성, 효과성과 만족도에서 전문가 및 일반인의 평가가 동일하게 3.0이하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해당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과 결과측면에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3.0으로 평가하였고 일반인이 2.7로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2.5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도 2.6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2.8, 일반인 집단이 2.6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2.7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6으로 평가하여 부정적이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 2.6, 일반인 집단 2.5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은 2.6으로 평가하고 일반인 집단이 2.4로 평가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과정의 책무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7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2.4로 매우 낮게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부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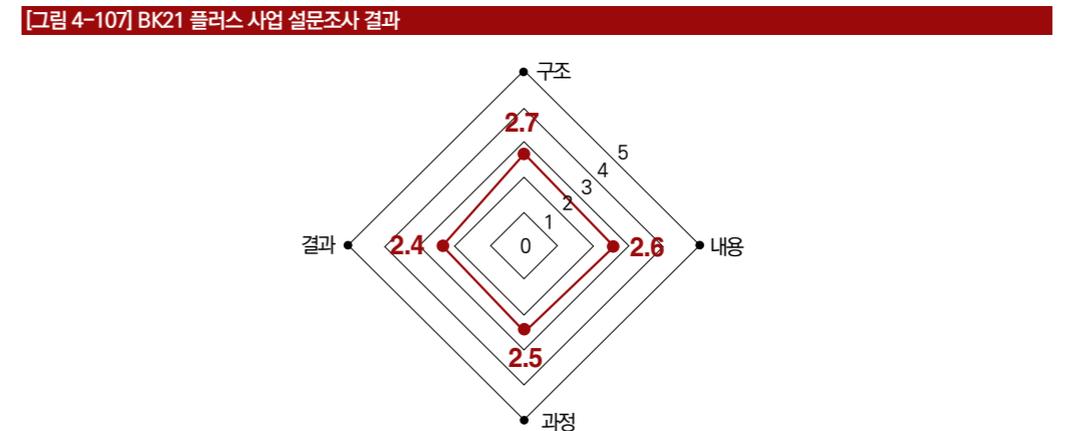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 전문가 집단 2.5 일반인 집단 2.4로 모두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이 2.3 일반인 집단이 2.4로 모두 매우 부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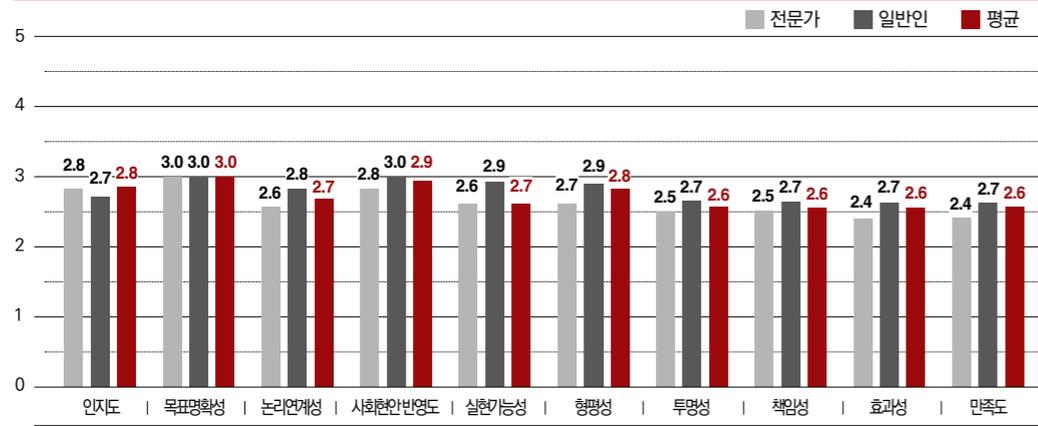
종합적으로, BK21플러스사업 정책은 전체 평균 2.55로 낮게 평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2.7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는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내용 2.6, 과정 2.5 결과 2.4로 모든 4개 영역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따라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해당정책에 대해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전면적인 점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0)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정책은 전반적으로 10개의 개별지표 모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인지도는 전문가 집단 2.8 일반인 집단 2.7로 모두 낮은 편이었다. 세부적으로 목표 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에서만 유일하게 일반인 집단으로부터 3.0이상의 평가를 보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효과성과 만족도, 일반인 집단에서도 또한 효과성과 만족도 지표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해당정책은 개별지표들이 평균 3.0이하의 낮은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모든 측면에서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08]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3.0으로 평가하였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2.6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도 2.8로 다소 낮게 평가하였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내용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 2.8, 일반인 집단이 3.0으로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2.6으로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9로 평가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내용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 2.7로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이 2.9로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은 2.5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과정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은 2.5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은 2.7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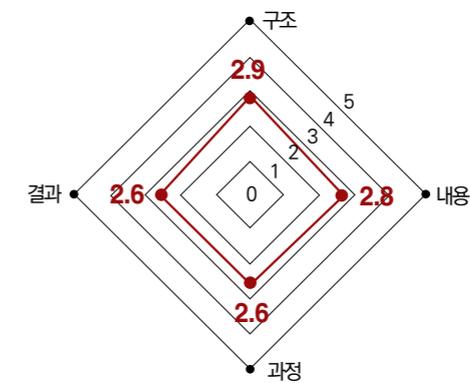
정책결과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가 집단은 2.4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고, 일반인 집단도 2.7에 그쳤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 집단이 2.4로 매우 낮았고 일반인 집단도 2.7로 다소 부정적이었다.

종합적으로,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정책은 전체 평균이 2.725로 낮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결과와 과정부분으로 각각 동일하게 2.6의 평가를 나타냈다. 구조와 내용도 2.9 및 2.8로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전문가와 일반인들은 해당정책에 대해 정책의 구조, 내용,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전면적인 점검 및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4-109]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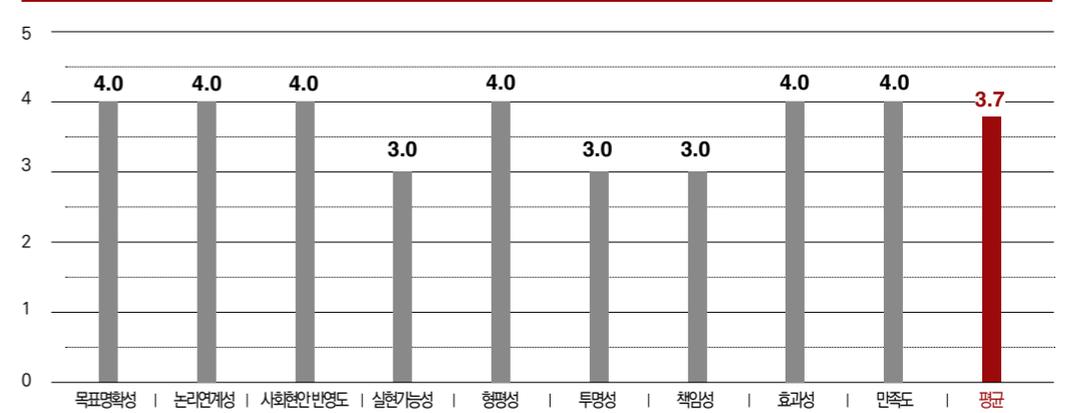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가) 정성평가 결과

(1) 방과 후 돌봄사업(교육부)

[그림 4-110]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방과후학교 연계 운영, 지역 돌봄기관 간 연계 강화 등의 목표를 제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교육부, 2014b). 구체적인 정책목표 달성 타임라인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 방과후 학교 연계 운영, 지역 돌봄기관 간 연계 강화와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정책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교육부, 2014b), 정책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방안들 사이에 연계성이 높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인식해서 대안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제공.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가 사회적 목표인 만큼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을 위해 3,983개의 추가 돌봄 교실 확충을 위해 597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운영비의 경우 대부분 시도에서 편성 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교육부, 2014b), 운영비 편성이 부족한 시도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추경 예산 편성여부도 불확실할 것으로 추측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초등돌봄교실이 모든 학부모들에게 제공이 되고 추가로 저녁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특정대상의 집단에게 높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정책의 형평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인 학부모 또는 돌봄학교 관계자들과의 정보공유 및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였으며, 본 정책 추진 경과를 보더라도 교육청 및 지자체 부처공동 워크숍 개최 등 관련부처 내에서만 정보공유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언론과 현장 등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한 자료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항들이 제기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예산을 제공하고 협력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책무성이 명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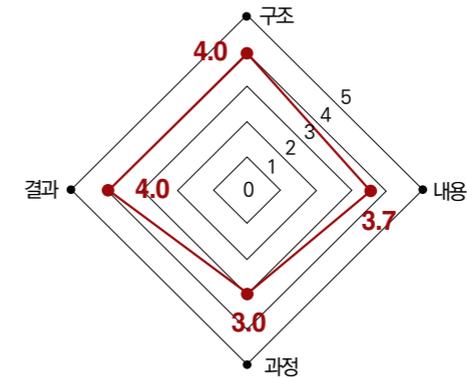
본 정책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한 학생들이 2013~14년에만 240,000명(오후와 저녁 합산)이 넘었다는 점에서(교육부, 2014b), 정책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언론과 현장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이 있었지만 개선을 위한 절절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돌봄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제대로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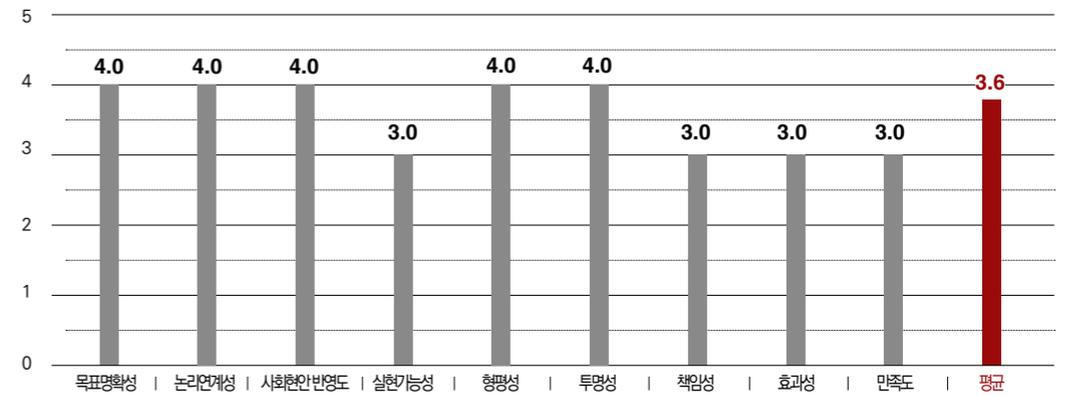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체제 강화 정책에 대해서 전체평군이 3.75이고 개별 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3.0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과 결과부문의 평가항목에서 동일하게 4.0으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과정부문의 평가항목에서 3.0으로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그림 4-111]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교육부/법무부)

[그림 4-112]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비전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이며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학교폭력 유형 및 지역별 맞춤형 대응,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어(교육부, 2013h)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은 5개 영역에 20개의 중점과제로 구체화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 영역은 학교현장 예방활동, 맞춤형 대응,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 추진 전략에 포함된 3개 영역에 학교역량 및 관리감독 강화, 학교 환경 및 사회적 대응의 2개 영역이 추가되어 있다(교육부, 2014d). 이 중에서 학교현장, 맞춤형,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3개 영역의 중점과제는 정책수단의 내용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학교역량 및 관리감독 강화, 환경 및 사회적 대응의 영역의 중점과제는 다소 구체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본 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 5개 영역 20개 중점과제의 논리적 연계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고조되어 왔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한 요구도 강하다. 특히, 성범죄자와 같은 고위험인자가 학교를 무단으로 출입하고 어린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성폭력을 행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조차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대형 촉발기제였다. 본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국무총리실,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 폭력 및 위협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도 정책문제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및 위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새로운 유형의 폭력 및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2012년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교육부 2012d)에 포함되어 있던 54개에 이르는 세부과제를 5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수단이 폭력 및 위협의 관리에 머무르고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은 모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정규 교과과정에 평가, 입시를 위한 경쟁과열, 학교 간 및 학교 내 수직적 서열화, 사회적 위험인자(성폭력자, 가정폭력 등) 차단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부가 배정한 특별교부금의 규모도 본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전국 각급 단위 학교의 전문 인력 및 시설의 확충과 각급 교육청, 지역 및 단위학교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학교폭력 및 위협에 대한 대책은 지역,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제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수혜집단에게 고르게 혜택을 제공하므로 정책의 형평성은 높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모든 관계부처, 각급 교육청, 단위학교, 학부모 및 학생이 참여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및 위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히고 있어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은 범부처 합동으로 추진되어 국무총리실에서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종 프로그램이 11개 부처에 혼재되어 되어 오히려 책무성을 저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 격상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중점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관계를 재정비하면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확보하면 책무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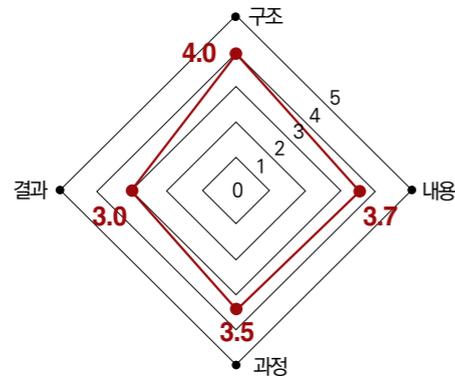
본 정책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추진체계도 여러 관계부처, 각급 교육청, 단위학교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학교폭력 및 위협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적 증거도 없고(감사원, 2013), 학생들에 가해진 가정폭력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직도 폭력 및 위협 징후에 대한 단위 학교의 대응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본 정책은 각급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현장에서 학교보안관, CCTV, 예방교육, 지역별WEE센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폭력 및 위협 사건의 발생으로 학생들이 희생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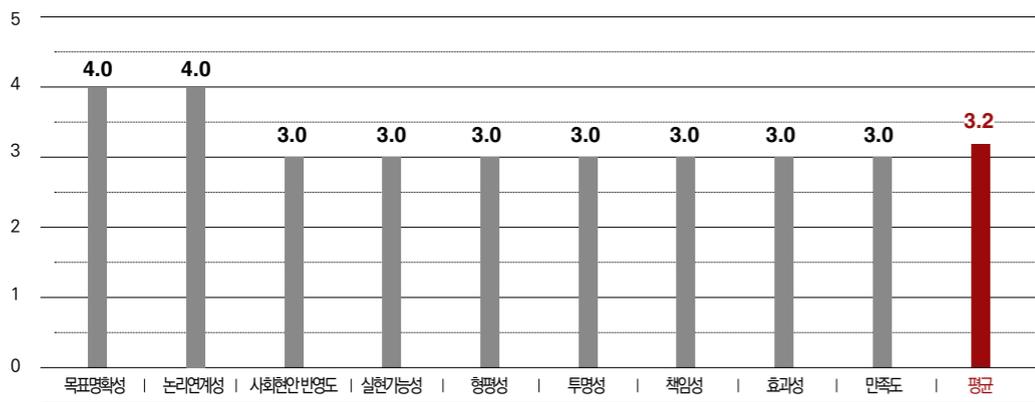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 정책에 대하여 연구진들은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4.0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다음으로 내용부문의 평가항목에서 3.7, 결과차원 평가항목에서 3.0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4-113]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3) 대학입시 간소화(교육부)

[그림 4-114] 대학입시 간소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대입전형 간소화 발전방안을 위한 전형 간소화, 영어 수준별 수능 통합, 수능성적 반영 완화,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변화의 대상과 구체적인 목표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14e). 특히, 권역별 공청회의 시작 날짜와 의견수렴 과정 및 기간 그리고 구체적인 확정과 발표 계획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14e).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 및 학부모들이 접수 과정과 대입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으며(교육부, 2014e), 수시와 정시가 보다 단순화되고(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 통합 등) 정시모집의 학과 내 분할모집이 폐지되는 등 목표에 대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이 대입전형이 복잡하다는 점과 사회적으로 이슈라는 점은 공공이 인식하고 있으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체계적인 증거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다. 즉, '복잡한 전형내용을 단순화하고, 학생,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별 전형 운영의 기본 원칙 제시'라는 목표는 전형내용이 복잡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전제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나 분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을 위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활성화한다고 하나 이를 위한 대학의 참여를 유도할 방법은 구체적이지 않다. 즉, '정원 외 전형은 물론 정원 내 전형에서도 대학들이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고 제시하였으나(교육부, 2014e), 그에 대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배려대상자가 어느 지역에 몰려있는지는 근거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정원 외 전형은 물론 정원 내 전형에서도 대학들이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전형 취지에 맞는 학생이 선발되도록 학생의 여러 환경과 잠재 능력을 종합 평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거주 지역(농어촌)·소득 수준(저소득층) 등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증하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형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할 경우 재정지원 불이익 조치 등의 제한점이 있어 정책형평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는 추론할 수 없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이해당사자들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방법 및 과정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명백하지 않다. 의견을 수렴 하는 공청회 날짜가 서울만 9월 2일로 명시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날짜 없이 개최여부만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14e). 또한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방법이 없어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어려워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교육부 안에서 전담하고 있는 담당부서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되는 피드백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가 없다. 공청회에 질의응답시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제기된 사항들의 반영방법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의 경우 대학입시의 간소화라는 물리적 간소화라는 정책효과는 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

으나 대학입시의 간소화가 정책대상집단인 수험생과 대학의 질적 제고라는 정책효과에는 도달하였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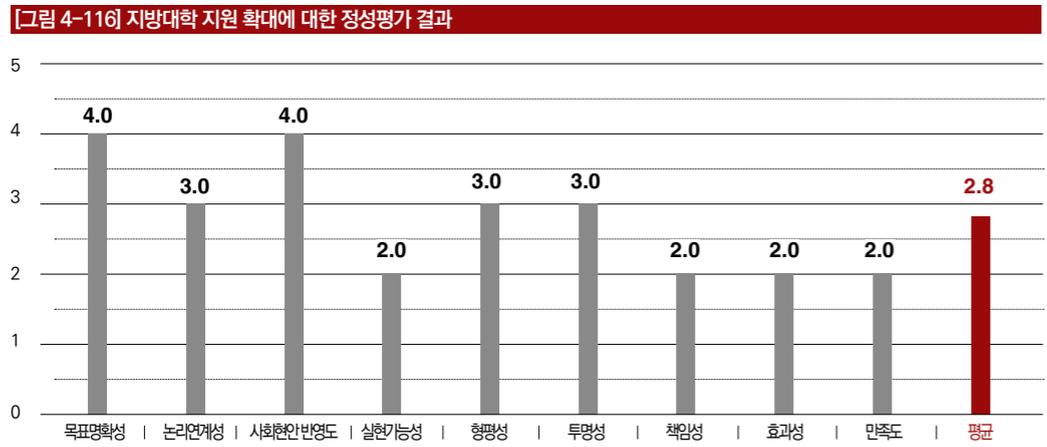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수험생과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 입시의 간소화가 궁극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는 사설학원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학입시 간소화에 찬성하고 정책수단을 지지하고 있는지는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은 전체적으로 평가항목 모두 3.0이상이었으나 그 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구조부문의 평가항목만이 4.0으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고, 나머지 3부문의 평가항목은 3.0으로 동일한 평가가 나타났다.



(4) 지방대학 지원 확대(교육부)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비전은 '지역의 창조경제 견인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이며 목표는 창조경제를 선도할 특성화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우수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주 기반을 구축하며, 평생교육, 문화, 복지 등의 구심점으로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다(교육부, 2013e, 2014c, 2014f). 따라서 이 정책은 지방대학 육성의 목표를 고등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의 우수성을 제고하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지방대학은 '지역을 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정책목표는 이 정책이 고등교육 영역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순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다. 이 정책의 5대 추진과제와 16개 세부과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정책수단은 구조조정을 통한 특성화와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의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고등교육의 특성이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고등교육의 지역별 특성화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렵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산학연계강화 사업, 심지어는 BK21플러스 사업에 비수도권대학의 쿼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지역별 대학교육 특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리적 연계성이 완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14년에 수립 시행중인 특성화사업 시행계획(교육부, 2014c, 2014f)은 지방대학에게 배타적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역량강화 사업의 규모를 크게 늘리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지역별 특성화에 대한 정책당국의 기본계획 및 전략이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 기간 누적되어 있는 일부 지방대학의 부실화와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정책은 지방대학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라는 점에서는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별 고등교육 수요의 특성을 판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이 제출한 사업단 계획서를 평가, 선정, 지원하는 등의 관리주의적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지역별 특성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2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사업단 단위로 배분하는 방식은 이미 BK21 플러스 사업 등에서 활용된 바 있는데, 문제 상황의 심각성과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가 질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으로 정책대상만을 조정해 둔 데 머무르고 수단적 유사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반적인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정책은 지방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며 경쟁과 평가로 일부 사업단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므로 교육기관 소재지의 지리적 기준과 사업단 평가 결과만으로 정책수혜의 집중 및 차별화를 정당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권역별로 지방대학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절차적 참여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지방대학지원 정책의 기본 방침이 매우 짧은 기간에 수립되면서 기존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지원 접근방식에 머물렀고(교육부, 2013e), 그 결과 2014년의 확대방안의 방향이 이미 정해짐으로 인해서 지방대학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접근방법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는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은 교육부가 한국연구재단을 사업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문제가 가진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다른 정부연구지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에게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지원 대학 선정, 지원액 결정,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의 주요업무를 위탁하고 교육부는 그 결과만을 보고받는 방식으로는 지방대학의 지역별 특성화라는 정책적 목표의 구현정도를 판단하고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아직 정책의 시행이 오래되지 않아 그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그러나 본 정책의 핵심 성과 지표는 사업단의 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비율, 교육성과 측정결과와 특성화 계획에 따른 자율적 성과관리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이미 교육역량사업에서 활용된 바 있으며, 지방 고등교육의 특성화와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고유한 정책적 목표의 달성정도를 포착하는 데에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감사원, 2014). 교육부가 지역별 특성화와 창의적 인재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각 지역별로 사업단이 추진해야 할 과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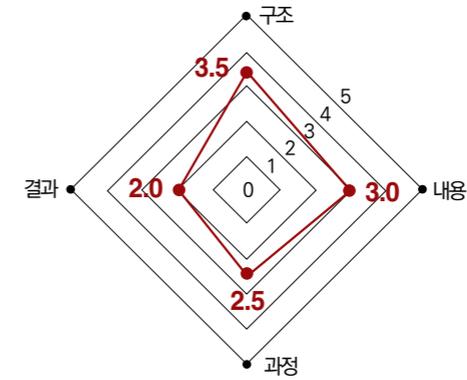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지방대학의 문제와 지방대학 육성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정책의 내용은 기존의 연구지원 프로그램과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았다. 이 정책은 지방대학의 우수 사업단에게 정부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 혹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도 그 파급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지방대학 지원확대 정책은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2.75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에서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이 3.5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결과부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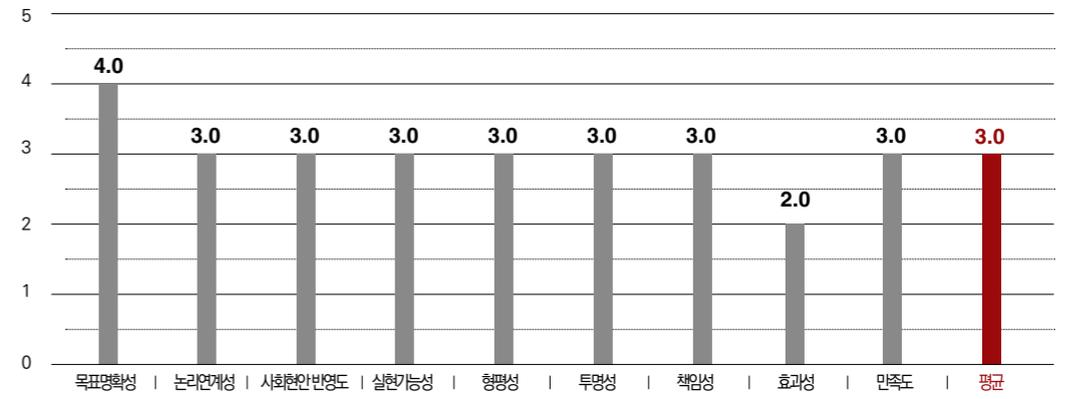
평가항목이 2.0으로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이 두 항목간의 차이가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림 4-117] 지방대학 지원 확대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5)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교육부)

[그림 4-118]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대학생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변화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15년까지 11년 기준 등록금 총액 14조 기준으로(교육부, 2014a), 대학 등록금 부담 절반 경감 실현하겠다는 타임라인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450만 원)을 기준으로(교육부, 2014a), 소득계층별로 일정비율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비율이 구체적이지 않다. 지원기간은 명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명시되지 않았다.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에 대하여 대학도 등록금 부담 완화에 동참하도록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교육부, 2014a), 대학자체노력과 연계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대학의 자체노력 이행 방안에 대해 등록금 인하, 장학금 추가 확충 또는 양자 혼합 방식으로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이라고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이행내용 또한 명확하지 않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본 정책이 대학 등록금의 수준이 사립학교의 경우 2000년도 451만 원에서 2011년도 769만 원, 국공립학교의 경우 2000년도 219만 원에서 2011년도 435만 원으로 증가한 것에 대한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교육부, 2014a), 구체적으로 반값 등록금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현안으로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I유형과 II유형에 합쳐서 제공되는 총 1조 5,000억 원의 예산규모(교육부, 2014a)가 타당하고 적절할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재정확충계획이 다소 불투명하다. I 유형과 II유형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한 추정치가 제시되지 않았고 대학마다 학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은 지원 대상 대학에 대학, 산업대, 원격대학, 전문대, 전공대학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교육부, 2014a), 실제 저소득 학생들이 많은 대학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정책의 형평성이 아주 높은 수준인 것으로는 추론할 수 없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의 유형 I과 II에서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해 보인다. 대학 의견 수렴이 과정 속에 포함되어있고 학생들이 대학에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대학마다 학생의 의견수렴을 접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기에 학생들이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이 확보되어 있거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이 확보되어 있다고 정책의 민주성이 보다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한국장학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사업위탁을 받아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과정에서 교육부가 한국장학재단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교육부가 본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어떠한 점검방식과 평가체계가 수립되어 있는지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의 경우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정책효과가 중장기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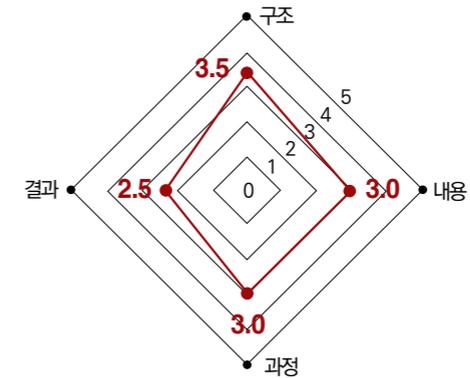
원확보와 수혜학생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반값등록금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의와 등록금 재원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본 정책의 효과가 아주 높다고 추측하기는 어렵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소득연계 반값등록금의 만족도는 실제 등록금의 면제가 아닌 정책금융형태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으로 본 정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과 연계된 등록금의 선택적 면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여야 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정책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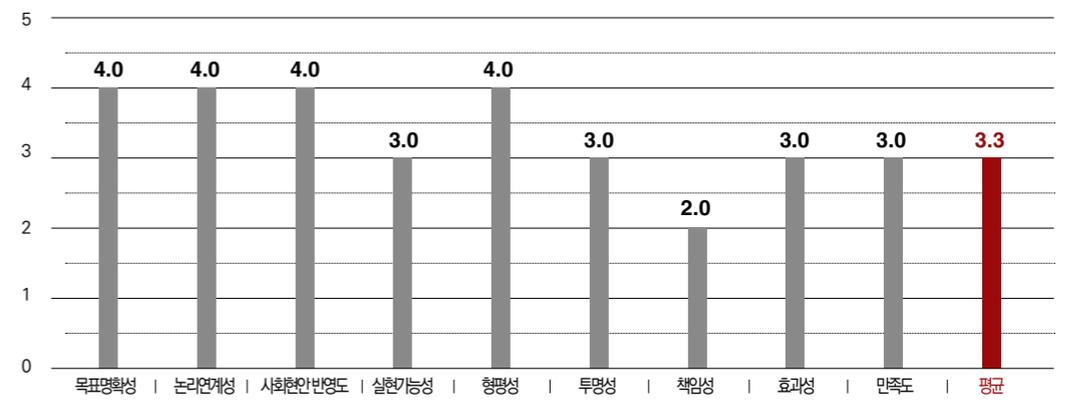
종합적으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정책은 구조항목에 대한 평가가 3.5로 다른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내용항목과 과정항목이 3.0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항목이 2.5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11]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6)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교육부)

[그림 4-12]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만3~5세 어린이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누리과정의 목적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가가 5세 미만 어린이의 교육 및 보육을 보장한다는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만3~5세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누리과정의 표준교과와 정부의 지원범위로 이루어져 있다. 누리과정은 기존의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하여 5개 영역의 연령별 공통교과과정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신체운동 및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로 구성 되어 있다(교육부, 2013f).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은 2013년부터 만 3~5세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일정부의 유아학비와 보육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책임진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표준교과와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이 명확하고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육아 및 보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투자의 필요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서 노인부양비가 급속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육아 및 보육의 비용을 공적재원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미래의 잠재적 사회적 갈등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어하는 측면에서도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3~5세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반면에 소요 재원의 확보 측면에서 다소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2014년까지 일부 국비에서 부담하던 5,000억 원의 3세 어린이집 보육비를 2015년부터 전액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 일시적으로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만3~5세 유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국회예산정책처, 2014), 향후 수년의 고비가 지나가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보완하여 시도교육청의 재정운명을 보장하거나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재원부족의 위험도를 충분히 관리할 필요는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만3~5세 모든 유아에게 공통의 교과과정을 제공하므로 전 계층의 모든 가정에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래의 노인부양을 책임지는 세대의 교육 및 보육이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형평성도 제고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기재부, 교과부, 복지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의 TF를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만5세 공통과정에서 만3~5세 누리과정으로 확대되는 결정이 매우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교육부, 2011e, 2012a, 2012b), 이 정책변화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누리과정의 운영에는 유치원을 관장하는 교육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복지부, 재원을 부담하는 시도교육청 등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앞으로 재원을 부담해야 할 시도교육청과 중앙부처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운영체계의 불안정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만3~5세 교육 정책의 집행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운영주체의 책무성은 낮은 편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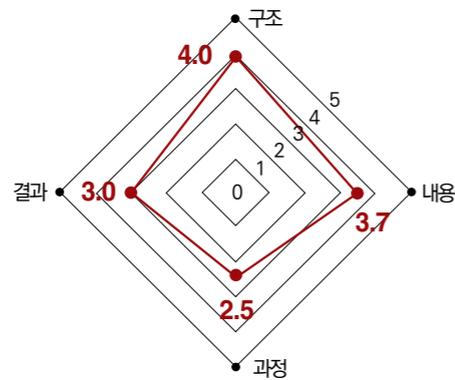
이 정책은 만3~5세의 유아를 키우고 있는 모든 가정에 정부가 교육비와 보육비를 보조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키는 단기적 효과는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에게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교육서비스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민주시민의 소양을 기르는데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에 이르다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미래세대에게 보편적인 교육서비스를 정부가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원의 부담을 둘러싼 지방교육청과 중앙정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목표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감안할 때 정책의 제도 및 재정적 기반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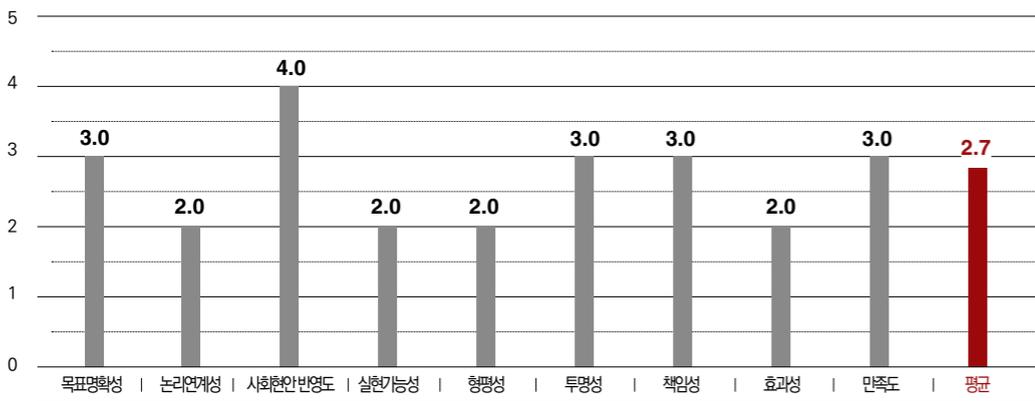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정책은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불균형적인 평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조항목이 4.0, 내용항목이 3.7로 높았으나, 과정항목이 2.5로 가장 취약하였다.

[그림 4-121]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7)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여성가족부)

[그림 4-122]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로 제시된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의 신고대상 활동, 활동주최 제한, 유스호스텔 수련활동 제한,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시설운영 또는 활동 중지명령, 수련활동 인증 의무화(여성가족부, 2014)등의 노력이 정책목표의 일관성을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통해 이러한 노력들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평가결과를 최우수, 우수, 적정, 미흡, 매우미흡으로 나누었지만, 목표비율과 참여하는 개소의 목표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어떠한 규제들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논리

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안전평가를 하지만 평가를 거부한 개소들에 대한 방침 혹은 참여개소의 목표 비율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며, 안전 관련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여러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관련 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즉,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수요 증가, 수련시설 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안전팀'을 설치하였고,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활동신고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시·군·구의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수련활동 현장의 신고·인증 업무를 컨설팅한다고 한다(여성가족부, 2014). 그러나 개별 정책사업간의 정책연계가 본 정책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최근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통한 부모들과 청소년들의 불안감에 대응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14),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청소년과 부모들이 안심하고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4),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은 지난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물 보수, 설비교체, 종합안전점검평가 등 여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비해 그에 대한 예산과 체계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불투명하다.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31개소에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것과 사용시설 3개소에 대한 안전조치 1.3억 원 등 예산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여성가족부, 2014), 실제 이러한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한 타당도 분석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적합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아래와 같이 효과적 추진을 위해 대책을 추진해나간다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및 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판단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여성가족부(2014) 보고서에 제시된 문건에 의하면, 관련법 개정으로 수련활동 신고 및 인증 수요 증가, 수련시설 평가 의무화 등에 따른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안전팀'을 설치하였고,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활동신고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시·군·구의 신고 업무를 지원하고, 수련활동 현장의 신고·인증 업무를 컨설팅 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종합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예산과 인프라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종합평가 및 안전점검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은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을 위한 시설과 안전점검인력 등의 격차가 실제로 관련 예산과 인력 배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의 예산연계와 정책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종합평가 및 안전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수련활동 계획 시 활용토록 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 안전 점검과 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였다. 본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점검 및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좋으나, 평가 및 점검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수행과정에 청소년수련활동과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이 지속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환류시스템이 확보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 홈페이지에 안전 점검 평가를 공개하는 것이 한가지의 방법이겠지만 평가에 실질적인 점검과 부족한 예산 및 인력 등 평가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점검시스템과 환류시스템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본 정책의 효과를 단순히 참여개소도 높고 평가등급도 높게 나왔으므로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평가등급에 대해 학부모 및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평가등급을 지속적으로 좋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실제 이러한 규제들로 환경이 안전하더라도 규제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예상되는 부작용(예, 사전등록 및 대그룹 활동에 대한 제한)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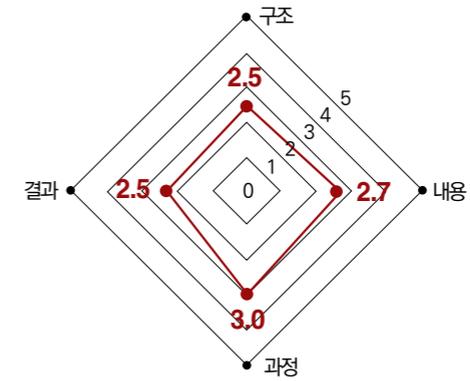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안전관리의 만족도는 실제로 청소년수련활동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의 효과성측면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평가등급을 지속적으로 좋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실제 이러한 규제들로 환경이 안전하더라도 규제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예상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보완이 본 정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면에서 본 정책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종합적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2.675로 상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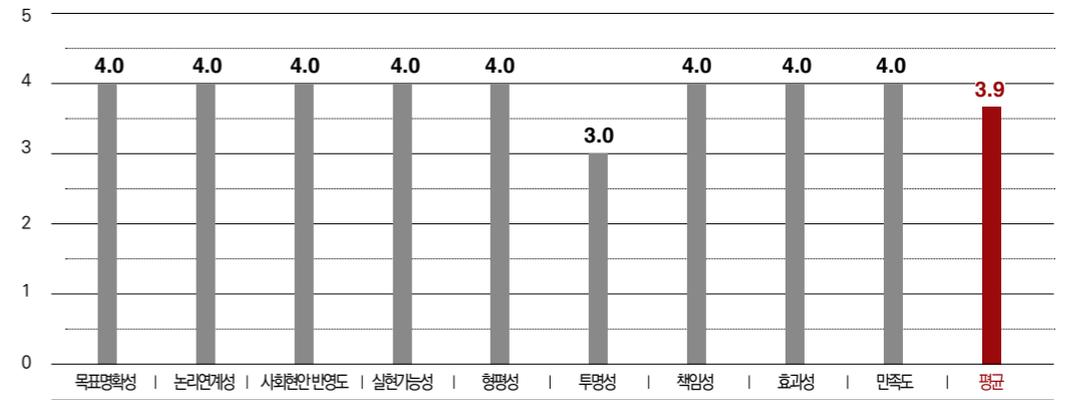
으로 낮은 평가와 더불어 개별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과정부문의 평가가 3.0으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높은 평가부문 또한 2.7로 매우 낮다. 나머지 구조부문의 항목과 결과부문의 항목은 2.5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그림 4-123]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8)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확대(산림청)

[그림 4-124]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확대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의 목표는 산림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산림자연자원을 보전하고 가꾸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 문화, 건강 자원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5일제 근무의 정착으로 산림휴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연휴양림을 확대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에게 휴식, 건강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의 방향이 높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자연휴양림을 156개소로 확대 조성, 다양한 교육, 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유 자연휴양림의 경쟁력 강화, 질환 치유에 특화된 치유의 숲 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가 보유한 산림휴양 자원뿐만 아니라 공유 및 사유 산림휴양 자원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체험유형 및 치유목적에 따른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의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수단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근무시간 단축과 레저여행 문화의 확산으로 전국 국립공원 및 자연휴양에 대한 수요가 연간 천만 명을 상회할 만큼 급증하였다. 국민 대다수의 삶에서 자연휴양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산림청의 자연휴양림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 정책은 이러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고요된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정책은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은 편이라 평가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자연휴양림 조성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은 전국 국공사유 156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자연휴양림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질병 유형별로 치유목적에 맞게 전문화한 것이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자연자원 보전과 관련된 예산과는 별개로 독립적 재원이 2014년 현재 연간 500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으며 1988년 이후 지속사업으로 완전히 확립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정책의 확대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체계와 재정적 지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된 상태로 보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판단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연령과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자연휴양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형평성 또한 높은 편이라 판단된다. 특히, 자연휴양림의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소요재원도 국비와 지방비로 균형적으로 부담되고 있어(산림청 2010b), 국가 예산 투입의 지역적 형평성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시민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다양한 자연휴양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자연을 활용한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학계의 전문가와 관련 질환자에 다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연휴양 공간의 일부를 어느 정도까지 질환 치유의 특정 목적으로 활용하면 균형을 이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산림자원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산림청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조성 및 확대 정책을 전담하고 있어서 행정적 책무성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연휴양림의 경제성과 이미지 통합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연구도 진행되었고,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선정 및 관리 지표도 확립되어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확인할 수 있다. 내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 및 평가 조사도 시행하는 등 환류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연휴양림 관리를 책임운영기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 관리 관심이 필요하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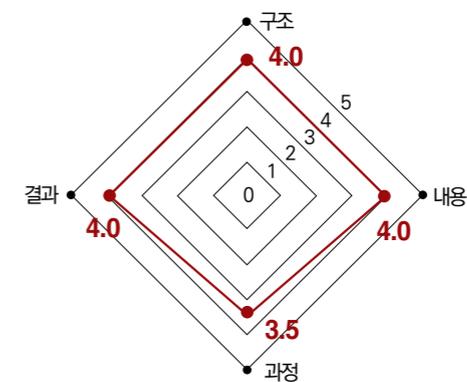
자연휴양림의 효과성은 연간 백만 명에 달하는 내방객의 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자연휴양림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연휴양림을 찾는 많은 내방객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최소 국가재정 투입액의 10배 이상일 것으로 산정되고 있어(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사회에 대한 순익의 창출이 분명하고 앞으로도 그 규모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직접적 효과가 쉽게 체감되는 정책으로서 단순 탐방 및 체험의 수준을 넘어서 교육, 문화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질환별 치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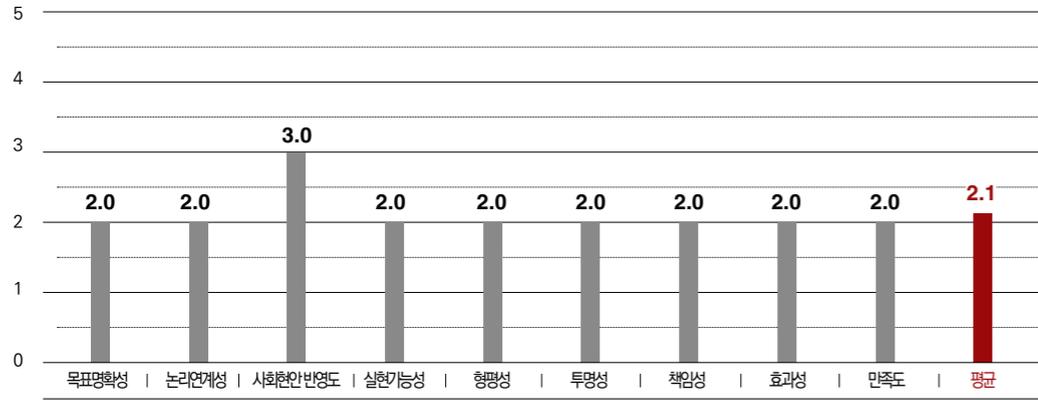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 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평균 3.875로 높게 평가되었다. 구조, 내용, 결과부분이 4.0으로 동일하게 가장 높았고, 과정항목만이 3.5로 다소 낮았으나 이도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에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 4-125]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 및 확대 영역별 정성평가



(9) BK21 플러스 사업(교육부)

[그림 4-126] BK21 플러스 사업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석박사급 “창의인재” 양성이 비전 및 목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교육부, 2013a), 이러한 목표자체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대학원생들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여러 표현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반영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않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대학원 역량 강화란 표현도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다소 실제적이지 못하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을 위한 대안들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계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대학원 역량강화, 또한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이 본 정책의 목표들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의문시 된다. 특히 융복합, 창의인재 및 창의력이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변화의 모습이 본 정책의 목표와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QS 대학평가 200위권 내 진입, 그리고 SCI 논문 피인용지수 순위 상승이(교육부, 2013a), 어떻게 창의인력 및 창의성과 연관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 목표로 QS 대학평가 200위권 내 대학 수를 6개(12)에서 11개(19)로 늘린다는 목표와, 학문분야별 핵심 고급인력 및 융복합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양성 목표로 7년간(13~19) 매년 우수 석박사 인력 약 15,000명 및 신진연구인력 지원한다고 하는데(교육부, 2013a), 이러한 정책목표와 국내 대학 교육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SCI급 논문 피인용지수 순위로 30위(11)에서 20위(19)로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창의적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정책대안 간 논리적 연계성과 타당성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한국이 그동안 교육과 연구역량에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증거로 통계수치를 제공하였다(교육부, 2013a).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창의성과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BK21과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체계적인 증거들이 제시되고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왜 관련연구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한지, 융복합분야 고급전문인력양성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들과 연구역량의 연계성이 어떻게 부족한지 등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고, 단순히 세계대학 순위의 기준만으로 우리사회의 현안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본 정책을 위한 수치적 목표만을 본다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원규모 2,526억 원이 지정된 지원분야에 연구비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나(교육부, 2013a), 그 예산에서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기계적인 정책실현가능성은 본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세계대학평가와 논문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관성과 연구인프라 구축, 특히 지방대학들에 대한 연구역량이 어떻게 제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의 실현에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본 정책의 목표가 연구의 질 향상 및 세계대학평가 순위 진입을 목표로 하다보면 연구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지고 기존의 연구 성과가 갖추어져 있는 상위권 대학들에게 연구비가 집중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와 집행은 정책실현의 형평성 제고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본 정책수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충분한 정보공개 및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 등에 소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BK21 플러스사업의 평가관리에서 그동안 부진한 사업단의 탈락과 신규사업단의 진입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단기적·양적성장 중심의 평가로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사업단의 예산집행의 경직성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문제제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등에서 볼 때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과정이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사업의 평가 및 사업관리 체계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사업총괄 관리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는데(교육부, 2013a), 이러한 경로에서 정책의 효과성 및 계획대로의 집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사업총괄 관리위원회만 해도 사업계획 심의

및 자문을 하지만 이행단계에서의 모니터링 역할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어느 담당부서에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점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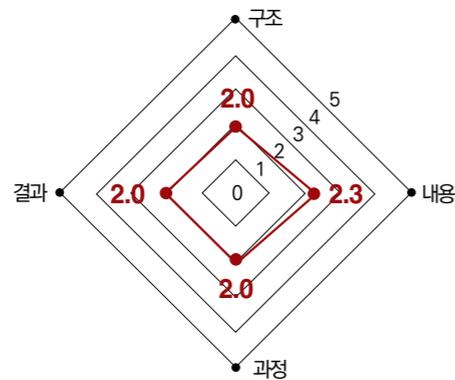
본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본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2019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교육부, 2013a),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의 효과성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대학평가순위나 석박사인력배출 학생 수, SCI급 논문피인용지수순위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본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대학의 질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본 정책의 효과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판단도 아직 이른 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대학순위 랭킹에만 대학들이 참여함으로써 목표를 이루고 만족도가 완성되는 것이 아닌 위에서 언급한 연구인프라에 대한 부분에서의 성과가 함께 만족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정책의 대학구성원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게 평가되기 어렵다고 본다. 단순히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그러하지만, 근원적으로 본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한 기대는 아주 높다고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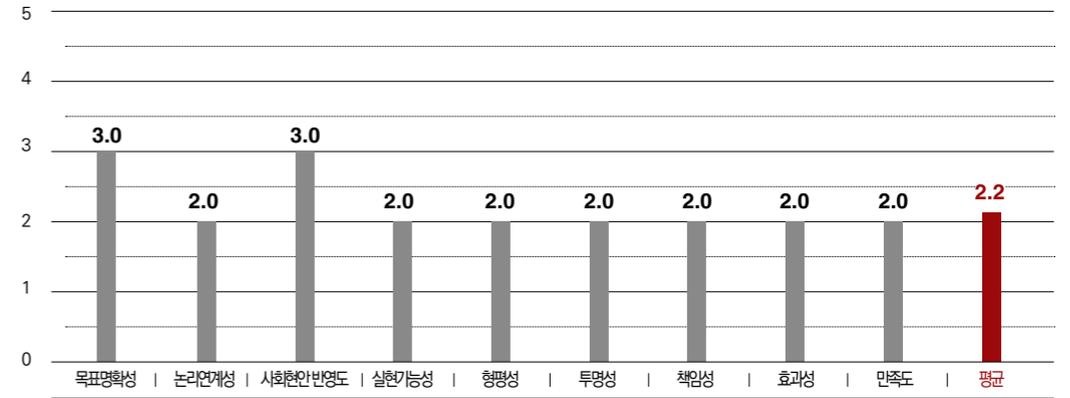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BK21플러스사업정책은 평균 2.075로 다른 정책들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 개별 평가항목 모두 2.5이하로 평가되었다. 내용부문이 2.3, 나머지 구조, 과정, 결과는 동일하게 2.0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4-127] BK21 플러스 사업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10)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문화체육관광부)

[그림 4-128]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본 정책은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외의 방한시장을 다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방한시장의 규모가 중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해외 방한시장을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정책 목표의 당위성은 분명하나 이를 좀 더 체계적인 정책아젠다로 구성하여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본 정책은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시군 단위의 관광두레 조직,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 등 핵심시장별 유치전략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대안 간의 연계성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지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관광두레 조직도 해외 방한시장 다변화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성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외 방한시장의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여 핵심시장별로 특화된 국내 관광자원의 유형을 발굴하는 방안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경기 침체로 인해 관광자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관광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책아젠다로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비해 정책의 가시성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은 문화와 관광의 영역이 융합되어 있는 새로운 분야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 지자체, 관광산업계 등과의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3년 7월 문체부차관을 단장으로 9개 부처를 포함하는 관광진흥협업추진단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정책의 영역에서 이러한 추진체계가 확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책의 낮은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의 영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필요한 협업체계를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주요 정책대상이 관광업계와 지역주민으로 혼재되어 있어 잠재적 수혜집단 내에서 높은 이질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대상 집단 내에서 수혜 분포의 비대칭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업계와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지역 및 주민 간에 이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일부 정책부서와 관광업계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계 뿐만 아니라 문화, 지역의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관광자원의 내용에 관한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본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이행과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업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며, 정부 지원의 영역에서 민관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을 보인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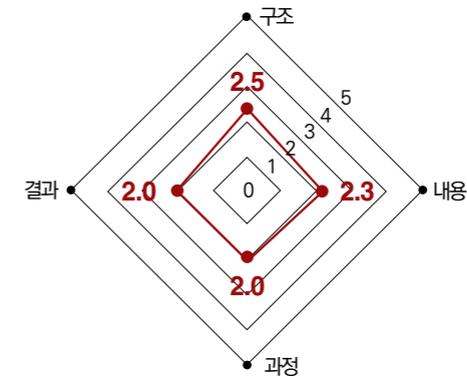
본 정책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제 활성화 기여와 해외 방한시장의 다변화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속적인 시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이 정책의 파급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았으므로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지역의 관광 참여 조직화는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핵심시장별 추진 전략의 이행 성과도 점검하여 최소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서 향후 본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정책은 평균 2.2로 낮게 평가되었다. 구조부문의 평가가 2.5로 나타났으며, 내용, 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 또한 각각 2.3, 2.0, 2.0으로 낮았다.

[그림 4-129]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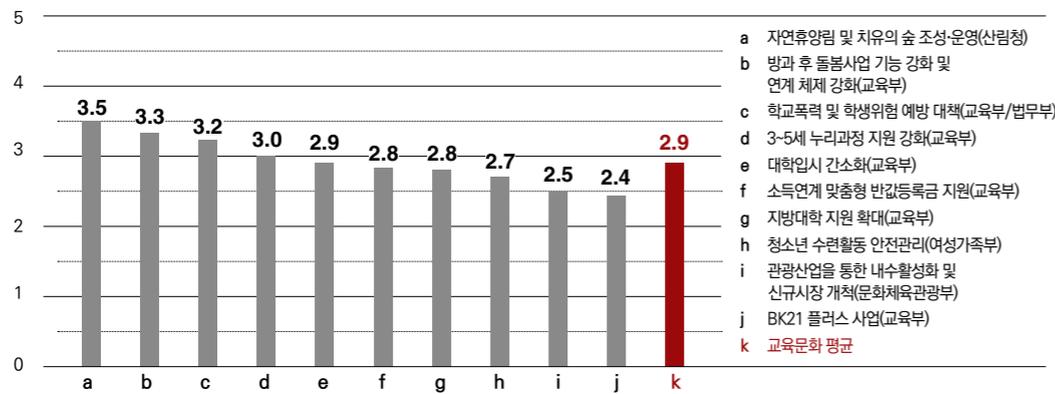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교육문화 분야 10개 정책에 대해 다차원의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교육문화 분야의 정책들은 정책구조, 정책내용, 정책과정, 정책결과의 평가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목표설정이 명확하고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설계의 품질은 다른 측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반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의 운영 및 제도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따라서 이 분야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당부분 정책 과정에 대한 평가에 의해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 일반시민과 전문가 평가의 차이를 중심으로 4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일반시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3개 정책(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방과후 돌봄사업,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정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일반시민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일반시민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던 3개 정책(3~5세 누리과정, 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일반시민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3) 일반시민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던 2개 정책(지방대학 지원 확대,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반시민과 동일하였다. 4) 마지막으로, 일반시민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던 나머지 2개 정책(관광산업 활성화, BK21플러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반시민의 평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0]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교육문화 분야에 대한 전체 평가결과에 따라 10개 정책은 다음과 같이 3개의 순위집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1) 상위집단(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방과후 돌봄사업,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정책, 3~5세 누리과정): 목표명확성 및 논리연계성(정책구조), 사회현안 반영도 및 형평성(정책내용)이 높게 평가되었고, 정책내용 중에서 실현가능성과, 정책과정(투명성, 책임성), 정책결과(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2) 중위집단(대학입시 간소화, 소득연계 반값등록금, 지방대학 지원확대,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 목표명확성 및 논리연계성(정책구조),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실현가능성 및 형평성(정책내용), 정책과정(투명성, 책임성)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책결과(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하위집단(관광산업 활성화, BK21플러스): 정책구조(목표명확성 및 논리연계성)에 대해서도 다른 정책들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정책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및 정책과정(투명성, 책임성)의 측면에서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정책결과(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개별 정책의 전체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체제 강화 정책은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이 3.3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3.6으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과정부문의 평가항목에서 2.9로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정책은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이 3.175로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3.5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결과부문의 평가항목에서 2.8로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대학입시 간소화정책은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이 2.9로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3.3으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과정부문의 평가항목과 결과부문의 평가항목에서 2.7로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지방대학 지원 확대정책은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이 2.725로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세

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3.2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결과부문의 평가항목에서 2.3으로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소득연계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정책은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이 2.85로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3.2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결과부문의 평가항목에서 2.6으로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정책은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이 3.025로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높은 평가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3.5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과정부문의 평가항목에서 2.6으로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정책은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이 2.675로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2.7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나 이는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그 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평가항목인 결과항목과의 차이가 0.2로 매우 작았으며, 개별항목간 균형적인 방사형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해당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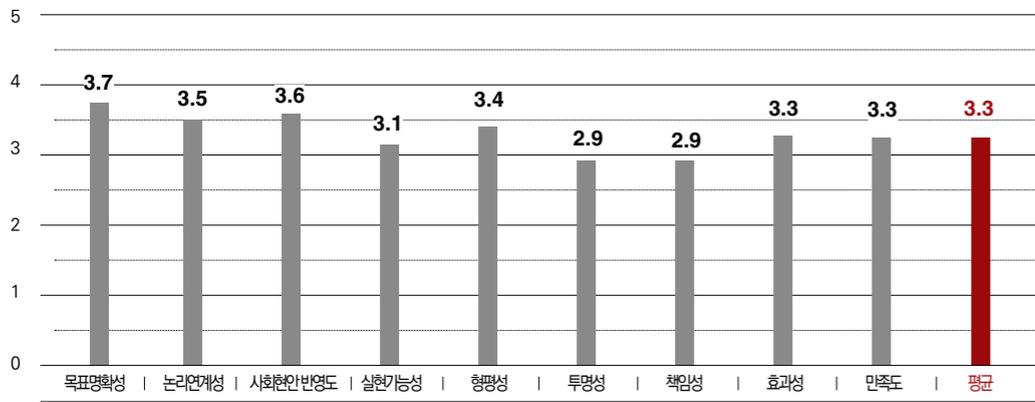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정책은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이 3.45로 정책 중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3.6으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결과부문의 평가항목과 내용부문의 평가항목 또한 동일하게 3.5로 그 정도차이가 적었다.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과정부문의 평가항목 또한 3.2로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BK21플러스사업정책은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이 2.4로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과 내용부문의 평가항목에서 2.5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나, 이는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평가수준이다. 또한 과정부문의 평가항목과 결과부문의 평가항목이 2.3으로 동일하게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지만 이는 가장 높게 평가된 구조부문과 내용부문과 0.2차이밖에 나지 않아 해당정책은 전반적으로 4영역 모두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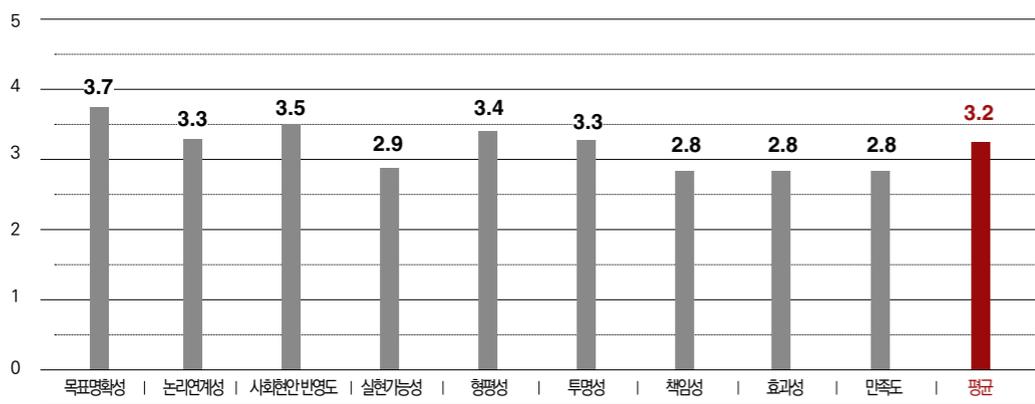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정책은 네 가지 항목의 평균이 2.15로 교육문화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구조부문의 평가항목에서 2.7로 가장 높은 평가가 나타났으나, 이는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평가수준이다. 또한 과정부문의 평가항목과 결과부문의 평가항목이 2.4로 동일하게 가장 낮은 평가가 나타났지만 이는 가장 높게 평가된 구조부문과 0.3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그림 4-131]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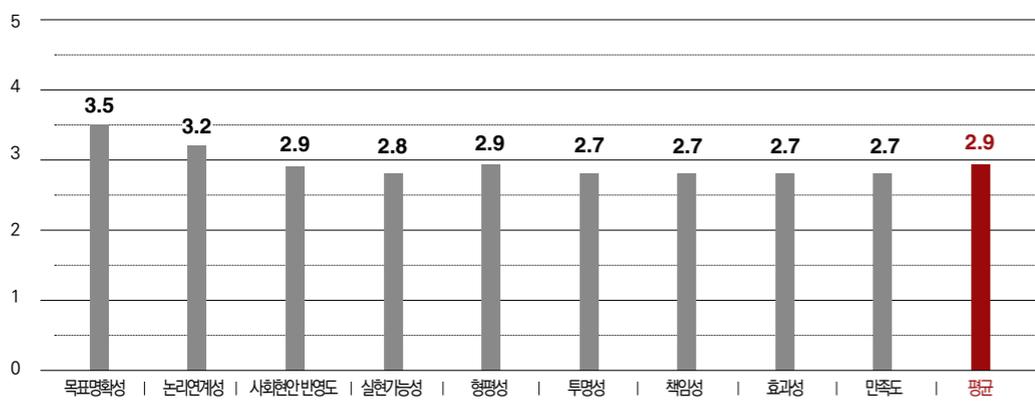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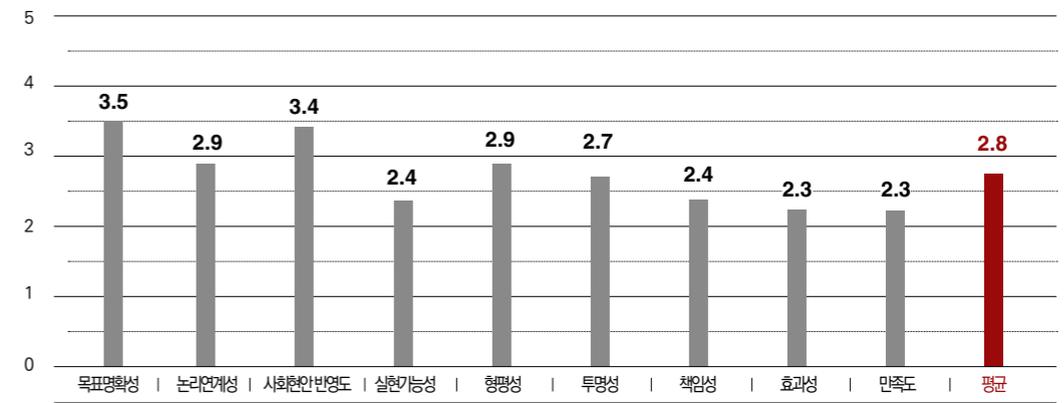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교육부/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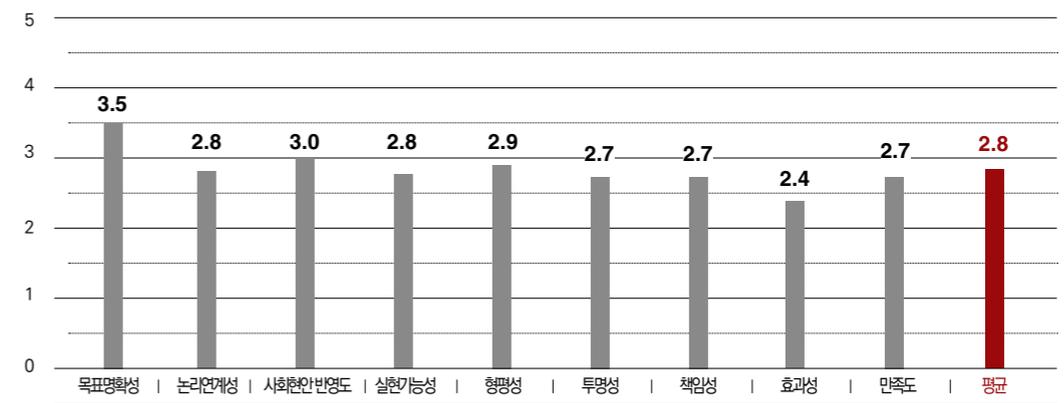
대학입시 간소화(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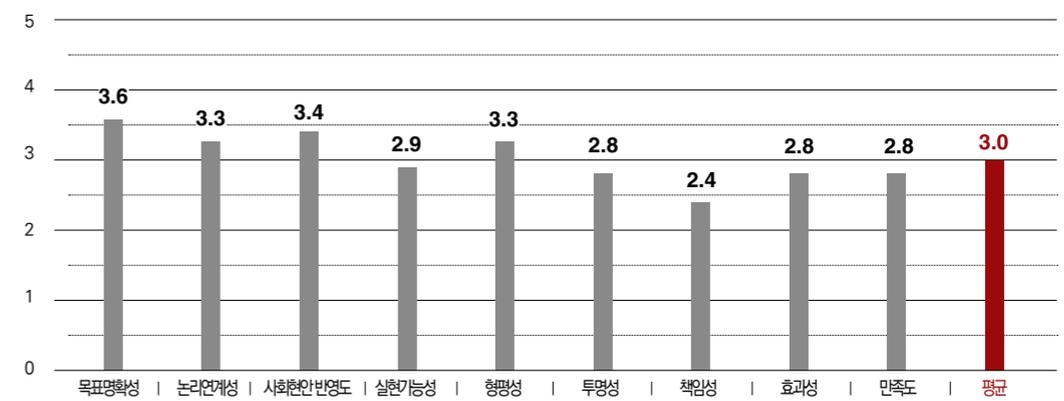
지방대학 지원 확대(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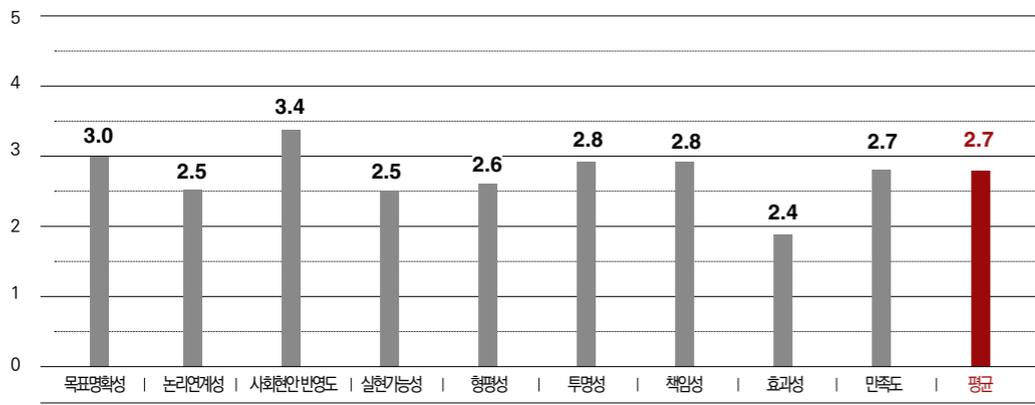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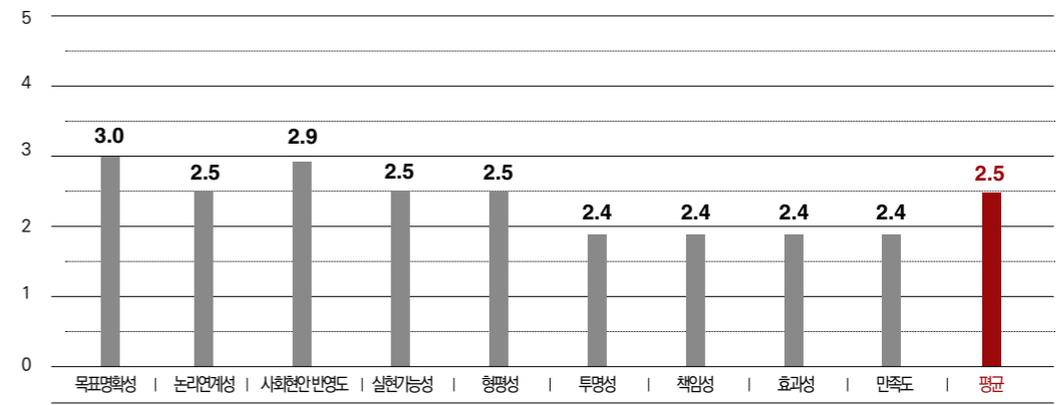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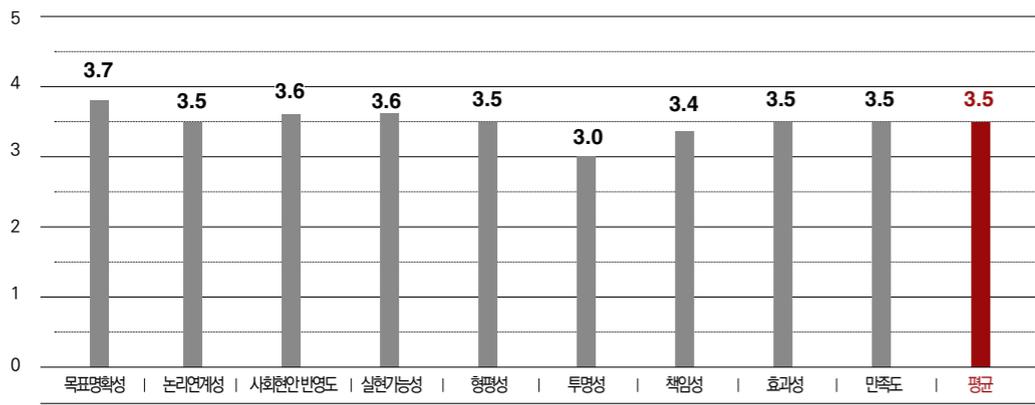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여성가족부)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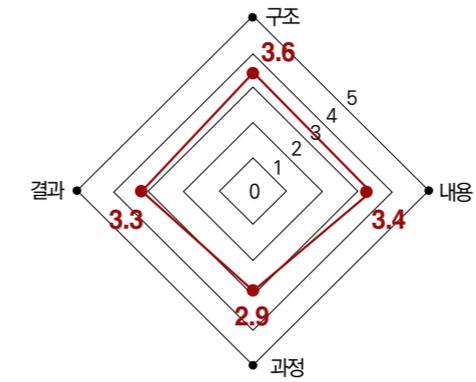


자연휴양림 및 사유의 숲 조성□운영(산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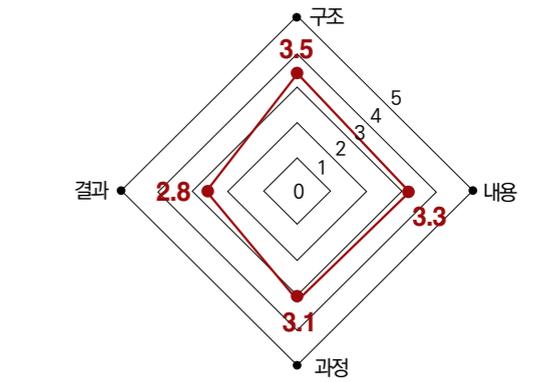


[그림 4-132] 교육문화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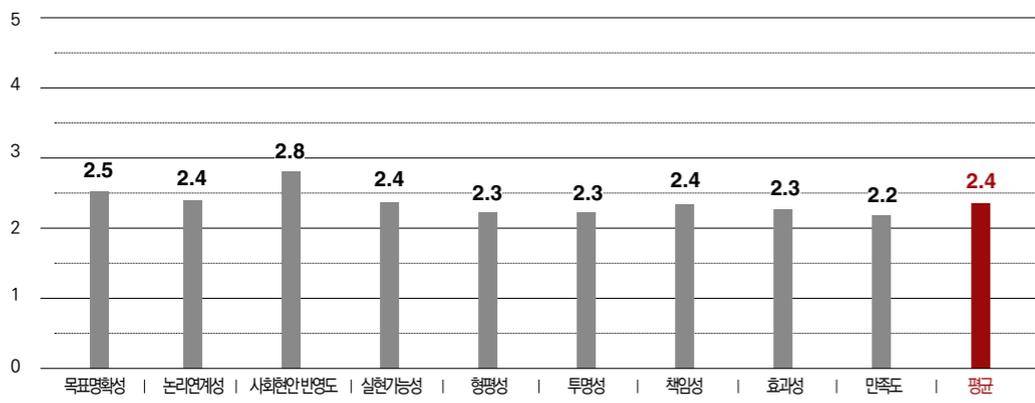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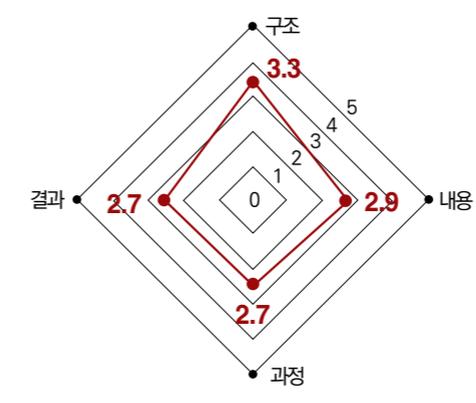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교육부/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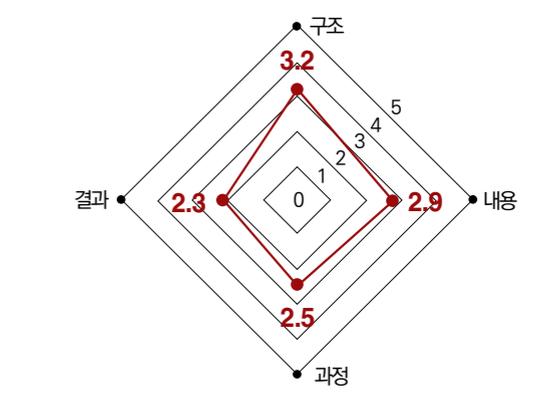
BK21 플러스 사업(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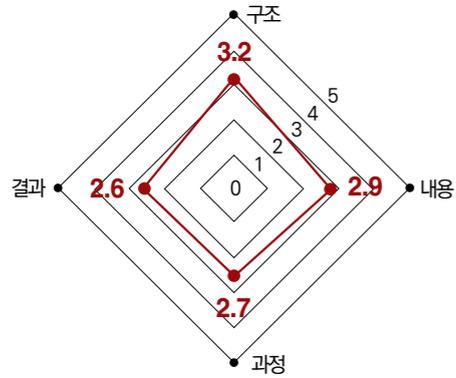
대학입시 간소화(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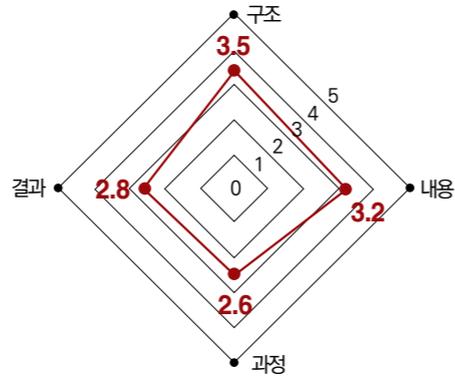
지방대학 지원 확대(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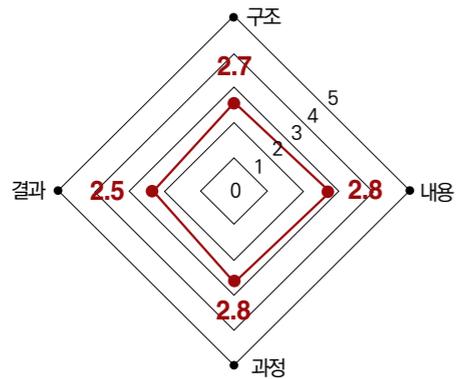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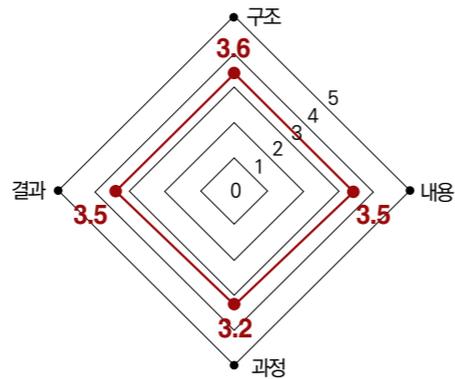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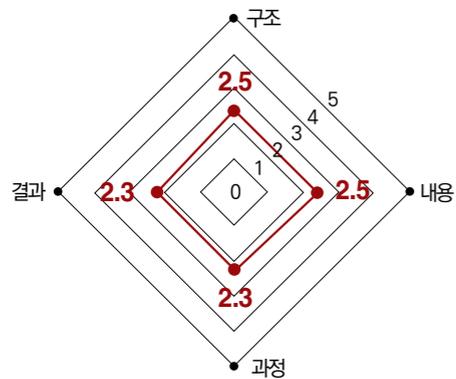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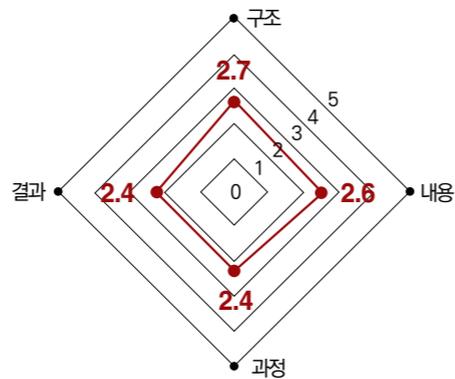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산림청)



BK21 플러스 사업(교육부)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신규시장개척(문화체육관광부)



5. 외교안보정책 분야

1)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결과 종합

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모든 지표에 대한 평가를 종합한 결과, 경제정책(2.9), 교육문화정책(2.9), 사회복지정책(3.1)과 비교하여 평균적 수준인 3.0의 평가결과를 보여 주었다. 세계화의 진행과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평화통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외교안보정책의 중요성은 부연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의 평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분야 정책과의 비교에서도, 평가점수에서도 평균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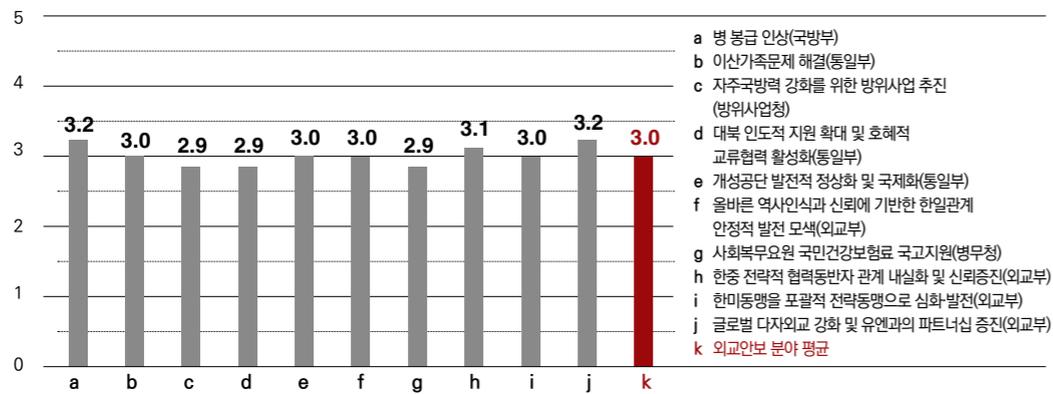
종합적인 결과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 주었는데, 대부분의 정책과 지표에서 전문가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반인의 정책 이해도가 낮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지표별로 본다면, 정책의 구조(목표 명확성,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와 내용(사회현안 반영도, 실현 가능성, 형평성)에 대한 평가에서 특히 일반인과 전문가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정책의 과정(투명성, 책임성)과 결과(효과성, 책임성)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 평가가 근소한 차이만을 보였고, 양자 모두 대체로 낮은 평가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의 10개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종합한 결과 3.6(4: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2: 모른다) 정도로 평가되어, 전문가의 경우에는 평균적인 인지도 수준을 보여 주었다. 일반인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훨씬 낮은 수준인 2.8로 평가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책의 구조(정책목표의 명확성, 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한 설문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차이를 보였다. 정책의 목표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3.6과 3.1,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4와 2.9의 결과를 나타냈다.

정책의 내용을 나타내는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형평성 평가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의 응답이 차이를 보였다.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3.4와 3.0,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3.2와 2.9, 형평성에 대해서는 3.3과 2.9의 응답을 하였다. 즉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외교안보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과 형평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정책의 과정, 즉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낮은 평가를 하였다.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다고 생각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는 2.9, 일반인은 2.7로 응답했으며, 정책 추진과정이 책임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 2.9, 일반인 2.7의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외교안보분야의 특성상 정책에 관한 정보제공과 의견 수렴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러한 특성이 정책과정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133] 외교안보정책 분야 설문 종합평가 결과



정책의 결과를 보여주는 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낮은 평가를 하였다.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 2.8, 일반인은 2.7로 응답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문가 2.9, 일반인 2.7로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교안보분야의 특성상 정책에 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정책 과정의 낮은 투명성과 책임성은 일반 국민의 정책 인지도 및 정책 구조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정책 과정에 대한 평가는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는데, 이는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역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10개의 정책들 간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각 정책에 대한 종합 평균 점수는 3.2에서 2.9 정도의 근소한 편차를 보였다. 모든 평가지표를 종합하여 볼 때,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사처우개선을 위한 병 봉급 인상과 외교부의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최근 군인 처우의 개선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 다자외교 및 국제적 협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의 자주국방력 강화를 방위사업 추진, 통일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병무청의 사회복지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정책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정책 중 방위사업청과 통일부의 정책은 정책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면, 병무청 정책의 경우 정책 과정과 결과에 대한 낮은 평가와 함께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각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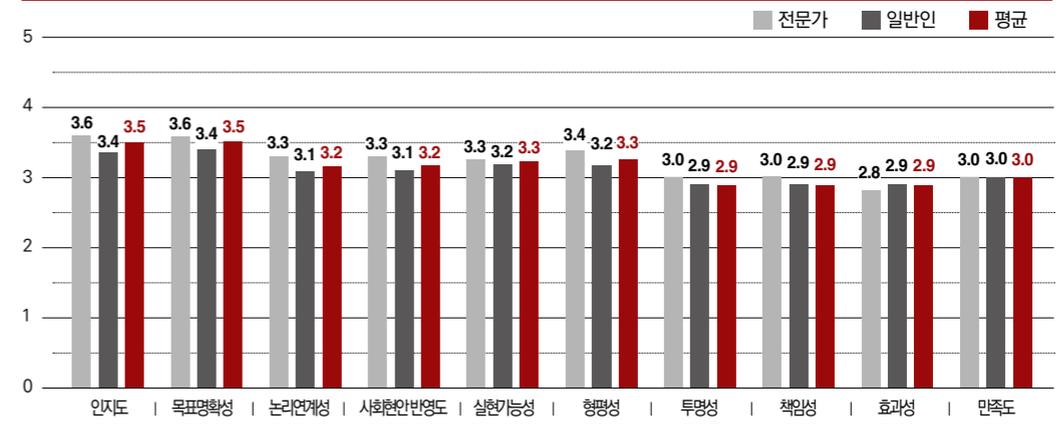
나) 정책별 설문조사 결과

(1) 병사처우개선- 병 봉급 인상(국방부)

국방부의 병 봉급 인상 정책의 경우 정책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설문 결과와 일반인 설문 결과를 종합한 전체 평균점수는 3.5점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된 지

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문항에서는 각각 3.5점과 3.2점의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정책의 내용 영역인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문항에 있어서는 각각 3.2점, 3.3점, 3.3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정책의 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민주성(투명성)과 책무성(책임성) 문항에서는 모두 2.9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이전 문항들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정책의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효과성과 만족도 문항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2.9점, 3.0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종합할 경우, 다른 평가지표보다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이 정책의 추진을 통한 봉급 인상 정도가 실질적으로 병사 처우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할 경우 이들은 대부분의 평가지표 문항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4-134] 병 봉급 인상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병 봉급 인상 정책 목표의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평균은 3.6점, 일반인 점수의 평균은 3.4점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3.5점의 전체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 관련 다른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보다 명확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서 이 정책 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사처우개선을 위한 병 봉급 인상 정책의 목표가 명확한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의 62%, 일반인의 52.1%가 그렇다(어느 정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산한 것)라고 답변했다. 이 정책의 경우 병사처우개선을 위해 병 봉급을 2012년에 대비하여 2017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2배까지 인상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정책 목표 달성시기와 인상액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에서 모두 반수가 넘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 답변은

3.3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은 3.1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이들의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으로, 이 정책이 제시된 목표를 달성할 최선의 방안이나의 질문과 관련하여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에서의 논리적 연계성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정책목표의 명확성의 경우와 비교하여서는 다소 낮은 평가라고 보이는데,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일반인 평가의 경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와 별로 그렇지 않다는 합한 것), 보통이다, 그렇다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인 28.8%, 33.4%, 37.7%로 나타났다. 전문가 평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가 각각 22%, 30%, 4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정책의 목표와 정책대안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보급 인상이 실제 병사처우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경우는 3.3점의 평균을, 일반인 점수의 경우는 3.1점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평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전문가들은 반수가 조금 넘는 54%가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를 긍정하였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42.4%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병사처우개선 정책이 사회현안을 반영한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보급 인상의 수준이 과연 병사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정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에는 3.3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에는 3.2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 보급 인상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함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각각 44%, 48%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이 정책의 경우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보급을 2배 인상하기 위한 예산은 연도별로 편성되어 있으나, 인력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 즉 현재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 보수정책담당관 2명의 책임 하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병사의 수를 감안했을 때 이는 다소 부족하게 평가된다. 또한 예산과 관련하여서도 계속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책의 수치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병사처우개선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이러한 점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병 보급 인상 정책의 형평성을 묻는 항목에 있어서 전문가 평가는 3.4점, 일반인 평가는 3.2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으로,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정책 수혜자와 정책의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정책은 평균적으로 보통수준에 가까운 형평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는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56%의 전문가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일반인의 경우 이보다는 다소 낮은 4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병사들의 처우개선의 문제는 병사 개인을 넘어 그의 가족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며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될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설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다음에서 살펴볼 정책과정의 민주성이 확보되지 못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병 보급 인상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 3.0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 2.9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두 집단 간 평균 점수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았다. 다만 전체 평균점수가 2.9점으로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민주성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 32%, 일반인 설문에서는 29.2%에 그치는 긍정적 답변이 돌아왔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절차들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민주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책임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3.0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는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2.9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민주성과 함께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에게서 민주성에서와 비슷한 낮은 수준인 28% 정도의 긍정적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 이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과 통계청 e-나라지표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외 별도의 내부 모니터링 제도 등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책무성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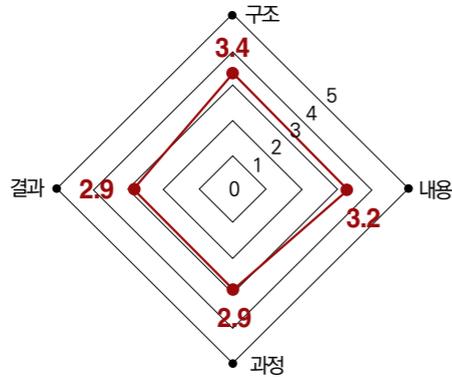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전문가 답변의 경우 2.9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도 2.9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는 평균적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정책의 효과성 또한 정책의 민주성, 책임성과 함께 다른 문항들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의 구체적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각각 26%, 33%만이 정책의 효과에 대해 '그렇

다라는 긍정적인 답을 제시하였다. 이는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이 정도의 봉급 인상이 병사처우개선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이러한 점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된 이 정책의 만족도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가 평균적으로 일치하고 있는데, 각각 3.0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병 봉급 인상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가 확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전문가의 경우 32%, 일반인의 경우 37.4%가 정책 만족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병 봉급의 인상은 병사처우개선에 얼마간 기여함이 분명하고, 정책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책 만족도가 나타날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정도의 봉급 인상에서 실제 병사 처우가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개선될지의 문제가 남으며, 이러한 점이 설문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병 봉급 인상에 대한 정책적 목표나 필요성 등을 포함하는 구조나 내용에 대해서도 다소 높은 평가를 준 반면 정책과정에 대해서는 평가를 높게 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효과성이나 만족도에서 높은 평가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4-135] 병 봉급 인상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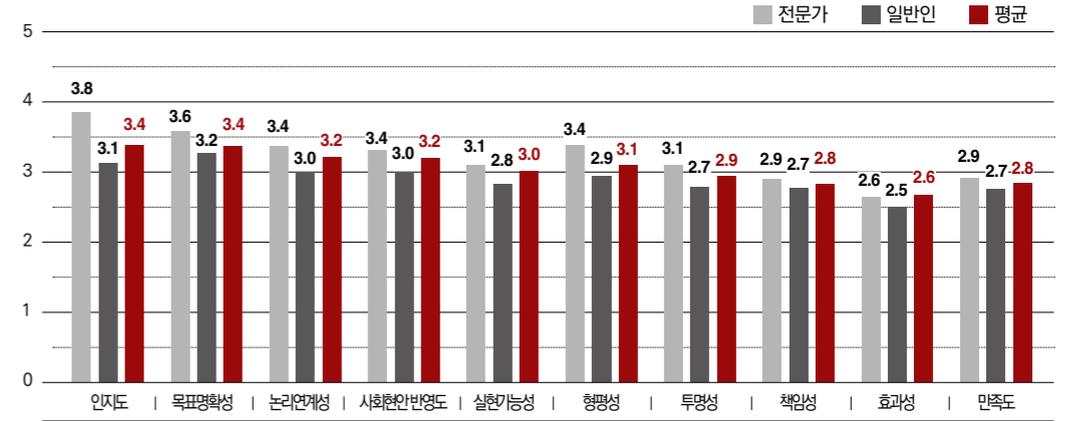


(2) 이산가족문제 해결(통일부)

통일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정책의 경우, 정책 인지도에 관한 문항에 있어서 3.4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된 지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문항에서는 각각 3.4점과 3.2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의 내용 영역인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문항에 있어서는 각각 3.2점, 3.0점, 3.1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의 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민주성(투명성)과 책무성(책임성) 문항에서는 각각 2.9점, 2.8점의 평균점수를, 정책의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효과성과 만족도 문항에서는 각각 2.6점, 2.8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문항 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정책

의 투명성, 책임성에 해당하는 과정 영역과 효과성, 만족도에 해당하는 결과 영역과 관련된 문항에서 다소 낮은 수준의 평가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산가족문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보다는 정치 상황의 변화에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 효과적이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진되었다고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책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이 낮은 투명성 평가의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4-136] 이산가족문제 해결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 정책의 목표의 명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가 답변의 평균점수는 3.6점을 나타내었으나, 일반인 답변의 평균점수는 3.2점을 나타내어 평균적으로 두 집단 간 평가에 다소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전체 평균점수는 3.4점으로, 평균적으로 이 정책의 목표는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명확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인다. 이 정책에 대한 다른 문항들의 평가결과와 비교했을 때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 평가와 일반인 평가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즉 전문가의 60%가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반면, 일반인은 43%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점은 일반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의 인지도 평가에서 전문가의 경우는 70%의 높은 인지도가 나타났지만, 일반인의 경우는 35.8%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도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해 이 정책의 목표와 대안이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 답변의 경우에는 3.4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는 3.0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평균적으로 전문가의 평가점수가 더 높았다. 전체평균은 3.2점으로 이 정책 목표의 명확성 평균점수보다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더 낮은 평균점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답변을 살펴보자면, 전문가의 48%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일반인의 경우 37.5%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실제 이산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설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실제 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고 정책의 정기적·효과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에 있어서 이 정책이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경우는 3.4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의 경우는 3.0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두 집단의 평가에 평균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으로 이 정책에 대해 보통수준에서의 사회현안 반영도가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에도, 전문가의 5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지만, 일반인의 경우 33.6%만이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 등이 일반 국민 차원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에는 3.1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의 경우에는 2.8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전체평균은 3.0점으로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의 실현가능성이 인정되고는 있으나, 일반인의 평가가 전문가의 평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의 36%에 비해, 일반인의 경우 26.3%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는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이 통일부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의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 증대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산의 부족 역시 낮은 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남북관계의 특성상 정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 역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의 형평성 평가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3.5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전체평균은 3.1점이지만, 이 문항에서의 두 집단 간 평가의 차이는 다른 문항들에 대한 평가에서보다 컸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에도, 전문가의 48%가 정책의 형평성을 긍정한 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30%만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이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산가족과 전문가 차원에서만 보장되고 일반 국민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 추진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답변은 3.1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의 답변은 2.7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2.9점이라는 다

소 낮은 수준의 전체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인이 전문가에 비하여 투명성 측면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이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에도 전문가의 40%가 정책의 형평성을 긍정한 반면, 일반인의 경우 23.5%만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이산가족과 전문가 차원에서만 보장되고, 일반 국민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한 점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집행이 책임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답변은 2.9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의 점수는 2.7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두 집단 모두 평균적으로 책임성 문항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24%, 22.3%가 긍정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실제 통일부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통하여 관련 자료의 관리 및 교류에 대한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선요구사항 등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책의 환류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지도, 내부 모니터링 제도의 부재 등이 낮은 책무성 평가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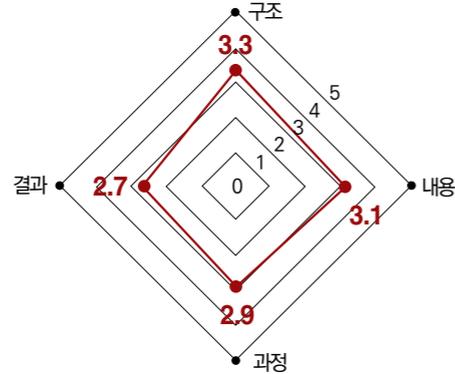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이 본래 기대되었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답변은 2.6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의 답변은 2.5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다른 문항들에 비해 이 문항에 대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전체 평균점수는 2.6점으로 이 정책의 효과성에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에서 각각 24%, 18.8%에 그치는 긍정적 답변이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남북관계의 특성상 정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어렵고 따라서 정책의 효과성 역시 낮을 것이라는 인식 역시 정책의 효과성을 낮게 평가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함에 있어, 전문가 집단은 평균적으로 2.9점에 해당하는 수준의 만족도를, 일반인 집단은 평균적으로 2.7점에 해당하는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평균점수는 2.8점으로 이 정책에 대해 두 집단 모두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20%, 일반인의 경우 23.3%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실제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 실시, 그 외 새로운 정책대안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이 설문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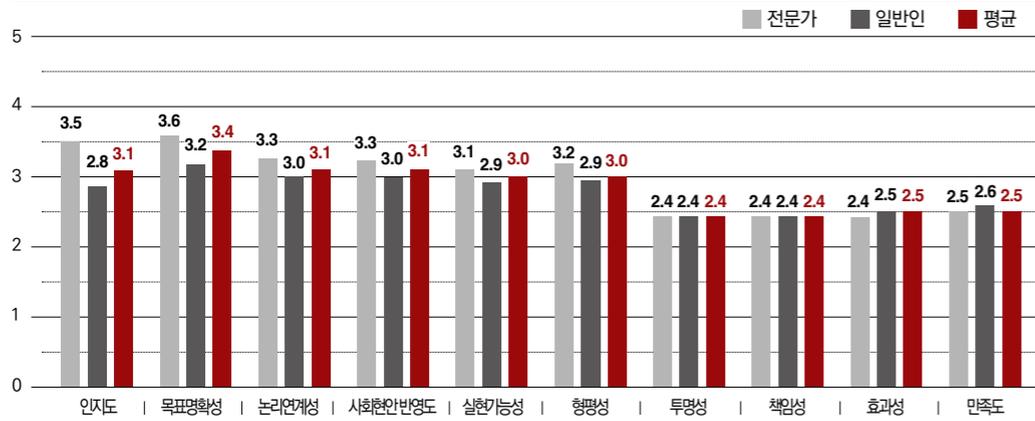
[그림 4-137] 이산가족문제 해결 설문조사 결과



(3)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의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정책의 경우, 정책 인지도에 관한 문항에 있어서 3.1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된 지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문항에서는 각각 3.4점과 3.1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의 내용 영역인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문항에 있어서는 각각 3.1점, 3.0점,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민주성(투명성)과 책무성(책임성) 문항에서는 모두 2.4점의 평균점수를, 정책의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효과성과 만족도 문항에서는 모두 2.5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책 또한 통일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정책과 같이 과정 영역과 결과 영역에 관련된 문항들에서 특히 부정적인 평가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 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절차가 다수 시행되고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방산비리는 이러한 절차와 시스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여 낮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제 이 정책의 추진을 통해 자주국방력이 강화되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고 관련 비리 등으로 인해 효과성과 만족도가 높지 않게 평가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림 4-138]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3.6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의 평가는 3.2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는 3.4점으로 이 정책에 대한 다른 문항들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평가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전문가의 64%, 일반인의 47.5%가 그렇다고 답하여 두 집단 모두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 정책은 방위산업 육성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자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비교하여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다수 불명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대안이 목표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3.3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의 평가는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일반인 집단이 이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을 더욱 낮게 평가하였다. 이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는 3.1점으로 목표의 명확성에 비하여 0.3점의 차이로 다소 낮은 수준의 평가점수를 부여받았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의 48%, 일반인의 34.2%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이 정책의 대안들로 구체적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것은, 최근의 방산관련 비리 등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평균점수 3.3점, 일반인 집단은 평균점수 3.0점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전문가 집단이 일반인 집단에 비하여 사회현안 반영도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전체 평균점수 3.1점 수준이었다.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46%가 사회현안 반영도를 긍정하였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3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이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고 사회현안을 반영한 정책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고(28%) 정책의 투명성 역시 매우 낮게 평가된 것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즉 정책의 특성상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의 추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한 다음 문항인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평균점수가 3.1점, 일반인 평가의 평균점수가 2.9점으로서 전문가 평균점수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3.0점으로서 평균적으로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보통 수준의 평가가 주어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자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각각 38%, 31%만이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실제 이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담당 인력은 실제 추진인력(약 160명)과 업무지원인력(약 1,500명)을 포함하여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은 꾸준히 상승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예산 측면의 낮은 실현 가능성과 방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낮은 효과성과 만족도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평가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된 정책의 수혜 대상과 목표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평가가 3.2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의 평가가 2.9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 또한 상기한 실현가능성에서와 마찬가지로 3.0점으로, 동일한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전문가와 일반인의 각각 38%, 32.7%가 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는 이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고(28%) 정책의 투명성 역시 매우 낮게 평가된 것과 관련된다고 하겠다. 즉 이 정책이 국가 안보와 국민 전체의 안전에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 특성상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의 추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형평성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먼저 민주성에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 모두 다른 문항들에 비하여 가장 낮은 점수의 평가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평가의 평균점수는 2.4점, 일반인 평가의 점수도 2.4점으로, 이로써 전체 평균점수 또한 2.4점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문항들에서 전문가 평가의 평균점수가 일반인 평가의 평균점수보다 높았던 것에 비하여 이 문항에서는 두 집단 모두 똑같은 수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 12%, 일반인 설문에서는 15.3%에 그치는 긍정적 답변이 돌아왔다. 정책과정에서 방산업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는 수회 이루어졌으나, 정책 특성상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의 추진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이 민주성과 투명성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두 번째 문항인 책무성에 있어서도, 상기한 민주성과 동일한 평가 결과가 나타났다. 전문가 평가의 평균점수, 일반인 평가 점수, 전체 평균점수 모두 2.4점으로, 전문가 평가와 일반인 평가가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결과에 비추었을 때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정책은 다른 영역들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의 과정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체 평균점수는 외교안보 분야에 속한 10개의 정책들과 비교하였을 때도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에서 8%의 전문가와 15.3%의 일반인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보안을 이유로 한 방위사업의 폐

쇄적 추진은 그동안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에 옴부즈만 제도, 상시 모니터링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비리 적발로 인해 정책의 책임성이 매우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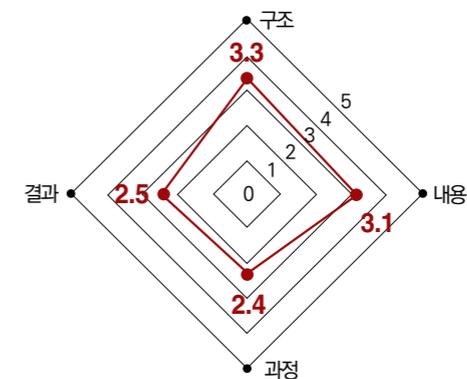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먼저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전문가 평가점수와 일반인 평가점수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전문가 평가의 평균점수는 2.4점, 일반인평가의 평균점수는 2.5점으로,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5점을 나타내고 있다. 정책의 과정 영역에서의 평가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과정 영역에서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답변에서 전문가의 8%와 일반인의 17.6%만이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제 수치로 나타나는 바에 따르면 방산수출액의 증대로 인한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되고 있으나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은 제자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낮은 효과성 평가의 주된 원인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비리 문제에 있다고 평가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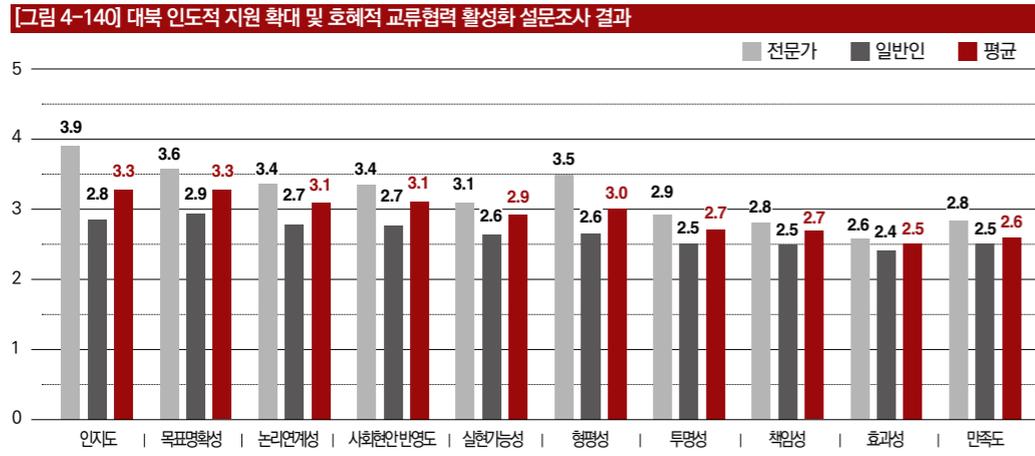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2.5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은 2.6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점수는 2.5점으로 정책 만족도에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방위사업 추진 정책은 정책의 과정 영역뿐만 아니라 결과 영역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10%, 일반인의 경우 19.8%가 이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고질적인 군납비리의 고리를 끊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2006년 신설되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착화된 비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폐지론이 거론될 만큼 현재 최대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 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실정임이 자명하다.

[그림 4-139]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설문조사 결과



(4)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통일부)

통일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의 경우 정책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설문 결과와 일반인 설문 결과를 종합한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된 지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문항에서는 각각 3.3점과 3.1점의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정책의 내용 영역인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문항에 있어서는 각각 3.1점, 2.9점,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정책의 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민주성(투명성)과 책무성(책임성) 문항에서는 모두 2.7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이전 문항들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정책의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효과성과 만족도 문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2.5점, 2.6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문항 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에 해당하는 과정 영역과 효과성, 만족도에 해당하는 결과 영역과 관련된 문항에서 다소 낮은 수준의 평가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국민들이 경제협력의 중단과 천안함 사태와 같은 일련의 대남도발 사건 등으로 북한에 대해 증가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책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이 투명성 평가가 낮은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할 경우 이들은 대부분의 평가지표 문항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목표의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평균은 3.6점, 일반인 점수의 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으로 이 정책에 대한 다른 문항들의 평균점수에 비하여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평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68%, 일반인의 33%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 정책의 경우 민족동질성 회복과 경제협력 사업자들의 고통 및 애로사항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비교하여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대안이 목표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3.4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의 평가는 2.7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일반인 집단이 더 낮은 수준의 점수로 논리적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이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는 3.1점으로 목표의 명확성에 비하여 0.2점의 차이로 다소 낮은 수준의 평가점수를 부여 받았다. 구체적인 평가 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의 58%, 일반인의 25.1%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이 정책의 대안들에 대해 일반인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것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책대안들이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경우는 3.4점의 평균을, 일반인 점수의 경우는 2.7점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3.1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평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전문가들은 60%, 일반인의 경우에는 24.5%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 잇따른 도발 행위가 국민들의 대북인식 외에도 대북 지원이나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에는 3.1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에는 2.6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점수는 2.9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정책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함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각각 44%, 22%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이 정책의 경우 인력과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1000여 곳이 넘는 경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의결된 금액이 약 200억 원에 불과하는 등 예산이 부족한 문제(박희준, 2014)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의 형평성 평가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3.5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 2.6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전체평균 점수는 3.0점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의 두 집단 간 평가의 차이는 다른 문항들에 대한 평가에서보다 컸다. 구체적인 평가 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각각 56%, 19.8%가 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는 이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험 기업과 같은 관련 사업자나 단체와 전문가 차원에서만 보장되고 일반 국민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 2.9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 2.5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다만 전체 평균점수가 2.7점으로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민주성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 26%, 일반인 설문에서는 14%가 이 정책의 민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절차들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민주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책임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2.8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는 2.5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2.7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민주성과 함께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24%, 14.5%가 긍정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현재 통일부 홈페이지 현황·정보공개란 등이 제공하는 지표에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외 별도의 내부 모니터링 제도 등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책무성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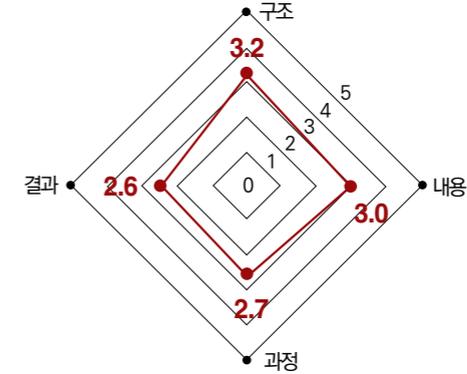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먼저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전문가 평가점수와 일반인 평가점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문가 평가의 평균점수는 2.6점, 일반인평가의 평균점수는 2.4점으로,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5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과정 영역에서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에서 전문가의 18%와 일반인의 13%만이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제 이 정책으로 인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존재하지만, 국민들이 점점 민족동질성의 회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2.8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은 2.5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점수는 2.6점으로 정책 만족도에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26%, 일반인의 경우 15.1%가 이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을 지속해나가는 것으로, 현재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며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많아졌다. 또한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교류협력이 낮은 순위를 유지하는 것도 위의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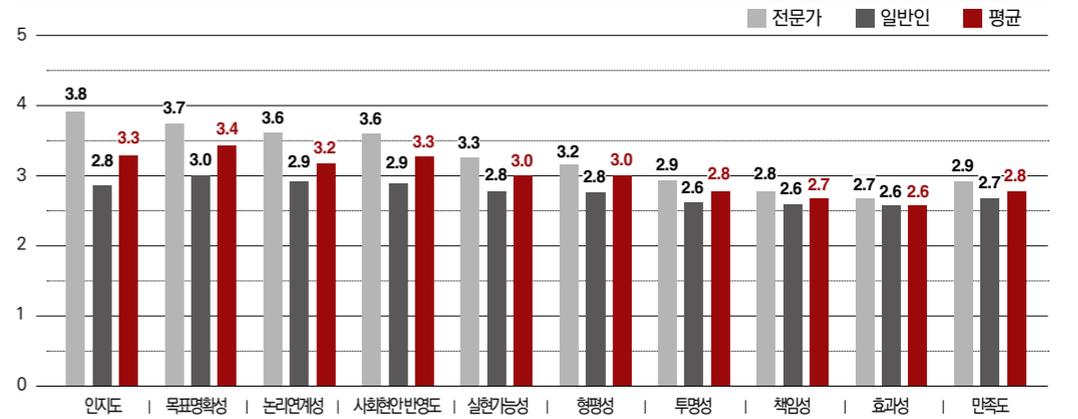
[그림 4-14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설문조사 결과



(5)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통일부)

통일부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정책의 경우 정책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설문 결과와 일반인 설문 결과를 종합한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된 지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문항에서는 각각 3.4점과 3.2점의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정책의 내용 영역인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문항에 있어서는 각각 3.3점, 3.0점,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정책의 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민주성(투명성)과 책무성(책임성) 문항에서는 각각 2.8점과 2.7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이전 문항들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정책의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효과성과 만족도 문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2.6점, 2.8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종합할 경우, 다른 평가지표보다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이 정책의 추진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의견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할 경우 이들은 대부분의 평가지표 문항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4-142]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목표의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평균은 3.7점, 일반인 점수의 평균은 3.0점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3.4점의 전체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과 관련된 다른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보다 명확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74%, 일반인의 36.2%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 정책은 개성공단 내의 제도를 개선하고, 당국간 협의기구를 상설화·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비교하여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대안이 목표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3.6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의 평가는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일반인 집단이 더 낮은 수준의 점수로 논리적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이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으로 목표의 명확성에 비하여 0.2점의 차이로 다소 낮은 수준의 평가점수를 부여 받았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의 64%, 일반인의 30.7%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이 정책의 대안들에 대해 일반인 평가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제도개선과 협의기구의 상설화·제도화를 위한 정책대안들이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경우는 3.6점의 평균을, 일반인 점수의 경우는 2.9점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평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전문가들은 66%, 일반인의 경우에는 30.7%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인식은 충분히 반영되었으나,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에는 3.3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에는 2.8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점수는 3.0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성공단의 제도개선과 협의기구 상설화·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함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각각 46%, 26.6%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이 정책의 경우 인력과 인프라의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아직도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지 않고 있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의 형평성 평가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3.2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 2.8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전체평균 점수는 3.0점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의 두 집단 간 평가의 차이는 다른 문항들에 대한 평가에서보다 컸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각각 40%, 26.1%가 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는 이 정책의 수혜자가 개성공단 내 입주해 있는 기업과 개성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기업, 외국계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은 관련 사업자나 단체와 전문가 차원에서만 보장되고 일반 국민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 2.9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 2.6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다만 전체 평균점수가 2.8점으로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민주성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 30%, 일반인 설문에서는 19.3%가 이 정책의 민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절차들을 통해 입주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지만,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민주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책임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2.8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는 2.6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2.7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민주성과 함께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20%, 20.9%가 긍정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은 별도의 내부 모니터링 제도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개선 및 환류에 의한 수정 조치가 미흡하여 책무성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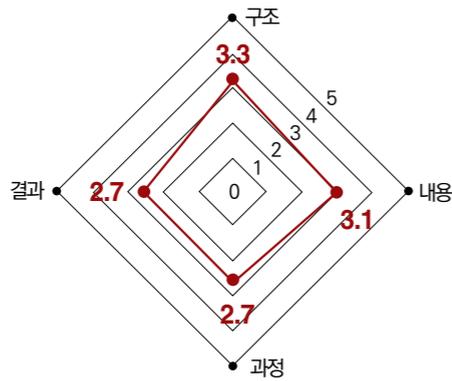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먼저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전문가 평가점수와 일반인 평가점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문가 평가의 평균점수는 2.7점, 일반인평가의 평균점수는 2.6점으로,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6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과정 영역에서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에서 전문가의 22%와 일반인의 21.4%만이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실제 이 정책은 법률이나 합의서와 같은 부분은 성과를 보였으나, 아직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2.9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은 2.7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점수는 2.8점으로 정책 만족도에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32%, 일반인의 경우 23.6%가 이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성공단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국제화와 관련된 가시적인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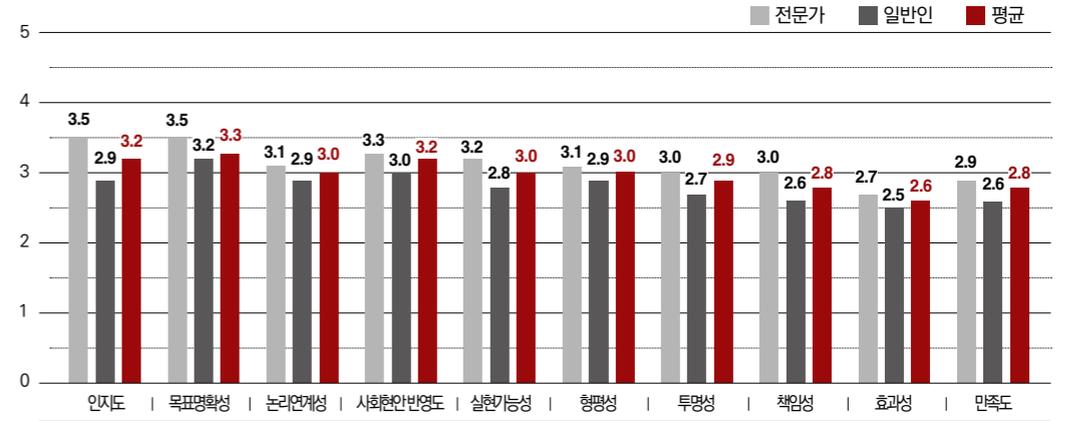
[그림 4-143]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설문조사 결과



(6)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외교부)

외교부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정책의 경우, 정책 인지도에 관한 문항에 있어서 3.2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된 지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문항에서는 각각 3.3점과 3.0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의 내용 영역인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문항에 있어서는 각각 3.2점, 3.0점,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의 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민주성(투명성)과 책무성(책임성) 문항에서는 각각 2.9점, 2.8점의 평균점수를, 정책의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효과성과 만족도 문항에서는 각각 2.6점, 2.8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 또한 다른 문항들에 비하여 과정 영역과 결과 영역에 관련된 문항들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정책의 특성상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정책의 환류 시스템도 외교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또한 한일관계의 개선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144]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적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 목표의 명확성 부분은 전문가의 평가에 있어서 3.5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의 평가에 있어서 3.2점의 평균점수를 얻어 전체평균 3.3점을 나타내었다. 평균적으로 보통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평가를 받은 명확성 문항은 다른 문항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58%, 일반인의 46.5%가 이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적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목표와 대안 간 논리적 연계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평균점수 3.1점, 일반인 집단은 평균점수 2.9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들보다 일반인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이었다. 전체 평균점수는 3.0점으로 대안이 목표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점수평가는 앞선 목표의 명확성에 대한 평가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설문문의 경우 36%, 일반인 설문문의 경우 34.78%가 이 정책대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의 구체적 대안들은 외교장관 회담 및 외교차관 협의, 정상회담 등을 통한 외교 추진과 독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관련한 대응 등인데, 이러한 대안들이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적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평균적으로 3.3점을, 일반인 집단은 3.0점을 부여하였다. 역시 일반인 집단의 평가점수가 전문가 집단의 평가점수보다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으로 내용적 영역에 관한 다른 문항들, 즉 실현가능성과 형평성 문항들에 관한 점수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의 48%, 일반인의 37.7%가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아베 내각의 부적절한 역사인식이 대두되며 한일관계가 계속하여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

면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질적 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이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적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은 3.2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은 2.8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일반인의 평가점수가 전문가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전체평균은 3.0점으로 앞선 실현가능성 문항에서의 전체평균보다 0.2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38%, 일반인의 28.5%가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 정책의 추진 인력은 직접적으로는 외교부 동북아과의 14명인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인력이 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예산 측면에서도 2014년 기준 53억 9,300억이 편성되어 있다. 즉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정책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낮았다는 점이 조사 결과 비교적 낮은 점수를 얻은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겠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적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형평성에 관해서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평균점수 3.1점, 일반인 집단으로부터 평균점수 2.9점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일반인 집단이 전문가집단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차이는 0.2점으로 정책의 내용적 영역에 관한 앞선 두 문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36%, 일반인의 31%가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이는 전체 국민의 역사인식, 한일관계에 대한 신뢰회복에 관련되며, 이 외 경제, 문화 등의 호혜적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한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 집단은 3.0점을, 일반인은 2.7점을 평균점수로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2.9점이라는 다소 낮은 전체 평균점수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책과정의 투명성에 관하여 평균적으로 보통수준보다 낮다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의 민주성에 대하여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34%, 23.2%의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의견수렴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 국민 차원의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점이 정책의 민주성이 낮게 평가되는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한 다른 문항으로서, 정책과정이 책임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은 투명성과 같은 점수인 3.0점을 평균점수로, 일반인 집단은 투명성보다 낮

은 점수인 2.9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2.8점으로 투명성 문항의 경우보다 책임성 문항의 경우가 낮은 평균점수를 획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의 책무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일반인은 각각 34%, 20.8%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즉 일반인 평가에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 정책의 경우 국가별 상시모니터링, 전문가 의견수렴, 자체 평가 등을 통한 책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국민 차원의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평가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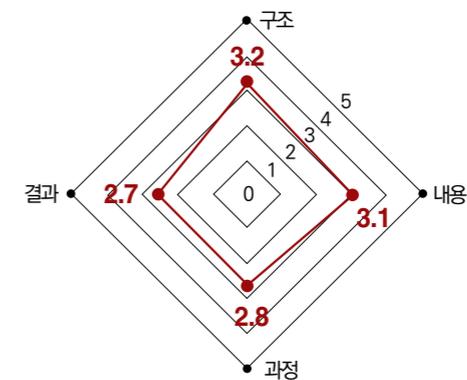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과 일반인 집단 모두 다른 문항들에 대한 평균점수들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부여하였다. 전문가의 평가는 2.7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의 평가는 2.5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2.6점이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18%, 일반인의 18.7%만이 이 정책이 효과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렇다는 답변을 했다. 그동안 실제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과 교류가 계속하여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이러한 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 결과는 2.9점으로, 일반인 집단의 평가 결과는 2.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점수는 2.8점으로, 평균적으로 두 집단 모두에게서 이 정책에 대하여 보통 수준 이하의 만족도가 확인되었다. 앞서 설명한 정책의 효과성 결과와 종합했을 때, 이 정책은 결과적 영역에 있어서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20%, 일반인의 경우 22.8%만이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한일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정책의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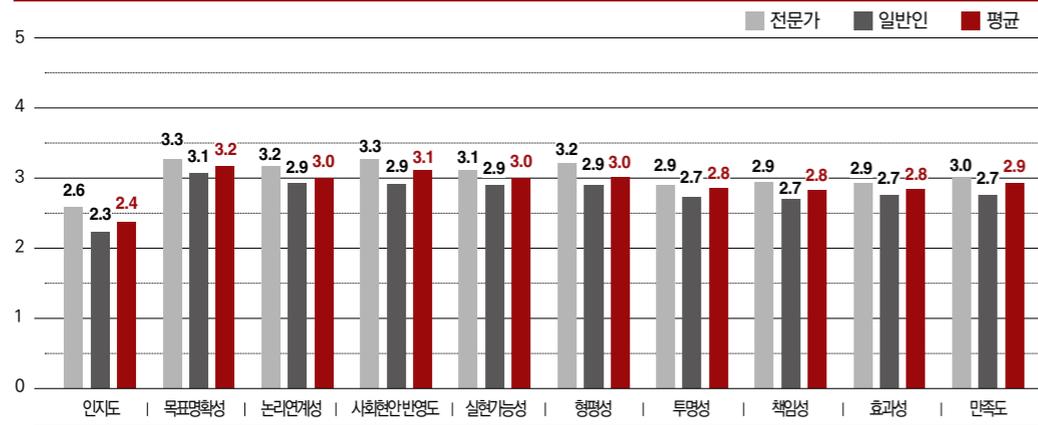
[그림 4-145]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설문조사 결과



(7) 사회복지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병무청)

병무청의 사회복지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정책의 경우, 정책 인지도에 관한 문항에 있어서 2.4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같은 분야 다른 정책들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된 지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문항에서는 각각 3.2점과 3.0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의 내용 영역인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문항에 있어서는 각각 3.1점, 3.0점,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정책의 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민주성(투명성)과 책무성(책임성) 문항에서는 모두 2.8점의 평균점수를, 정책의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효과성과 만족도 문항에서는 2.8점, 2.9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 또한 다른 문항들에 비하여 과정 영역과 결과 영역에 관련된 문항들에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이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낮은 인지도와 이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수혜적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림 4-146] 사회복지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목표의 명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평가는 3.3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는 3.1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고,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이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46%, 일반인의 37.5%가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 내용은 비교적 명확하고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반인 조사에서 목표의 명확성에 대해 높은 수준의 평가 결과를 얻지 못한 원인은 정책과정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과 홍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이라는 구체적 대안이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는 3.2점의 평균점수, 일

반인의 평가는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고, 전체 평균점수는 3.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38%, 일반인의 30.4%가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 정책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보험료 지급 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되어 왔던 사회복지요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책과정에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홍보, 의견수렴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이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는 3.3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의 평가는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고, 전체 평균점수는 3.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보다 일반인의 경우가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하여 낮은 수준으로 평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40%의 긍정적 답변을 하였지만, 일반인의 경우 28.6%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동안의 지원책이 현역병에게만 치중된 점에 대해 계속된 지적이 있어 왔고, 따라서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지원은 사회현안을 반영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반인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계속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 차원의 정책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이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평가는 3.1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의 평가는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전체 평균점수는 3.0점으로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의 실현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와 일반인의 각각 24%, 29.5%가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즉 정책의 실현가능성 역시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책 추진을 담당하는 부처의 의견은 인력과 예산 모두 정책 수행에 충분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정책수행과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3명의 인력과 39억의 예산은 충분한 정책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의 평가는 3.2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의 평가는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전체 평균점수는 3.0점으로 같은 영역인 실현가능성의 평균점수와 같이 보통 수준의 형평성이 인정되고 있다. 전문가의 40%, 일반인의 경우 이보다는 다소 낮은 31.5%가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사회복지요원이지만 현역병과의 그동안의 차등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인 조사에서 비교적 낮은 결과가 나온 것은 계속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의 평가는 2.9점의 평균 점수를, 일반인의 평가는 2.7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전체 평균점수는 2.8점으로 다소 낮은 수준의 평가점수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답변을 살펴보자면, 전문가 설문에서 24%, 일반인 설문에서는 19.2%에 그치는 긍정적 답변이 돌아왔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수혜자만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이해관계인도 없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전혀 의견수렴절차가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결국 정책의 민주성이 낮게 평가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다른 측면인 정책 과정의 책임성에 대한 평가에서 전문가의 평가는 2.9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의 평가는 2.7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이는 투명성에서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전체 평균점수 또한 투명성에서와 같은 2.8점을 나타내어 다소 낮은 수준의 평가점수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정책의 과정 영역에 있어서 이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의 책무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경우 22%, 일반인의 경우 19.8% 정도만이 긍정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의 사전 공개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이다.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나 책무성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정책의 환류가 보장되는 시스템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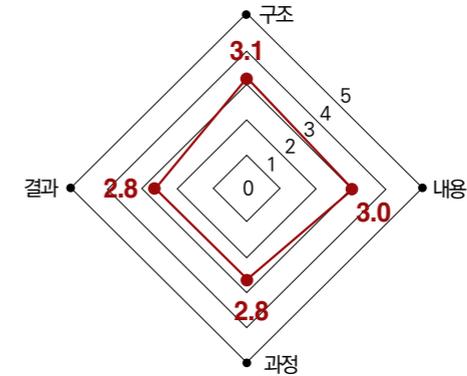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함에 있어 전문가 평가의 경우 2.9점의 평균 점수를, 일반인평가의 경우 2.7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점수 2.8점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효과성 측면에서도 이 정책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에서 각각 28%, 22.4%의 그렇다라는 답변이 나타나는데 그쳤다. 실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총 25억 원 원의 건강보험료가 총 136,322명에게 지급되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요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면제 처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정책이 용이하게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이 낮다고 평가된 이유는, 이 정책에 대한 관심과 그 효과성을 체감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의 만족도에 있어서 전문가의 평가는 평균점수 3.0점, 일반인의 평가는 평균점수 2.7점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평균점수는 2.9점으로,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의 경우에는 32%, 일반인의 경우에는 22.7%가 이 정책의 만족도에 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특히 일반인 설문조사에서 정책의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이유는, 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 및 그에 대한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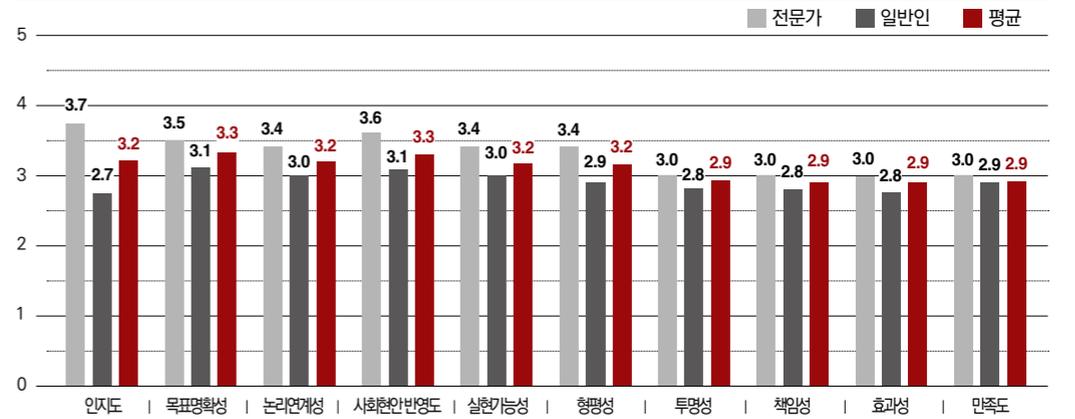
[그림 4-147] 사회복지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설문조사 결과



(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외교부)

외교부의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정책의 경우 정책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설문 결과와 일반인 설문 결과를 종합한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된 지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문항에서는 각각 3.3점과 3.2점의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정책의 내용 영역인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문항에 있어서는 각각 3.3점, 3.2점, 3.2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정책의 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민주성(투명성)과 책무성(책임성) 문항에서는 모두 2.9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이전 문항들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정책의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효과성과 만족도 문항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2.9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종합할 경우, 다른 평가지표보다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실제 이 정책의 추진을 통해 양국의 관계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다. 한편,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할 경우 이들은 대부분의 평가지표 문항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4-14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목표의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평균은 3.5점, 일반인 점수의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3.3점의 전체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 관련 다른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보다 명확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60%, 일반인의 37.5%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 정책은 한중간 전략적 소통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정치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지속·강화하며, 인문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비교하여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대안이 목표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3.4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의 평가는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일반인 집단이 더 낮은 수준의 점수로 논리적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이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으로,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의 58%, 일반인의 32.4%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급·고위급 회담의 개최로 인한 결과가 양국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기 어려운 문제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경우는 3.6점의 평균을, 일반인 점수의 경우는 3.1점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수는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평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전문가들은 64%, 일반인의 경우에는 38.7%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가 점점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거의 없는 점이 부정적 평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에는 3.4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에는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함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의 수준이 보통인 편에 속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각각 54%, 34.1%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이는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지속적으로 개최되며, 교류가 활발하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적다는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의 형평성 평가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3.4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전체평균 점수는 3.2점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에서의 두 집단 간 평가의 차이는 다른 문항들에 대한 평가에서보다 컸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각각 52%, 28.3%가 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보통 수준의 점수를 부여받았지만, 일반인의 답변에서 비교적 낮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이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일반 국민 차원에서 확보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 3.0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 2.8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다만 전체 평균점수가 2.9점으로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민주성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 28%, 일반인 설문에서는 22.4%가 이 정책의 민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거의 없고, 일반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민주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책임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3.0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는 2.8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2.9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민주성과 함께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30%, 25.2%가 긍정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은 별도의 내부 모니터링 제도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문제점의 발굴과 이를 해결할 실적이 미흡하여 책무성에 대해 높은 평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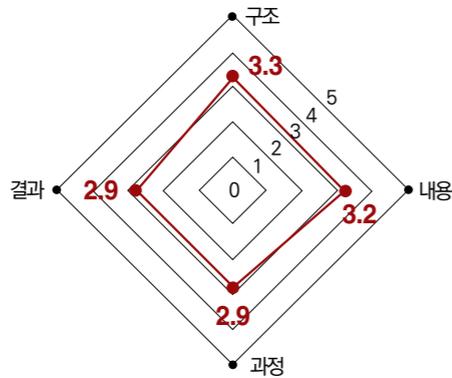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먼저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전문가 평가점수와 일반인 평가점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문가 평가의 평균점수는 3.0점, 일반인평가의 평균점수는 2.8점으로,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9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과정 영역에서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에서 전문가의 32%와 일반인의 27.1%가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3.0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은 2.9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점수는 2.9점으로 정책 만족도에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34%, 일반인의 경우 25.6%가 이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일반인 설문조사에서 정책의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 이유는, 이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부족 및 그에 대한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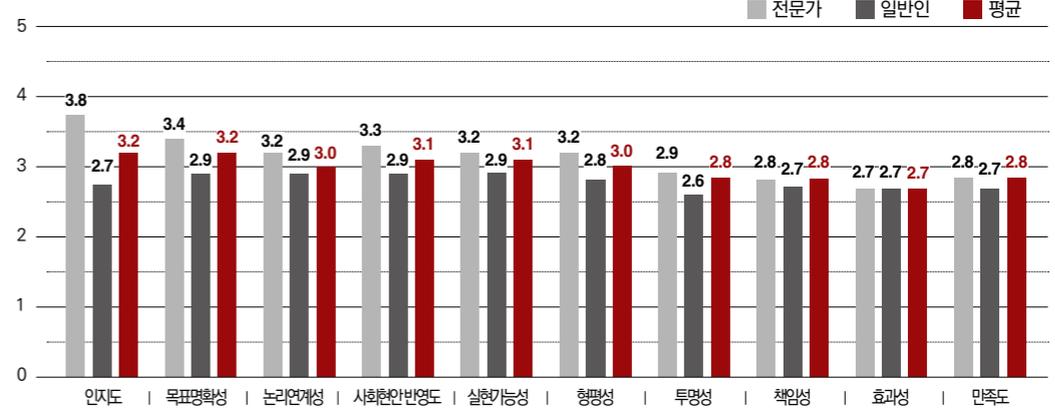
[그림 4-149]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정책 설문조사 결과



(9)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외교부)

외교부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정책의 경우 정책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설문 결과와 일반인 설문 결과를 종합한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된 지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문항에서는 각각 3.2점과 3.0점의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정책의 내용 영역인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문항에 있어서는 각각 3.1점, 3.1점,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정책의 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민주성(투명성)과 책무성(책임성) 문항에서는 모두 2.8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이전 문항들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정책의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효과성과 만족도 문항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2.7점, 2.8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종합할 경우, 다른 평가지표보다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정책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실제 이 정책의 추진을 통해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얼마나 심화·발전되었는지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할 경우 이들은 대부분의 평가지표 문항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4-150]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설문조사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목표의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평균은 3.4점, 일반인 점수의 평균은 2.9점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3.2점의 전체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 관련 다른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보다 명확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52%, 일반인의 31.5%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 정책은 전통적 한·미 안보협력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 일치 및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비교하여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대안이 목표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3.4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의 평가는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일반인 집단이 더 낮은 수준의 점수로 논리적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이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는 3.2점으로,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의 48%, 일반인의 29.1%가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급·고위급 회담의 개최로 인한 결과가 양국 관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가시적으로 알기 어려운 문제가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경우는 3.3점의 평균을, 일반인 점수의 경우는 2.9점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3.1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수는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평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전문가들은 54%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29.1%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일련의 도발적 언사와 같은 긴장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에는 3.2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에는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점수는 3.1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함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의 수준이 보통인 편에 속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각각 46%, 29.2%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이 정책의 추진 인력은 직접적으로는 외교부 북미1과, 북미2, 한미안보협력과 등의 14명인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인력이 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예산 측면에서도 2014년 기준 27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의 대부분이 동맹기반 강화사업에 편성되어 있다(외교부 동북아 2·3과, 2014). 즉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정책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기 보다는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낮았다는 점이 조사 결과 비교적 낮은 점수를 얻은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겠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의 형평성 평가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3.2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 2.8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전체평균 점수는 3.0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각각 42%, 23.4%가 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보통 수준의 점수를 부여받았지만, 경제, 안보 등의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정책과정에 국민이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 2.9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 2.6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또한, 전체 평균점수가 2.8점으로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민주성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 26%, 일반인 설문에서는 17.4%가 이 정책의 민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회의 또는 세미나 등이 존재하지만,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민주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임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책임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2.8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는 2.7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2.8점 수

준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민주성과 함께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24%, 20.8%가 긍정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은 별도의 내부 모니터링 제도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의 입안이나 이행과정 등에 대한 자료가 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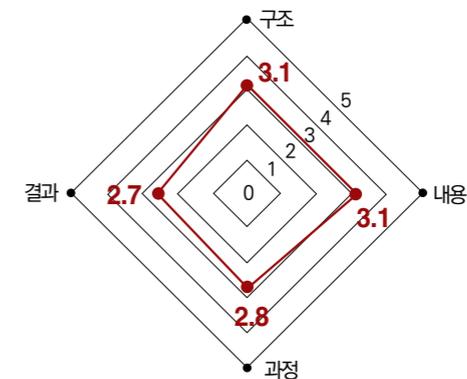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먼저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전문가 평가점수와 일반인 평가점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문가 평가의 평균점수와 일반인 평가의 평균점수는 모두 2.7점으로,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2.7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과정 영역에서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에서 전문가의 20%와 일반인의 23.1%가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결과는 한미 동맹의 핵심인 안보를 위협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상대적으로 한중 FTA 등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성과가 비교적 명확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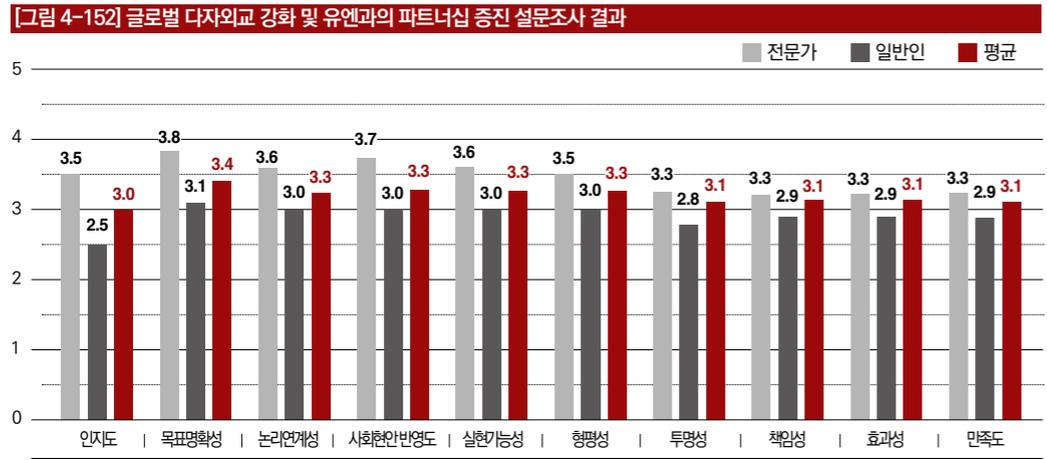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2.8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은 2.7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점수는 2.8점으로 정책 만족도에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24%, 일반인의 경우 20.5%가 이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정상급·고위급 회담이 수차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양국 관계가 진전되었음을 알기 어려운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림 4-151]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 설문조사 결과



(10)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외교부)

외교부의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정책의 경우 정책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전문가 설문 결과와 일반인 설문 결과를 종합한 전체 평균점수는 3.0점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된 지표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문항에서는 각각 3.4점과 3.3점의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정책의 내용 영역인 사회현안 반영도, 실현가능성, 형평성 문항에 있어서는 모두 3.3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정책의 과정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민주성(투명성)과 책무성(책임성) 문항에서는 모두 3.1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이전 문항들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정책의 결과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인 효과성과 만족도 문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3.1점의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 종합할 경우, 다른 평가지표보다 정책의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아직 많은 국민들이 글로벌 다자외교라는 용어에 익숙하지 않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할 경우 이들은 대부분의 평가지표 문항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목표의 명확성을 묻는 문항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평균은 3.8점, 일반인 점수의 평균은 3.1점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3.4점의 전체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정책 관련 다른 문항에서의 평균점수보다 명확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평가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74%, 일반인의 35%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이 정책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및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전문가와 비교하여 일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목표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구조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대안이 목표와 얼마나 논리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의 평가는 3.6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의 평가는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일반인 집단이 더 낮은 수준의 점수로 논리적 연계성을 평가하였다. 이 문항의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으로,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의 64%, 일반인의 33.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이 해외순방과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루어낸 성과 등이 다른 정책에 비해 언론을 통해 잘 홍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점수의 경우는 3.7점의 평균을, 일반인 점수의 경우는 3.0점의 평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점수는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평가 답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전문가들은 64%가, 일반인의 경우에는 33.8%가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는 일반인들도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고,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등의 국제기구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에는 3.6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에는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어, 전체 평균점수는 3.3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제도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가늠함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의 평가점수의 수준이 보통인 편에 속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각각 62%, 34.3%의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 이 정책의 추진 인력은 직접적으로는 국제기구국의 12명인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인력이 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 예산 측면에서도 2014년 기준 1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의 대부분이 국제회의 개최 또는 참여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되었다(외교부 유엔과, 2014). 즉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정책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정책의 목표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정책의 내용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의 형평성 평가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3.5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 3.0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전체평균 점수는 3.3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각각 56%, 31.5%가 이 정책의 형평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보통 수준의 점수를 부여받았지만, 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낮게 나

타난 것은, 나라의 위상과 관련된 부분은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의 경우 3.3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평가의 경우 2.8점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또한, 전체 평균점수가 3.1점으로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민주성 부분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답변을 살펴볼 경우, 전문가 설문에서 46%, 일반인 설문에서는 24.1%가 이 정책의 민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문회의 또는 세미나 등도 존재하지 않고, 일반 국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민주성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정책의 과정 영역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책무성에 관한 질문에 있어 전문가 답변의 경우 3.3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답변의 경우에는 2.9점의 평균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평균은 3.1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민주성과 함께 다른 문항들의 평가점수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책무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여부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을 살펴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의 40%, 25.1%가 긍정적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은 별도의 내부 모니터링 제도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과정에 대한 자료가 세부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거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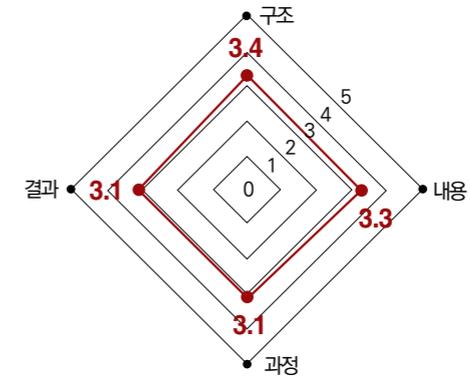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먼저 정책이 기대한 효과를 성취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전문가 평가점수와 일반인 평가점수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문가 평가의 평균점수는 3.3점, 일반인평가의 평균점수는 모두 2.9점으로, 전체적인 평균점수는 3.1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과정 영역에서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답변에서 전문가의 42%와 일반인의 26.3%가 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통령이 유엔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고, 다양한 지역을 순방하는 등 결과가 가시적으로 잘 드러난 측면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정책의 결과 영역과 관련하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은 3.3점의 평균점수를, 일반인 집단은 2.9점의 평균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점수는 3.1

점으로 정책 만족도에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경우 46%, 일반인의 경우 25.2%가 이 정책의 만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전문가의 경우 다른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만족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나, 일반 국민들의 만족도는 보통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다자외교를 중견국 외교로서 보는 것보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세일즈 외교·자원 외교 등으로 보는 관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4-153]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설문조사 결과



2)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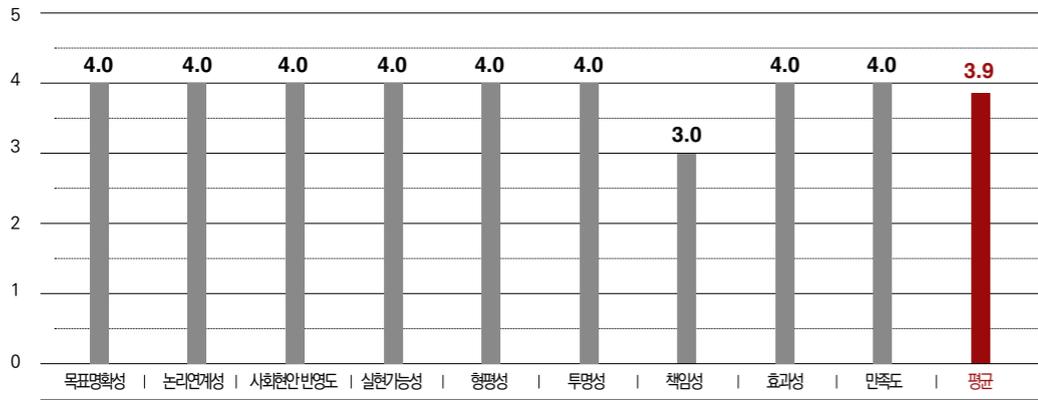
가) 정성평가 결과

(1) 병사처우개선- 병 봉급 인상(국방부)

국방부의 병 봉급 인상 정책의 경우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들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부분에서 각각 4.0점의 평가를 받아, 평균 4.0점의 점수로 구조 영역에 있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하는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표,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서 모두 4.0점을 획득하여, 내용 영역에서도 평균 4.0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어, 정책의 과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첫 번째 지표인 정책의 민주성(투명성) 부분에 있어서는 4.0점의 평가를 받았는데, 두 번째 지표인 정책의 책무성(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는 3.0점을 획득하여, 유일하게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과정 영역의 평균은 3.5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평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효과성 지표와, 만족도 지표에서 각각 4.0점을 획득하여, 결과적으로 이 영역 평균 또한 4.0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전문가 정성평가에서 병사처우개선을 위한 병 봉급 인상 정책의 경우 대부

분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에 나타났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봉급 인상이 병사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책 환류 시스템이 보완되어 의견수렴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9개 지표 평가점수의 평균은 3.9점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설명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와 이들의 평균, 각 평가영역별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54] 병 봉급 인상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궁극적 측면에서 병 봉급 인상 정책은 첫째,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병사들의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주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 둘째, 이를 위해 병영생활에 필요한 최소경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봉급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실질적 측면에서 이 정책은 2012년에 대비하여 '2017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병 봉급을 '2배'로 인상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정책 목표 달성의 구체적 시기와 인상액의 구체적 수준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잘 확보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상기한 것처럼 이 정책은 병 봉급 인상의 구체적 시기와 인상액 수준을 제시하며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이러한 실질적 목표는 다른 한편 곧 이 정책대안 내용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곧 정책대안의 명확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의 정책대안을 궁극적 정책목표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경우에도 양자의 연계성은 잘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병영 활동 기간 중에 원치 않게 다른 직업 활동 및 경제 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병사들에게 있어 봉급액의 수준은 사기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박근혜 정부는 '보람 있는 군 복무'를 모토로 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다양한 장병 복지향상 방안을 구상하였는데 이 중 하나가 병 봉급 인상 정책이었다. 특히 이 정책은 징병제를 유지하는 타 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병 봉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현실과 이에 대한 지속된 사회적 불만들을 감안하여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대만의 경우 280,000원, 이스라엘의 경우는 100,000원~220,000원의 봉급액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1인당 GDP 수준에 있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병 봉급의 수준이 82,000원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국방부, 2013). 이러한 측면에서 병 봉급 인상은 사회현안에 대한 인식을 정책으로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은 「13~1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인력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을 살펴보면, 현재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 보수정책담당관 2명의 책임 하에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병사의 수를 감안했을 때 이는 다소 부족한 수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예산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 2배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과 중기계획에 반영된 재원을 토대로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 6,184억 원, 2014년 6,995억 원, 2015년 7,952억 원, 2016년 9,005억 원, 2017년 1조 1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국방부 보건복지관실, 2014), 후술할 '정책의 민주성' 측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초 정책 과정에서 수차례의 간담회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인상액의 수준과 이에 따른 예산편성이 단계별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역사적 배경 하에서 현재까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 의무복무 비율이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정책뉴스, 2013), 병사들의 처우개선의 문제는 병사 개인을 넘어 그의 가족을 포함, 더 나아가 전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민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병사들이지만,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 이 정책 추진을 통하여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자 또한 없다는 점에서 정책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이 정책의 경우 정책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절차들을 통해 이해당사자 및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2012년 6~7월에 실시한 군인복지실태 조사를 통해 '병 봉급 2배 인상'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병사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 및 각 군 복지정책과장 등 업무유관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수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2013년 9월 24일에는 차관 주관 '군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병 봉급 2배 인상' 과제를 확정

하고 「13~1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다(국방부 보건복지관실, 2014).²⁶⁾ 따라서 정책의 사회현안적 중요성에 상응하여 정책의 민주성 또한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실질적으로 봉급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사전 정보공개 대상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차적으로 국방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²⁷⁾ 또한 통계청 e-나라지표의 '부문별 지표'에서 '계급별 사병봉급 추이'를 통해 실제 지급되고 있는 봉급에 대해서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²⁸⁾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현재 이 정책은 「13~17 군인복지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 인상률을 매년 반영하여 2015년 예산안이 확정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따라서 실질적인 정책목표를 잘 달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성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병사들의 사기 증진 정도와 복지향상 및 봉급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에 대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07년 병사 2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병 봉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답변했었는데(박민혁, 2010), 이 정책을 통해 정책 시행 이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현 봉급에 대해 얼마간 만족도가 증대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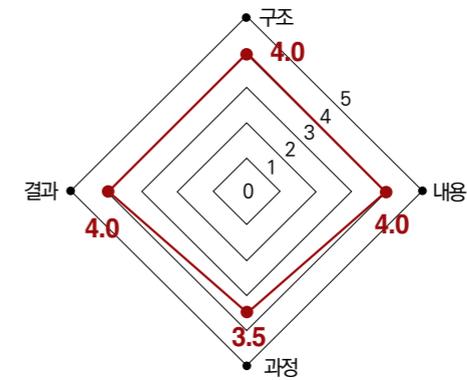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전체적으로 병 봉급 인상 정책은 사회적 현안에 대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목표와 내용의 정책을 입안, 추진해 왔다고 평가되며, 계획된 예산의 투입을 통해 현재에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책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일부의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만 확보되면 병사의 봉급을 40만원까지 올리는 것 또한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바 있는데(정중섭, 2009; 박민혁, 2010), 따라서 봉급액 수준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결과(4.0), 과정(3.5), 내용(4.0)의 순으로 나타났다.

26) 군인복지위원회는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병 봉급 인상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보건복지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의 국장, 서울대, 세종대 교수, KIDA연구위원 등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하였다.
 27) 대한민국 국방부 사이트. 사전정보공개. (http://www.mnd.go.kr/mbshome/mbs/mnd/subview.jsp?id=mnd_050100000000)
 28) 통계청 'e-나라지표' 사이트. 부문별 지표. '계급별 사병봉급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0#quick_02;)
 29) 병 봉급의 인상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07년 대비 10% 인상, 2009년에는 2008년 수준을 유지, 2010년 또한 전년도 수준 유지, 2011년에는 '10년 대비 6.49% 인상, 2012년에는 '11년 대비 4.09% 인상하여 저조한 인상률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3년은 '12년 대비 20% 인상, 2014년에는 '13년 대비 15%를 실제로 인상하여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상률이 병 봉급에 대한 병사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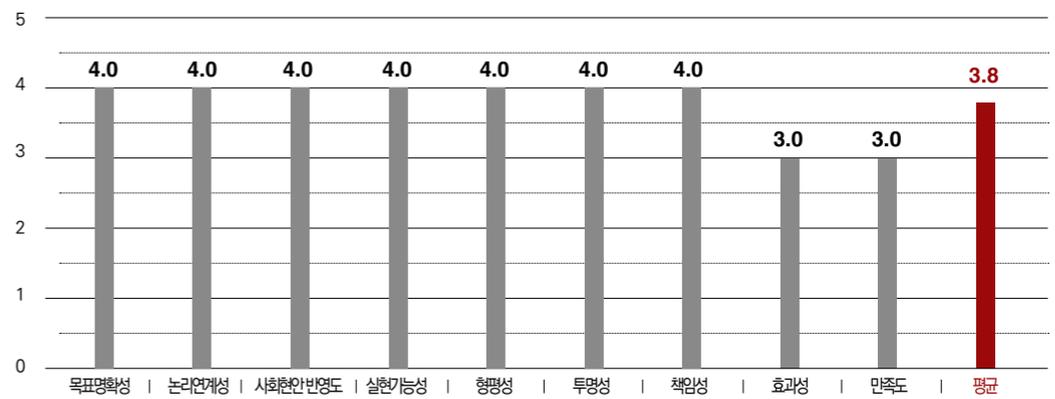
[그림 4-155] 병 봉급 인상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2) 이산가족문제 해결(통일부)

통일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부분에서 모두 4.0점의 평가를 받아,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평균 4.0점의 점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하는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표,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서도 같은 평가결과를 보였는데, 각각 4.0의 점수를 획득하여 구조 영역과 마찬가지로 내용 영역에 있어서도 평균 4.0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정책의 과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민주성(투명성) 부분과 정책의 책무성(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 같은 점수인 4.0점을 얻었다. 이에 따라 과정 영역 또한 다른 영역과 같은 수준인 평균 4.0점의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효과성 지표와, 만족도 지표에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두 지표에서 모두 3.0점을 획득하여, 다른 지표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영역 평균은 3.0점에 그쳤다. 이는 이산가족문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보다는 정치상황의 변화에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새로운

[그림 4-156]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정책대안들, 즉 8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긴급특별 상봉의 추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시적 운영, 화상상봉의 실시, 서신 교환의 상시화, 장기 가족방문 형식으로서의 가족재결합 등의 도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9개 지표 평가점수의 평균은 3.8점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설명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와 이들의 평균, 각 평가영역별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첫째, 이산가족 사전(死前) 교류 지원, 둘째, 이산가족 사후(死後) 교류 준비, 셋째, 이산가족 고통 위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모두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목표들이며, 이산가족 지원이라는 큰 목표 하에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교류 과정을 사전, 사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대해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과 차별화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보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산가족의 사전 교류 지원 목표를 위해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산가족 (영상)편지교환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산가족의 사후 교류 목표를 위해서는 이산가족 영상편지의 사전 제작,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보관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의 고통 위로를 위해서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들 정책수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체계적으로 나뉘어 각각의 정책목표에 대응하여 잘 연계되고 있으며, 각 대안 간 상충되는 점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남북한 정상 모두 2014년에 관계 개선을 언급한 바 있고, 특히 박근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관계 개선의 첫 단추'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고령층의 급속 증가 추세와 사망자의 급증으로 인하여 정책 대안 중에서도 상봉 확대의 시급성에 대한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통일외교안보 관련 학계·연구계·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92.4%가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상봉행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13). 이러한 측면에서 이 정책의 추진은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먼저 인력 측면에서 통일부 내에서 이산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은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의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망자를 제외해도 이산가족의 수가 약 7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담당 인력의 수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산 측면에 있어서, 소요예산은 2012년 약 9억 9,000만 원, 2013년 약 17억 3,000만 원, 2014년 약 31억 7,000만 원이었으며, 각각 전년 대비

74.7%, 83.2%의 증가율을 보여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2014년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이산가족 당국교류에 할당되는 예산액의 증대와 이산가족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보관 예산항목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산 증대를 통해 전반적으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산가족 정책 추진 시 수혜를 보는 대상은 남북의 이산가족이며, 이산가족의 범주에는 이산 당사자 그리고 8촌 이내의 친척·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포함된다. 정책의 수혜자가 국민 일반이 아닌 이산가족으로 한정되고 있으나, 정책 추진 시 불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매년 지역별로 정책의 직접적 이해관계인인 이산가족들을 초청하여 이 정책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총 7회, 2013년에는 총 7회, 2014년에는 총 6회에 걸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시켰다. 또한 이산가족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 이북도 민회중앙연합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남북이산가족협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수시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책과정에 있어 민주성이 비교적 잘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통일부는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³⁰⁾ 이를 통해 이산가족신청 자료를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과 관련한 통계 및 당국 간 상봉행사 지원 및 이산가족 교류 현황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어서 더 나아가 센터는 정책 관련 각종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사항을 접수받고 있어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환류 및 반영 또한 꾀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먼저, 이산가족 당국교류에 있어 2014년 2월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남북의 316가족, 2,342명이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남북의 170가족, 813명이 상봉하였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편수는 1,200편이었고,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보관 또한 1,200건을 진행하였다. 2014년 1월에서 10월 이산가족 초청행사가 6회 개최되었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2011년에서 13년 사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가 2014년 2월 다시 열린 것이고(현대경제연구원, 2014),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보관 또한 2014년부터 도입·실시된 것으로 이를 통해 정책 효과에 얼마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봉행사의 경우 3년 4개월 만에 비로소 한번 개최된 것으로 전문가들 대다수의 요구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이를 통한 정책 효과를 크게 확신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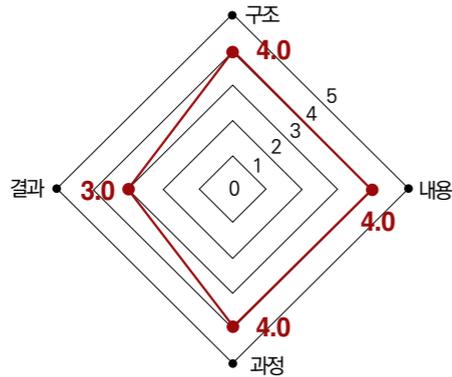
30) 이산가족정보시스템 사이트(<https://reunion.unikorea.go.kr/reunion/index>)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의 높은 연계성, 예산의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대안인 상봉 확대 실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견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대안 외에 새롭고 다양한 정책대안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점을 고려하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8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긴급특별 상봉의 추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시적 운영, 화상상봉의 실시, 서신 교환의 상시화, 장기 가족방문 형식으로서의 가족재결합 추진 등 정책대안들에 대한 의견 개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경빈, 2014; 현대경제연구원, 2014). 따라서 이러한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지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결과(3.0), 과정(4.0), 내용(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이산가족문제 해결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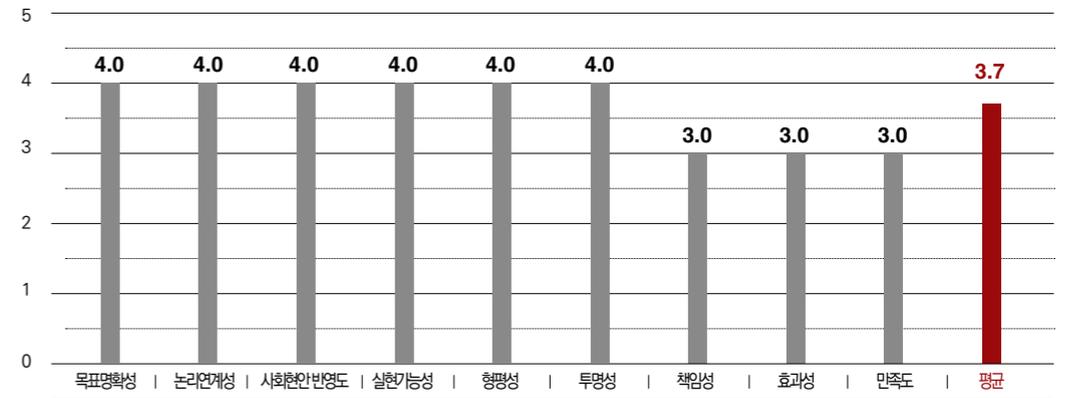


(3)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의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정책은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지표에서 모두 4.0점의 평가를 받아,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평균 4.0점의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표,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서도 이어졌는데, 세 지표들에서 모두 4.0점을 획득하여 정책의 구조 영역과 비교했을 때 내용 영역에 있어서도 같은 평균점수인 4.0점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의 과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민주성(투명성) 지표에서는 4.0점, 정책의 책무성(책임성) 지표에서는 3.0점을 얻어 같은 영역의 두 지표 간에는 다른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전 영역들에 비해 과정 영역은 평균 3.5점의 다소 낮은 평가점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효과성 지표와, 만족도 지표에서는 각각 3.0점의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 영역 평균은 3.0점으로 이 정책 평가에 있어서 가장 낮

은 점수의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책임성과 효과성, 만족도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최근의 방산비리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리의 근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 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절차가 다수 시행되고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이러한 절차와 시스템의 의미가 무색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엄청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9개 지표 평가점수의 평균은 3.7점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설명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와 이들의 평균, 각 평가영역별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5]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첫째, 방위산업 육성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 둘째 이를 통해 자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방산위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과 이들이 생산하는 무기체계를 군에 보급하여 자주 국방력을 강화시키기는 것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양 목표 간 상충되는 요소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경제발전'과 '자주국방력 강화'로 요약되는 다소 거시적인 목표가 제시되어 있을 뿐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발전과 자주국방력 강화를 의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목표 달성 수치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아 목표로서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첫째, 선제타격 시스템(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구축, 둘째, 지상-해상-공중 핵심무기 연구개발 및 양산, 셋째, 무인로봇 등 핵심기술개발, 넷째, 방산수출, 상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산업체 역량향상 지원사업의 시행 등이 그것이다. 이들 상호간 상충되는 요소는 없으며 상술한 정책목표를 위해 추진되어야 할 구체적 정책대안들로 적합하다고 본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방위산업의 육성은 국가안보의 한 축을 이루게 되며, 따라서 일시적 사회 현안을 반영하여 한시적으로만 추진될 사항에 그치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역적, 역사적으로 특수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무기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안보산업이라는 특수성 외에도 방위산업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산업, 수요자 중심의 시장구조를 지닌 사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방위사업청, 2008)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이 되며, 따라서 방위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으로서 추진되어야 할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먼저, 인력 측면에서 이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존재하는 정책기획, 재정편성, 인사운영 부문 등에서의 실담당 지원인력으로 약 160명이 있고, 이러한 실담당 외에 방위사업추진업무를 조력하는 업무인원은 1,500여 명에 달하여 행정상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용이하게 확보되고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예산 측면에서 방위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무기를 연구개발,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방위력개선비 항목인데 2006년부터 201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2년 9조 6,935억 원, 2013년 9조 8,938억 원, 2014년 10조 1,74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고, 2015년에는 10조 5,09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간 방위력개선비 중에서 핵심기술 등을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기술개발예산은 매년 5% 비중을 그쳐 선진국 10%의 절반 수준을 보여 왔는데(방위사업청, 2008), 현재에도 그 비중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여서 여전히 이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전체 국방비 대비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따졌을 때, 2008년 27.3%에서 2012년 30.9%로 증가 추세를 보이던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2013년부터 하락세로 30.0%, 2014년에는 29.5%를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상운영비의 비중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서호진, 2013)임을 감안하면 정책의 재정적 실현 가능성은 다소 미흡하다고 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 추진의 이해관계자는 일차적으로는 무기의 사용자인 각 군,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각 연구소와 업체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통해 군사력을 개선할 수 있게 되므로 일반 국민들 또한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제기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인 방위산업체의 비리문제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지적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어서(김동민, 2014)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2012년 방산수출업체 초청간담회, 무기체계 획득업무·제도발전을 위한 공청회 등이 이루어졌고, 2013년에는 국방조달 계약방법 개선을 위한 공청회, 방위산업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산

정책 심포지엄 등이 추진되었다. 2014년의 경우에는 국방무인로봇 발전 산학연 간담회, 무기체계 국산화발전전략 세미나, 방산현안 등 주기적 논의를 위한 방위사업청 정책포럼 등이 개최되는 등 그동안 이 정책 관련 공청회와 용역발표회, 간담회 등이 수차례 실시되었다. 덧붙여 각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업체·각 군의 의견수렴 회의, 대국민 브리핑 등의 과정들 또한 거치고 있다. 이를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있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방위사업은 보안을 명분으로 사업의 폐쇄적 추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간 비리의 고착화 가능성을 보여 왔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에 2006년부터 최초로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해(방위사업법 제6조) 감시와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있고(방위사업청, 2009; 2014), 특히 비리와 관련하여 적극적 감사활동 및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의견을 비공식적이고 수시로 수렴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감사를 요구하며 피감부서와 함께 최적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자발적 클리닉 감사제도 또한 두고 있다(방위사업청, 2007). 그러나 계속되는 비리적발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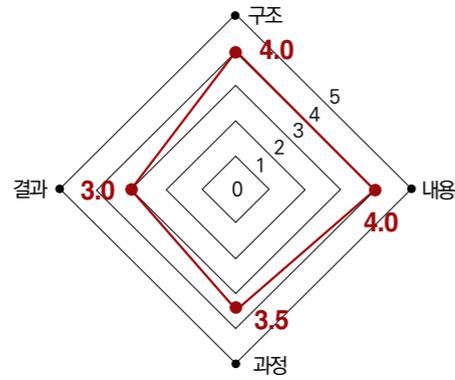
첫째, 방위력개선사업 적기추진율에 있어서 2011년 99.65%, 2012년 97.71%, 2013년 100%를 달성하였으며, 둘째, 미국을 100점으로 기준하여 평가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은 2011년 78점(11위)에서 2012년 80점(10위)로 상승한 뒤, 2013년과 2014년에도 동점수와 동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방산수출액을 살펴볼 때, 2011년 전년대비 약 12억불이 증대되어 23억 8,200만 불을 기록한 이래로 2012년 23억 5,300만 불, 2013년 34억 1,600만 불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방산수출액의 증대로 방위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지만,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은 제자리를 보이고 있어서 자주국방력 강화의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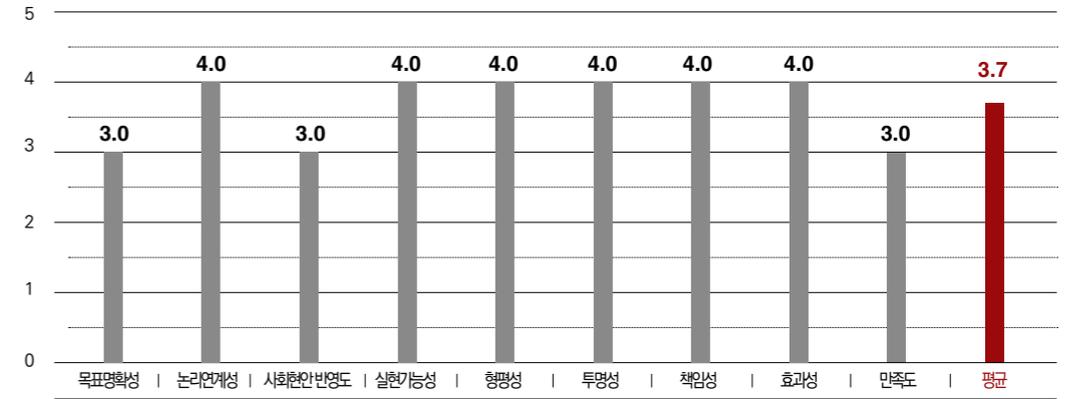
방위사업청은 고질적인 군납비리의 고리를 끊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신설한 정부조직이었다. 상기하였듯 방위사업청은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착화된 비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전문가, 언론, 대통령 등을 통하여 비판을 받고 있고 현재 폐지론이 거론될 만큼 최대의 위기에 빠져있다(윤상호, 2014).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합동수사단 조직되어 방산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강경석, 2014).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정책 전반에 대해 긍정적 수준의 만족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4.0), 과정(3.5),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9]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그림 4-160]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4)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통일부)

통일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의 경우 정책의 구조적 측면을 평가하는 지표들인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부분에서 각각 3.0점, 평균 4.0점의 평가를 받았다. 구조 영역에 있어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부분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 목표가 다소 명확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하는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는 3.0의 점수를 획득하였고,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표,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서 모두 4.0점을 획득하여, 사회현안 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정책의 과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첫 번째 지표인 정책의 민주성(투명성)과 책무성(책임성) 부분에서 모두 4.0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효과성 지표와, 만족도 지표에서 각각 4.0점과 3.0점을 획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영역 평균이 3.5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전문가 정성평가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의 경우 정책의 결과적 측면의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전문가와 일반인 설문조사에 나타났던 것처럼, 사회현안이 적절히 반영되고 만족도가 낮은 측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의견수렴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9개 지표 평가점수의 평균은 3.7점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설명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와 이들의 평균, 각 평가영역별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경제협력(이하 경제) 사업자들의 고통 및 애로사항 완화에 볼 수 있으며,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주민 간 접촉면을 확대해나가는 것을 세부 목표로 삼고 있다.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목표는 그 변화의 모습과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정의되기 어렵지만, 세부적인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경제가 남북교

류협력에 속하여 남북주민간의 접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시된 두 목표 간에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은 국제기구(UN)와 민간단체를 통한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산·산림 협력 사업과 사회문화교류를 지속 확대하며, 남북협력기금으로 경험 사업자들에게 특별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우선, 인도적인 지원 외에 협력과 교류의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은 남북주민간의 접촉면을 확대하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험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저금리의 특별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별대출은 재무등급요건이나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하며, 세금체납기업에게도 대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을 지니는 것을 고려할 때, 기업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생각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2013년에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박명규 외, 2013). 이는 2013년 들어 북한의 핵실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 등과 같은 잇따른 도발적 행위가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도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하였지만 2012년도에는 45.9%라는 비율에 비해 40.3%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는 현재 사회현안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은 교류협력기획과, 사회문화교류과, 남북경제과, 인도지원과로 이루어진 교류협력국의

인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정책의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인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세부사업들이 대부분 기존의 사업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의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협 기업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제3차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으로 총 200억 원이 의결되어 있다(통일부 교류협력국, 2014). 기업의 입장에서 경협 사업자들 중 심사받은 기업의 60%가 1억~2억 원 사이의 대출을 받는 등 대출금액이 크지 않고, 경협 기업이 총 1000여 곳이나 되는데 200억 원이라는 예산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박희준, 2014), 그에 따라 대출 한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의 수혜자는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의 취약계층, 북한 낙후지역 주민들, 사회문화 교류 협력 관련 사업자와 단체, 경협 기업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취약계층과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된다. 경협기업의 입장에서 경협기업 간에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별대출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세금체납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아 특정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 정책자금에 비해 우호적인 금리도 현재 경협이 중단되어 매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이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남북교류 추진협의회를 연내 8차례 개최하여 19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게다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위원회를 연내 5차례 개최하였다. 사회문화교류 분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 남북교류실무협의회를 연내 7회 개최하였으며, 대북 인도적 지원 분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간단체 공모사업 설명회를 연내 5회 개최하였다. 또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시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통일부 교류협력국, 2014).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이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이나 환류를 통한 문제점의 수정과 관련된 자료는 자체평가 결과에서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경협 분야에서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대출평가 및 심사위원회가 존재하며 연내 8회 개최되었다(통일부 교류협력국, 2014). 그러나 대북 인도적 사업과 마찬가지로 일시, 참석인원, 회의 내용 등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평가의 기준이나 환류를 통한 수정의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2014년 11월 현재 영양식·의약품·영농자재 등을 위한 민간단체 자체 재원 승인 45억 원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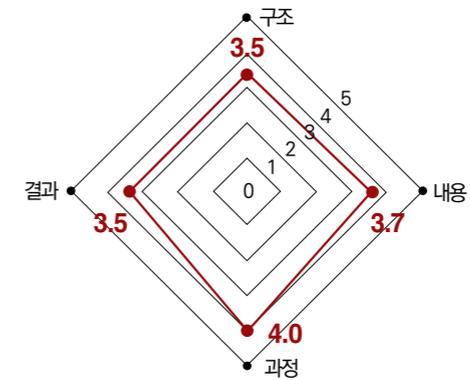
WHO(세계보건기구)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630만 불)과 WFP(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영양식 지원 사업(700만 불) 등을 위한 141억 원(2014년 11월에 지급) 등 총 186억 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지원의 수혜 범위가 68만 명이나 증가하였다. 농·축산·산림 협력 분야에서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동영농자재 지원이 허용되었다.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는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사업」이 2011년 12월에 중단된 이후 약 3년 만에 2014년 7월부터 재개되었으며,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회의」가 2010년 5월에 중단된 이후 2014년 8월부터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등 장기간 중단되었던 다양한 남북 문화유산 공동 복원 사업이 재개되었다. 또한, 종교계는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남북합동다례재가 6월 29일에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등 다양한 ‘남북합동법회’·‘남북합동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체육교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북한팀 참가를 지원하여 「인천아시아게임」에 273명, 「인천 장애인 아시아게임」에 33명 등이 참가하였다. 이는 2013년도에 방남한 체육관련 인원이 40명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경협 분야에서는 2014년 4월에 특별자금대출 200억 원을 의결한 이후 총 42개사에 164억 원을 집행하였다(통일부 교류협력국, 2014).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박명규 외, 2013)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52.3%로 2012년의 34.3%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설문조사 결과가 이 정책의 만족도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결과에 따르면 ‘남북한 긴장 해소와 교류협력’이 17.4%로 전년도의 46.1%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낮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4.0), 구조(3.5), 내용(3.7), 결과(3.5)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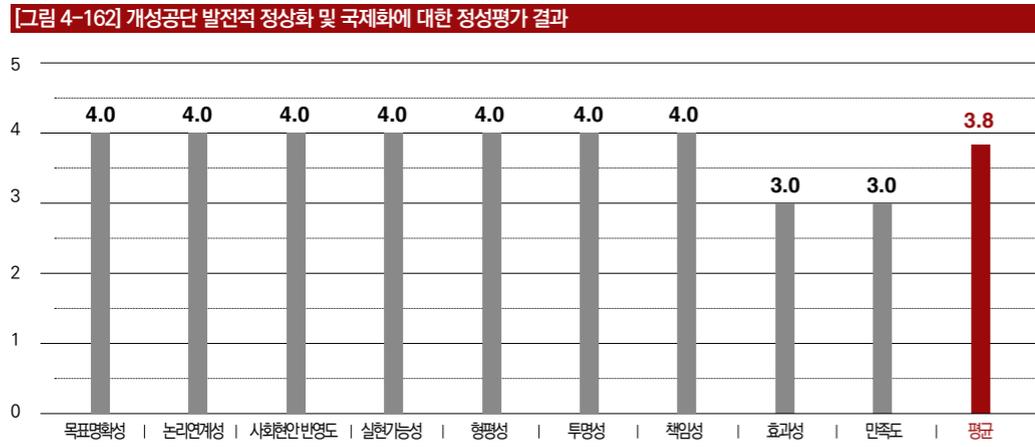
[그림 4-16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5)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통일부)

통일부의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부분에서 모두 4점의 평가를 받아,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평균 4.0점의 점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내용적 측면을 평가하는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표,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서도 같은 평가결과를 보였는데, 각각 4.0의 점수를 획득하여 구조 영역과 마찬가지로 내용 영역에 있어서도 평균 4.0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정책의 과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민주성(투명성) 부분과 정책의 책무성(책임성) 부분에 있어서도 모두 같은 점수인 4.0점을 얻었다. 이에 따라 과정 영역 또한 다른 영역과 같은 수준인 평균 4.0점의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효과성 지표와, 만족도 지표에서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두 지표에서 모두 3.0점을 획득하여, 다른 지표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영역 평균은 3.0점에 그쳤다. 이는 개성공단이 중단되었던 현상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체결한 이후에도 아직 북한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제도 개선과 당국 간 협의기구의 상설화·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9개 지표 평가점수의 평균은 3.8점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설명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와 이들의 평균, 각 평가영역별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의 목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로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변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외교부가 제공한 부처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추진일정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국제화라는 목표 간에는 서로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아 목표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되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는 신변안전 보장·투자자산 보호·3통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당국 간 협의기구를 상설화·제도화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분과위원회, 상설사무처에 대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또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개성공단 지원재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시된 사업들은 서로 간에 경합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의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현안사항으로는 ▲ 공단의 운영안정성 담보(23.8%), ▲ 5.24조치 해제(22.6%), ▲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19.0%)로 나타났으며(복수응답),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개성공단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운영안정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 2014). 그러므로 현재 이 정책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생각하는 현안 중 운영안정성 담보와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현안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생각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의 집행을 위해 배정된 인원은 기획총괄과, 투자개발지원과, 제도개선팀으로 이루어진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23명과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9명이다(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2014). 통일부 일반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주요 업무가 재정지원과 업무위임임을 감안하면 인력의 부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통일부, 2014).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사업은 제도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을 별도로 추계하기는 어렵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남북 간 구체적인 사업 협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예산의 적절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개성공단과 생산·판매 계약을 체결한 국내기업이며, 개성공단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계기업 등이다. 입주기업의 경우, 공단 운영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3통·투자 보장, 기타 공단 운영 관련 제도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개선, 시장의 신뢰 회복 등을 통해 기업 생산 활동 및 경영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며,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특례가 신설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단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 국내 중소기업에 준하는 각종 지원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개소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공단의 운영성 보장과 제도개선

에 대한 필요성은 입주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형평성의 관점에서 문제될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이 정책은 분기별로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 또는 입주기업 의견청취 절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는 연내 총 4회, 입주기업 의견청취는 연내 총 4회, 그리고 전문가 자문회의는 연내 총 3회 이상 개최되었다. 또한, 2014년 10월에 개최된 발전적 정상화 합동워크숍에는 재단·관리위원회, 유관부처, LH, 현대아산, 기업협회장, 입주기업 대표 등 80여 명이 참여하였다(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2014). 이를 통해 정책의 의견수렴절차가 비교적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통일부(2014) 일반재정 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유관기관 및 입주기업의 요구 사항 및 문제점 처리 등의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문제점 해결이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되었다(통일부, 2014). 또한, 자체평가, 사업평가 및 외부 지적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 일부 개선 및 환류에 의한 수정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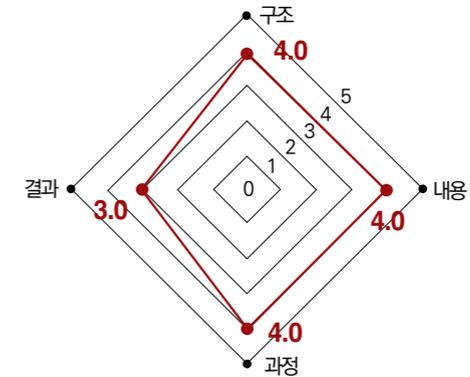
개성공단은 2013년 9월부터 정상가동 중이며 2014년 8월 기준으로 가동중단 대비 생산액이 88% 증가하였다. 통행 제도개선을 위해 전자출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통신실무접촉을 통해 인터넷연결방식을 합의하였다. 투자보장을 위해 상사중재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절차 등 중재규정을 협의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지원재단 내 외국인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외국기업 대상 투자상담, 정보제공 등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동위, 분과위, 그리고 상설사무처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다(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2014). 이러한 결과를 참고해보면 안정적인 운영보장을 위한 상설화·제도화에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박명규 외, 2013) 결과에 따르면, '약간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설문에 대해 응답자의 50.4%가 찬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가 증가한 것으로 개성공단의 폐쇄가능성이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재개를 위해 정부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정책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사실은 높은 정책의 만족도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4.0), 구조(4.0), 내용(4.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3]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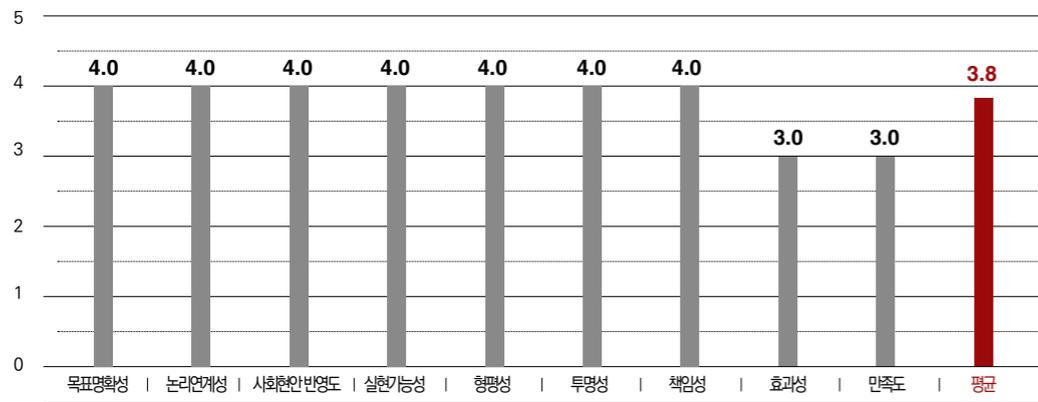
(6)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외교부)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지표에서 모두 4.0점의 평가를 받아,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평균 4.0점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표,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서도 모두 같은 점수인 4.0점의 평가결과를 보였는데, 이로써 정책의 내용 영역에 있어서도 구조 영역과 같은 평균 4.0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정책의 과정적 측면에서도 같은 평가결과를 보였는데, 정책의 민주성(투명성)지표와 정책의 책무성(책임성)지표에서 각각 4.0점을 얻었다. 다만 정책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효과성 지표와, 만족도 지표에서는 모두 3.0점의 평가를 받아 다른 지표들에 비하여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로써 결과 영역의 평균은 3.0점으로, 이 정책 평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이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9개 지표 평가점수의 평균은 3.8점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설명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와 이들의 평균, 각 평가영역별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첫째, 역사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퇴행적 언행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 둘째 이러한 역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 등 호혜적 분야에서는 양국 간 지속적 협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정책 안에서 역사와 그 외 분야를 모두 포괄하여 대응과 협력이라는 상충되어 보이는 복수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목표의 명확성에 일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림 4-164]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하지만, 양국 간에 존재하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이에 대한 뿌리 깊은 감정적 문제가 타 분야와 완전히 별개로 논의될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양 목표는 하나의 정책 안에서 조화롭게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분야에 따라, 상황적 특수성에 따라 외교 문제 자체가 가변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정책이 타임라인에 따른 구체적 목표를 선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서는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이 정책은 협력 분야에 있어 외교장관 회담 및 외교차관 협의, 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정상 및 고위급의 외교를 추진함과 동시에 역사 문제에 있어 독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에 관련한 논평 발표와 대변인 성명 발표 등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정책대안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안은 외교정책의 추진에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책대안으로서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교류와 의견표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적절히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이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4월 중순부터 아베 내각이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영준, 2013). 또한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언론 NPO 법인이 실시한 제2차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 결과 보고서(2014)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70.9%가 일본에 대한 인상에 대해 나쁘다 또는 대체로 나쁘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의 70%는 역사인식 문제와 영토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일 관계의 바탕이 역사문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이 정책은 사회현안 반영의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판단된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먼저 인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외교부 동북아1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 정책은 총 14명의 인력으로

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협의, 회담, 논평 발표 등의 경우를 포함하면 이러한 실담당자 외에 더욱 많은 인력이 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행정 측면에서의 실현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예산 측면에서 이 정책은 동북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사업에 할당된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4년 기준 53억 9,3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이는 2013년에는 51억 8,500만 원에 비하여 4% 증가된 수치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2013년 4월부터 역사적 문제를 두고 한일관계가 악화된 것을 고려했을 때 예산의 증가는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이 외 경제, 문화 등의 호혜적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제기될 것이 없다고 본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이 정책의 추진을 위해 특히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201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 및 간담회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다만 일시와 참석자 명단 등 구체적 사항들은 외교적 사안으로 대외적으로 비공개되어 있어 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일부 협의의 개최와 그 결과에 대해서 정부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론을 통한 정보 접근만이 가능한 상태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외교부(2014)의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사업에 있어서 국가별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분기별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잘 구축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및 외부지적을 반영하여 사업구조개선에 잘 환류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특히 위안부 등 과거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에 있어 모니터링과 의견 반영에 힘썼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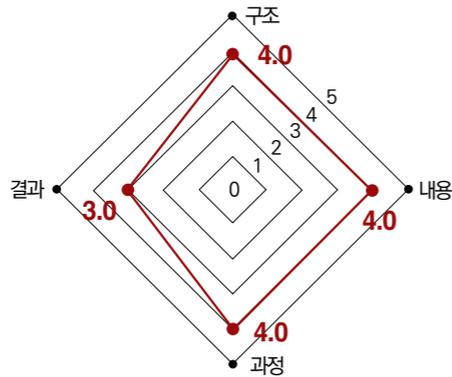
외교부(2014)의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3년 한일 교류·협력 지수 평가에 있어 계획(A) 85.3에 비하여 달성(B) 88.3을 이루어 달성률(B/A)이 103.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의 경우 평가 결과가 아직 존재하지는 않으나, 3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7월 대통령의 동경도지사 접견 등 정상 및 고위급 회담이 총 7회 진행되었고, 양국 문화교류 및 인적교류 실적이 약 25회, 일본 주요 정치인들의 역사 퇴행적 언행을 자제를 촉구하고 국제 여론 조성을 위해 6회에 걸친 NYT 사설 발표, 유엔총회 및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의 문제제기 및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다만, 특수한 역사적 감정문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온전히 달성하기에는 기본적인 한계가 늘 따른다고 보인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상기한 것처럼 이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구상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현재에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역사 인식에 관하여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선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서,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이를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개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박영준, 2013)는 한계를 지적받기도 했다. 상기한 제2차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비교분석 결과 보고서(2014)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부정적인 것 또한 정책을 통한 목표 달성에 있어 국민들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4.0), 구조(4.0), 내용(4.0), 결과(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5]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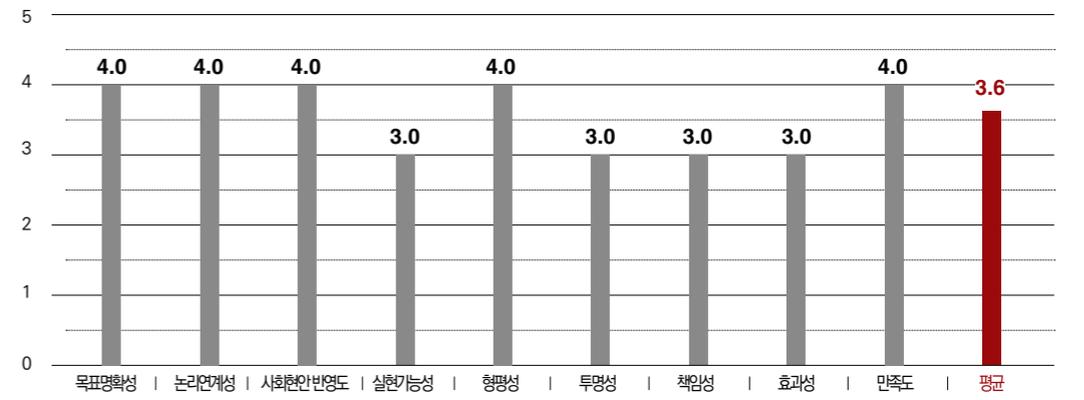


(7) 사회복지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병무청)

사회복지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정책의 경우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지표에서 모두 4.0점의 평가를 받아,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평균 4.0점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표,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서는 각각 4.0점, 3.0점, 4.0점의 평가결과를 보였는데, 이로써 정책의 내용 영역의 평균은 3.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의 과정적 측면에서는 정책의 민주성(투명성)지표와 정책의 책무성(책임성)지표에서 각각 3.0점을 얻어 평균 3.0점을 나타내었다. 정책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효과성 지표와, 만족도 지표에서는 각각 3.0점과 4.0점의 평가를 받아 이 영역의 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정책의 경우 그 내용과 법적 근거, 추진 방법이 명확하고 비교적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책의 경우 수혜적 정책에 해당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정책에 관련된 부처가 다수인데, 이러한 부처간 협력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려우며, 이 정책이 실제 사회복지요원의 역량 강화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이 낮은 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종합적으로 9개 지표 평가점수의 평균은 3.6점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설명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와 이들의 평균, 각 평가영역별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66] 사회복지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함으로써 첫째, 병역이행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둘째, 이를 통해 사회복지요원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가지의 목표를 통해 정책의 도입으로 꾀하고자 하는 변화의 양상이 잘 제시되고 있으며, 양 목표 사이에도 상충되는 부분 없이 일관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상기한 목표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정부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사업을 통한 정책대안의 제시는 그동안 건강보험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사회복지요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기한 정책목표의 용이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대안이라고 판단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사회복지요원도 귀중한 병역자원으로서 국가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그동안의 지원책은 현역병에 게만 치중되어 왔고 이에 대해 이미 지적이 많이 제기된 바 있다. 고령화의 빠른 전개에 따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 등의 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요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요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또한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도입된 이 정책은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가 높다고 판단된다(정성택, 2014).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먼저, 인력 측면에서 이 정책의 추진은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3명의 인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요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 인원으로도 사업의 적절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산 측면에서 당초 2014년도 예산편성은 39억 7,500만 원이었으나, 예산집행 결과 이보다 적은 수준인 연간 31억 원 정도에서도 정책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예산집행 결과와 복무예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2015년에는 3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국회 심의중이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사회복지요원으로 한정되나, 그렇다고 특정집단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상기한 바와 같이 현역병과의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 정책의 시행을 통해 손해를 입는 이해관계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이 정책의 시행을 위해 이해당사자간 의견수렴 절차나 공청회 등의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 정책이 시행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김광진, 2013), 따라서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의원의 발의를 통하여 추진된 만큼 민주성 측면이 훼손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이 정책의 경우 정책의 내용이 곧 예산의 집행과 관련되어 있기 예산 집행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사전정보공개 사항에 해당하여 병무청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³¹⁾ 이러한 자료는 정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총 25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총 136,322명에게 지급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사회복지요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건강보험료 부담에서 면제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을 통해 사회복지요원의 편익이 제고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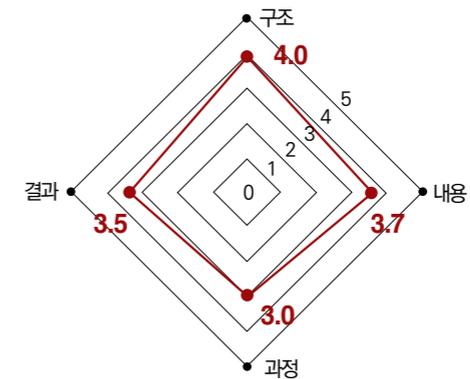
다. 또한 보험료 정부지원 내역을 매월 사회복지요원에게 통보해줌으로써 사기 진작 및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은 물론 정부신뢰에 대한 효과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그동안 공익근무요원들의 대다수가 사회서비스의 분야를 통해 국가를 기여함에도 법령에 이들에 대한 정비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문제가 존재해 왔다. 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요원으로 명칭을 바꿈과 동시에 이 정책이 함께 도입되면서 정부의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복지보장 의지가 정책을 통해 더욱 확실히 확인되었다. 여론을 통해 정책의 만족도에 있어 전반적으로 좋은 수준의 평가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구조(4.0), 내용(3.7), 과정(3.0), 결과(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기 사회복지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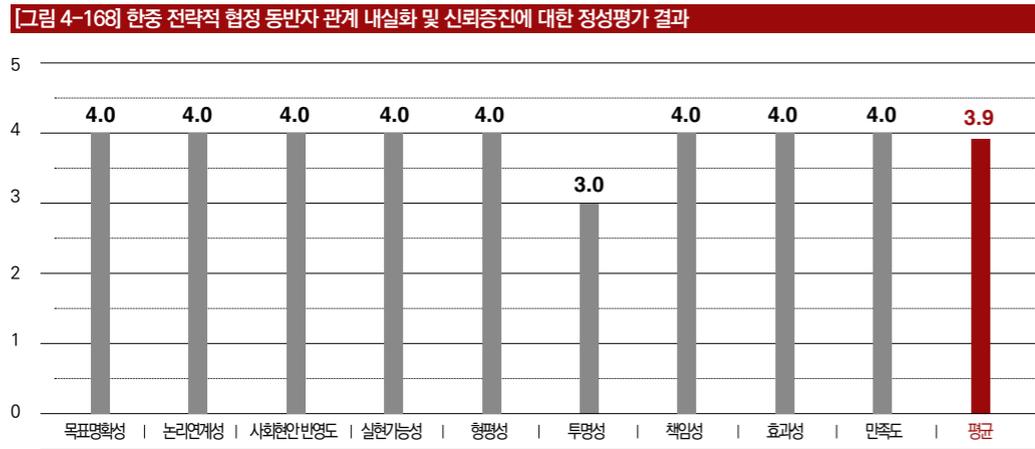
(8)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외교부)

외교부의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정책은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지표에서 모두 4.0점의 평가를 받아,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평균 4.0점의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표,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서도 이어졌는데, 세 지표들에서 모두 4.0점을 획득하여 정책의 구조 영역과 비교했을 때 내용 영역에 있어서도 같은 평균점수인 4.0점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의 과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민주성(투명성) 지표에서는 3.0점, 정책의 책무성(책임성) 지표에서는 4.0점을 얻어 같은 영역의 두 지표 간에는 다른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전 영역들에 비해 과정 영역은 평균 3.5점의 다소 낮은 평가점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효과성 지표와 만족도 지표에서는 각각 4.0점의 평가를 받았는데, 이에 따라 결과 영역 평균은 4.0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31) 병무청 사이트. 사전정보공개. "사회복지요원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현황" (http://www.mma.go.kr/kor//s_info/dev01/release0904/release09044/1341216_7395.html)

이처럼 민주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에서 모두 4.0점을 획득하여 전문가 정성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민주성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보아 이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 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일반 국민들도 해당 정보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9개 지표 평가점수의 평균은 3.9점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설명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와 이들의 평균, 각 평가영역별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한중 전략적 협정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이라는 큰 기조 아래, 한중간 전략적 소통 채널을 적극 가동하고, 정치와 안보분야에서 협력을 지속·강화하며, '인문유대'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외교부 정책과 같이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한 변화상과 타임라인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어렵지만 정책의 목표가 가지는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다만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이라는 목표와 인문유대 강화라는 목표는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책으로 묶기에는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사업은 크게 정상급, 고위급 회담의 개최와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운영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안보 분야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비영리 단체 및 민간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며 일반적으로 정상급·고위급 회담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한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는 인문 유대 사업 목록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인문유대 강화라는 목표에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논의된 주 내용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안정 유지, 한중 FTA 등 경제·사회분야의 협력 확대, 인문유대 강화활동 등이다(박정규 김형섭, 2013). 이는 2013년 기준 중국이 우리나라의 제1위 교역·수출·수입 대상국이며, 1992년 양국 수교 이래 교역액이 약 36배, 인적교류가 약 64배 증가하는 등의 현안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³²⁾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은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 2과, 3과의 10명의 인력이 배정되어 있다. 외교부의 특성상 동북아시아국 내의 다른 인력들과의 공조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동북아 1과 하나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2개 과의 인력 배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정책에 편성된 예산은 총 53.93억 원으로 예산의 주요 내용은 정상급 회담 개최 비용, 실무자들 교류비용, 의장단 활동비용 등인 것과 향후 예산이 2015년 55.34억 원, 2016년 56.85억 원, 2017년 60.82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을 감안할 때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외교부 동북아 2·3과, 2014).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로 인해 생기는 수혜자는 양국 간의 경제 교류를 담당하는 기업 등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책의 목표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있으므로 정책을 통해 얻는 혜택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 협력 유지나 강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정책의 수혜자는 국민 전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집단이나 지역에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외교부 동북아 2과와의 통화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 공청회나 간담회 등이 거의 개최되지 않고, 그에 따른 정보도 외교부의 일이 대외비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렵다. 즉,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과정을 살펴거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거의 없으며, 국민들도 정부가 발표하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외교부(2014)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각 국가별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고, 분기별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32) 외교부 사이트
http://www.mofa.go.kr/trade/areaissue/weasia/20years/index.jsp?menu=m_30_30_10&tabmenu=t_3

구축 및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중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한 실적이 다소 미흡하게 제시되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외교부, 2014).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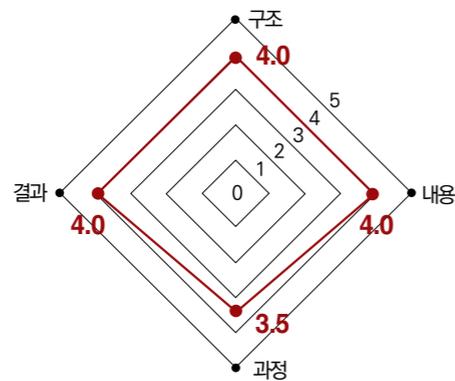
이 정책의 성과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상급·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였는데, 2013~14년간 정상회담 5회, 정상급 회담 3회, 총리회담 1회, 외교장관회담 6회 등을 개최하였다. 외교부의 내부적 평가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100%를 초과하였다. 또한, 정상급·고위급 회담 외에도 정당 간 정책대화, 국가안보실장·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국책연구기관 합동 전략대화, 외교안보대화 등을 신설하여 운영한 것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인문유대 강화와 관련된 성과지표로는 2013년 한·중 인문교류공동위원회 신설 및 제1차 회의, 2014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선정된 19개 인문교류사업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2015년도에 시행할 40여개 인문유대 사업도 선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외교부, 2014).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박명규 외, 2013)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협력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8.5%로 전년도 대비 약 6%가 증가하였다. 이렇듯 국민들이 협력의 대상이라고 보는 여론이 증가하고 이에 맞물려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므로 전반적인 정책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5), 구조(4.0), 내용(4.0), 결과(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9]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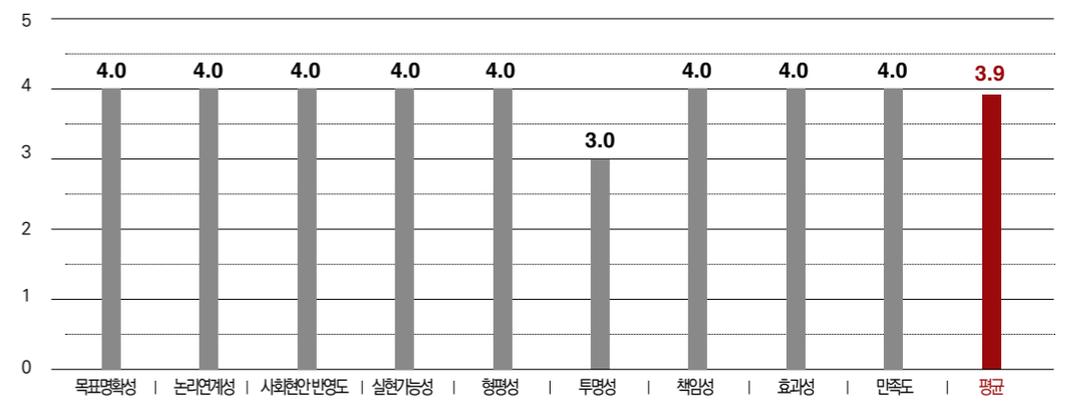


(9)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외교부)

외교부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하는 정책은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지표에서 모두 4.0점의 평가를 받아,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평균 4.0점의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는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표, 정책의 형평성 지표에서도 이어졌는데, 세 지표들에서 모두 4.0점을 획득하여 정책의 구조 영역과 비교했을 때 내용 영역에 있어서도 같은 평균점수인 4.0점을 보였다. 그러나 정책의 과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민주성(투명성) 지표에서는 3.0점, 정책의 책무성(책임성) 지표에서는 4.0점을 얻어 같은 영역의 두 지표 간에는 다른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전 영역들에 비해 과정 영역은 평균 3.5점의 다소 낮은 평가점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효과성 지표와, 만족도 지표에서는 각각 4.0점의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 영역 평균은 4.0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민주성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 부처,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정책과정에서의 전반적인 정보가 단순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가 아닌 좀 더 접근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9개 지표 평가점수의 평균은 3.9점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설명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와 이들의 평균, 각 평가영역별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70]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전통적 한·미 안보협력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 일치 및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미 동맹은 역사적으로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관계로, 앞으로의 변화 모습과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다만 안보협력이 한·미 동맹의 주요 내용이며, 동맹의 발전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목표로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한·미 동맹은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가 주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는 여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비영리 단체 및 민간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로 정상급 회답이나 장·차관급 회답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고위급·정상 회담 개최, 대미 의회 인사와의 교류 등의 정책대안은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인원이 양국 정상, 장·차관급이고,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양국 내에서 의회를 통과해야하므로 제시된 정책대안 간에 경합 혹은 상충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아산정책연구원(최강 외, 2014)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인의 미국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보통 이상인 5점대 중후반으로 나타났다. 함께 조사한 중국 호감도가 평균 4점대, 일본과 북한의 호감도가 '호감이 없다'에 가까운 2~3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미국에 대한 평가는 우호적이었다.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의 비율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80%대를 유지해, 중국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이 50%대에 머문 것과 대조됐다. 일본을 협력대상으로 본 한국인은 20%대에 불과했다.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높은 지지를 보냈고, 양국이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93%의 한국인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한 한국인은 83%,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66%였다. 그러므로 한미 동맹을 심화·발전시키는 정책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인식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에 배정된 인력은 북미1과, 북미2과, 한미안보협력과 등 14명이다. 외교부의 특성상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와의 공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북미국 외에 한미안보협력과의 존재가 한·미 동맹의 안보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미국 전체 예산 27.35억 원 중 대부분이 동맹기반 강화 사업(20억 원)에 편성된 것과 연도별 예산 계획이 2015년 31.35억 원, 2016년 38.12억 원, 2017년 39.7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외교부 북미1과, 2014)을 생각해 볼 때, 예산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고, 항목 또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된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한·미 동맹은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가 핵심인 만큼 대미 교역 관련자들을 수혜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논의되는 내용이 대부분 안보 분야와 관련성이 높고 이는 전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므로 특정한 집단이 수혜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딱히 형평성의 문제를 찾기 어렵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외교부 북미국과의 전화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교수 등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안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한·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대미 외교정책 수립·시행 등에 참고하고 있다. 다만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세미나 등에서 논의되는 내용, 일시, 참석자 등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언론 보도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외교부(2014)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주미대사관의 의회 자문회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 및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자율평가에서 나온 지적에 따라 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 개선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였으며, 국회 지적사항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반영한 실적이 제시되고 있다(외교부, 2014).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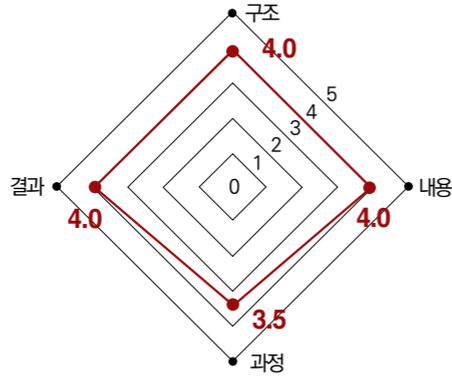
외교부에서 제시한 성과는 정상급 외교에서의 성과와 장·차관급 외교에서의 성과로 나눌 수 있다. 4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한·미 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 채택 및 APEC 계기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연내 4차례의 외교 장관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하는 등 기타 장관급 외교를 다수 실시하였다(외교부 북미1과, 2014). 외교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결과에서는 고위급 정책 협의회 지수, 의회 인사 교류 지수, 안보 정책 협의회 지수의 계획에 따른 달성률이 제공되고 있지만, 각 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고, 지표 변경 후 시행 첫 해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으며,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는 평가(외교부, 2014)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애매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민들은 한미동맹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양국이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것에도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연구원의 조사(최강 외, 2014)에 따르면 65%의 한국인이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보고 있고, 정상회담의 결과로 나온 한미 FTA의 결과가 미국에 더 이득이라는 비율이 높은 것(한미관계가 평등하다고 답변한 응답자 중 16.9%가 미국에 더 이득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한국에 더 이익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11.6%에 그쳤다. 또한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52.3%가 미국에 더 이익이라고 답변하였다.)을 고려하면 이 정책의 현재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5), 구조(4.0), 내용(4.0), 결과(4.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1]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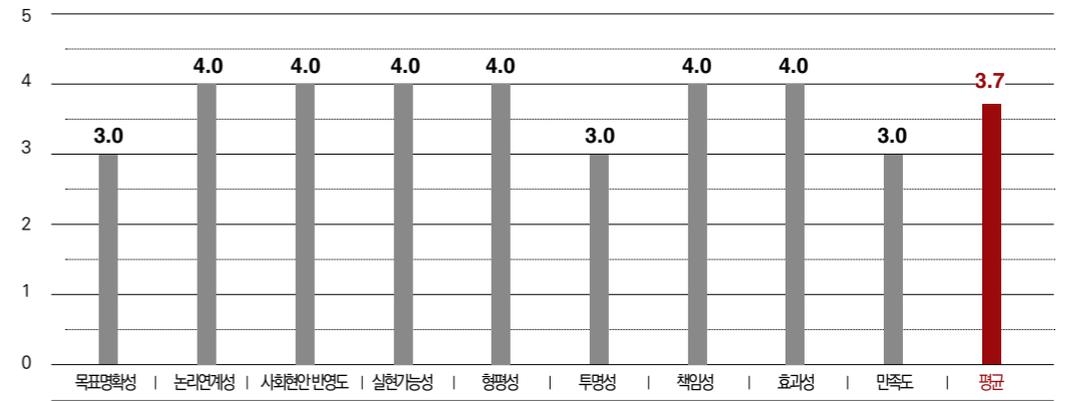


(10)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외교부)

외교부의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정책은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지표에서 각각 3.0점과 4.0점의 평가를 받아, 정책의 구조 영역에서 평균 3.5점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다른 정책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평가가 내려졌다. 정책의 내용 영역을 평가하는 사회현안 반영도 지표, 정책의 실현가능성 지표, 정책의 형평성 지표들은 모두 4.0점을 획득하여 정책의 구조 영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점수인 4.0점을 받았다. 그러나 정책의 과정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민주성(투명성) 지표에서는 3.0점, 정책의 책무성(책임성) 지표에서는 4.0점을 얻어 같은 영역의 두 지표 간에는 다른 평가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정책의 과정 영역은 평균 3.5점의 다소 낮은 평가점수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결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정책의 효과성 지표와, 만족도 지표에서는 각각 4.0점과 3.0점의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 영역 평균은 3.5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목표명확성, 민주성, 만족도 문항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글로벌 다자외교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책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민주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9개 지표 평가점수의 평균은 3.7점으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설명한 각 평가지표에 대한 점수와 이들의 평균, 각 평가영역별 평균을 그래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72]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① 정책의 구조 1: 정책목표의 명확성

이 정책은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기여 및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외교적인 기여와 위상은 정량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구체적인 타임라인의 제시와 변화 양상도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임을 고려해볼 때, 그 목표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② 정책의 구조 2: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글로벌 다자외교 관련 회의 및 협의체를 주도하고,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G20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강화된 것을 살펴보면, 현재 제시된 정책대안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보인다. 또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군축-비확산 논의에의 참여,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등을 통해 세계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자외교 무대에서 다루는 이슈는 주로 인류공영과 관련된 것으로, 유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대안 간에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고 생각된다.

③ 정책의 내용 1: 사회현안 반영도

국제무대에서 다자외교는 주로 환경, 인권, 평화 등과 같이 하나의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담고 있다. 경제 성장과 복지체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있는 중견국의 위치에서 국민들도 인권이나 환경, 평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의 정책은 국제적인 현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④ 정책의 내용 2: 정책의 실현가능성

이 정책에 배정된 인력은 유엔과, 군축비확산과, 인권사회과, 국제안보과로 이루어진 국제기구

국의 12명이지만, 외교부 특성상 다양한 부서와의 공조를 통해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예산이 2010년 4.85억 원, 2011년 7.65억 원, 2012년 12.58억 원, 2013년 14.72억 원이었으며, 이중 2012년에 13.26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외교부 유엔과, 2014) 최근 5년 중 유일하게 편성된 예산이 부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집행 중 예산 부족의 문제점은 겪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외교부 유엔과의 통화로 주요 예산내용을 확인한 결과 국제회의의 국내유치 및 개최비용에 1.2억 원, 국제회의 의장단 진출·활동 지원비용에 8.65억 원을 배정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 중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비용이 2천만 원이며, 이는 비율상으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⑤ 정책의 내용 3: 정책의 형평성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강화되면 일견 다국적기업이나 수출입에 의존하는 기업 등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집단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책은 그 수혜자가 특정 집단이기보다는 국민 전체로 생각되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⑥ 정책의 과정 1: 정책의 민주성

외교부 유엔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책과 관련된 사안자체가 비공개라 정책의 입안과 집행의 과정이 내부적으로 진행되며, 정책의 입안과 집행관련 공청회나 간담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들은 내부적으로 정책 형성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논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일부 현황에 대한 자료와 성과에 대한 정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공된다.

⑦ 정책의 과정 2: 정책의 책무성

외교부 유엔과의 통화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정책은 부 차원의 자체평가,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그리고 현 정부 국정과제 130번 실적평가의 세 가지 차원의 평가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지표가 공개되지 않아 평가에 대한 내용이나 방식을 알기 어려우며, 평가에 대한 환류작용도 파악하기 어렵다.

⑧ 정책의 결과 1: 정책의 효과성

이 정책에 대해 외교부가 제공하는 성과 지표는 다자관계 협력강화 지수로, 구체적으로는 국제회의(고위급 회담) 참가 및 개최 회수의 형태로 제시된다. 외교부가 제공한 세부실적은 군축·비확산 관련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횟수가 총 12회, 안보관련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횟수가 총 11회, 인권관련 국제회의의 참가 및 개최 횟수가 총 4회이며, 목표대비 달성률은 87%로 나타난다(외교부 유엔과, 2014). 이는 국제회의의 개최 및 참가라는 정책의 소기 목적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치이다. 다만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이나 국제무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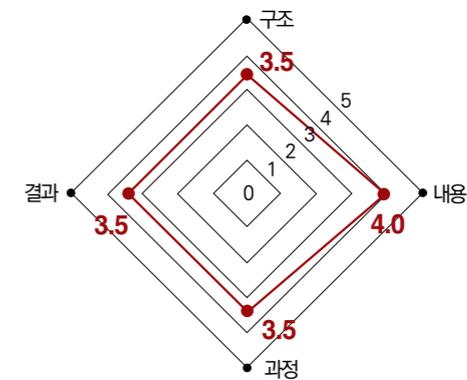
의 위상 변화라는 목표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는 보다 대안적인 성과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⑨ 정책의 결과 2: 정책의 만족도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최강 외, 2014) 결과에 따르면 질문 중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떠오르는 정책을 물어보았을 때, '중견국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에 불과했다. '세일즈 외교'라는 응답이 26.9%를 차지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3.2%를 차지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중견국 외교, 즉 글로벌 다자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인식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현재 이 정책에서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인식도 낮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정책의 만족도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정성평가 결과를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과정(3.5), 구조(3.5), 내용(4.0), 결과(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3]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영역별 정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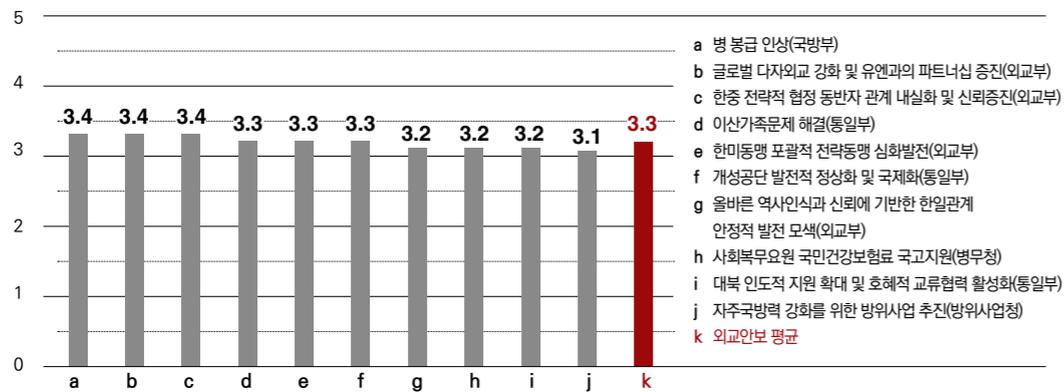


3) 평가결과 종합

가) 설문조사와 정성평가 결과 합산

일반인과 전문가 설문조사와 전문가 정성평가를 거쳐 가중치를 계산하여 종합적으로 정책을 평가한 결과,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10개 정책이 근소한 차이만을 나타냈다. 10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그림 4-174]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순위



평가지표별 특징을 보면, 외교안보 분야의 경우 그 특성상 정책과정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지 않게 평가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외교정책의 경우 정책의 추진이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정경영, 2013), 그 효과성과 만족도의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안보정책의 경우에도 그 효과성과 만족도가 높지 않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병 봉급 인상과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책별로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먼저 병사처우개선을 위한 병 봉급 인상 정책의 경우 근소한 차이지만 외교안보분야 정책 중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평가지표별로 보았을 때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봉급 인상이 병사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³³⁾ 또한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책 환류 시스템이 보완되어 의견수렴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산가족문제 해결 정책의 경우 대부분의 지표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이산가족문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보다는 정치 상황의 변화에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새로운 정책대안들, 즉 8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긴급특별 상봉의 추진(고경빈, 2014, 이용화-홍순직, 2014),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상시적 운영, 화상상봉의 실시, 서신 교환의 상시화, 장기 가족방문 형식으로의 가족재결합 등의 도입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정책의 경우 특히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33) 우리 정부가 병사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한국 병사가 받는 봉급은 여전히 다른 징병제 국가의 병사 봉급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병무청, 외국의 병역제도 참고 http://www.mma.go.kr/kor/s_about/about/about06/about06011/5029_index.html)

가 낮게 평가된다. 이는 최근의 방산비리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리의 근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절차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질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방위사업 관련 정책의 특성상 국민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실질적인 자체 감사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변용완, 2011).

대북 인도적 지원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의 경우 정책의 만족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전문가 평가에서 지적된 것처럼 예산 측면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정책의 경우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 참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절차와 정책 환류 시스템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정책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인다(이광훈-김권식, 2008).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정책은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에 있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전문가 평가에서 지적된 것처럼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국제화라는 정책 목표의 불명확성이 낮은 효과성과 만족도의 원인을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실제 개성공단의 운영을 위한 절차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성공단의 유지에 과반수의 국민이 찬성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 목표의 구체화와 명확화, 국민 참여의 확대와 환류 시스템의 보완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2단계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복핵 해결 등의 문제와 개성공단 활성화를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민간주도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남북 당국 간의 합의를 조약화하여 북한에게 국제법상의 의무이행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배국열, 2014).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정책 역시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다. 이는 정책이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요구된다. 즉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태도 변화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 우리는 적극적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내셔널리즘을 극복한 대일정책이 필요하며(박영준, 2013), 이와 더불어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정책의 경우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정책의 경우 수혜적 정책에 해당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문명재, 2010) 의견수렴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러한 평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책임성과 관련하여 일반인 및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원인은 이 정책에 관련된 부처 간 협력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정책 환류 시스템을 통한 정책의 책임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불투명한 점 역시 원인이 되고 있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병무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계는 제시되어 있으나, 수요부처와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

무요원에 대한 지원정책이 실제 사회복지무요원의 역량 강화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이 낮은 효과성 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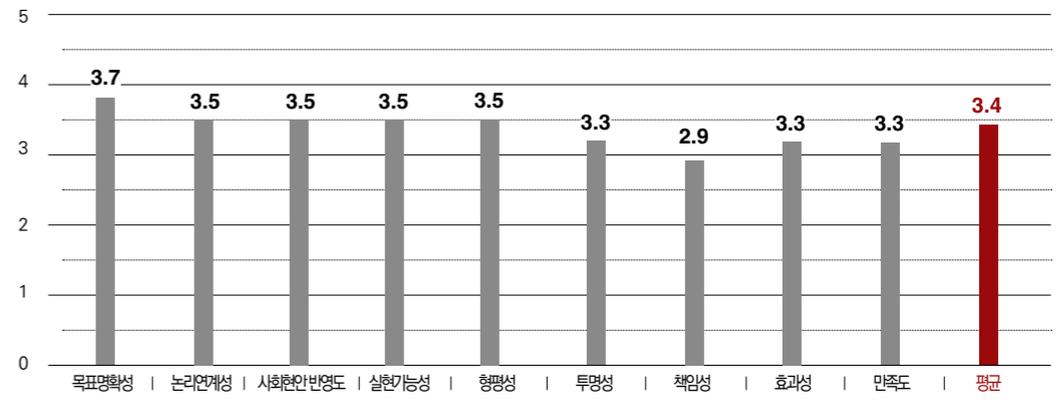
한중 전략적 협정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정책의 경우 외교안보정책 중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평가 지표 중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앞서 정성평가 부분에서 설명된 것처럼 정책과정에서 의견수렴절차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정보제공도 행해지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은 정치안보와 인문유대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목표가 국민에게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정치안보와 인문유대라는 정책 목표는 경제적 측면의 한중관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역시 관련 국민과 기업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국민 참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절차, 정책 환류 시스템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의 구조와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는 한중관계의 특성상 북핵문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관계 등이 유동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김홍규, 2014).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정책 역시 투명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앞서 살펴 본 것처럼 정책과정에 정책 추진 부처와 전문가 참여만이 이루어졌을 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앞서 한중관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 참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 환류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미 FTA를 포함하여 앞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이 부담하게 될 정치·경제적 비용문제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된다(이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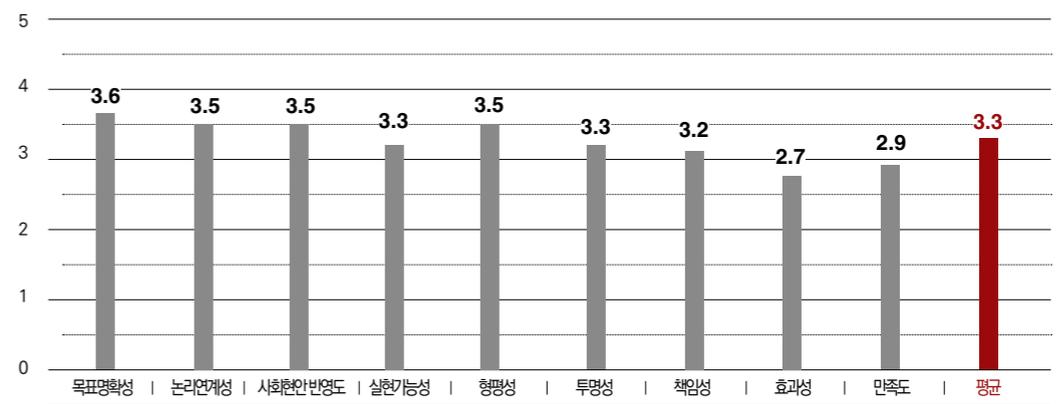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정책의 경우 외교안보정책 중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의 투명성과 만족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 평가에서 지적된 것처럼 정책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낮은 점 등이 만족도 평가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자외교의 특성상 앞서 살펴 본 한미, 한중, 한일관계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이 그대로 적용되게 되며, 이 정부에서 추진한 다자외교의 성과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경색된 한일관계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북핵문제, 미중관계 등 우리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상존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며 구체적 정책 목표의 설정과 국민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등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림 4-175]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항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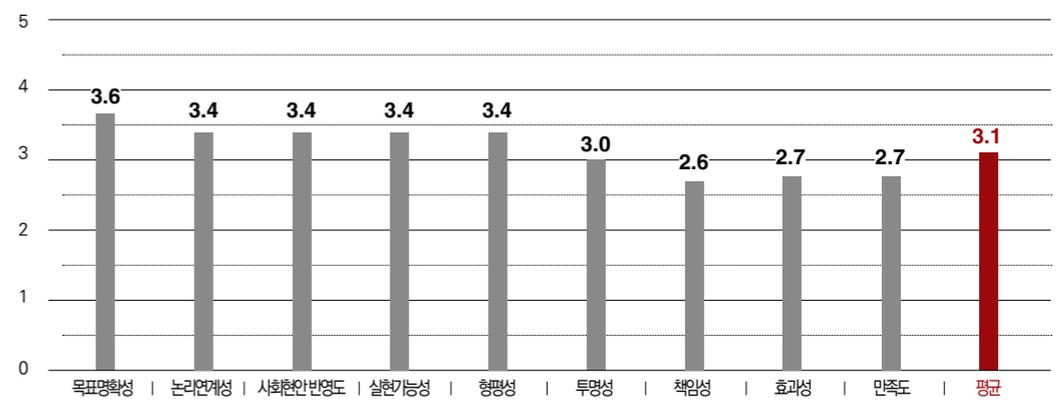
병 봉급 인상(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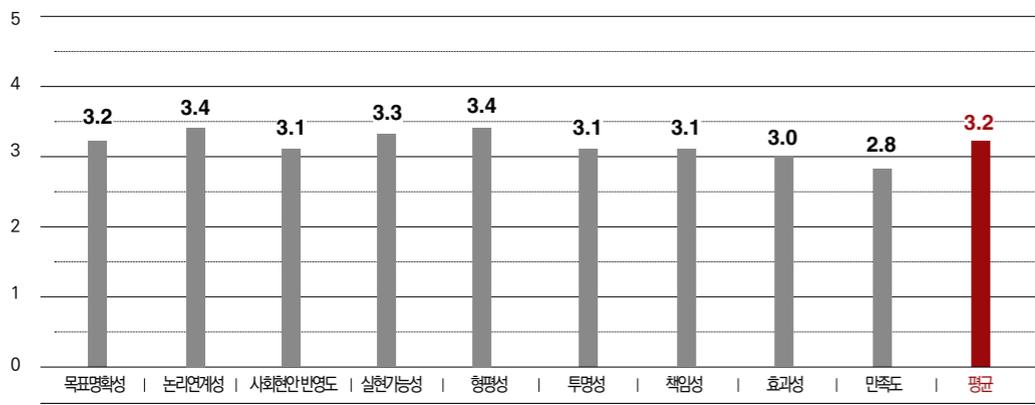
이산가족문제 해결(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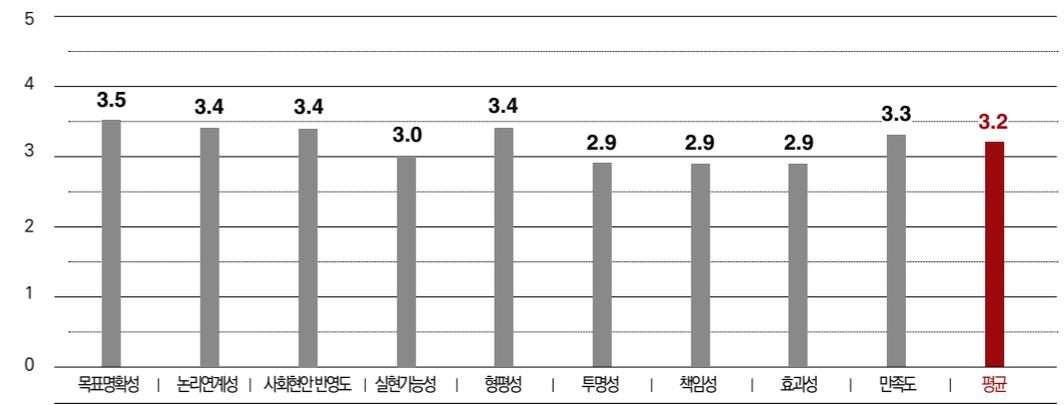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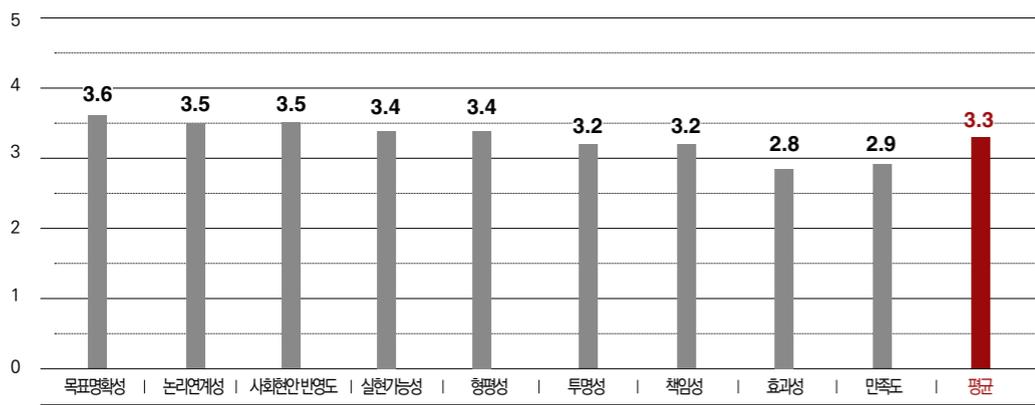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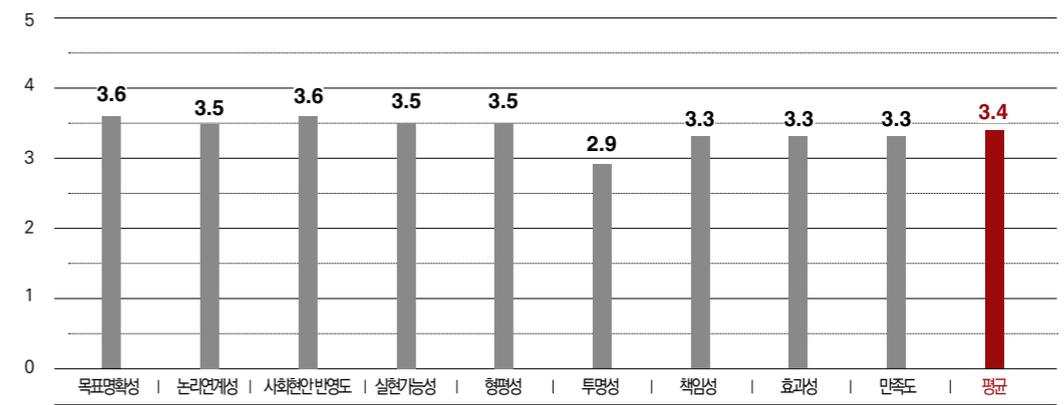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병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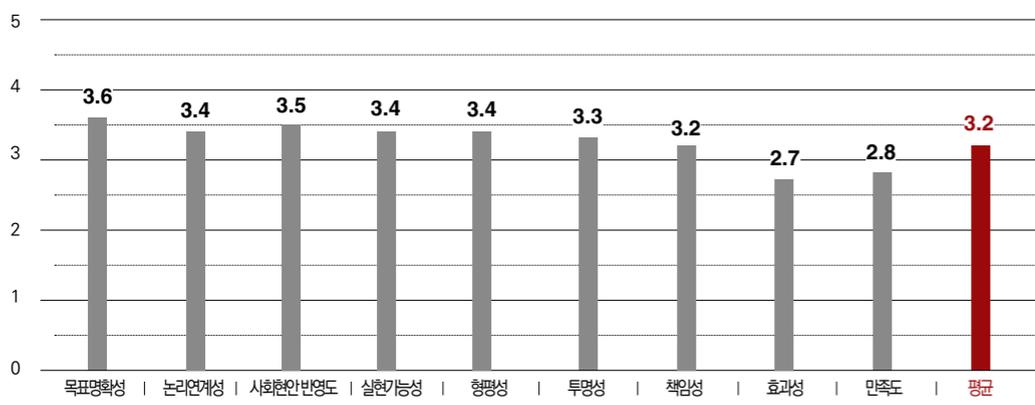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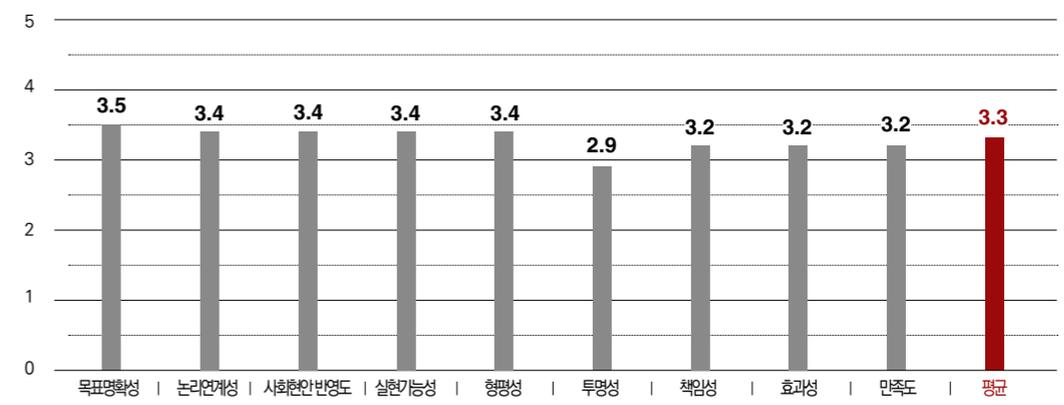
한중 전략적 협정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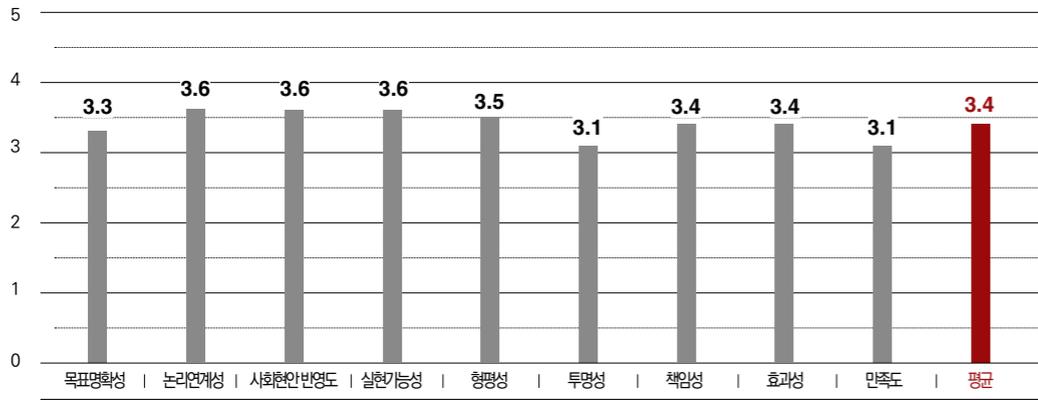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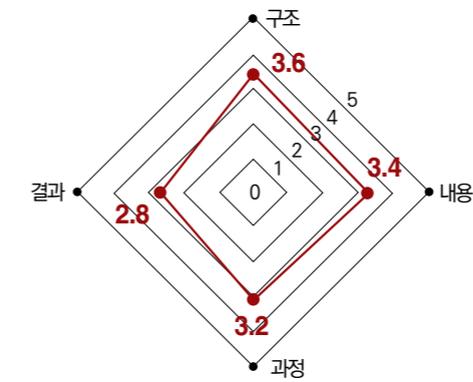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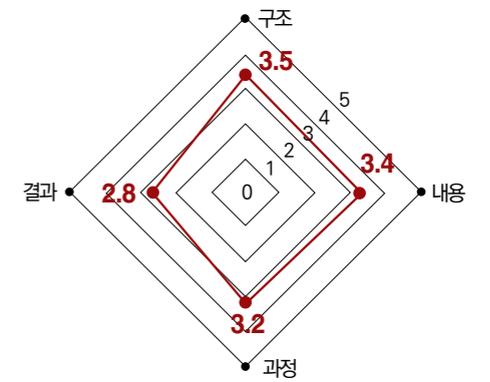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외교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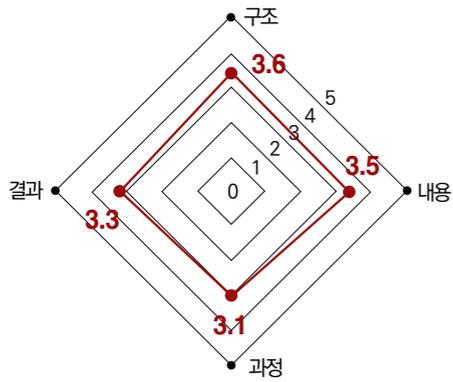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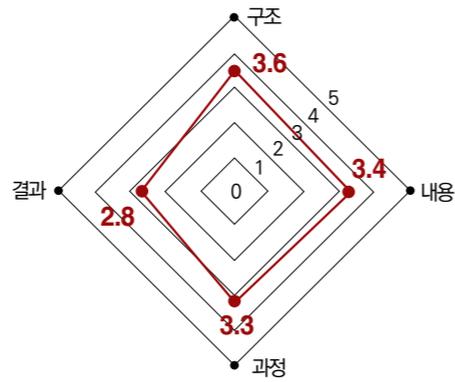


[그림 4-176] 외교안보정책별 종합평가결과: 설문영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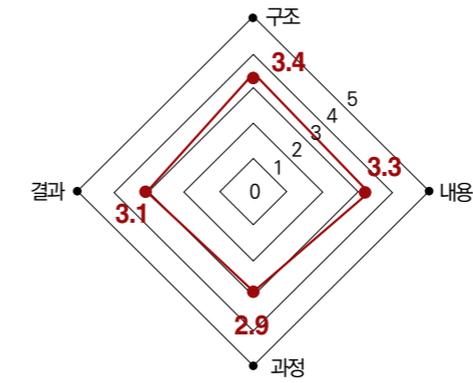
병 봉급 인상(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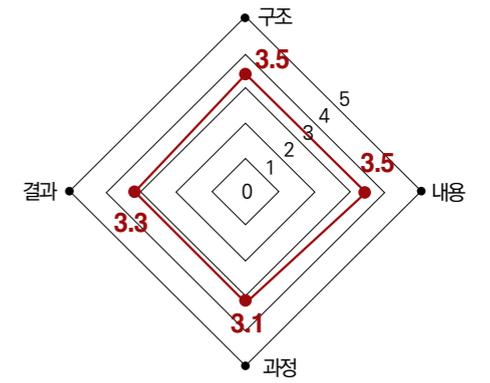
이산가족문제 해결(통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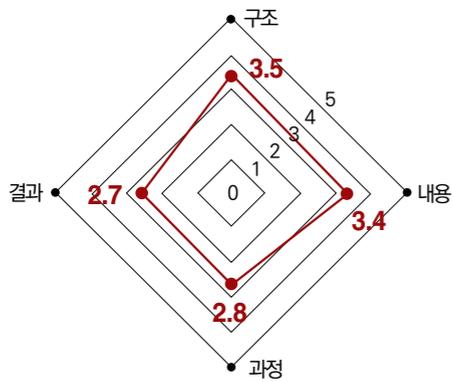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병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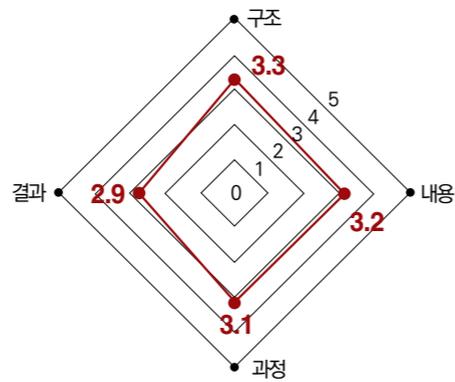
한중 전략적 협정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외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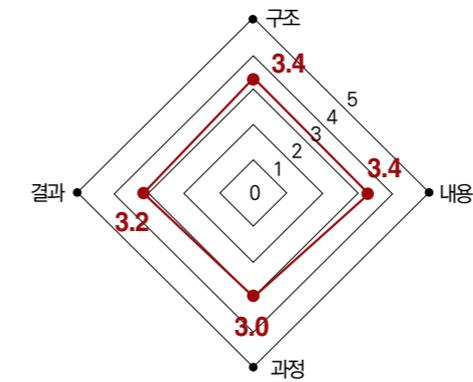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방위사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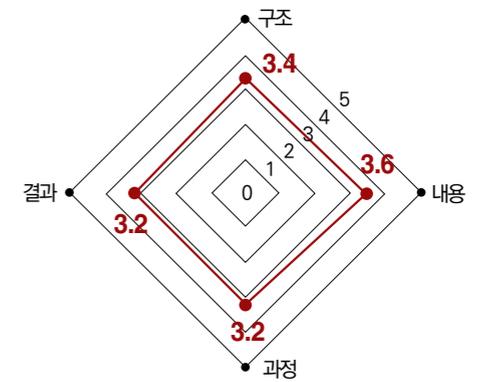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통일부)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외교부)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외교부)



05

제5장 정책평가 결과 종합 및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평가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40개 정책은 대한민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40개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의 정성평가를 종합한 결과는 평균 3.1로 “보통(3점)”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0개 정책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 분야의 비교

4개 정책 분야의 종합 점수를 비교하면 외교안보정책 분야가 3.3점, 사회복지정책 분야가 3.2점으로 “보통”을 약간 웃도는 결과를 보였으며, 경제정책 분야가 3.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육문화정책 분야는 2.9점으로 “보통”을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 외교안보정책 분야가 다른 세 분야에 비해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북한 문제나 일본 과거사 문제 등의 현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대다수의 외교안보정책이 성격상 국민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어 중간 정도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302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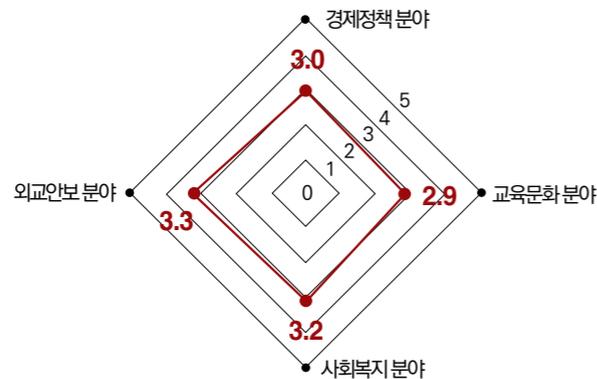
1. 정책평가 결과 종합

평가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40개 정책은 대한민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40개 정책에 대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그리고 연구진의 정성평가를 종합한 결과는 평균 3.1로 “보통(3점)”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0개 정책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분야를 막론하고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정책 분야의 비교

4개 정책 분야의 종합 점수를 비교하면 외교안보정책 분야가 3.3점, 사회복지정책 분야가 3.2점으로 “보통”을 약간 웃도는 결과를 보였으며, 경제정책 분야가 3.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고, 교육문화정책 분야는 2.9점으로 “보통”을 밑도는 결과를 보였다. 외교안보정책 분야가 다른 세 분야에 비해 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북한 문제나 일본 과거사 문제 등의 현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대다수의 외교안보정책이 성격상 국민들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어 중간 정도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안보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는 2014년 2월 24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분야별 전문가 평가 결과(10점 만점에 8점)보다 다소 낮은 결과인데, 최근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복지정책 분야는 성격상 부의 재분배 측면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이긴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 분야의 결과가 긍정적이지만 “보통”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혜택을 보는 다수의 국민들에게조차 만족할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나타난 경제정책 분야는 최근 활력을 잃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일부 정책은 정책의 목적과 효과도 불분명하며, 최근 논란이 된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개 정책분야에서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인 교육문화정책 분야는 효과가 커 보이지 않는 교육정책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문화정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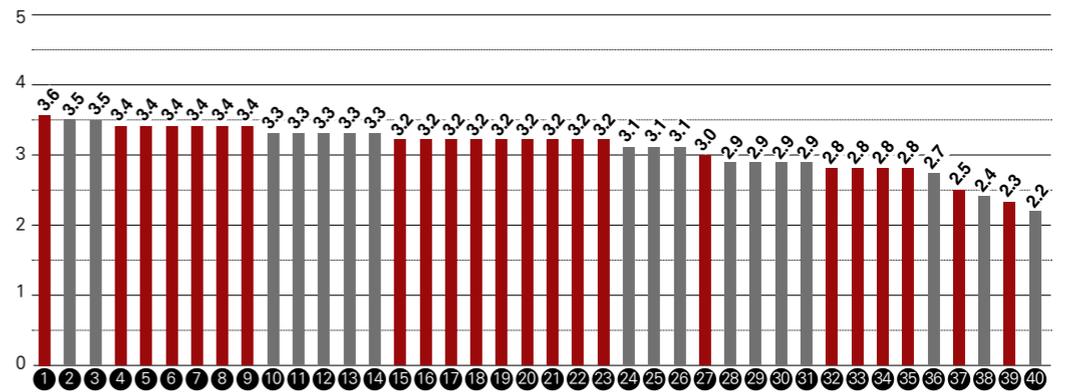
[그림 5-1] 4대 정책 분야별 종합 평균



② 개별 정책의 비교

40개 정책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27개 정책이 “보통” 이상으로 나왔고, 13개 정책은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40개 정책 가운데 “긍정(4점)”을 넘어서는 정책은 없었다. “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13개 정책 가운데 교육문화정책이 6개, 경제정책이 5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이렇게 평가받은 정책의 다수는 대학입시, 기초연금, 단통법과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책 또는 공유형 모기지, 반값등록금, 마린나 산업 육성과 같이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존재감이 높지 않은 정책이 포함되었다. 반면 “보통” 이상으로 평가된 정책들의 상당수는 외교안보와 관련된 정책과 사회복지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다. 특히 사회복지정책 가운데 국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관련 정책과 경제적·사회적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40개 정책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3.6점)”이었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단

[그림 5-2] 40개 정책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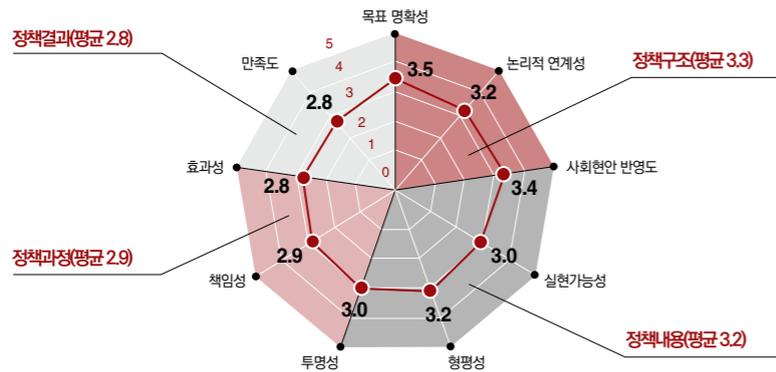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안정과 내실화(보건복지부)
- 2 가맹점주 권리강화(공정거래위원회)
- 3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조성·운영(산림청)
- 4 성급병실료·선택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보건복지부)
- 5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관세청)
- 6 병·봉급 인상(국방부)
- 7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외교부)
- 8 한중 전략적 협정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외교부)
- 9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 10 사회적 기업 육성(고용노동부)
- 11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제 강화(교육부)
- 12 이산가족문제 해결(통일부)
- 13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외교부)
- 14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통일부)
- 15 일감몰아주기 과세(국세청)
- 16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외교부)
- 17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보건복지부)
- 18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보건복지부)
- 19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병무청)
- 20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대책(교육부/법무부)
- 21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통일부)
- 22 기술 유망기업 발굴·지원(중소기업청)
- 23 모성보호육아지원(고용노동부)
- 24 색깔있는 마을 육성 추진(농림축산식품부)
- 25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방위사업청)
- 26 취약아동 돌봄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내실화(보건복지부)
- 27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정책(교육부)
- 28 행복주택 공급(국토교통부)
- 29 대학입시 간소화(교육부)
- 30 공유형 모기지(국토교통부)
- 31 의료·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육성(유망서비스산업 육성)(기획재정부)
- 32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교육부)
- 33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여성가족부)
- 34 기초연금 도입(보건복지부)
- 35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교육부)
- 36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관리(여성가족부)
- 37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정책(문화체육관광부)
- 38 BK21플러스사업(교육부)
- 39 마린나 산업 육성(해양수산부)
- 40 단일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미래창조과학부)

말기 유통구조 개선법(2.2점)”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정부는 국민 생활에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책은 당장 정책을 집행하기 보다는 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높이거나, 이러한 노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집행의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이 공감하지 않고, 현실성이 낮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거나, 집행된다 해도 그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책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정책을 폐지하거나 집행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

③ 평가항목별 비교

40개 정책 모두를 대상으로 9개 평가지표와 영역별 평균을 산출한 결과 “정책구조(3.3점) 정책내용(3.2점) 정책과정(2.9점) 정책결과(2.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에서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은 정책결과와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책이 정부가 계획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평가하고 있다. 평가영역이 정책결과와 집행의 전체적인 맥락을 감안하였고, 전체 평균이 “보통”이라는 결과는 정부가 정책결과과정부터 집행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와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성(2.9점), 정책의 효과성(2.8점)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의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정책에 대한 만족도(2.8점)도 같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림 5-3] 40개 정책 평가지표별 점수 결과



2.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별 제언

1) 경제정책 분야

경제분야 정책은 전반적으로 주요한 사회현안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 전문가 설문조사와 연구진 정성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마리아산업육성, 단통법,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를 제외하면 정책의 구조와 내용에 비하여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저조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많은 경우 경제분야 정책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어 정책과정에서 이를 수렴해서 반영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별로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경우 정책의 실현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감몰아주기과세의 경우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손해가 재벌이라는 힘을 가진 특정집단에 집중되다 보니 정책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정책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반 국민의 의견개진을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중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의 경우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의료와 교육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형평성, 투명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고, 문제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 및 전문가들과의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가 있다면 풀고 문제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주택의 경우 높은 사회현안 반영도와 명확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행복주택 입지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은 앞으로 풀어야 할 급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관리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의 민주성,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리아산업육성의 경우 마리아산업은 개념 자체가 모호할 뿐 아니라 실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다. 여기에 뚜렷한 사회현안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혜택이 사회 전반으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성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및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매우 제한적인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해양레저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정책의 대상과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술유망기업발굴지원의 경우 산업경제에서 창의경제로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인 노력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지나치게 양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원래 의도한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에 대한 질적인 고

려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정책의 내용을 정책수요자의 니즈에 맞게 과감하게 수정하려는 의지와 노력 또한 요구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려는 정책적 수단은 뚜렷하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수단에는 보조금 경쟁이 서비스 요금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큰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 전제에는 다소 논리적 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의 논리적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색깔있는 마을 육성은 다소 인지도가 낮은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정책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책 목표의 명확성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존재하므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의 목표가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가맹점주 권리 강화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갑을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현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책 수단을 단순한 과징금 부과에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정책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당근과 채찍 성격의 정책 수단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된다.

공유형모기지 높은 현안 반영도와 명확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주택구입 의사결정의 행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수익공유형은 주택가격 상승시 손익공유형은 주택가격 하락시 유리한데 주택가격 상승시엔 수익을 공유한 인센티브가 주택가격 하락시엔 주택을 구입할 인센티브가 낮아지므로 정책의 메리트가 높지 않음) 실현가능성이 낮은 정책이다. 따라서 정책의 논리구조를 정책 수요자의 의사결정 인센티브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분야

기초연금이나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 및 보건정책들은 다차원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가 다소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서술되어진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이러한 서술 자체가 문제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추상적인 정책목표와 함께 본 정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이 투입되어 예상되는 성과, 즉 국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한 성과치를 제시하고 기초연금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본 정책과 다른 정책들이 어떻게 동시에 협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현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의 생활비를 일부 보조해주는 불명확한 목표만이 있다. 이를 노인빈곤율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정책의 책임성 역시 더욱 상승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을 줄여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몇 %까지 높일 것을 목표로 하는지, 영유아보육료+모성보호사업(일가족양립사업)+경력단절여성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여성의 고용율을 어느 정도까지 어떠한 단계로 확대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

과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다양한 정부의 정책계획서들이 성과 위주로 서술되어 있지 못하고 재정이나 인력에 대한 투입지표 혹은 제도 수혜자가 어느 정도(예를 들어 70% 노인) 인지 등과 같은 산출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책체감을 높이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도 이어진다. 효과성이란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가지고 평가된다. 그런데 목표 자체가 '취약계층 보호'나 '부담경감' 등과 같이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정책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적인 정책목표와 함께 부차적으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성과를 제시해야 효과성이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부분의 정책에서 효과성이 낮은 것은 단순히 효과성이 낮다는 것을 넘어 '효과성'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형평성과 실현가능성을 파악하고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복지정책의 경우 복지나 보건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 '형평성'의 기준과 조건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단순히 보편적 적용이 형평성이 높거나 일부 선별적 적용이 형평성이 높다고 평가하지 않았다. 그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준인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파악된다. 돌봄이 더 필요하거나(노인장기요양보험) 의학적 개입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왜 '70%'까지인지, 왜 국민연금의 기여기간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평가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빈곤층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도 수혜자가 형평성이 있게 선별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이는 비수급빈곤층과 관련된 자살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고되면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금번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각 정책마다 목표에 따라서 재정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지출하는 정책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과연 제도를 도입하고 계획하면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각 정부주체들이 어떻게 재정을 부담해야 할지가 명확히 준비가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앙정부나 정당의 일방적 계획이 아닌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을 거쳐서 논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 많은 정책들이 이러한 절차와 계획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보육과 관련된 예산 혹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예산의 지속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목표가 뚜렷한 정책일수록 정부는 보다 '사회적' 방식으로 재정에 대한 대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낮았던 점은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들이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가졌다는 것은 정부 당국의 역할이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정책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이들 역시 설문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수도 있지만, 전문가 평가에서도 그다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책의 성과를 뚜렷이 제시하는 것 자체가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에 대한 논의와 개혁과정을 너무 서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많은 사회복지정책은 도입을 하게 되면 혹은 개혁을 하게 되면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 효과를 나타내고 때로는 눈덩이효과(snowball effect)를 가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에서 형식적인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밀어붙이기식' 정책개혁을 하는 경우가 많다. 5년 대통령임기제에서 정책개혁을 위한 장기적 사회적 대화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대국민정책보고서와 실질적 사회적 대화절차(consultation process)를 거쳐서 입법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홍보를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전문가 평가에만 기대지 말고, 정책이 국민의 피드백 속에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문화정책 분야

교육문화 분야 10개 정책에 대해 다차원의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문화 분야의 정책들은 목표설정이 명확하고 정책대안의 논리적 연계성도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책설계의 품질은 다른 측면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절차의 운영 및 제도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분야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는 상당부분 정책과정에 대한 평가에 의해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과 후 돌봄사업 기능 강화 및 연계 체계 강화 정책은 개별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구조평가항목인 목표명확성과 논리연계성, 정책내용항목인 사회현안 반영도와 형평성, 그리고 정책결과항목인 효과성과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과정평가항목인 투명성과 책임성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예방 정책은 개별평가지표의 평균이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다. 구조평가항목의 목표명확성과 논리연계성, 그리고 정책내용항목인 형평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실현가능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정책설계 자체의 질은 좋은 편이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학생 사망사고의 여파로 인하여 정책목표의 구현과 효과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 간소화 정책은 개별평가지표의 평균이 교육문화 10개 정책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구조평가항목의 목표명확성과 논리연계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개별지표들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복잡한 대학입시 제도는 수험생과 많은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거래비용만을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본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내용, 정책과정, 정책결과의 제반 측면에서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특히,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 지원 확대 정책은 개별평가지표의 평균이 동일 분야 10개 정책의 전체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세부적으로 목표명확성과 사회현안 반영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평가항목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실현가능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설계의 질을 제고하고 의견수렴 및 환류의 기제를 내실화하는 등의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고등교육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단 평가 및 지원의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전략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정책은 개별평가지표의 평균이 교육문화 분야 10개 정책의 전체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세부적으로 목표명확성에 대해서만 높은 평가결과를 받았다. 정책구조항목에서 목표명확성에 비해 대안의 논리연계성에 대해서는 점수가 매우 낮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른 지표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었으며, 특히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가점수가 매우 낮았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대안설계를 비롯한 제반 측면에 대한 점검 및 강화가 필요하다.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정책은 개별평가지표의 평균이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편이었다. 구조평가항목의 목표명확성과 논리연계성, 그리고 내용평가항목의 사회현안 반영도와 형평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다른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책임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최근 누리과정 소요재원의 부담을 둘러싸고 시도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갈등을 보이고 있어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소요 재원 확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하다.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 정책은 개별평가지표의 평균이 동 분야 다른 정책의 전체 평균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학생 수련활동 시설의 안전미비로 인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 사회현안 반영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정책구조, 내용, 과정, 효과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대안의 논리연계성, 실현가능성, 형평성, 효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휴양림 확대 및 치유의 숲 조성 정책은 교육문화 분야 10개 정책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정책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평가항목에서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개별지표에 대한 평가결과가 매우 균형적이었다. 다만, 과정평가항목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결과가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휴양림을 관리하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내방객 환류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K21플러스사업 정책은 개별평가지표의 평균이 동일 분야 10개 정책 중에서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세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 항목도 전무하였다. 이 정책은 정책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제반 측면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고등교육사업의 특성상 사회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가시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으나, 정책목표, 대안의 연계성, 실

현가능성, 투명성, 책임성 등 정책설계와 시행과정의 한계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업단 위주의 평가 및 지원 등 관리적 차원을 넘어서 미래 고등교육 인재양성에 대한 국가전략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산업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정책은 교육문화 영역에서 평가된 정책들 중에서 개별평가지표의 평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목표명확성을 제외하고 정책구조, 내용, 과정, 결과의 제반 측면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부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의 설계 및 추진체계, 사회전체에 대한 파급효과, 추진과정의 개방성 등에 대하여 개선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문화자산과 해외 방한시장의 확대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것을 보인다.

4) 외교안보정책 분야

외교안보 분야 정책의 평가를 수행한 결과 정책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먼저 정책의 평가지표 중 정책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일반인과 전문가 조사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책목표의 명확성이 낮은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외교안보 분야의 특성상 정책목표가 추상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책목표의 불명확성은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외교안보정책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외교안보 분야의 특성상 정책과정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로 인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지 않게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정보공개 범위 설정은 매우 어렵고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의 기본적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필요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국민 참여가 허용되도록 하여 정책의 성립과정과 추진과정에서 국민에 대한 홍보, 정보제공, 의견수렴 등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안보 정책의 경우 특히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는 경우 이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즉 투명성이 낮은 정책의 경우 정책의 사회현안 반영도, 형평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등이 함께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국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셋째, 외교안보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의 마련에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과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평가대상 정책 중 병 봉급 인상과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예로 들어보면, 이러한 정도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현역병이나 사회복지무요원 등에 대한 처우는 그동안 국민의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설정된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 처우개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의 내용이 수혜적이든 부담적이든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평가대상 정책 중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의 경우, 일반 국민의 이해 부족

으로 정책 자체에 특별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며, 이는 수혜적 정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해 정책의 우선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현실에서 수혜적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별로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해본다면, 먼저 병사처우개선을 위한 병 봉급 인상 정책의 경우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봉급 인상이 병사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정책 환류 시스템이 보완되어 의견수렴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산가족문제 해결 정책의 경우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이산가족 문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보다는 정치 상황의 변화에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관련되는데,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대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 정책의 경우 특히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다. 이는 최근의 방산비리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리의 근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의견수렴절차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실질화하여야 하며, 방위사업 정책의 특성상 국민에 대한 투명성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인 자체 감사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확대 및 호혜적 교류협력 활성화 정책의 경우 정책의 만족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책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의 부족에 기인하며, 따라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공감대를 보다 더 이끌어낼 수 있는 환류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정책은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에 있어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 목표의 불명확성을 시정하여 구체화하고, 국민 참여의 확대와 환류 시스템의 보완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의 2단계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활성화 문제를 이원화하여 추진하고, 민간주도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남북 당국 간의 합의를 공식화하여 북한에게 국제법상 의무 이행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 안정적 발전 모색 정책 역시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가 낮게 평가된다. 이는 정책이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에 기반한 한일관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지 않음에 기인한다. 정책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목표의 구체화와 이에 적합한 새로운 대안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가 요구된다. 즉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태도 변화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 우리는 적극적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는 내셔널리즘을 극복한 대일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올바른 역사인식과 신뢰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

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정책의 경우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정책의 경우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한중 전략적 협정 동반자 관계 내실화 및 신뢰증진 정책의 경우 역시 정책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얻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국민 참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과 의견수렴절차, 정책 환류 시스템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의 구조와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는 한중관계의 특성상 북핵문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관계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한미동맹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정책 역시 투명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정책 과정에 정책 추진 부처와 전문가 참여만이 이루어졌을 뿐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정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한중관계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 환류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이 부담하게 될 정치·경제적 비용문제 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된다.

글로벌 다자외교 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정책의 경우 정책의 투명성과 만족도가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자외교의 특성상 앞서 살펴 본 한미, 한중, 한일관계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이 그대로 적용되며, 현 정부에서 추진한 다자외교의 성과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경색된 한일관계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북핵문제, 미중관계 등 우리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상존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과 국민에 대한 홍보와 정보제공 등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1. 경제정책 분야

- 구창환. 2014. "새누리당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업코리아』(9월 4일).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1442> (검색일: 2014.12.1.)
- 국세청. 2014.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2014년 증여세 신고 안내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 국토교통부. 2013. 보도자료. '행복주택 국민에게 물어보니?' (7월 31일).
- 국토교통부. 2013. 보도자료. '공유형 모기지 연내 5천가구로, 2천가구 늘린다' (9월 12일).
- 국토교통부. 2014a. 행복주택 브로슈어
- 국토교통부. 2014b. 부처제공 자료
- 국토교통부. 2014c. 보도자료. '공유형모기지 3. 26일부터 무주택자(5년 이상)도 신청가능' (3월 25일)
-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2013. [주택] '공유형 모기지' 12월 9일부터 1.5만호 공급,
<http://korealand.tistory.com/2514> (검색일: 2014.12.7.)
- 고용노동부. 2014.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집중신고기간(11.10~12.9) 운영' (11월 10일).
- 기획재정부. 2014. 보도자료.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8월 12일).
- 김건우. 2014. "단통법은 통신사편?... 소비자들 위약금 폭탄 맞을까 '덜덜'". 『컨슈머타임즈』(9월 29일)
<http://www.consumemews.co.kr/news/view.html?pid=434238&cate=&page=> (검색일: 2015. 2.16.)
- 김유정. 2014. "단통법 여파... 단말기 판매량 60% 급감". 『디지털타임즈』(11월 26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2255220> (검색일: 2015.2.16.)
- 농림수산식품부. 2011. 보도자료. '농식품부,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례집' 발간' (10월 20일).
- 매일경제 사설. 2014. "단통법 개정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가 좋다". 『매일경제』(10월 16일).
<http://news.mk.co.kr/column/view.php?sc=30500003&cm=%BB%E7%BC%B3&year=2014&no=1317664&relatedcode=&wonNo=&slID> (검색일: 2015.2.16.)
- 미래창조과학부. 2014. 보도자료. '단통법과 통피아 제하의 논설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1월 11일).
- 신현우. 2014. "목동-공릉 '행복주택' 시범사업, 1년만에 운영 결정". 『머니투데이』(12월 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378037> (검색일: 2015.2.16.)
- 윤보람. 2014. "단통법 시행 두달, 통신비 부담 여전히...대폭 보완해야". 『연합뉴스』(12월 1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7275591> (검색일: 2015.2.16.)
- 이석우. 2014. "부동산 살릴 야심작 '공유형 모기지'의 추락". 『조선비즈』(11월 17일)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16/2014111602264.html (검색일: 2015.2.16.)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2014.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공사례집,
<http://www.smtech.go.kr/front/itg/eb/bestCaseBook.do> (검색일: 2014.12.10.)
- 통계청. 2012. 『2012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 Bingham, R. and Felbinger, C. 2002. Evaluation in Practice. Chatham House.

2. 사회복지정책 분야

고용노동부. 2014.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집중신고기간(11.10 ~ 12.9) 운영.(11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2012. 제2차 사회적 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
관계부처 합동. 2014. 보도자료,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10월 15일)
관계부처 합동. 2014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2월 4일)
국민건강보험. 2013.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88.5%... 1.6% 상승' (7월 4일)
국회예산처. 2014. 실업급여사업평가.
국회예산처. 2012.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평가
김용익. 2013. 보도자료, 4대 중증질환 환자 중 26만명은 '해당 없음' (10월 14일)
김용익. 2013. 보도자료, 희귀난치질환 40만명 4대 중증질환 공약 '사각지대' (11월 4일)
김윤. 2014.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평가, 『대한의사협회지』, 57(3): 198-203.
남윤인순. 2014. 경력단절 막스한 불러오는 새일센터. (10월 26일)
문진영 외. 2014.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박인화. 2013. 2014년 보건·복지 예산안의 구조와 쟁점, 『보건복지 Issue and Focus』, 212호, 1-8.
보건복지부. 2013.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88.5%... 1.6% 상승' (7월 4일)
보건복지부. 2014.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 2014. 2월 13일 서울신문 '증세없는 3대 비급여 개선안은 임시 방편'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2월 13일)
보건복지부. 2014.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제공 수준 등 종합 평가결과 발표' (4월 25일)
보건복지부. 2014. 보도자료,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2월 5일)
보건복지부. 2014. 보도자료,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4개소 행정처분 등 엄정조치' (2월 5일)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노인장기요양시설 서비스제공 수준 등 종합 평가결과 발표' (4월 25일)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1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2010-2014) 2014년도 시행계획.
윤성주. 2014. 기초연금제도의 쟁점과 과제, 『재정포럼』, 1월호, 8-10.
윤희숙 외.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이재영. 2014. 보도자료,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간의 격차 심각. (2월 14일)
조만규. 2014. 「4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 예산부족으로 차질」, 『국민일보』(11월 5일)
한국노총. 2014. 『한국노총 모성보호·육아휴직 실태 분석 결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2014년도 사업설명회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황옥경 외. 2013.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3. 교육문화정책 분야

감사원. 2013. 『감사결과보고서-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실태』
감사원. 2014. 『감사결과보고서-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교육부. 2011a. 보도자료, "만5세 어린이 교육·보육, 국가가 책임진다." (5월 2일).
교육부. 2011b. 보도자료, 「5세 누리과정」제정(안) 마련 (8월 12일).
교육부. 2011c. 보도자료, 「5세 누리과정」고시 (9월 2일).
교육부. 2011d. 보도자료, 「5세 누리과정」도입 관련 법령 개정 공포 (9월 30일).

교육부. 2011e. 보도자료, 5세 누리과정 만 4세, 만 3세 확대 (12월 14일).
교육부. 2012a. 3, 4세 누리과정 공청회 제정(안) (6월 7일).
교육부. 2012b. 보도자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완성 (6월 11일).
교육부. 2012c.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2년 국가장학금사업 기본계획(안) (11월).
교육부. 2012d. 보도자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안전을 강화한다." (11월 5일).
교육부. 2012e.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리플릿.
교육부. 2013a. 「BK21 플러스 사업」기본계획 (5월).
교육부. 2013b. 「BK21 플러스 사업」FAQ (5월 15일).
교육부. 2013c. 2013년 국가장학금 사업 기본계획 수정(안) (1월).
교육부. 2013d. 지방대학 육성방안 질의답변 자료(Q&A) (7월 31일).
교육부. 2013e. 지방대학 육성방안 국정과제 기본계획 (10월).
교육부. 2013f. 3-5세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 2013g.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교육부. 2013h.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안) (2013년 7월).
교육부. 2014a.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2014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 (1월 10일).
교육부. 2014b. 보도자료, 초등방과후 돌봄확대 연계 운영계획발표 (1월 28일).
교육부. 2014c.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2월).
교육부. 2014d. 보도자료, "학교폭력, 현장에서 해결한다." 관계부처 합동,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발표 (7월 23일).
교육부. 2014e. 보도자료,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발전방안(시안)발표 (8월 28일).
교육부. 2014f. 보도자료, 「지방대학 육성방안」확정 발표 (11월 4일).
국회예산처. 2014.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2013. 보도자료, "관광불편 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협업 가동" (7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 2014a. 『2014년 주요업무계획』-관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
문화체육관광부. 2014b. 보도자료,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2014c.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4d. 2014년 관광두레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4e.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투자대상.
산림청. 2010a. 보도자료, 몸과 마음 치유하고 건강도 지키는 '치유의 숲' 인기(7월 28일).
산림청. 2010b.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사업비 지급 내역
산림청. 2012. 『치유의 숲 조성계획 사전승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산림청. 2014. 보도자료, 산림청, 내년 예산안 1조 9,325억 원 편성 (9월 29일).
여성가족부. 2013. 보도자료,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12.26) 통과 (12월 30일).
여성가족부. 2014a. 보도자료,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성 강화 지원, 화재대비 안전성 강화, 노후시설 보수·보강 위해 13억여 원 지원 (2월 4일).
여성가족부. 2014b. 보도자료,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제도 대폭 손질 (7월 15일).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10. 『방과후 학교 질적 수준 제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2010 지역문화관광포럼 자료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문화융성 시대 국가정책의 방향과 과제』

4. 외교안보정책 분야

강경석. 2014. “방위사업 비리 뿌리 뽑자… 檢-감사원 ‘투 트랙’ 가동.” 『동아일보』(11월 25일).

<http://news.donga.com/3/all/20141125/68144902/1> (검색일: 2014.11.28.)

고경빈. 2014.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본질과 해법- 정전 60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 『정책과학연구』 23권 2호.

국방부. 2013. 『국방비 확보논리 홍보책자,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2014. 『정책자료』.

김광진. 2013. 『국회의원 김광진 의정보고서』. 대한민국국회.

김동민. 2014. “박 대통령, 방위산업 비리 반드시 밝혀내야.” 『충북일보』(11월 25일).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69833> (검색일: 2014.11.29.)

김흥규. 2014. “중국국가 주석 시진핑의 2014년 방한과 한중관계.” 『전략연구』 통권 제64호, 63-89.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 2014. 『정책자료』

동아시아연구원-특정비영리활동법인 언론 NPO. 2014. 『제2차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한일 비교분석 결과 보고서』.

문명재. 2010. “정보제공의 정책수단적 특성과 향후 연구 방향.” 『행정논총』제48권 제1호, 51-70.

박명규 외. 2013. 『2013 통일인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박민혁. 2010. “사병월급 모아 대학등록금 된다면” 『동아일보』(8월 4일).

<http://news.donga.com/3/all/20100804/30299749/1> (검색일: 2014.11.28.)

박영준. 2013.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국제관계연구』 18권 2호, 49-73.

박정규-김형섭. 2013. “한중정상회담-성과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뉴시스』(6월 27일).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lD=article&ar_id=NISX20130627_0012191131 (검색일: 2014.11.28.)

박영준. 2013.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국제관계연구』 18권 2호, 49-73.

박희준. 2014. “남북경협 기업 대출한다지만 문턱 너무 높다.” 『아시아경제』(7월 10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61108480050985> (검색일: 2014.11.29)

방위사업청. 2007. 『방위사업청 새로운 출발, 방위사업청 1년의 성과와 다짐』.

_____. 2008. 『방위사업개론』.

_____. 2009.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활동백서 (2006-2009)』.

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siteId=dapa_kr&boardId=2629&page=2&boardSeq=7783&search=&column=&categoryId=&categoryDepth=&id=dapakr_030502000000&parent=
(검색일: 2014.11.29)

_____. 2014. 『방위사업청 옴부즈만활동백서 (2010-2013)』.

http://www.dapa.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page=1&boardId=2629&boardSeq=0_21198&titleId=null&id=dapa_kr_030502000000&column=null&search=(검색일: 2014.11.29)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2014. 『정책자료』.

배국열. “개성공단 정상화(8-14) 합의의 평가 및 개성공단의 발전적 개선방안.” 『통일연구논총』 제23권 제1호, 67-90.

변용완. 2011.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방위사업분야 자체감사기구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2014. 『정책자료』.

병무청. 『외국의 병역제도』.

http://www.mma.go.kr/kor/s_about/about/about06/about06011/5029_index.html (검색일: 2015.2.15.)

서호진. 2013. 『방위력개선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외교부. 2014.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일반재정)』.

외교부 동북아1과. 2014. 『정책자료』.

외교부 동북아2·3과. 2014. 『정책자료』.

외교부 북미1과. 2014. 『정책자료』.

외교부 유엔과. 2014. 『정책자료』.

윤상호. 2014. “방위사업청 인사개혁이 비리 척결의 출발점.” 『동아일보』(11월 19일).

<http://news.donga.com/3/all/20141119/67979237/1> (검색일: 2014.11.29.)

이광훈-김권식. 2008.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의 집행실패요인 분석: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4권 제4호, 147-194.

이규.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관계의 진화.” 『한국동북아논총』 제17권 제1호, 5-23.

이용화-홍순직.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긴급대책 필요하다.” 『통일경제』 통권 제107호, 31-42.

정경영. 2013. “새 정부의 출범과 외교안보정책 방향.” 『군사세계』 통권 205호, 15-19.

정성택. 2014. “사회복무요원 4인의 낮과 밤” 『동아일보』(9월 6일).

<http://news.donga.com/3/all/20140905/66254916/1> (검색일: 2014.11.29.)

정중섭. 2009. “병사들 월급부터 정상화하라.” 『제주일보』(5월 22일).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525#>(검색일: 2014.11.28.)

정책뉴스. 2013. “병사봉급 급식비 인상 등 장병 복지 집중.” (7월 11일).

http://www.korea.kr/policy/diplomacyView.do?newsId=148764323&call_from=naver_news (검색일: 2014.11.28.)

중소기업중앙회. 2014.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인식 조사』. 중소기업중앙회.

최강 외. 2014. 『세일즈 외교로 기억된 박근혜 정부의 외교 첫 해』.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_____. 2014.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아산정책연구원.

통일부. 2014.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일반재정)』.

통일부 교류협력국. 2014. 『정책자료』.

통일부 통일정책실. 2014. 『정책자료』.

현대경제연구원. 2013. 『현안과 과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다』.

_____. 2014. 『현안과 과제-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긴급 대책 필요』.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공동연구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 보고서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편)

1판1쇄 인쇄	2015년 3월 12일
저은이	염재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책임) 최진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평가총괄)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총괄) 이응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책 분야) 최홍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총괄) 최영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사회복지정책 분야) 김두래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총괄) 최상욱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육문화정책 분야)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총괄) 임 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외교안보정책 분야)
발행인	최윤호
아트디렉터	김 환
디자인	유진민, 전기욱
DTP	김민지
마케팅	김현민, 동아E&D
교정	김현민
인쇄	(주)꽃피는 청춘
펴낸곳	주식회사 동아E&D
주소	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계천로1 동아미디어센터
등록	2008년 2월 18일 101-86-37667
출판사등록	2010년 4월 20일 제300-2009-18호
구입문의	02-2020-1751, 1758

저작권© 2015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동아일보

편집저작권© 2015 동아E&D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본사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97257-08-9 03060

값 20,000원